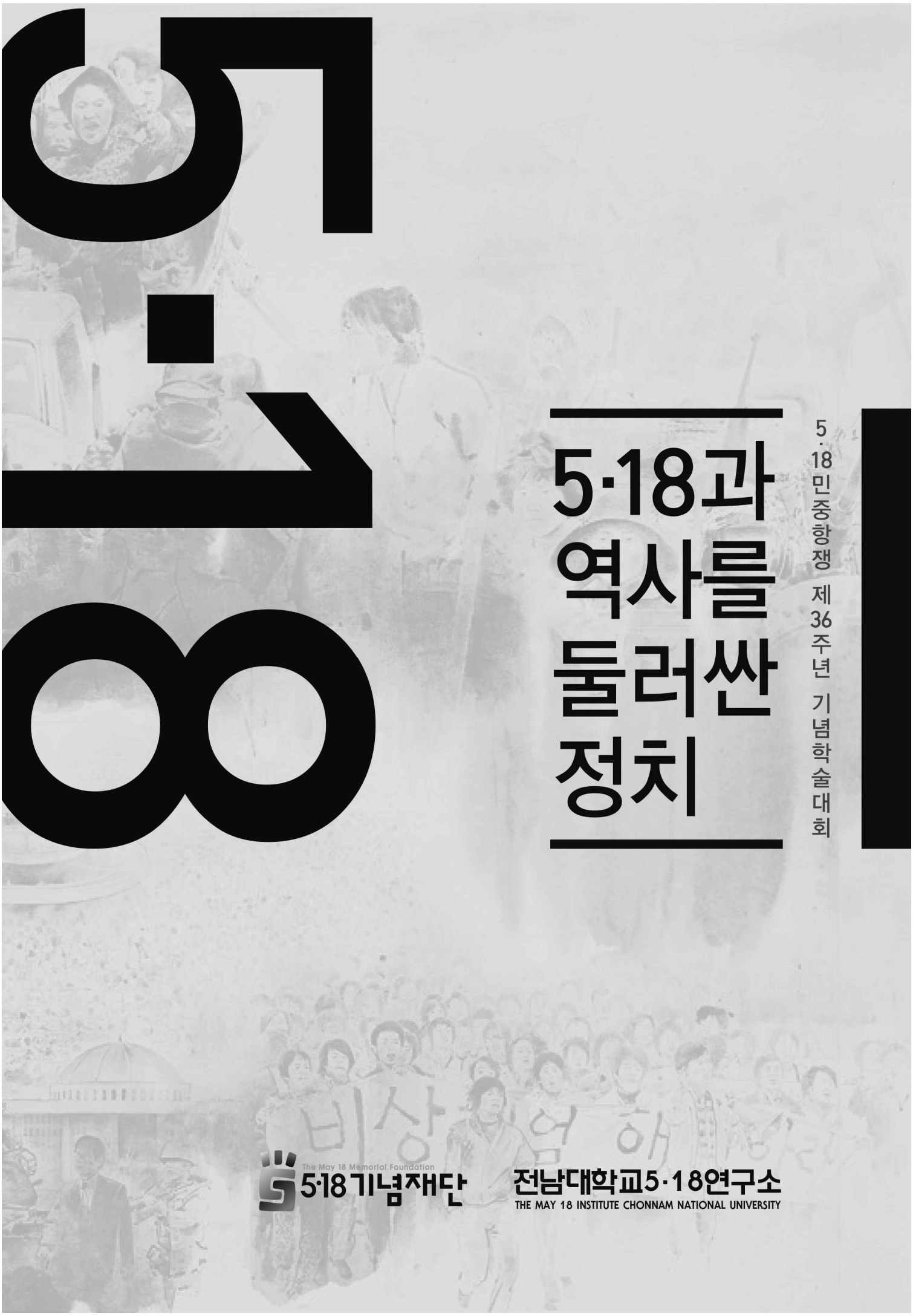


5·18

5·18과 역사를 둘러싼 정치

5·18민중항쟁 제36주년 기념학술대회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5·18기념재단

전남대학교5·18연구소
THE MAY 18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5·18민중항쟁 제36주년 기념 학술대회

일 시	발표 및 내용	비 고
10:00 ~ 10:30	**개회사:** 차명석 (5·18기념재단 이사장) **환영사:** 박해광(전남대학교 5·18연구소장) **축 사:** 지병문(전남대학교 총장)	**용지관 광주은행홀** 윤영덕(5·18연구소)
라운드 테이블	**"5·18연구소 설립 20주년 기념 – 5·18학술연구의 현재와 5·18연구소"**	
10:40 ~ 12:10	**발표 1:** 5·18연구소 20년과 5·18 연구 /최정기(전남대학교 사회학과) **발표 2:** 해외 5·18학술연구 동향 /George Katsiaficas **토 론:** 서 승, 오수성, 나간채, 박만규, 홍성흡	**용지관 광주은행홀** 박해광(5·18연구소장)
12:10 ~ 13:30	오찬	**전남대 햇들마루**
	"5·18과 역사왜곡"	
제1세션 13:30 ~ 16:00	**발표 1:** 5·18민주화운동 왜곡의 심화: 분석과 대안 /오승용(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발표 2:** 5·18민주화운동 진실부인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방안 /김재윤(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 3:** 1980년 5월 광주 그리고 북한 /김희송(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발표 4:** '님을 위한 행진곡'의 세계화: 홍콩, 대만, 중국을 중심으로 /정근식(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토 론:** 노영기(조선대학교 기초교육대학), 안 진(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 선(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김병인(전남대학교 사학과)	**용지관 광주은행홀** 이강래 (전남대학교 사학과)
	"현대사와 역사왜곡"	
제2세션 16:20 ~ 18:50	**발표 1:** 보수정권 이후 한국 근현대사 왜곡의 실태와 분석 /이준식(연세대학교, 역사정의실천연대 집행위원장) **발표 2:** 굴절된 역사, 시민들에 의한 역사의 진실찾기: 근로정신대 문제와 한일 시민단체 활동을 중심으로 /이국언(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상임대표) **발표 3:** 역사의 전복: 반(反)헌법 열전 /오유석(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 연구소) **토 론:** 임종명(전남대학교 사학과), 윤영덕(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김용철(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용지관 광주은행홀** 홍성흡 (전남대학교 문화인류고고학과)
19:00	만찬	**전남대 햇들마루**

CONTENTS

▣ 5·18과 역사를 둘러싼 정치

• **라운드테이블 "5·18연구소 설립 20주년 기념 – 5·18학술연구의 현재와 5·18연구소"**

■ 5·18연구소 20년과 5·18연구/
최정기(전남대학교 사회학과) ——— 1

■ 해외 5·18학술연구 동향/
George Katsiaficas ——— 21

■ 라운드테이블 토론문/ 서 승 ——— 33

• **제1세션 "5·18과 역사왜곡"**

■ 5·18민주화운동 왜곡의 심화: 분석과 대안/
오승용(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35

■ 토론문/ 노영기(조선대학교 기초교육대학) ——— 61

■ 5·18민주화운동 부인죄 도입의 필요성과 헌법적 정당성/
김재윤(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65

■ 토론문/ 안 진(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83

■ 1980년 5월 광주 그리고 북한/
김희송(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87

■ 토론문/ 한 선(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 113

■ '님을 위한 행진곡'의 세계화: 홍콩, 대만, 중국을 중심으로/

정근식(서울대학교 사회학과) ——— 117

■ 토론문/ 김병인(전남대학교 사학과) ——— 147

• 제2세션 “현대사와 역사왜곡”

■ 보수정권 이후 한국 근현대사 왜곡의 실태와 분석/

이준식(연세대학교) ———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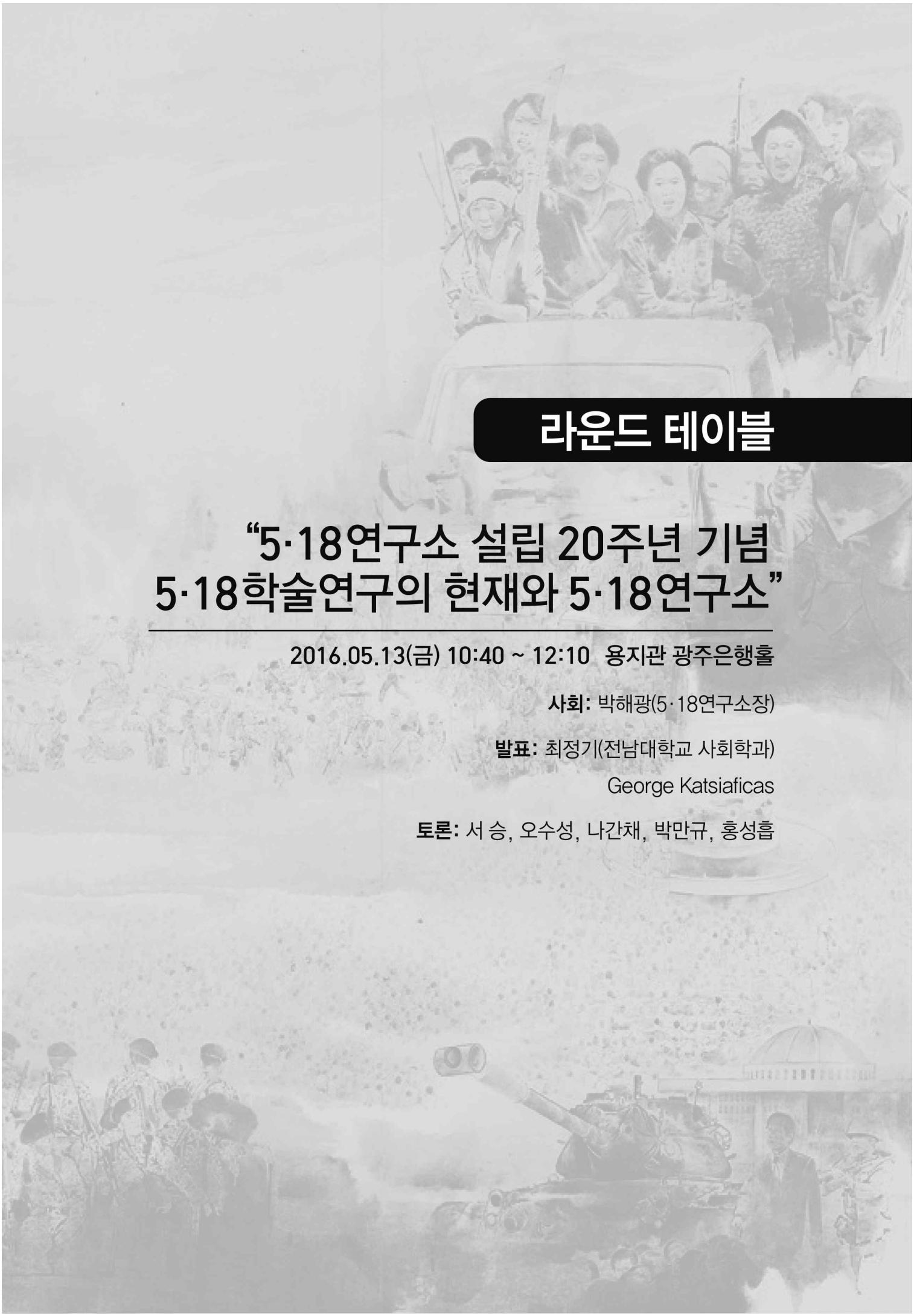
■ 토론문/ 임종명(전남대학교 사학과) ——— 181

■ 굴절된 역사, 시민들에 의한 역사의 진실찾기: 근로정신대 문제와 한일 시민단체 활동을 중심으로/ 이국언(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 185

■ 토론문/ 윤영덕(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203

■ 역사의 전복: 반(反)헌법 열전/

오유석(성공회대학교) ——— 207



라운드 테이블

“5·18연구소 설립 20주년 기념 5·18학술연구의 현재와 5·18연구소”

2016.05.13(금) 10:40 ~ 12:10 용지관 광주은행홀

사회: 박해광(5·18연구소장)

발표: 최정기(전남대학교 사회학과)

George Katsiaficas

토론: 서 승, 오수성, 나간채, 박만규, 홍성흡

5·18연구소 20년과 5·18 연구[1)]

- 연구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최정기(전남대학교 사회학과)

1. 문제제기

1980년 광주에서 발생한 학살극과 그에 대항하여 발생한 광주민주화운동은 그 자체로도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한국 현대사에서 하나의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즉 5·18 당시 발생한 살상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은 5월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전국화 되었으며, 결국 1987년 6월 항쟁의 토양이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그대로 한국의 민주화가 진전하는 출발점이기도 했다.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적어도 직접적인 폭력을 통한 통치는 설자리를 잃었으며, 정치권력의 교체도 비교적 공정한 선거를 통해 이루어졌다. 물론 이러한 민주화가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계기였는가는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5·18이 한국사회의 변화과정에서 중요한 계기였다는 점은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5·18은 그 역사적 책무를 다했는가? 혹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5·18은 이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야 할 사안인가? 이 글은 학술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5·18연구소의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최근 10년의 연구경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도 5·18연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무엇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하려는 것이다.

2016년은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이하 5·18연구소)가 만들어진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며, 5·18이 발발한 때로부터는 36년이 경과된 해이다. 연구소의 설립은 그 자체로 5·18연구의 여건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제도화된 연구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난점으로 인해 지금껏 연구소의 운영이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고, 5·18연구에 전념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또 36년이 지나면서 운동으로서의 5·18이 퇴색하고, 5·18의 의례화가 진행되면서 5·18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고, 이것이 그대로 5·18연구의 한계가 되기도 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불어 닥친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보수화 및 민주주의의 후퇴는 학문적 연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

---

* 이 논문은 2016년 5월 13일 '전남대학교5·18연구소'에서 주최한 광주민주화운동 제36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기 위하여 준비한 초고이다. 완성된 글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양해 바란다.

1) 이 글에서의 '5.18연구'는 1980년 5.18 당시 및 사건 후 그것을 기억하거나 기념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사회운동과 사건들, 문화적 현상 등 5.18과 그 이후의 모든 관련 움직임을 학술적으로 접근한 연구물들중 학술논문과 학술저서들을 지칭한다.

쳤다.

이 글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그 하나는 5·18연구소의 설립과정과 설립 이후의 운영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5·18연구소는,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설립 전의 민간연구소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5·18연구의 중심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따라서 5·18연구소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그대로 5·18연구의 실상을 보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5·18연구가 갖고 있는 가능성과 한계를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최근 10년(2006년~2015년) 사이에 발표된 연구물들을 대상으로 5·18연구의 최근 경향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5·18연구가 지속가능한 연구영역인지, 그렇다면 어떠한 형태로 나아갈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한 가지 언급해야 할 사안은 분석대상이 된 연구물은 이 시기에 논문이나 책의 형태로 출판된 경우라는 것이다. 따라서 논문이 작성된 시기는 훨씬 이전 시기일 수도 있다. 특히 동일 시기에 5·18기념재단에서 그때까지 나온 논문들을 여러권의 단행본으로 묶어서 출판했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전 시기의 연구물들이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이 이 연구의 최초 의도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5·18 학술연구의 역사와 연구소의 형성[2)]

2.1 학술연구의 태동과 사설연구소 시기(1988-1996)

5·18에 대한 최초의 학술적인 접근은 천주교 광주대교구에서 실시한 5·18 관련 시민의식조사였다. 이 조사는 광주시민들을 대상으로 5·18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하고, 그 결과를 사회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한 보고서였다. 그때까지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존재하였던 5·18이 이 조사를 통하여 비로소 공통된 것으로서의 실체를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5·18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적 조사와 연구는 1988년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이하 현사연)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송기숙교수와 전남대학교를 비롯한 이 지역 대학의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현사연은 향후 5·18연구의 거점이 되었다. 현사연에서 제일 먼저 시행한 작업은 5·18을 직접 몸으로 겪은 시민들의 경험을 기록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가 2년에 걸친 구술채록 작업 끝에 만들어낸 『5.18광주민중항쟁사료전집(이하 사료전집)』(1990)으로 향후 5.18연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되는 시민들의 체험담

2) 이 장은 기본적으로 졸고, 「지역에서의 5·18연구」(2009)를 중심으로 하고, 기타 자료들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이었다.

또 한 가지 현사연의 주요 공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이 5·18학술대회의 개최였다. 그때까지는 5·18에 대한 학술적 접근이 전무한 상태에서 5·18은 사회운동의 영역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현사연은 1989년 광주민중항쟁 9주년을 기념하여 '5·18 광주민중항쟁과 한국민족민주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는 당시 학계의 중견 및 원로라고 할 수 있던 김세균(정치학, 서울대교수)과 강만길(한국사, 고려대교수), 박현채(재야경제학자, 이후 조선대교수)가 발표자로 나서서 5·18에 대해 민족사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현사연의 5·18학술대회 개최는 10주년인 1990년에도 '광주5월민중항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이때는 현사연의 연구역량 강화에 힘입어 지역에서도 정근식(사회학, 전남대교수)과 오수성(심리학, 전남대교수)이 연구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그 외 타지역에서는 이수인(정치학, 영남대교수), 김진균(사회학, 서울대교수), 김홍명(정치학, 서강대교수), 김세균, 장을병(성균관대교수), 고은(시인) 등이 발표자로 나서서 분야별로 5·18에 대한 학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학술대회는 향후 전국적인 수준에서 5·18연구를 촉진하는 효과를 발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사연의 활동이 주춤하면서, 그리고 5·18기념사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90년대 초반에는 이러한 학술대회가 의미있는 수준에서는 거의 열리지 않았다.

이 시기에 시작된 5.18 연구는 대략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그 하나는 1980년 5월 이후 정부 등에 의해 왜곡되고 은폐되었던 5·18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었다. 이는 각종 자료집의 출간이나 구술채록작업으로 나타난다. 또 다른 하나는 역사적 맥락을 토대로 5·18의 성격이나 역사적인 의미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강만길, 박현채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는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대상으로 사회과학적인 설명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초 서울에서 시작되었지만(정해구 등, 1990), 곧바로 지역에서도 시작되었다(손호철, 1995). 이들의 연구 성과는 5.18이 지닌 의미의 재해석을 가능케 하고 1980년대 사회운동의 진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이었다.

현사연은 1996년 전남대학교 5.18연구소로 5·18연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이관하였다. 현사연의 활동은 설립 초기였던 1988년부터 1990년에 집중되어 있다. 사료전집의 출간과 두 번의 학술대회 개최가 가장 활발했던 모습이었다. 1990년대 초반의 현사연은 다수의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이 활동하고 있었지만, 한국 현대사를 연구하는 일종의 연구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미 5.18에 대해 국가의 입장이 바뀌고, 기념사업과 보상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민간연구소인 현사연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던 것이다. 물론 개인적인 수준에서 학술연구가 진행되기도 했지만, 학술연구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학술연구가 이루어질 수는 없었다.

2.2 학술연구의 제도화 시기(1996-현재)

5.18연구가 제도화되는 시기는 1996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계기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그동안 5.18연구를 주도하였던 현사연이 분화해서 5.18연구와 관련된 자료 등과 함께 '전남대 5.18연구소'가 되었다. 그때까지 민간연구소로 있으면서 90년대 초반 명맥만 유지하던 현사연이 대학교 내에 둥지를 튼 것이다. 둘째, 1995년에 만들어진 '5.18기념재단'이 5.18관련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학술연구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셋째, 1997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또 대학에 대한 학술지원사업이 본격화되면서 5.18연구 역시, 한시적이지만, 국가의 연구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표 1> 연례 학술행사 제목(1998-2015)

개최일	행사제목
1998.05.12.	5·18과 동아시아의 민중항쟁
1999.11.11.	5·18의 보편적 의의
2000.05.15.~05.17.	새 천년을 열며 : 세계의 민주주의 및 인권
2001.05.15.~05.17.	동남아시아의 식민주의, 권위주의, 민주주의 및 인권
2002.05.15.~05.17.	민주화운동과 여성
2003.05.15.~05.17.	역사적 기억과 문화적 재현 : 4.3과 5·18
2004.05.06.~05.07.	5·18연구 : 회고와 전망
2005.05.19.~05.21.	21세기 민주주의와 한국정치
2006.05.23.~05.24.	민주주의, 평화, 통일과 시민사회
2007.05.17.~05.19.	5·18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2008.05.22.	5·18과 선진화 시대의 사회운동
2009.05.17.	다시 묻는 5·18 : 기억과 현재성
2010.05.26.~05.28.	5·18 30년,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색
2011.05.20.	5·18과 한국민주주의, 그리고 김대중
2012.05.18.	5·18 연구의 확장과 재구성
2013.11.01.	5·18 연구의 재구성과 미래적 상상
2014.06.10.	5·18민주화운동과 5월 운동, 그리고 그 현재성
2015.05.22.	5·18 현장의 사람들과 인권

이렇게 시작된 5·18연구는 시기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5.18연구가 보여주는 시기별 경향성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표 1)로 1998년 18주년 행사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치러왔던 5.18학술행사의 개최일 및 행사제목이다. 먼저 개최일을 보면 20주년이었던 2000년 이후 2007년까지 2-3일간 학술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그 외는, 30주년이었던 2010년을 제외하면, 하루 프로그램으로 학술대회가 진행되었다. 이는

2000년대 초반에는 그만큼 재정적 지원이 있었다는 것과 2-3일 동안의 학술행사가 가능할 정도의 인적 자원 및 쟁점거리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행사제목을 보면 하나의 경향성이 발견된다. 정례적인 학술행사가 시작된 이후 20주년 행사를 전후한 시기까지 학술행사의 주요 목적은 5.18의 보편적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5.18이 광주만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고, 인류보편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주요 논쟁거리였다. 그러다가 2002년 이후 2004년까지는 다시 우리 내부에서 5.18연구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그 후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우리 사회 내부의 민주주의 문제와 평화·통일 등의 주제가 다시 쟁점거리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200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술대회의 주된 화두는 향후 5.18연구의 지향점은 어디인가에 맞춰져 있다. 이와 같이 5.18연구 주제에 대한 고민이 8년 동안이나 표현을 달리 하면서 계속된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지적 실험이 있었다는 것이지만, 달리 말하면, 5.18연구가 아직 제대로 착종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한편 이 시기에 5.18연구를 주도한 기관은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지만, 그 외에도 광주시청과 '5.18기념재단'이 각종 학술지원사업을 통해서 5.18 연구 활동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었다. 그 결과 1990년대 후반부터는 서울에서 5.18을 주제로 정치학회(1997)와 사회학회(1998), 학술단체협의회(1999) 등이 학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5.18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5.18연구에 대한 학술지원사업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남대 5.18연구소 역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연구사업을 진행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는, 연구용역이 대부분 1년 단위로 기획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5.18연구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의 부재와 장기적인 프로그램의 부족에 기인한다. 또 연구소의 주체적인 여건도 문제이다. 한 가지 예로 표 2)를 보자. 역대 5.18연구소 소장은 모두 단임으로 임기를 마감하였으며, 재직 기간도 통상 2년 정도였다. 2년 임기의 소장이 분명한 재정적 토대도 없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비젼을 갖고 활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표 2>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의 역대 소장 및 재임기간

	이름	재임기간		이름	재임기간
1	송기숙	1996.12~1998.01(13개월)	6	최석만	2006.09~2008.09(24개월)
2	오수성	1998.01~2000.06(29개월)	7	박만규	2008.09~2010.10(25개월)
3	나간채	2000,06~2003.03(33개월)	8	나간채	2010.10~2012.10(24개월)
4	송정민	2003.03~2004.09(18개월)	9	홍성흡	2012.10~2014.10(24개월)
5	최영태	2004.09~2006.09(24개월)	10	최정기	2014.10~2015.01(3개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5.18 연구자는 수적으로 크게 확장되었다. 지역에서도 이 시기에 다양한 분야에서 5.18과 관련된 연구물이 양산되었다. 나아가 이 시기의 각종 연구지원사

업으로 인해 5.18연구의 주요 관점들이 형성되었으며, 이들 사이의 논쟁이 가능하게 된 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2000년을 전후한 시기에 만들어진 주요 논의들은 한상진의 승인투쟁론(1998)과 최정운의 절대적 공동체론(1999), 정근식의 '세 국면의 구별 및 마지막 국면에서의 항쟁 의미 완성'이라는 주장(2000) 등이 있다[3].

2000년대 중반부터는, 앞의 학술대회 제목에서 본 바와 같이, 5.18연구의 방향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사실 이 시기는 5.18연구소의 입장에서 볼 때, 재정적 지원이 비교적 풍족한 때였다. 2005년 이후 5·18기념재단에서 학술지원사업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필요한 연구비를 신청할 수 있었고, 2006년에는 5·18연구소가 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로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 2000년대 중반 이후의 5.18 연구는, 그것을 1980년 당시의 사건사에 대한 연구로 축소시켜서 생각한다면, 2000년을 전후한 시기의 상태에서 별로 나아가지 못한 상태이다. 즉 2000년대에 들어서도 그렇게 많은 용역사업 및 학술발표가 진행되었고, 각 분야에서의 수많은 연구성과들이 있었지만, 5.18 자체에 대한 연구라는 측면에서 보면 별로 진전된 것이 없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5.18연구소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996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는 한국사회의 민주화 및 5·18의 보편화를 시도하는 흐름과 맞물리면서 지금까지 가장 활발하게 5.18 연구가 진행되었던 시기이다. 또 5.18연구의 보편화를 추구한 결과 주제로 보면 인권, 평화, 민주주의 등의 문제들로 인식이 확장된 시기이며, 공간적으로도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5.18연구의 범위가 확장되던 시기이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피해자 보상사업 및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망월묘역의 성역화 등 각종 기념사업의 영향으로 기억과 기념의 문제가 새롭게 학술연구의 장으로 들어온 시기이기도 하다.

한편 2000년대 중반 이후 오늘날까지는 5·18담론의 보편화가 갖는 한계가 노정되고, 그러한 한계를 돌파하려는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즉 인권, 민주주의 등의 주제로 연구영역이 확산되고, 지역별로도 국제적인 수준에서 연구활동이 이루어졌지만, 이들 연구와 5.18연구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200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형태로 5.18에 대한 왜곡이 심해지면서 5.18연구 자체는 늘어나고 있지만, 학술적인 차원의 연구이기보다는, 왜곡과 그에 대한 반박이라는 지루하고 비생산적인 언쟁이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3) 이들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졸고(2002: 201쪽)를 참조하라.

3. 최근 10년간의 5·18연구 분석

여기서는 5.18 관련 학술논문들을 대상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거쳐서 대상 논문들을 수집하였다. 먼저 주요 학술정보 웹사이트에서 연구대상이 될 논문을 검색하였다. 국회전자도서관(dl.nanet.go.kr)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kr), 누리미디어(www.dbpia.co.kr), 학술교육원(www.earticle.net), 학지사(newnonmun.com), 교보문고(scholar.dkyobobook.co.kr), 한국학술정보(kiss.kstudy.com) 등에서 '5·18민주화운동', '5·18민중항쟁', '광주민중항쟁', '광주항쟁', '5월운동', '오월운동', '광주사태' 등을 주제어로 논문을 검색하여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웹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은 자료들은 5·18연구소와 5.18기념재단 등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게시된 자료와 첨부된 파일들을 수집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으로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은 전남대학교 도서관과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자료실 등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물론 이들 수집물들 중 경험담이나 르뽀 형식의 글 등 학술적인 연구논문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글들은 제외시켰다. 이렇게 수집된 전체 연구대상은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433편이다.

<표 3> 연구대상 논문들의 발표형태

발표형태별 연구 분포					
발표 형태	소논문	학위논문	단행본	기타	합계
빈도	173	34	156	70	433
비중(%)	39.9	7.9	36	16.2	100

* 기타는 학술대회 발표문 및 ***기념재단 연구지원사업 논문집을 합산한 것임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은 연구대상들이 2006년부터 2015년 사이에 출판물로 나온 논문이거나 단행본이라는 것이다. 즉 연구물이 만들어진 시기가 전시기라고 하더라도 이 시기에 새롭게 나온 출판물에 게재되어 있으면, 연구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러다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앞 시기에 작성된 논문이 연구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2006년~2007년 사이에 5·18기념재단에서 『5·18민중항쟁과 정치, 역사, 사회』1~5권을 비롯하여 『5·18민중항쟁과 법학』, 『5·18민중항쟁과 문학, 예술』 등을 출간하였는데, 여기에는 1990년대 이후 나온 주요 논문들이 상당 부분 망라되어 있다.

따라서 이 글의 표나 자료들을 해석할 때,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다. 즉 2006년과 2007년의 자료는 1990년대 이후의 주요 연구물들까지 망라된 것인데 비해 2008년 이후의 자료는 그대로 동 시기의 연구물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물의 분석을 위해 각종 연구물들을 다섯 가지 변수, 즉 발행연도, 발표매체, 발표형태, 연구비 수주 여부, 발표주제 등으로 나누어서 통계 처리하였다.

3.1 연구자 분석

이번 조사에 포함된 논문은 433편이며, 필자 수는 모두 294명이다. 연구자 1인당 발표 논문 수는 다음 표 4)와 같다. 이에 따르면 논문 1편만을 작성한 경우가 216명으로 전체 경우 수의 73.5%에 달한다. 전체의 ⅔ 이상이 논문 한 편을 작성한 뒤, 더 이상 5·18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다섯 편 이상의 논문을 작성한 연구자는 단 11명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동안 20년에 걸쳐서 5·18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또 수많은 연구지원사업이 있었지만, 실제 5·18연구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표 4> 연구자 1인당 발표논문 수 분포 및 외국인에 의한 연구물

연구자 1인당 발표논문 수 분포(외국연구자포함)						
논문수	1편	2편	3편	4편	5편 이상	합계
빈도	216	48	15	4	11	294
비중(%)	73.5	16.3	5.1	1.4	3.7	100

* 공동논문은 총 25편(2인: 22편, 3인: 1편, 4인: 2편)

* 국외연구자는 6명(1편: 5명, 4편: 1명)

연번	연구자명	제목	발행년도	발표매체	발표형태	연구비수주	연구주제
1	브루스 커밍스	The Kwangju Uprising and the Korean-American Relationship (광주항쟁과한-미관계)	2007	***연구소 학술대회	기타	비지원	*** 사건관련
2	롤란드 베인	광주***이후독일에서의한국연대사업 (***민중항쟁과정치,역사,사회4)	2007	공동저서	단행본	비지원	***영향 및효과
3	샐리 이에	전라도지역의저항지도와반체제세력의지리부도(***민중항쟁과정치,역사,사회2)	2007	공동저서	단행본	비지원	*** 관련문화
4	무토 이치요	광주항쟁은일본사회에어떤영향을미쳤는가(***민중항쟁과정치,역사,사회4)	2007	공동저서	단행본	비지원	***영향 및효과
5	George Katsiaficas	Neoliberalism and the Gwangju Uprising	2006	민주주의와 인권	소논문	비지원	***과 다른주제
6		광주항쟁과 점거운동	2012	***연구소 학술대회	기타	비지원	***과 타사건비교
7		역사속의광주항쟁 (***민중항쟁과정치,역사,사회1)	2007	공동저서	단행본	교육부	***의미 및성격
8		U.S. Involvement in the Gwangju Uprising	2008	***연구소 학술대회	기타	비지원	*** 사건관련
9	한스 요르그 잔트퀼러	인간의존엄성과근대국가의정당화,그리고 광주민중항쟁의보편적의의 (***민중항쟁과정치,역사,사회1)	2007	공동저서	단행본	비지원	***의미 및성격
	합계						

이번 조사에서 외국인 학자가 5·18을 연구한 경우는 모두 6명으로 연구물은 9개가 발견되었다. 출신국도 미국과 독일, 호주, 일본 등으로 다양하다. 하지만 총 네 편의 논문을 쓴 카치아피카스를 제외하면, 이들을 5·18연구자로 부르기는 어렵다. 브루스 커밍스는 5·18연구논문이라고 할만한 것이 없다가 전남대에서 학술상을 수상하면서 그 기념으로 발표한 논문 한 편이 있을 뿐이다. 다른 연구자들 역시 5·18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을 한 편의 논문으로 정리했지만, 그 이상의 연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한편 학위논문, 특히 박사논문의 주제로 5·18과 관련된 주제가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5·18관련 학위논문이 있다는 것은 전문연구자가 나왔다는 것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파악된, 5·18연구와 관련된 석·박사 학위논문은 34편이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매우 긍정적이다. 우선 학위논문이 나온 학교의 분포가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물론 광주·전남의 대학이 17개교로 50%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수도권의 9개교, 영남권의 3개교, 강원도의 1개교에서 5·18관련 학위논문이 나왔다. 박사논문의 경우는 그 경향성이 더 큰데, 총 6개의 박사학위논문 중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전남대와 조선대에서 각 한 편씩 나온데 비해, 호남 외의 지역에서는 서강대에서 두 편, 외국어대학에서 한 편, 동아대에서 한 편이 나왔다.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부분이다.

<표 5> 5·18관련 학위논문의 영역별 분류

전공영역	학위종류	편수	전공	학위종류	편수
교육대학원	석사	7	역사학	석사	1
국어국문학	석사 박사	2 2	정치학	석사 박사	1 3
기록관리학	석사	2	연극·영화학	석사	1
문화전문대학원	석사	4	인류학	석사	1
사회학	석사	2	조경학	석사	1
신문방송학	석사 박사	1 1	NGO대학원	석사	1
신학	석사	3			

또한 5·18관련 학위논문이 배출된 전공영역 역시 매우 다양하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학이나 정치학, 역사학, 인류학, 신문방송학 등 전통적으로 사회현상이나 사회운동을 다루는 분야는 물론이고, 인문학의 제 분야나 문화관련 학과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심지어 조경학까지 망라되어 있다. 5·18 관련 연구를 둘러싸고 일종의 융합학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상당히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5·18 자체에 대한 연구의 비중이 비교적 적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점이기도 하다.

3.2. 발표시기 및 주제

5·18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2000년을 전후한 시기이다. 1989-1996 사이의 8년 동안에는 30편의 연구물이 나온 반면에 1997-2005사이의 9년 동안에는 무려 156편의 연구물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5·18 20주년 행사가 거행된 직후인 2001년에는 20주년 행사에서 발표되었던 논문들이 대거 출판되면서 총 41편의 논문이 출판되었다. 그리고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의 평균 연구물 수는 24편 정도였다(졸고, 2009:). 또한 앞장에서 본 바와 같이 200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는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토대 위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5·18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2000년을 전후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는 시기의 5·18연구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표 6)을 통해 확인해보자.

<표 6> 시기별 5·18연구물 수

연도	빈도	비중(%)
2006	56	12.9
2007	113	26.1
2008	31	7.2
2009	42	9.7
2010	41	9.5
2011	24	5.5
2012	33	7.6
2013	36	8.3
2014	23	5.3
2015	34	7.9
합계	433	100

5·18기념재단에서 그 전의 논문들을 모아 책자를 출판한 2006년과 2007년을 예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2008년부터 2005년 사이의 평균 연구물 수는 33편에 이른다. 2000년대 초반(24편)에 비해 훨씬 많은 연구물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시기는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보수화와 민주주의의 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시기이고, 학문 연구에도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는 2005년 이후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 '5·18기념재단'의 연구지원사업과 5·18연구소에서 연 3-4회 발행하는 학술저널인『민주주의와 인권』[4]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연구주제로 본 상황은 어떠한가? 2000년을 전후한 시기까지는 5·18연구로 분

4)『민주주의와 인권』은 2001년에 열 2회 발행으로 창간되었으며, 2004년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가 되었고, 2008년에는 연 3회 발행으로 증편되었다. 2009년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승격되었으며, 2016년부터는 영문판 1회를 포함하여 연 4회 발행할 계획이다.

류되는 주제들 중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영역은 아무래도 '5·18 사건 관련'이었다. 이는 1990년 무렵부터 2000년을 전후한 시기까지 5·18연구의 핵심 과제가 진실규명이었기 때문이다.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왜 군부는 총을 쏘았는가? 수많은 시민들이 살상당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계엄군의 잔인한 무력 앞에서 시민들은 어떻게 저항할 수 있었는가? 등과 같은 질문들이 이 시기 연구를 주도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2000년대 중반 이후의 5·18연구는 어떠한 주제들이 많이 발견되는가? 표 7)을 보자. 그 전 시기까지 연구를 이끌었던 사건 관련 연구물은 그 비중이 현격히 줄었다(10.9%). 대신에 이 시기의 5·18연구를 주도한 주제는 5월 운동(기억 및 과거청산운동 포함, 23.8%), 5·18의 의미 및 성격 규정(23.3%), 5·18과 관련된 문화예술 및 문화운동(19.4%)의 순이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5·18과 관련된 실증적인 자료가 더 이상 발굴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건 관련 연구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된 현상일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시기 한국사회 및 광주전남지역의 핵심 쟁점들이 변화했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즉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던 한국사회의 과거청산운동 및 그로 인한 기억문제의 쟁점화, 그리고 200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광주지역에서 시작되었던 문화중심도시 추진 등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표 7> 5·18연구의 주제 영역별 분포

주제영역 / 발표시기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합계 (비중)
5·18 사건 관련	1	25	7	0	0	1	3	5	1	4	47 (10.9)
5·18의 의미 ·성격규정	7	33	3	10	16	6	3	11	6	6	101 (23.3)
5·18 및 5월운동과 다른 사건 비교	0	4	2	1	1	1	4	1	0	2	16 (3.7)
5·18 및 5월운동의 영향 및 효과	2	14	3	2	3	2	3	1	4	0	34 (7.9)
5월운동관련 (기억·과거청산운동)	20	23	6	17	10	7	6	4	2	8	103 (23.8)
5·18 관련 문화예술 및 문화운동	25	9	7	7	4	3	8	9	6	6	84 (19.4)
5·18과 타 주제 연결 (지역주의 반미 등)	1	3	2	1	4	4	2	1	2	7	27 (6.2)
5·18관련교육	0	1	1	2	2	0	0	1	1	0	8 (1.8)
5·18왜곡관련	0	1	0	2	1	0	4	3	1	1	13 (3.0)
합계	56	113	31	42	41	24	33	36	23	34	433 (100)

5·18 관련 학위논문의 분석에서도 드러났지만, 5·18연구가 갖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그것이 스스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왔으며, 시기별로 그때그때의 정세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5·18의 연구영역은 동 시기 한국사회의 문제 및 광주지역의 정치사회학적 지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5·18이 갖는 사회적 의미 역시 지속적으로 변형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연구영역 역시 변화하고 있다. 그것은 대체로 1980년대에는 당시의 지배세력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및 민주화를 의미했다면, 1990년대에는 과거청산, 민주·인권·평화 등 5·18의 전국화와 세계화 및 5·18 정신의 보편화를 의미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이 지나면서부터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5·18 자체의 의미나 문화예술 등 지역 내의 주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역시 당시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수화 및 민주주의의 퇴행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이 시기 연구물의 주된 특징 중 하나는 5·18 왜곡 관련 연구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5·18은 발생한 순간부터 다양한 형태의 왜곡이 시도된 사건이었다. 그리고 5월 운동 및 한국의 민주화는 그러한 왜곡을 이겨내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새로운 역사만들기를 시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시기에도 일부 수구적인 극단주의자들이 5·18에 대한 왜곡을 시도했지만, 개인적인 수준의 망언에 그치는 정도였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왜곡 시도는 매우 체계적이고 집요하며, 조직적인 수준에서 자행되고 있다. 또 이에 대응하여 이루어지는 학계의 연구도 나오고 있다(13편, 3.0%). 왜곡의 폐해가 심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물이 적은 것은 왜곡 자체가 비이성적이고 근거 없이 이루어진, 그야말로 쓰레기 수준이어서 학술적인 수준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3.3. 발표매체 및 연구비 수주 여부

1980년대 후반 무렵에 시작된 5·18연구는 초기에는 민간인들이 내주는 성금으로 운영되었다. 1980년 5월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시민들의 정성과 그날의 학살자를 처벌하려는 염원이 모여서 학술연구의 토대를 제공한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당시 5·18연구를 수행하는 유일한 기관은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소장 송기숙, 이하 현사연)였으며, 시민들이 낸 성금이 현사연의 활동자금이었다. 당시 어느 정도의 성금이 모였는지, 그 성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은 당시 현사연 구성원들 내에서도 극히 일부만이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5], 당시로써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성금이 모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들의 성금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었다.

5) 1990년 전후 무렵까지도 송기숙교수를 비롯한 현사연 구성원들은 권위주의정권에 대한 두려움 내지 조심성 때문에 재정이나 후원 내역 등은 비밀로 취급하였다.

1990년 시민들의 증언채록집인『5.18광주민중항쟁사료전집(이하 사료전집)』이 출간된 후에는 현사연의 운영자금이 부족했으며, 5·18연구를 수행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이 1990년대 중반까지 이어지면서 5·18연구도 거의 발견하기 어려워졌다.

새롭게 5·18연구가 시작된 것은 제도권 내 자금이 투입되면서부터였다. 5·18연구에 대한 제도권 내에서의 지원이 시작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였다. 5·18기념재단이 만들어지고, 광주시청에 5·18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부서가 만들어지면서부터 학술연구 등에도 지방자치단체나 5·18기념재단의 지원이 시작된 것이다. 1990년대 후반 서울지역에서 개최된 여러 학회(정치학회, 사회학회, 학술단체협의회)들의 5·18 관련 학술대회는 이들 기관들의 지원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전남대학교에 5·18연구소가 생기고, 교육부에서 연구비를 지원한 것 역시 5·18연구를 부흥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렇다면 2006년 이후에는 5·18연구의 연구비 형태는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표 8)이다. 이에 따르면 지원이 없었다고 표시된 것이 344편으로 전체의 79.4%에 이른다. 그 외에는 5·18기념재단의 지원을 받았다고 밝힌 것이 35편(8.1%)이며, 한국연구재단(구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이 28편(6.5%), 대학 자체 지원이 15편(3.5%)의 순이다. 논문의 사사표기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절대 다수의 연구가 지원받지 않았다고 적고 있는 것이다.

<표 8> 연구비 제공처로 본 5·18연구

연구비 수주로 본 연구물 분포								
연구비수주 (사사표기)	비지원	광주광역시	대학교	교육인적 자원부	한국연 구재단	5·18 기념재단	기타	합계
빈도	344	4	15	6	28	35	1	433
비중(%)	79.4	0.9	3.5	1.4	6.5	8.1	0.2	100

* 기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연구비를 수주한 것임.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많은 부분이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비지원으로 표기된 연구물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5·18기념재단 등 여러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이들 기관들의 학술지원사업 관리 방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이들 기관들은 연구용역을 준 다음에 연구결과를 제출받으면 용역을 종료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다[6]. 반면에 연구자들은 용역결과를 제출한 다음 그것을 토대로 논문을 만들어서 학술지나 저서 등에 게재하고 있는데, 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6) 한국연구재단이나 전남대학교 등의 학술지원사업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저널에 게재된 논문을 연구용역의 결과로 평가한다.

<표 9> 발표매체로 본 5·18연구

발표 매체	빈도	비중(%)
5·18연구소 학술대회발표문	51	11.8
민주주의와 인권(5·18연구소 저널)	50	11.5
5·18기념재단 연구지원사업 결과	9	2.1
학회저널 및 학술회의 발표문	132	30.5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발행물	0	0
공동저서 게재논문	157	36.3
석박사 학위논문	34	7.8
합계	433	100

한편 2006년 이후 5·18연구의 발표매체는 표 9)와 같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발표매체는 공동저서의 형태(157편, 36.3%)였다. 다음으로는 학회 저널 및 학술회의 발표문의 형태(132편, 30.5%)이고, 그 뒤를 5·18연구소 학술대회 발표문(51편, 11.8%)과 5·18연구소 학술저널인『민주주의와 인권』에 게재된 논문형태(50편, 11.5%)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공동저서나 학술대회 발표문에 있는 연구물의 많은 부분은 사사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발표매체로만 보면 5·18기념재단의 역할을 적게 나타나지만, 실제 역할은 매우 크다. 5·18기념재단은 다양한 매체에 흩어져 있는 연구물들을 한 곳에 모으고, 그것들을 출판물의 형태로 출간하여 후세대 연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 2005년도부터는 학술지원사업을 통해 5·18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AJ(아시아 저널)』라는 이름의 학술저널을 창간하여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표 10> 연구비 출처와 주제영역 관계

연구비 / 주제영역	비지원	광주시청	대학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5·18기념재단	기념사업회[7]	합계
5·18 사건 관련	39	0	1	1	1	5	0	47
5·18의 의미 및 성격규정	78	0	2	1	10	10	0	101
5·18과 다른사건 비교	13	0	0	0	1	1	1	16
5·18 및 5월운동의 영향·효과	30	0	0	2	0	2	0	34
5월운동 관련	81	0	7	2	3	10	0	103
5·18 관련 문화 및 예술	66	0	3	0	10	5	0	84
5·18과 다른 주제 연결	22	0	2	0	2	1	0	27
5·18관련교육	8	0	0	0	0	0	0	8
5·18왜곡관련	7	4	0	0	1	1	0	13
합계	344	4	15	6	28	35	1	433

한편 연구비 출처와 주제 영역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가 표 10)이다. 압도적으로 많은 비지원을 제외하고 보면, 대부분의 연구는 5·18기념재단과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연구비를 받아서 수행한 것들이었다.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광주시청에서 제공한 연구비는 오로지 5·18 왜곡 관련 연구물에만 투입되었다는 점이다. 애초 5·18기념재단이 있다는 것 때문에 5·18연구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던 광주시청이 5·18 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네 개의 연구물이 나올 정도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의 결과로 보인다.

4. 성과와 한계 및 제언

지난 20년에 걸친 5·18 연구사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일반 시민들이 가장 짧은 기간에 스스로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이룩한 성취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전세계적 수준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5·18연구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탐구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학문분야에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5·18연구이다. 여러 영역의 학문들이 상호 소통하는, 일종의 융합학문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결과나 영향에 대해 속단하기는 이르다. 수준에서 5·18연구소의 성과 및 5·18연구의 의미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1996년에 현사연을 이어받아 설립된 전남대학교 5·18연구소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명실상부하게 5·18연구의 핵심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1990년대 중반 이후 5·18담론의 세계화 및 민주주의와 인권 연구 등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5·18연구소였다. 5·18연구소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관련 연구물을 생산하고 있고, 5·18연구자들이 소통하는 장소로 이용되며, 매년 5월이면 학술대회를 주관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저널을 발간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1990년대 중반 이후의 5·18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둘째, 1994년 5·18기념재단의 설립과 1996년 5·18연구소의 설립 이후 20년에 걸쳐 5·18연구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5·18연구는 사회성격 논쟁과 5·18의 가치를 보편화하는 연구로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5·18 20주년을 전후하여 수많은 연구물의 생산으로 이어졌고, 다양한 형태의 국제연대와 사회 활동으로 이어졌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보수화와 민주주의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적인 연구, 역사학과 문학 등 인문학 연구, 실용적인 연구 등으로 5·18연구의 영역이 확장되었다. 달리 보면 보편성을 추구하던 2000년 전후의 연구에 비해 다

7) 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말한다.

시 우리 사회의 문제로 연구의 초점이 옮겨졌다고 볼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5·18연구자로 부를 수 있는 전문 연구자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5·18연구를 학위논문으로 연결시키는 연구자도 적지 않게 나왔다. 학위논문 제출자는 전공으로 5·18연구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만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5·18연구를 통해 학제 간, 혹은 국가 간 교류와 소통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아직 국제적 교류와 소통이 궤도에 오른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학술대회와 행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시작되고 있다. 5·18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2011년에 창설되어 올해 6년째를 맞이하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은 대표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5·18연구는 앞의 연구자 분석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학제 간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융합학문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이론적이고 사상적인 측면에서부터 매우 실용적인 영역까지 망라되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의 5·18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5·18 연구를 위한 지역 내에서의 역할 분화 및 기능의 통합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1990년대 후반 이후 5·18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으로 광주지역에서 추진된 모든 사업의 컨텐츠는 상당히 유사하다. 기념관의 설치, 아카이브의 설치, 연구소의 설치, 전시 공간의 설치 등이 거의 모든 사업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사업이나 기관별 역할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5·18기념관도 여러 개고, 자료실도 여러 개며, 모든 기관에서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 단계 진전된 5·18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5·18과 연관된 모든 사업 및 기관들 사이에서 역할의 분화와 기능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전문 연구자 층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자들 사이에 네트워크도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 물론 2000년 전후와 비교하면 괄목할만한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이며,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연구자들이 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연구자들은 분산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사이에서 상호 연결되는 것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5·18연구자들이 제도권 내, 특히 대학에 자리 잡는 경우도 발견하기 어렵다. 이는 5·18연구가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드는 요인이다. 나아가 현 시점에서 요구되는 것은,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는 5·18연구가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1980년 당시의 5·18을 연구하거나 분석하는 연구자가 다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5·18 사건 그 자체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많은 부분이 미해결상태이거나 분석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전망을 갖는 5·18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 편으로는 개인적인 수준에서 5·18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한 편으로는 학술연구의 주도권을 용역 발주처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거의 모든 연구가 1년 단위로 제공되며, 그나마도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다보면 실제 연구기간은 반

년 남짓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한 편으로는 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에서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다양한 형태(예를 들면 2년 단위나 3년 단위, 5년 단위의 프로젝트 등)의 용역사업을 기획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한 편으로는 연구자들이 5·18연구회나 포럼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5·18기념재단. 2006.『5·18민중항쟁 연구의 현황』학술자료 목록집 3.

5·18기념재단. 2009. '5·18기념재단 연구지원 현황(2005-2008)'. 내부문건.

광주광역시. 2000.『5·18광주민중항쟁사』.

김정한, 2013,『1980 대중 봉기의 민주주의』, 소명출판.

손호철. 1995.「80년 5.18항쟁: 민중항쟁인가 시민항쟁인가?」,『해방 50년의 한국정치』, 새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4.『5·18연구: 회고와 전망』. 5·18 24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집.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9. '역대 5월 학술대회 프로그램 정리(1998-2008)'. 내부문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6.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의 행사 및 학술활동 정리(1998-2016)'. 내부문건.

전남사회문제연구소(편). 1988.『5·18광주민중항쟁자료집』.

정근식. 2000,「부마항쟁과 79-80레짐」.『지역사회학』2호, 한울.

정문영. 1999.『광주 '5월 행사'의 사회적 기원 -의례를 통한 지방의 역사 읽기-』.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인류학전공 석사학위논문.

정호기. 2002.『기억의 정치와 공간적 재현 -한국에서의 민주화운동들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정해구 외. 1990.『광주민중항쟁연구』, 사계절.

최정기. 2002.「국가폭력과 대중들의 자생적 저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기억과 전망』창간호.

_____. 2009.「지역에서의 5·18연구 - 연구사 및 연구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한국지역사회학회.『지역사회연구』제17권 제3호.

최정운. 1999.『오월의 사회과학』. 풀빛.

학술단체협의회. 1999.『5·18은 끝났는가?』. 푸른숲.

한국사회학회. 1998.『세계화시대의 인권과 사회운동 -광주민주화운동의 재조명』, 5·18기념재단.

한국정치학회. 1997.『5·18학술심포지움』. 5·18기념재단.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1990.『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한상진. 1998.「광주민주화운동에서 본 국민주권과 승인투쟁」. 5.18 국제학술심포지움.『세계화 시대의 인권과 사회운동 -광주민주화운동의 재조명』. (재)5.18기념재단.

황석영/전남사회운동협의회.정동년외 321인.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1996.『5.18 그 삶과 죽음의 기록』, 풀빛.

< 자료수집 웹사이트 >

국회전자도서관(dl.nanet.go.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kr)

누리미디어(www.dbpia.co.kr)

학술교육원(www.earticle.net)

학지사(newnonmun.com)

교보문고(scholar.dkyobobook.co.kr)

한국학술정보(kiss.kstudy.com)

Assessing Research about the Gwangju People's Uprising

George Katsiaficas

The role of the May 18 Institute in the international comprehension of the events of 1980 is not simply confined to the academic arena, although that is the primary place where the Institute has had an impact. Through its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s, the Institute has brought researchers from more than 18 countries to Korea, where they have learned not only facts about the uprising but have had a chance to visit Mangwoldong cemetery, to experience Gwangju's vibrant civil society and to meet participants in the uprising.

In my remarks today, I will begin by mentioning some of the more prominent English language accounts of Korean history and comment upon the place that they ascribe to the Gwangju Uprising. By English-language accounts, I mean books originally published in English. Some Korean language books have been translated, most notably Lee Jae-eui's history of the uprising. But my focus is to try to help us understand the depth with which 518 has been understood as central to Korean history by foreigners.

Despite Korea's rich history of uprisings, they are seldom adequately addressed in Korean studies. In one of the most popular English-language histories, Korea's Place in the Sun, Professor Bruce Cumings, the foremost American Koreanist, devotes only one page to the Gwangju Uprising of more than 500 pages in his book. He has only one paragraph on the June 1987 uprising. Thus, the two key events that overwhelmed the military dictatorship and won democracy are practically ignored. Moreover, Cumings mistakenly tells us the 1987 uprising lasted 10 days, from June 10 to 20, when, in fact, people sustained it for nineteen days—from June 10 to 29—and would have continued longer if the dictatorship had not capitulated to their insistence upon direct

presidential elections.[8] Cumings also places the Buma Uprising in August and September 1979, when it occurred from October 16 to 18. He informs readers that Chun Doo-hwan was forced from office in June 1987 (while he actually finished serving the remainder of his term until January 1988).[9] Inattention to detail may be excused, but Cumings' work reflects a broader sense in which uprisings are not understood as a major variable in the constellation of forces that shaped modern Korea. As I discuss below, a Eurocentric view of civil society contributes to this problem.

Martin Hart-Landsberg's insightful book, The Rush to Development, offers only a few paragraphs on Gwangju and two sentences on the June Uprising. Sadly, in Koo's important book, Gwangju 518 is mentioned only once, and while on that topic, he twice mentions the 517 military coup as having enormous influence on Korean history but does not comprehend the significance of 51 8.[10] Hagen Koo claims most people arrested during the June Uprising were workers, an inaccurate statement. Linda Lewis's impressive work treats Gwangju's movement as victims of violence rather than subjects of history.[11]

Given the marginalization of 518 in mainstream American histories, I believe the main tasks ahead for the May 18 research are threefold:

1. To transcribe and translate recordings (both audio-video and simply audio) of the seven rallies in liberated Gwangju from May 22 to May 26
2. Theoretically to challenge the Eurocentric assertion of what constitutes "civil society" because of its role in ascribing to the United States a predominant role in Korean democratization while minimizing the role of the Korean minjung
3. Empirically to challenge and refute the myths currently circulating of North Korean influence on the uprising

---

8) Bruce Cumings, Korea's Place in the Sun: A Modern History (New York: Norton and Co., 1997), 387

9) Bruce Cumings, "Civil Society in West and East," in Korean Society: Civil Society, Democracy, and the State, ed. Charles Armstrong (London: Routledge, 2007)

10) Hagen Koo, Korean Workers: The Culture and Politics of Class Format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1), 120.

11) Linda Lewis, Laying Claim to the Memory of May: A Look Back at the 1980 Kwangju Uprising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2); Juna Byun and Linda Lewis (editors), The 1980 Gwangju Uprising After 20 years: The Unhealed Wounds of the Victims (Seoul: Dahae Publishers, 2000).

1. To transcribe and translate recordings (both audio-video and simply audio) of the seven rallies in liberated Gwangju from May 22 to May 26

At the heart of the meaning of the 518 uprising were the love and solidarity of citizens for each other. The seven rallies that occurred in liberated Gwangju from May 22 to May 26 may provide textual data for these emotions. Using careful CA (conversation analysis) to minutely study the discursive patterns of the rallies could be a fruitful avenue of inquiry. As far as I know, little comprehensive work has been done to outline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hese events: the number of participants, the times of the rallies, the points discussed, and the outcomes of the discussions. In Asia's Unknown Uprisings, I attempted to develop a typology of these rallies, which I reproduce below.

Table 1: Rallies in Liberated Gwangju

Date	Time of Rally	# People	Topics/notable events
May 22	Afternoon	30,000-40,000	Huge meandering discussion
May 22	5 p.m.-7 p.m.	>100,000	Homage to the dead Citizens' Settlement Committee announced results of negotiations; Vice-Governor Chung chaired; 8 negotiators introduced; Chang Hyu-dong "give up weapons"—jeered; Kim Jeong-bae took mic and was cheered when he declared the need for resistance. CSC backed off stage. Leaders of the two major gangs in Gwangju—Obi and Hwasun—addressed the rally and declared cooperation with the struggle
May 23	10 a.m. 11 a.m. 11:30 a.m.	50,000 50,000 to 100,000	"1st Citywide Rally" scheduled for 3 p.m. but began at 11:30 a.m. because people came and began it; Kim Tae-jong presided; Donations of Love for the Injured collected; 1 p.m.: Kim Chang-gil returned with 34 prisoners exchanged for 200 rifles; Kim also

	3 p.m.	150,000 100,000+	brought a secret army explosives expert who removed detonators; Student Settlement Committee: Decision to collect arms—2,500 guns collected (50% of the 5,400 seized)
May 24	2 : 3 0 - 6 p.m. 3 p.m.	100,000 Pouring Rain	"2nd Citywide Rally": crowd against CSC—people demand details; CSC refuses to allow use of sound system; unplugs rally loudspeakers; no electricity so tear gas truck used; Chun effigy burned; 7 p.m. SSC meeting: Yoon Sang-won and Jeong Hae-jik criticize Kim Chang-gil. Afterwards YWCA meeting. After that at Posong Construction Company.
May 25	3 p.m.-7 p.m.	50,000	"3rd Citywide Rally": Demand for SC to resign; local problems discussed 9 p.m. Kim Chang-gil leaves Province Hall Citizens-Student Struggle Committee formed
May 26	10:30 a.m.	30,000	"4th Citywide Rally": demand for "new government of national reconciliation"; 30,000 people marched to cordons and called for "direct democracy." Military helicopter circled overhead, dropped leaflets
May 26	3 p.m.	30,000	"5th Citywide Rally": Organizers announced that the military would soon attack; demonstration of 6,000 led by high school students.

I hope the above table serves as a starting point for others who can painstakingly constructs of very detailed outline of the rallies.

In my view, the rallies corresponded to the ideal speech community discussed by German philosopher Jürgen Habermas.[12] In this discourse, everyone was equal, and all could enter public space; disagreement and debate were uncensored, the debate was political and highly moral, and the context was rooted in the vital to needs of the lives of citizens. The space in liberated Gwangju was as close as reality has come to Habermas's ideal-typical public sphere. One of the most meaningful tasks ahead for the May 18 could be to

12) See his book, Communication and the Evolution of Society (Boston: Beacon Press, 1984).

transcribe tapes that were made of the daily rallies and also to translate them into English so that foreign researchers can attempt to do conversation analysis of these rallies. Some Korean analysts (including distinguished scholar Choi Jungwoon) insist the rallies were not forms of direct democracy but rather simply public arenas for exhortation and encouragement, not arenas in which controversies could be openly discussed and resolved. This is a question that needs to be studied through CA.

2. Theoretically to challenge the Eurocentric assertion of what constitutes "civil society" because of its role in ascribing to the United States a predominant role in Korean democratization while minimizing the role of the Korean minjung

518 was a gift of Korea's deeply rooted civil society. The economic marginalization of the Honam region through the military dictatorship's industrialization along the Seoul to Busan corridor had a positive effect in so far as Honam's traditional cultural bonds remained intact. In other parts of Korea the extended family was shattered, regional dialects disappeared, and group solidarity quickly turned into the struggle for individual enrichment.

In my view, two great myths about Korean democratization have been widely propagated. Both accounts diminish or even dismiss the importance of South Korean civil society.

The first is the nonsensical allegation of North Korean involvement in 518. This is a pernicious and false allegation to which I will return below. More insidious and destructive, however, is the myth of the Carnegie Council and others that it was the United States and Roh Tae-woo who brought democratization to Korea in 1987. Roh and Gaston Sigur are hailed as a champion of democracy while the minjung of Koreans, who risked life and limb during 19 consecutive days of illegal protests, disappear from history.

Let's set the record straight. At the beginning of 1987, the U.S. government believed Chun was going to serve out his term in 1988 and expected him to

appoint a suitable successor. A secret 1984 Blue House report, "Study of the Peaceful Turnover of Political Power," considered a four-phase plan to permit elections only in the year 2000. When U.S. Secretary of State George Schultz visited Seoul in early 1986 and again in 1987, he supported a delay in the transition. Clearly, at the beginning of 1987, U.S. policymakers thought their Korean assistants would be able to manage to stay in power for many years to come. Massive protests would soon cause the American position to change, but the history they wrote emphasized their own role in bringing democracy to Korea.

During the June Uprising, early street victories won by protesters clearly alarmed Chun. He ordered the Army, Air Force, and Navy to be ready to mobilize, and reviewed plans to implement martial law. On June 10, the ruling party had labeled the demonstrations "overt violations of basic order" and publicly hinted at the possibility of martial law. U.S. Ambassador Lilley attended the ruling party's convention where Roh was nominated—a clear public signal of U.S. support for Chun's orchestration of Roh's succession. On June 15, Roh Tae-woo—as the dictatorship's official candidate to succeed Chun—told the central executive committee of the ruling party "violent demonstrations that may shake the national principle from its roots cannot be tolerated."

Top U.S. officials worried. On June 18, US president Reagan sent Chun a letter cautioning him not to use the military. He urged a resumption of negotiations with opposition parties. The next day at 4:30 in the afternoon, only a few hours before ROK troops were scheduled to deploy, Chun suspended the mobilization plan.[13] Interviewed in his home by a sympathetic analyst in 1998, Chun maintained that U.S. pressure, evident in Reagan's letter and in a personal meeting he had with U.S. Ambassador Lilley on June 19, was the key reason for his cancellation of his order to deploy army units to urban areas. In his meeting with Chun, Lilley warned that martial law might provoke another Gwangju Uprising. To emphasize U.S. concerns, Reagan dispatched Gaston

13) Kim Yong-cheol, "The Kwangju Uprising and Demilitarization of Korean Politics," in 5-18 관련 논문과 작품 영역 및 저술 사업: 2001. 5-18 20주년 기념 학술연구사업 연구 소위 (Gwangju: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2001).

Sigur as a special envoy for the second time on June 22. The following day, Sigur reiterated to Chun in no uncertain terms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not support a military crackdown as they had in 1980.

Looking back at the June Uprising and Korea's turn to democracy, the prestigious Carnegie Council on Ethics and International Affairs concluded that Roh Tae-woo was the key figure in the transition from dictatorship to democracy. Following a long line of thinking that Great Men of history are its motor force, the transition was analyzed in terms of personalities. The widespread misconception among U.S. elite policymakers that Korea's democratic transition was "elite-led" serves to justify the Chun dictatorship as benign, superior to Chinese Communist autocrats,[14] and deemed Roh Tae-woo a participant in the democratization movement—rather than his actual position as its enemy.

Eurocentric views of civil society help to explain these mistaken understandings. The Carnegie report explicitly stated that Korean "civil society was weak," and the

Gwangju Uprising and June protests of only marginal significance. The Carnegie Council believed Korean civil society was weak, but empirical history (from the April 19 overthrow of Rhee to the Gwangju and June Uprisings) reveals the critical role of civil society in overthrowing U.S.-imposed military dictatorships.

With their Eurocentric ideology overriding facts, the Carnegie Council reported: "President Roh has successfully led the country through these changes [Korean democracy]." Gaston Sigur, President Reagan's special envoy to Korea in 1987, contributed an article to the report in which he affirmed that, "Roh led Korea toward a full-blown democracy"; Roh "curbed the power of the police"; his policies "included the freeing of labor."[15] Such experts

14) See Jung-kwan Cho, "The Kwangju Uprising as a Vehicle of Democratization," in Contentious Kwangju: The May 18 Uprising in Korea's Past and Present, ed. Gi-Wook Shin and Kyung Moon Hwang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2003), 76-77.

15) Gaston Sigur, "A Historical Perspective on U.S.-Korea Rel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Korea 1987-1992," in Democracy in Korea: The Roh Tae Woo Years, ed. Carnegie Council (New York: Carnegie Council on Ethics and International Affairs, 1992), 9-17.

completely conflate fact an ideology because of their understanding of civil society. The Carnegie Council report included statements like, Korean values are "incompatible with democracy" and Korean people are "uncomfortable with democracy" and want "to be ruled by an elite."

Whatever their differences, U.S. liberals like the Carnegie Council, conservatives like Samuel Huntington, and critical thinkers like Cumings share an underestimation of the significance of Korean civil society. This diminution of Korean civil society and the blaming of Korean character, present in even some progressive accounts of Korea, follow in the footsteps of a century of subordination of Korea to U.S. and Japanese interests.

For Bruce Cumings, Korean civil society was asleep and "began to waken again with the February 1985 National Assembly elections." Like Gregory Henderson, Cumings believes traditional Korea did not enjoy a strong civil society: "in the Republic of Korea strong civil society emerged for the first time in the 1980s and 1990s, as a product and also a gift of the extraordinary turmoil of Korea's modern history." Cumings' understanding of civil society mistakes European images of it for its universal appearance, specifically in the notion of the autonomous individual and Western forms of civil society. Cumings invokes Habermas's ideal speech community, believing "intellectuals are the primary carriers of a self-conscious civil society," but he somehow fails to consider Korean intellectuals in Gwangju during the 1980 uprising or traditional Korean intellectuals in private academies. For him, like Habermas, a Eurocentric frame leads to hypostasizing the Western individual and developing universal categories based upon the assumption that the historical trajectory of Europe defines that of every society.

Cumings believes that civil society exists between the state and the mass of people, not in the actual relationships among people in their daily lives. He also ascribes too much power to government: Park Chung-hee's coup was an act of "shutting down civil society" and "civil society began to waken again with the February 1985 National Assembly elections." Like many Western democratization theorists, he believes Japan became a democracy after 1945 and South Korea after 1993. The paths of these two countries to parliamentary

democracy were quite different. Great struggles emanating from civil society won democratic reform in Korea—unlike in Japan where the electoral system was mandated by the US from above. Nevertheless, Cumings believes "the ROK still falls short of either the Japanese or American models of democracy and civil society" because of the continuing existence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NSL)—the 1948 measure derived from a Japanese model under heavy pressure from the United States.[16] Without any doubt, the continuing division of Korea distorts many aspects of its political and economic life. Yet the NSL is an instrument of state power and has little to do with the strength of civil society. Rather than understanding civil society as something that can be shut down by a dictator or reawakened in elections, civil society is a vast web of relationships in ordinary people's everyday lives, not a dependent variable of government or marketplace.

Emphasizing the role of civil society might also help to de-mythologize multinational Korean corporations, whose reputations have been enhanced by international knowledge of the May 18 uprising. Clearly Korean people's actions in fighting for and winning democracy are an inspiration not only to Asians but also to Africans, Latin Americans, and also Europeans and North Americans. Propagation of the news of the qualm to uprising therefore helps to build a mystique about Korean People's love of freedom. At the same time, however, Korean corporations seeking to maximize profits in their overseas ventures often have terrible reputations for maltreatment of workers through authoritarian and sexist practices, underpayment or nonpayment of wages, and even use of violence or the threat of violence against employees. Delinking Korean corporate interests from 518 is an important task.

16) For Cumings statements, see Cumings, "Civil Society," in Civil Society in West and East," in Korean Society: Civil Society, Democracy, and the State, ed. Charles Armstrong (London: Routledge, 2007) 9, 17, 22-24, 26.

3. Empirically to challenge and refute the myths currently circulating of North Korean influence on the uprising

Although it is a very important contemporary issue for 518 in Korea, I will not go into much detail about very ridiculous statements currently circulating here about the North Korean influence on the events of 1980. Almost all English-language accounts of the uprising understand clearly that North Korea's influence was minimal or nonexistent. At the time the American Embassy's internal documents made quite clear that North Korea was not involved. The Embassy voiced concern, however, that media censorship by the Chun Doo-hwan dictatorship caused more South Koreans than ever to listen to the North's radio reports about events in Gwangju. Beginning about ten years ago, right-wing web sites began propagating false stories about 518. Last year, after publication of Kim Dae Ryung's book claims no citizens were killed in Gwangju by the ROK army and that the uprising was remotely controlled by North Korea, right-wing forces have accelerated their campaign of distortions. The book cunningly distorts history. It is vital that its fabrication of "facts" be empirically challenged.

Even a glance at 26 years of research about 518 leaves little doubt of the enormous influence of the Gwangju People's Uprising all over the world. The 518 Memorial Foundation, the May 18 Research Institute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nd a handful of other organizations have been instrumental in spreading news of the uprising, or "globalizing 518."

English-Language Bibliography

Charles Armstrong (editor), Korean Society: Civil Society, Democracy and the State (London: Routledge, 2002)

Juna Byun and Linda Lewis (editors), The 1980 Gwangju Uprising After 20 years: The Unhealed Wounds of the Victims (Seoul: Dahae Publishers, 2000)

Bruce Cumings, Korea's Place in the Sun: A Modern History (New York: Norton, 1997)

George Katsiaficas, Asia's Unknown Uprisings Vol. 1: South Korean Social Movements in the 20th Century (Oakland: PM Press, 2012).

Martin Hart-Landsberg, The Rush to Development: Economic Change and Political Struggle in South Korea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93)

Martin Hart-Landsberg, Korea: Division, Reunification, and US Foreign Policy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98)

Kyun Moon Hwang and Gi-Wook Shin, (editors) Contentious Kwangju: The May 18th Uprising in Korea's Past and Present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2003)

Hagen Koo, Korean Workers: The Culture and Politics of Class Format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1)

Namhee Lee, The Making of Minjung: Democracy and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in South Kore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7)

Linda Lewis, Laying Claim to the Memory of May: A Look Back at the 1980 Kwangju Uprising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2)

Kenneth Wells (editor), South Korea's Minjung Movement: The Culture and Politics of Dissidence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5)

[5·18민중항쟁 36주년 기념학술대회 라운드 테이블 토론문]

‘5·18의 불기둥인 저항권을 일궈야 한다’ “5·18연구소 20년과 5·18연구”(최정기)의 토론문

서 승(리츠메이칸 대학)

‘5·18연구소와 5·18연구’의 문제점→5·18의 성격 규정과 연구설계의 문제
1996년부터 2000년대 중반이 가장활발하게 5·18연구가 진행,
5·18의 보편화를 추구한 결과 ‘인권, 평화, 민주주의’로 주제가 확장,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수준으로 확장
그러나 ‘이들 연구와 5·18연구 사이에 여전히 간극’(6)

5·18연구의 한계
여러 연구기관과 연구의 통합과 조직화가 부재
전문연구자의 연계와 조직화가 미흡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전망을 갖는 5·18연구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16)

5·18과 나의 관련→2000년 ‘동아시아 냉전과 국가테럴리즘 국제심포지엄’, 2010년 광주민중항쟁30주년 기념 일본평화학회 특별 심포지엄(광주) 개최, 2013년 5·18세계인권토시 선언심포지엄에서 ‘국가폭력과 광주인권도시’발제,

5·18은 무엇인가?
동아시아 인권선언→세계인권선언토시→보편성, 세계화, 보편적 인권의 담론이 필요한가?
5·18은 (근대) 동아시아사, 우리나라 역사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의 맥락에서 일어난 사건이다→친일·친미(제국주의 헤제모니) 파시스투와의 투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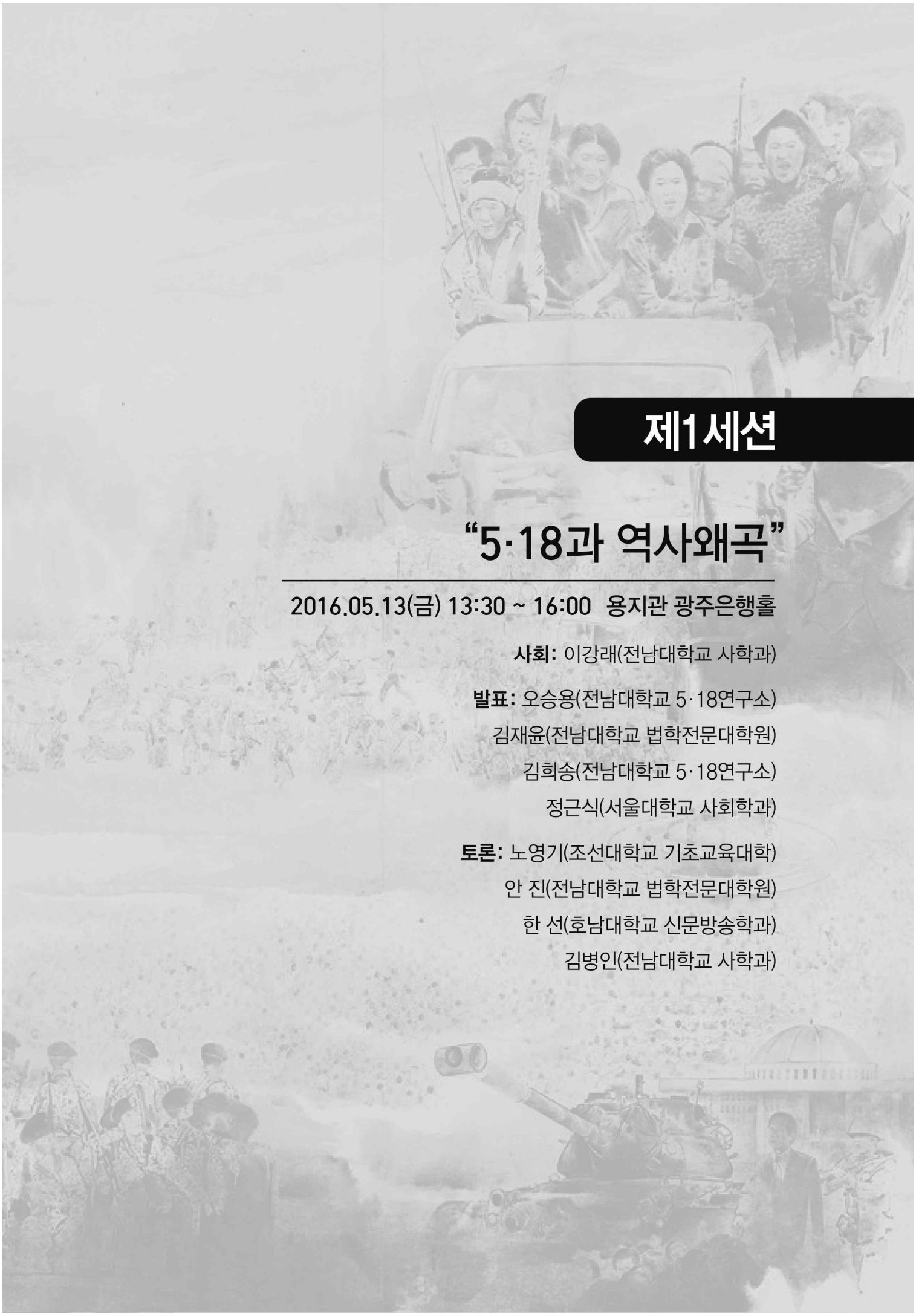
저항권→’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또 어떠한 형태의 정부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변혁 내지 폐지하여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다’
인민이 주권자임을 명시

인권=공건력에 대한 통제권, 공권력에 대한 인민의 우위의 담보

미국독립전쟁, 프랑스혁명, 러시아혁명, 구바혁명, 월남민족해방투쟁, 조선민족해방투쟁, 대일전쟁승리70주년의 시진핑의 연설(대일전쟁 승리는 '근대 이후, 외세의 침략에 반대하여, 처음으로 완전히 승리한 민족해방전쟁')

저항권을 모든 연구의 기둥으로 삼을 수 있다.

동아시아의 반제민족해방투쟁, 저항권의 행사를 기둥으로 하는 세계적, 동아시아적 연구를 전개해야 한다.



제1세션

“5·18과 역사왜곡”

2016.05.13(금) 13:30 ~ 16:00 용지관 광주은행홀

사회: 이강래(전남대학교 사학과)

발표: 오승용(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김재윤(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희송(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정근식(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노영기(조선대학교 기초교육대학)
안 진(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 선(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김병인(전남대학교 사학과)

5·18민주화운동 왜곡의 심화: 분석과 대안

오승용(전남대학교 5·18연구소)

1. 들어가는 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이 심화되는 오늘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해야할까? 하나의 단어만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적확하게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 얼핏 봐도 현재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하면서도 난해한 상황으로 보인다.

먼저, 현재의 상황은 복잡한 상황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상황이 가능했던 것은 역설적이지만 정치적 민주화가 진전된 결과였고, 기술적으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덕분이며, 문화적으로는 사회 극단화의 심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왜곡을 주도하는 주체들은 단일 행위자라기보다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사회적 맥락에서 왜곡의 주체(행위자)로 호명되거나 형성되고 있으며, 다원적 주체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은 복잡한 상황의, 복잡한 분석이 필요한 문제다.

권위주의 정권의 퇴진과 민주정부의 등장은 한국사회 보수 세력에게 체제의 소수파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생성시켰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보수세력의 결집 도모와 함께 한국 보수 세력의 역사적 정당성을 재정립하고자 했다. 그러한 시도의 결과가 보수판 '역사바로세우기'였고, 그 핵심이 민주화운동으로서의 5·18항쟁에 대한 보수주의적 재평가였다. 이러한 재평가를 주도하는 이들은 초기에는 권위주의 시절 관변단체나 극우 언론인 등 소수에 국한되었으나 시민사회의 분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보수적 시민운동과 정치운동 단체들이 폭넓게 참여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지식과 정보의 수집과 조작, 재해석이 훨씬 용이하게 된 측면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애초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정보통신기술은 쌍방향성을 매개로 사회적 소통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집단적 극단화(양극화)를 강화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타진요)'나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오늘의 유머'(오유) 등의 사이트가 대표적이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개인 미디어,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렸고, 사회관계망(SNS)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개인주의 문화가 더욱 강화되고 이러한 개인주의 문화의 강화가 사회적 소통을 편협하거나 불균등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러한 소통의 편협성과 불균등성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현상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

정할 수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복잡한 사회적 변화의 과정과 연계되어 있고, 단일요인이 아닌 다변인, 일차원적이 아닌 다차원적으로 중층화된 정치사회적 문제다.

다음으로, 현재의 상황은 위험한 상황이다. 필자는 현재의 상황을 집단 극단화(양극화)와 이로 인한 사회세력 간 충돌의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진단한다. 그리고 일베, 뉴스타운 등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사이트가 존재하고 있는 사이버공간에서 이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세력과 혐오하고 배척하는 세력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사이버 발칸화(cyber Balkanization)가 심화될 수도 있다고 본다. 사회적 통합과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현상은 매우 심각하고 위험하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집단극단화가 보수의 사회적 세력화과정에서 우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진보진영의 세력화에 대한 반작용과 보수의 대응의 결과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특히 사이버공간에서의 집단 극단화를 상징하는 일베 등 5·18민주화운동 왜곡 사이트 참여자들은 진보주의자들에 의해 지배되던 사이버공간에서 배척과 폄하, 조롱을 경험한 자칭 피해자들이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진보와 보수 그 어디에도 상대방에 대한 관용과 배려, 이해는 찾을 수 없다. 극단적인 혐오와 증오, 왕따와 조롱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 특히 5·18왜곡 사이트들은 보수주의자들의 영향력과 세력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사이트라는 점에서 사이버공간에서 우리사회의 이념갈등과 남남갈등이 압축적으로 재현된 곳인데, 단순히 사이버공간에서만 그 파장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5·18특별법 위헌 서명운동과 '임을 위한 행진곡 퇴출'과 같은 행동으로 언제든지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는 통합의 정치에 역행하는 분열의 정치, 사랑의 공동체가 아닌 증오의 공동체, 사이버 유토피아가 아닌 사이버 디스토피아의 징후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사회현상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상황은 대단히 난해한 상황이다. 솔루션을 찾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찾는다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그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은 사실과 증거자료의 발굴과 제시의 문제라기보다는 제시된 사실관계를 자신들의 이념적 틀과 잣대에 따라 해석하고 재해석하여 지지자를 결집시키고 상대방을 공격함으로써 사회적 여론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한국 현대사를 다시 쓰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사실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신뢰의 문제라는 이야기다. 극보수주의자의 흰소리로 치부하여 무시할 경우 걷잡을 수 없이 왜곡이 확산될 수 있다. 그렇지만 왜곡담론을 반박하는 사료와 증언을 발굴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며, 왜곡내용을 생산하고 유포시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소송·고발과 같은 사법적 수단을 동원한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복잡한 맥락에서 발생한 사회역사적 문제이기 때문에 복잡다단한 해결과정을 거쳐야 하는 난해한 문제인 것이다. 하나의 조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만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있다. 그 핵심은 결국 '행동하는 보수의 양심'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권위주의 정권과 행정부에 대한 압력을 통해 항쟁의 제도화를 진전시켰던 5·18 단체에게 5·18왜곡은 마치 등애처럼 귀찮고 처리가 쉽지 않은 문제다. 5·18왜곡은 상대적으로 쉬운 경로를 통해 이행해온 제도화 프로세스를 전도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정치운동이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시민사회 내부에서 자율메커니즘에 따라 작동하는 일반적 현상이 되었다. 우리는 5·18민주화운동 왜곡이라는 객관적 상황을 인정하고 감정적인 대응을 넘어서는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에 열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기원과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보수 세력에 의한 5·18 왜곡담론의 역사적, 논리적 기원을 추적한 후 이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과 흐름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5·18민주화운동 왜곡의 사회적 기원

현재 횡행하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왜곡의 기원을 파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3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5·18민주화운동 왜곡의 최초 생산자를 추적해야 한다. 5·18항쟁의 성격을 규정하고 5·18항쟁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만들어 유포한 주체는 5·18항쟁에 대한 강경진압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이었다. 신군부는 5·18왜곡의 최초 생산자로서 5·18항쟁 이전부터 북한의 남침위협을 강조하는 한편, 5·17비상계엄령 전국 확대의 명분을 찾기 위해 골몰했다(노영기 2013). 5·18항쟁이 발발하자 이를 불순분자의 선동에 의한 시민폭동으로 규정하고, 계엄군의 살인적인 진압은 은폐했으며, 시민들의 정당한 저항은 왜곡했다. 특히 국방부 과거사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군부의 권력찬탈을 위해 복무했던 보안사(505보안대 포함)는 광주에서 아직까지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특수 활동을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과거사위 2007). 신군부의 지시를 받은 보안사가 중심이 되어 수행한 특수정보활동의 실체를 밝힐 수는 없지만, 이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들은 일부 있다.

신군부가 어떤 정치적 의도에서 5·18항쟁을 어떻게 왜곡했는가를 규명하면 5·18항쟁 왜곡의 전체적인 윤곽을 그려볼 수 있다. 실제로 현재 보수 세력들이 주도하는 5·18민주화운동 왜곡담론들은 북한 특수부대 침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내용이 1980년 5·18항쟁 당시 신군부가 생산·유포했던 내용들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보수 세력의 5·18민주화운동 왜곡은 신군부의 5·18항쟁 왜곡을 정교화 하는 작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둘째, 5·18항쟁 왜곡의 유통경로를 살펴봐야 한다. 1980년 당시 언론(방송, 신문 등)은 5·18항쟁 왜곡 담론 유통의 매개체였다. 언론이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사회적 동의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신군부의 5·17비상계엄령 전국 확대의 정당성, 계엄군의 살인진압 정당성 부여, 신군부의 권력 장악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군부가 언론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했던 사례는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동의의 토대를 구

축하는 기제로서 1980년 당시 언론이 수행한 역할과 지금의 인터넷 매체가 수행하는 역할은 5·18민주화운동 왜곡담론의 유통 및 사회적 의미의 가공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하다.

셋째, 왜곡의 본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보수 세력들 사이에 신앙과 같이 회자되는 5·18항쟁의 발생 원인은 "불순분자의 악의적 선동과 근거 없는 유언비어 확산"이다.[17] 유언비어는 비공식적이라는 특징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의 대안으로 기능하는 측면도 있다. 신군부에 의해 장악된 공식 언론이 계엄군의 살인진압에 침묵하거나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할 때, 민중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때 유언비어는 민중의 언론으로 기능하기도 한다.[18] 유언비어는 기존질서를 부정하고 변화를 지향하는 정치적 언론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배세력의 혐오와 탄압의 대상이다(이효성 1989, 120). 그렇다면 5·18항쟁 당시 유포되었던 소위 유언비어는 보수 세력의 주장처럼 혹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전혀 사실무근의 허무맹랑한 내용들인가? 사실무근의 유언비어가 광주시민들을 호도(糊塗)하여 결과적으로 시민폭동적 상황을 만든 원인이었는가? 어려운 작업이긴 하지만, 만약 5·18항쟁 당시 유포되었던 유언비어를 광주시민들의 항쟁과정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유언비어와 계엄군이 심리전의 일환으로써 의도적으로 유포한 유언비어로 구분할 수 있다면, 유언비어의 진실은 물론 5·18항쟁의 진실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유언비어에 대한 말 그대로의 내용분석이 필요한 이유다.[19]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폄하는 1980년 항쟁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문제다. 다소의 부침과 강약은 있었지만, 5·18민주화운동 왜곡은 국회 광주청문회를 거쳐 5·18특별법이 제정되고, 5·18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심해진 측면이 있다. 5·18항쟁에 대한 왜곡과 폄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뿐만 아니라 광주시민의 명예, 자존심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시민들을 분노케 했고, 지식인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특히 지만원, 조갑제, 김대령, 전사모 등 뉴라이트 인사와 단체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전개되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폄훼는 그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정부는 공익활동이라는 명분으로 5·18항쟁을 왜곡하는 뉴라이트 단체들에게 정부보조금까지 지급하기도 했다. 이 점에서 5·18민주화운동 왜곡은 보수정권의 상징정책 중의 하나다.

1980년 5·18항쟁 당시는 물론 오늘날 논란이 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다양한 왜곡의 진원지는 신군부다.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에 의해 주도된 '12·12 쿠데타'는 세계사적으로 전례를 찾기 힘든 '다단계 쿠데타'였는데, 신군부는 광주항쟁에 대한 강경진압

17) 유언비어는 일종의 보도·설명·신념·의견이다. 유언비어는 비공식적이라는 특성이 있으며, 그 근거가 불확실하고 대개 구두에 의해 전달됨에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점이다(이효성, 1989: 117).

18) 특히 전쟁이나 혁명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유언비어의 이러한 기능이 도드라진다.

19) 이에 대해서는 오승용 외(2011)의 4장을 참조할 수 있다.

에 성공함으로써 12·12쿠데타의 최종 승리를 선언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집권을 반대하는 정치세력들을 제거할 수 있었다. 신군부는 성공적인 권력 장악을 위해 북의 남침 위험설을 과장·유포하여 국가적 안보위기를 조장하고, 5·18항쟁을 불순세력에 의한 난동으로 규정하고, 항쟁 진압 이후 이를 김대중내란음모사건과 연결시킴으로써 국내의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는데 악용했다. 5·18항쟁은 신군부가 쿠데타를 성공시키는 과정에서 극복해야만 하는 대상이었고, 5·18항쟁에 대한 살인강경진압의 현실은 은폐한 채 철저히 신군부 집권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도구로 활용했다.

국방부 과거사위 조사에 따르면(국방부 과거사위 2007), 보안사는 신군부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의 첨병 역할을 수행했다. 시민군이 도청을 장악하고, 해방공동체를 형성한 바로 그 순간 보안사 특별팀은 도청 근처에 사무실을 차리고 지하정보활동 및 특수임무를 수행했는데, 당시 보안사 특수팀은 시민군 분열공작, 심리전, 유언비어 유포, 광주의 상황에 대한 왜곡허위보고를 통해 5·18항쟁 왜곡의 첨병역할을 수행했다. 이와 관련하여 신군부는 계엄군이 도청에서 퇴각한 직후인 5월 22일부터 편의대를 집중 운영했는데, 자료에 따르면 약 10개조의 편의대가 5월 22일-23일 양일간 운영되었고, 24일-26일간에는 그 이상 규모로 편의대가 운영되었다. 편의대는 시위 군중 속에 잠입하여 시민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시민군의 와해를 위한 여타의 특수 임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신군부는 5·18항쟁을 유혈 진압한 이후 즉각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교재 등을 만들어 5·18항쟁 왜곡에 진력했다. 신군부는 5·18항쟁이 전국의 간첩들이 북괴의 지령을 받고, 잠입하여 파괴방화는 물론 장갑차를 비롯한 각종 차량을 탈취토록 선동하고, 이에 앞장섬으로써 소요사태를 확산시켰고, 광주에 잠입했던 지방의 불순인사들이 시위대를 이끌고 충동질을 한데 기인한다고 타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하면서 5·18항쟁을 왜곡하였다. 신군부와 보안사에 의해 자행된 5·18항쟁에 대한 왜곡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었으며, 광범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신군부와 보안사의 5·18왜곡 실태 사례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5·18민주화운동 왜곡에 대한 대응작업의 핵심이다.

5·18항쟁 과정 중 언론은 매우 모순적인 위치에 있었다. 역사적으로 권력을 가진 자는 체제 유지를 위해 어떤 형식으로든 대중들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의 언론은 신군부의 집권 시나리오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대중들의 동의를 구축하는 역할에 충실했다. 신군부는 때로는 적극적으로 언론을 조작하고 때로는 언론에 위협을 가하면서 대중들의 정치적 동의를 구축해 나갔고 국민들은 '대안이 없다'거나 '국가 안보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식의 생각을 숙명적으로 또는 절망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신군부의 전략을 묵인했다. 광주를 이용해 집권 시나리오를 완성시키려는 신군부의 의도에 따라 언론은 5·18민주화운동을 고정간첩, 불순분자, 깡패들이 주도하는 '폭도들의 난동'으로 규정했다. 이를테면 언론은 5·18민주화운동 발생 첫 소식을 계엄사의 발표문에 의지함으로써 첫 단계부터 언론은 항쟁을 왜곡했다. 주재기자와 취재기자를 통해 진실을 목격하고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언론은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다른 지역 국민들이

5·18민주화운동을 ‘무질서한 폭도들이 저지른 폭력적인 시위 사태’로 오해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잘못을 저질렀다. 언론은 또한 학생들의 시위가 과격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시민들이 학생들과 동조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본질적인 이유인 ‘공수부대의 의 무자비한 과격진압’이나 ‘군의 집단 발포’ 등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대신 ‘공수부대의 과격한 진압’과 ‘집단 발포’를 일관되게 부인했던 신군부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충실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시위대가 오히려 군을 공격해 군이 피해자인 것처럼 오해하기도 했다. 일부 중앙지의 5·18민주화운동 발발 첫 소식이 군경의 사망자 수가 시민의 사망자 수보다 더 많다고 한 것이나, 관공서나 방송국의 방화 사실만을 부각시켰다. 게다가 언론은 신군부의 주장이나 발표를 그대로 옮기면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만들기도 했다. 한 중앙지의 경우 ‘어린아이들을 앞세워 교도소를 7차례나 습격했다’는 터무니없는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다. 또 ‘광주항쟁을 폭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남파 간첩이 광주에 침투했다’는 식의 유언비어에 가까운 신군부의 발표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5·18민주화운동에 동참했던 광주시민과 학생들의 진정성을 모욕하고 왜곡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신군부와 언론이 합작해 만든 왜곡과 침묵으로 일반 국민들은 5·18민주화운동을 ‘일부 폭력적인 시위대가 무기를 탈취해 관공서 등을 파괴하는 무질서한 광주’로 받아들였고, 따라서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안정시키지 않고서는 한반도의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자위권’ 발동했다는 신군부의 논리에 수긍했던 셈이다.

1980년 5·18항쟁 기간 동안 발생한 ‘유언비어’는 이 시기 광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왜곡시키는 주요한 매개물이었다. 최근 인터넷에서는 5·18을 “폭도, 빨갱이에 의한 소요사태”라 폄하하면서, 5·18이 폭도와 빨갱이들이 유포시킨 유언비어에 자극받아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 시기 ‘폭도와 빨갱이’라는 사회적 낙인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당사자들에게 죽음의 고통을 재발시키는 것과 동시에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다.

1980년 5월의 ‘유언비어’는 두 가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신군부 세력은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실시’와 동시에 전국의 민주인사와 대학교 학생들을 검거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사전에 준비된 보안사령부 언론반의 검열세부지침에 따라 관련내용은 왜곡되어 보도되었다. 5·18 또한 광주에 투입된 공수여단의 학생 및 시민에 대한 잔악한 시위진압의 실상은 보도되지 않았고, 지역민들의 가열된 시위를 ‘폭도’와 ‘유언비어에 의한 선동’으로 폄하했고, 이에 지역민들은 더욱 분노하였다. 오히려 광주 시내에서 발생한 유언비어와 유인물은 공수부대원의 잔악한 진압을 사실적으로 전달하면서 지역민들에게 ‘대안언론’의 역할을 했다.

5·18항쟁 당시 신군부세력은 광주지역에서의 정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음을 짐작·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전교사의 「작전상황일지」, 특전사령부의 「광주지역소요사태진압작전」 등을 보면 이미 18일부터 계엄사 측은 광주지역에서 첩보 및 정보수집 활동을 통해 광주 지역에서의 유언비어를 수집했고, 더불어 사복수사관 등 ‘편의대(군내 사복정보원)’의

활동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보고서들도 다수 있다. 실제 계엄사는 수집된 유언비어를 통해 "광주사태"를 언론에 보도하게 하면서도 계엄군의 과잉진압은 은폐하고자 했다.

5·18과 관련한 사실관계에서 당사자들의 목격담과 같은 증언은 신뢰도가 높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와 연구 성과들을 당사자들의 증언과 비교해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오승용 2011 참조), 공개된 정부 및 군측 자료들이 전두환정권기 군부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폐기되었던 반면, 당사자들의 증언은 시위대의 입장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증명해 주었다. 예컨대 21일 도청 앞 집단발포사건의 경우, 계엄군과 시위대 사이의 협상시도 과정, 장갑차 돌진사건(장갑차 탑승인원, 사상자 및 사망자 등), 시위대 무장 등 군측 자료의 내용과 대부분 일치할 뿐만 아니라, 군측 기록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당사자들의 증언들은 보다 구체적인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다. 1980년 5·18항쟁 시기 '유언비어'는 그것이 발생하는 일련의 조건들이 있으며, 그 내용들 또한 사실과 전혀 무관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5·18민주화운동 왜곡담론의 기원은 1980년 5·18항쟁이 발생하면서 시작되었다. 신군부세력은 자신들의 집권과정을 반대하는 광주 시민들에 발포하며 학살을 자행했다. 동시에 광주에서 발생한 시민들의 저항활동을 유폐시키고자 이들의 행위가 불순분자, 폭도의 선동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왜곡·폄하하였다.

이러한 5·18민주화운동 왜곡담론은 신군부 내 보안사를 중심으로 계획되었고, 주요언론을 통해 유언비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유포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5·18시기 유언비어는 계엄군의 잔악한 진압 그리고 집단발포와 같은 학살의 사실들을 시민들이 목격하고 경험하며 형성되었던 '대안언론', 즉 집단지성의 결과물이었다. 그리고 그 내용 또한 대부분 사실에 근거하고 있었다.

3. 누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가?

1) 5·18항쟁 당시의 왜곡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최초의 왜곡은 신군부에 의해 이루어졌다. 항쟁이 발생하자마자 신군부는 항쟁을 불순세력의 선동에 의한 폭동으로 간주했고, 심지어 전국의 간첩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시위현장에 잠입하여 광주시민을 선동하여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과 담화문을 통해 발표하기도 했다. 아직도 1980년 당시 권력찬탈에 앞장섰던 신군부 인사들은 5·18민주화운동의 원인이 불순분자의 왜곡된 유언비어 선동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20] 유언비어가 5·18민주화운동의 원인이라는 신군부세력의 주장

은 일부 진실을 담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이 전남대 정문 앞의 시위에서 시민항쟁으로 발전해 가는데 있어 신군부가 유포했던 유언비어는 광주의 진실을 왜곡하고 사태를 악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시민들의 유언비어가 문제가 아니라 신군부와 계엄군이 퍼트린 유언비어가 문제였다. 즉 광주에서 벌어진 시민학살의 진실을 왜곡하고, 광주시민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신군부의 유언비어가 5·18민주화운동의 확산에 진정한 책임이 있다. 신군부가 이처럼 광주에서의 진실을 왜곡시키는 유언비어를 유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광주에서의 보안사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 본론에서 언급하겠지만, 보안사는 5·18항쟁이 발발하자 광주에 파견되어 신군부의 진압작전과 대국민 왜곡선전을 주도하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으나 정확한 활동의 규모와 실상은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1980년 당시 광주항쟁에 대한 왜곡은 방송과 신문 등 기성 언론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사실 언론을 통한 왜곡의 반복 재생산은 5·18민주화운동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광주사태' 혹은 '광주폭동'으로 국민들에게 기억되도록 만들었다. 신군부와 언론은 항쟁기간은 물론 항쟁이 끝난 후에도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 혹은 '광주폭동'으로 끊임없이 호명했다. 특히 언론은 신군부의 지침을 충실히 따르면서 5·18민주화운동을 "불순분자의 조종을 받은 폭도들의 난동"으로 규정했다. 언론이 5·18항쟁을 왜곡했던 사례들은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조선일보는 광주의 상황을 '폐허'로 지칭했고, 경향신문은 '난동'으로, 동아일보는 광주시민들에게 '이성'을 찾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동아일보, 1980. 5. 26). 언론을 통해 유포된 신군부의 유언비어는 5·18항쟁에 대한 대중의 기억을 조작하는 효과를 유발했다. 물론 언론은 신군부의 이른바 '보도지침'에 따른 불가피한 보도였다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언론사는 어떠한 저항노력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앞장서서 광주항쟁에 대한 신군부의 입장을 옹호하고 왜곡을 증폭하는데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전두환에 대한 개인적 찬양에도 열을 올렸던 행적은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아 있다.

1980년 5·18항쟁 당시 언론의 왜곡보도를 제외한다면, 1990년대 중반까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담론의 주요 생산자는 신군부 인사의 개인적 발언이나 일부 보수언론의 근거를 확인하기 힘든 왜곡 보도에 국한되고 있었다. 그러나 1997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컴퓨터 통신의 발달과 인터넷의 대량 보급으로 인해 왜곡 담론의 생산은 신군부 세력이나 기성 보수언론에 국한되지 않고,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했다. 오히려 주류 언론의 경우 법적·윤리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보도 내용에 제약이 따르지만, PC 통신이나 인터넷 매체는 그러한 법적·윤리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상식을 뛰어넘는 왜곡내용이 생산, 유통되고 있다.

---

20) 노태우는 최근 펴낸 회고록에서 "광주사태의 진범은 유언비어"라며 "'경상도 군인들이 광주 시민들 씨를 말리러 왔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들은 시민들이 무기고를 습격하게 된 것"이라고 회고했다(한겨레신문, 2011. 8. 11).

2) 5·18항쟁 이후의 왜곡

5·18항쟁에 대한 왜곡 시도는 5·18항쟁의 진실규명의 과정과 연동되어 이루어졌다. 진보세력의 진실규명운동에 대한 보수 세력의 왜곡 혹은 '보수식 진실규명' 시도가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작용과 반작용의 메커니즘이 작동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다. 주지하듯이 5·18항쟁의 진실규명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1980년 5월부터 1989년 광주청문회까지의 시기. 둘째, 1989년 광주청문회부터 1998년 특별법 및 재판까지의 시기. 셋째, 1998년 이후 시기가 그것이다. 이에 상응하는 보수 세력의 대응도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각 시기마다 정도의 방법의 차이는 있었지만, 하나의 대당을 형성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선, 5·18항쟁의 진실규명과 왜곡 사이에 어떤 쟁점들이 형성되었는지 간략히 살펴보자.

먼저, 첫 번째 시기는 폭동 대 민중항쟁의 경합 시기였다. 1980년 5월 27일 광주 시민의 항쟁을 무력 진압한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은 5·18항쟁을 "소요, (데모, 소요) 사태, 광주사태, 폭동" 등으로 명명했고, 이러한 명명은 1989년 광주청문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언론 등을 통해 공식화된 보수 세력의 공식 입장이었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지역민의 정당한 저항행위를 북한의 고정 간첩과 김대중의 추종 세력들을 지칭하는 "불순분자들의 책동으로 유발된 폭도들의 무장난동"이라고 폄하했다(계엄사령관의 담화문, 1980. 5. 31). 이는 5·18항쟁의 원인을 '지역감정'으로 왜곡함으로써 1980년 5월의 전국적 민주화운동을 '지역'의 문제, 지역 불순분자의 책동으로 축소·유폐시키고, 집권의 정당성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전략적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1987년 민주화는 보수정권의 5·18항쟁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선회 혹은 후퇴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노태우정권은 계엄군의 과잉진압을 인정하기도 했지만, 시민들의 불법 행위와 과격 행위도 사건의 악화를 초래했다는 양비론 혹은 양시론적 시각을 고수했다. 이 시기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곧 보수 세력의 입장이었으며, 보수적 시민사회가 독자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도, 역량도 갖추어지지 않았던 시기였다.

1988년 7월 국회에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5·18항쟁 진실규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특별위원회는 1988년 7월 8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 이래 1989년 12월 30일까지 총 32회의 전체 회의를 개최하면서 5.18에 관한 사건들을 조사하였다. 특별위원회 활동의 성과로 '광주청문회'가 구성되었으며, 사건의 관련자들이 국회에 출석하여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진술해야만 하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광주청문회는 5·18항쟁의 주요 쟁점들을 공개적으로 전국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지만 발포명령계통과 지휘체계의 이원화 배경, 민간인 사망자의 규모, 미 행정부의 역할과 책임문제 등 다수의 사안들에 대한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한계를 노정

한 데에는 신군부의 일원이었던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집권하던 시기였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정권 차원에서 광주청문회에 조직적으로 대응하면서 5·18항쟁에 대한 왜곡 내용이 이전 시기보다 논리적 허점들을 보완하고, 내용적 보완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즉 이 시기는 5·18항쟁 왜곡의 밀도(密度)가 이전시기 보다 훨씬 높아지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1995년 박계동 의원에 의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정축재 내용이 국회에서 폭로되면서 정국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이에 김영삼 대통령은 5.18특별법 제정 지시를 내렸고, 이에 의거하여 '12.12 및 5.18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었다. 이로부터 이틀 만에 두 대통령이 전격 구속되었고, 이들에 대한 사법적 처벌을 위한 조사와 재판이 진행되게 되었다.[21] 5.18특별법에 의거한 조사 결과, 재판 도중 사망자를 제외한 15명에 대한 처벌이 1997년 4월 18일 대법원에서 이루어졌다. 주요하게 적용된 죄목은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이었다.

이 사건은 5·18항쟁에 대한 보수 세력의 사고와 태도를 전환시킨 계기가 되었다. 5·18항쟁의 진실규명과 제도화에 대한 보수 세력의 조직적 대응은 사실 이 시기부터 본격화되었다. 이전 시기의 대응이 정권 차원의 공식적 대응과 보수적 시민사회의 침묵이 중심이었다면, 이 시기에 이르면 정권 차원의 5·18항쟁 왜곡은 더 이상 공식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언론이나 보수적 시민사회 논객 등이 중심이 되어 5·18항쟁에 대한 왜곡을 주도한다. 5·18특별법 위헌 논란, 전두환 정권 정통성 옹호, 간첩침투 등 5·18항쟁에 대한 색깔론 제기 등이 대표적이다. 이 시기부터 보수 세력의 5·18항쟁 왜곡의 강도가 강해지고, 참여자의 외연이 확장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18항쟁에 대한 진상규명과 왜곡은 5·18항쟁이 제도화되는 정도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5·18항쟁에 대한 국가적 승인과 제도화가 진전될수록 보수 세력의 5·18항쟁에 대한 왜곡도 심해졌고, 보다 조직적으로 대응하였다.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할 부분은 보수적 시민사회의 움직임이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을 통한 보수 세력의 5·18항쟁 왜곡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콘텐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은 지만원이 운영하는 시스템클럽인 것으로 나타났다(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9: 74). 인터넷 사이트가 5·18왜곡담론 생산의 거점이 되는 과정과는 별도로 지만원은 출판물을 통해 지속적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5·18항쟁에 대한 왜곡담론을 생산해왔다. 대표적인 출판물을 보면, 2008년 지만원이 그 동안 시스템클럽(www.systemclub.co.kr)을 통해서 생산해 온 5·18관련 자료들을 망라하여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1~4』(도서출판 시스템, 2008) 시리즈를 발간한데 이어 2010년에는 『솔로몬 앞에선 5·18』(도서출판 시스템, 2010)을 발간했다. 2008년 발간된 책들은 5·18 수사과정에서 공개된 검찰기록과 공판기

21) 5.18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비등해지자,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헌법파괴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 등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후 개정된 법률명인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록을 중심으로 12·12사건을 쿠데타 주체의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5·18항쟁에 대한 강경진압의 불가피성을 역설한 책으로 현재의 왜곡 담론과 비교하면 그래도 왜곡의 강도가 약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책이다.

그러나 2010년 발간된 책은 자유북한군인연합 관계자들의 증언과 자료를 토대로 5·18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라, '김일성이 만들고 북한이 소유한 적화통일 역사'라고 주장하고, 그 명칭도 5·18민주화운동이 아닌 광주폭동으로 확정한다. 1980년으로의 회귀를 공식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다. 지만원에 따르면, '광주폭동'은 북한이 기획·연출한 사건이었고, 광주에 북한 특수부대가 잠입해 작전을 수행했으며, 광주시민이 당한 가장 큰 희생은 계엄군이 아니라 북한 특수군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쓴 국군(계엄군)의 명예회복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지만원은 5·18주동자들과 북한 당국은 내통된 하나의 적화세력이라고 주장한다(지만원, 2010).

인터넷 사이트는 아니지만 자유북한군인연합(대표 임천용)은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광명기획, 2009)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을 자행하고 있고, 실체를 알기 힘든 한국현대사 자료편찬위는 『북의 지령 따라 움직이는 남쪽 사람들』(비봉출판사, 2010)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과정에 북한 특수부대가 잠입·암약했다는 자유북한군인연합의 주장이나 급진 뉴라이트 세력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22] 임천용 등이 주도해서 발간한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은 1980년 5월 18일 발생한 5·18항쟁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특수부대요원들이 개입한 살인 만행이자 무장폭동이었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데, 그들의 주장은 최근 탈북한 일부 북한특수부대요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하고 있다(자유북한군인연합, 2009). 한국현대사 자료편찬위에서 발간한 책은 5·18항쟁이 끝나고 2년 후에 북한에서 발행된 <주체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이란 책을 재발간한 것이다. 이 책은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80년의 5·18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개입으로 발생했던 남한 사회의 각종 민주화운동(반정부 소요사태!)들을 다루고 있다. 해방 이후 혼란의 절정을 이루던 시기에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극렬한 반미 투쟁, 신탁 찬성 투쟁과 '유엔조선임시위원단' 반대투쟁, 남한 단독선거에 의한 단독정부 수립 반대투쟁, 1948년 4월의 김구와 김규식 선생 등이 '남북연석회의'에 참석해서 한 활동의 실상, '제주도 4·3인민봉기'의 실상, 1948년 '8·15남한 단독정부 수립'의 험난했던 과정 등 북한의 입장에서 서술된 역사 이념서를 자료집 형태로 소개하고 있으며, <부록1>에서는 탈북군인들의 '5·18광주사태' 증언, <부록2>에서는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5·18광주사태' 보고서가 요약 번역되어 있다.[23]

---

22) 한국현대사 자료편찬위의 책은 5·18민주화운동에 국한하지 않고, 건국 이후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민주화운동 세력들이 모두 북한 김일성에 충성 맹세를 하고, 북한의 지시와 조종을 받은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한국현대사 자료편찬위, 2010 참조).

23)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헤리티지 재단의 보고서 자체가 미국 보수파의 시각을 여과 없이 반영한 것인데다가 번역이라기보다는 '창작'에 가까운 부분도 눈에 띈다(한국현대사 자료편찬위, 2010: 734-739). 그런데 이 번역문은 지만원이 출간한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제3권 152쪽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그렇지만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5·18항쟁 당시 북한군 침투 여부에 대한 정부는 공식적으로 그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

<표 1>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정부의 입장

구 분		내 용	비 고
'정부 공식 조사	1차 (1980년)	계엄사 발표	부정
	2차 (1985년)	국방부 재조사(1985년)	〃
	3차 (1988년)	국회 청문회	〃
	4차 (1995년)	검찰 및 국방부 조사	〃
	5차 (1996년)	5.18 재심	〃
	6차 (2007년)	과거사 진상 조사 위원회	〃
국무총리	김황식 (2011년)	❍ 국회 본회의 답변 5·18 민주화운동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록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정의·인권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관심을 갖고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원하겠다.	〃
	정홍원 (2013년)	❍ 국회 본회의 답변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 했고 황교안 국무총리(전 법무장관)도 같은 날 "(5·18 역사왜곡을) 철저히 수사하겠다	〃
광주광역시	국방부 질 의 (2013년)	❍ 광주광역시 질의에 대한 국방부 답변 '5.18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모방송사의 방송내용과 탈북자 단체 주장에 대한 군의 입장'회신문에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2007.7.24.)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고, 국방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법률 제정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존중하며,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하여 깊은 애도를 표한다.	〃

최근의 가장 주목할 만한 왜곡 사례는『역사로서의 5·18』시리즈다(1~4권). 이 책의 저자 개대령은 과거 역사학도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에서 활동했던 인물이다. 2013년 발간된『역사로서의 5·18』시리즈는 1980년 5월 당시의 정치적 동인(動因)들을 검토하고 "5월 시위구호는 직선제 요구가 아니라 직선제 개헌 반대였다"와 "학생이 아니라, 북한 세력이 전두환을 제거하려 하였다"는 두 가지의 명제를 제시한다. 1권은 5·18항쟁이 불순세력의 유언비언 선동에 의한 것이며, 5·18항쟁이 사전에 준비된 무장폭동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통일혁명당과 남민전을 연계시키고 있다. 2권은 시위대 사망이 시민군의 총기오발 등에 의한 사망이 많으며, 시민군 내에 외부 불순세력(특히 북한군)이 침투해 있었음을 '입증'하고자 했다. 3권과 4권은 민주화운동으로서의 5·18이 재조명 필요성을 법리적 측면과 북한과의 연계성 양 측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촉구하고 있다. 그렇지만『역사로서의 5·18』시리즈는 한 연구자가 지적한 것처럼(김희송 2014, 30), 5·18에 대한 객관화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혔다기보다는 과거 신군부의 5·18왜곡담론을 재구성한 것에 불과하고 이들이 도출한 자칭 명제들은 왜곡과 조작에 근거하고 있다.

이와는 다르게 최근의 왜곡은 보다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최근 진행된 5·18민주화운동 관련 왜곡 실태를 일지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5·18민주화운동 왜곡 실태

일시	내 용
'02. 8.29.	❍ 5.18단체, 동아일보 등 왜곡광고 게재를 이유로 지만원 고소 - 고소인 : 5.18재단 이사장(이광우) 외 607명 / '02.10.14. 지만원 구속
'03. 1.28.	❍ 광주지법, 5.18단체 고소건에 대해 집유판결 지만원 석방 - 5·18청문회,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과정 등에서 5·18 발생원인 과 전개과정 등이 밝혀졌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인정되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08. 5.30	❍ 5.18단체, 지만원 등 20여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5.18은 폭동이고 북한이 개입한 내란 음모였다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
'10. 2	❍ 이희호여사, 지만원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11. 5	❍ 지만원, 유네스코본부에 기록유산 등재 반대 청원
'13. 1.10	❍ 대법원, 5.18단체 고소건에 대해 무죄 판결 확정 -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아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움 - 5.18민주화운동은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로 지만원의 게시글을 통한 5.18관련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13.11.24	❍ 대법원, 이희호여사 고소건에 대해 유죄 판결 확정 -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과 모의해 5·18광주시민학살을 저지른 사실이 없는데도 믿을 만한 객관적 근거 없이 추측으로 허위사실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일시	내 용
’14.10.24.	❍ 지만원, ‘5.18분석 최종보고서’ 발간
’15. 3.19	❍ 지만원, '5.18역사의 진실 대국민 보고회' 개최(서울 프레스센터)
’15. 4.17.	❍ 지만원, 시국대강연회 개최(부산 부산일보사)
’15. 4.	❍ 시스템클럽 회원, ‘5·18은 북한군 소행’ 플래카드 대구에 게첨
’15. 6. 8.	❍ 지만원, '5.18역사의 진실 대국민 대구 보고회' 개최
’15. 6.11.	❍ 지만원, 방통심위 상대소송 패소(1심) - 5.18 역사왜곡 콘텐츠 삭제 관련 방통심위 상대 소송 제기 - 원칙적으로 헌법상 학문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이 사건 동영상 등의 내용을 볼 때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통신매체라는 파급효과에 비추어 법률적 근거에 따라 일정한 제한이 필요함 ※ 지만원 일명 ‘광수자료’를 토대로 항소 : 서울고등법원(’15. 7. 3.)
’15. 6.	❍ 지만원, ‘5·18은 북한군 소행’ 대자보 게첨(한양대학교 등)
’15. 7.23.	❍ 광주지방변호사회(5·18법률지원특위), 지만원 법률 대응 결의 - ’87년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발간한 ‘광주민중항쟁 기록사진집’을 북한과 공모하여 발간하였다고 주장하여 명예훼손한 부분에 대해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소송 대리 추진 ※ ‘5·18당시 복면한 시민을 북한특수군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에서 소송 대리 추진
’15. 7.23.	❍ 정평위건 고소 실무 간담회(정평위, 변협, 재단, 市)
’15. 8.10	❍ 김홍두 고양시 시의원 5·18 망언문자 유포 - 5·18 민주유공자에 대하여 5·18폭동자로 비하 - 5·18 보상금의 악의적인 부풀리기 및 타 보상금의 의도적 줄이기 -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폭동 및 종북몰이 - 5·18 민주유공자의 국가전복 이적죄 연루 선동
’15. 8.11.	❍ 5·18재단 및 단체, 고양시의회 항의방문 및 규탄성명
’15. 8.31.	❍ 정평위, 5·18 출판물 명예훼손 지만원 고소(광주지검) - 고소인/피고소인 :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지만원 - 내용 : 정평위 출판 ‘광주민중항쟁기록사진집’의 왜곡에 따른 명예훼손 고소
’15. 8.10.	❍ 제 8차 역사왜곡대책위원회 회의 법률대응 논의 - 정치적 대응 우선, 법률대응은 향후 추진, 규탄성명서 발표
’15. 9.13.	❍ 5.18관련 현안 건의서 전달(새정연 광주시당 간담회)
’15. 9.15.	❍ 뉴스타운 배포금지 가처분신청 실무 간담회(변협, 재단, 광주시)
’15. 9.17.	❍ 5·18재단 및 단체, 고양시의회 및 새누리당 재차 항의방문
’15. 9.20.	❍ 대법원(3심), 일베회원(양운모) 관련 집행유예 확정 - ‘5·18홍어 택배사건’ 당사자로 징역6월, 집행유예1년, 사회봉사시간 80시간

일시	내 용
’15. 9.25.	❍ 뉴스타운 배포금지 가처분신청 및 인용(광주지법) - 신청인 : 5·18 4단체대표 및 관련자(박남선, 심순례) - 피신청인 : 주)뉴스타운(발행), 지만원(배포) - 내용 : 뉴스타운 호외 1~3호에 대한 발행·배포금지 가처분및 위반행위에 대한 보상금 청구
’15.10.20.	❍ 북한군 개입설에 따른 지만원 명예훼손 고소
’15.11.23.	❍ 지만원과 뉴스타운, 광주지방법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5.12.17	❍ 뉴스타운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심문(1차) - 지만원과 뉴스타운, 법정 불출석
‘15.12.17.	❍ 지만원과 뉴스타운, 재판부 기피신청
‘16. 2.29.	❍ 5.18대책팀, 지만원 및 뉴스타운 소송관련 1차회의
‘16. 3. 2.	❍ 지만원 수사촉구 탄원서 제출(서울중앙지방검찰청)
‘16. 3.15.	❍ 지만원 및 뉴스타운 본안소송 소장 접수

이밖에도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에서는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는 민주주의의 회복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5.18민주화운동, 1980년).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은 군대를 동원하여 이를 폭력적로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5.18민주화운동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주화를 이루는 데에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간략하게 서술되었는데 구 교과서에 “전두환은 비상계엄을 확대하여 정치인과 시민들을 체포하였다. 특히 광주에서는 계엄군에 의해 많은 시민이 죽거나 다치는 비극이 발생하였다”라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던 부분이 삭제되었고, 사진도 구 교과서에는 5·18항쟁 당시 계엄군의 진압장면 등 사진 4컷이 실려 있었으나 새 교과서에는 이들 사진이 모두 삭제되고 5·18국립묘지 사진만 실려 있다. 특히 새 교과서에는 시위가 원인이 되어 전두환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한 것처럼 선후관계가 뒤바꿔 서술하고 있는 부분은 큰 문제다.

1990년대 말 이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은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매체발달에 의존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의 왜곡 방식이 언론이나 출판물을 통한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면, 현재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를 통한 왜곡담론 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방식이 주를 이루는 이유는 언론광고나 출판물을 통한 왜곡담론 생산은 일정한 비용을 초래하는 선전방식임에 비해 인터넷을 통한 왜곡담론 생산은 거의 무료로 담론의 생산과 유포가 가능하다는 기술적 장점 때문이며, 익명성도 보장되고, 의견을 같이 하는 이들과의 집단화(grouping)도 가능하다는 기능적 이점 때문이다.

5·18왜곡담론을 생산하는 이들은 소수에 한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무한복제와 쌍방향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기술의 특성상 왜곡된 5·18담론을 공유하고, 이를 유포하는 이

들은 헤아리기 힘든 상황이다. 2009년 조사된 전남대 5·18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 인터넷을 통한 5·18항쟁 왜곡은 너무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이어서 하나의 통일된 유형을 도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과거 5·18항쟁 왜곡담론의 생산자였던 보수언론들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는 상황에서 뉴데일리, 데일리안 등 보수 인터넷언론들은 조갑제, 지만원, 역사학도 등의 블로거들이 생산하는 5·18왜곡담론들을 적극적으로 소개·유포하고 있다. 보수적인 이념성향의 인터넷 유저들은 5·18왜곡담론의 수용자로서 기능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터넷 상의 왜곡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고 뿌리 깊게 퍼져있다.

4. 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가?

보수 세력들은 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할까? 지극히 당연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은 그렇게 만족스럽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1980년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 5·18 관련 단체와 민주화운동세력은 5·18의 진상규명을 제1의 과제로 설정하고 전두환 정권 하에서 지난한 기간 동안 5월운동을 전개했다. 당시 보수 세력들은 일종의 원죄의식이 있었다. 5·18항쟁의 정당성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전두환 정권의 정통성 시비와 광주에서의 계엄군의 학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모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보수 세력들은 일부 극우논객들을 제외하고는 공적인 논의의 장에서 5·18항쟁에 대해 침묵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노태우정권 하에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1987년 민주화 이후 광주청문회가 개최되면서 광주문제가 정국의 뜨거운 화두가 되자 조선일보나 월간조선,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마저 광주문제의 진상규명에 동참하기까지 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주문제에 대한 보수 세력들의 불만이 하나의 여론과 조직적 흐름을 형성하기 시작한 시점은 김영삼 정권에서 5·18특별법을 제정하고 난 이후였다. 5·18특별법 제정은 광주문제가 제도화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피해자 측에서는 불만족스럽게 볼 수도 있었지만, 국가차원에서 5·18항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5·18특별법의 제정은 그 동안 침묵의 방식이 지배적이던 보수 세력에게 침묵이 아닌 다른 대응의 필요성을 일깨우기 시작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들 보수 세력들이 5·18항쟁에 대해 침묵이 아닌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세운 논리는 전두환 정권 하에서 5·18항쟁 관련자들이 제기했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들 보수 세력 역시 5·18항쟁에 대한 진상규명을 내세웠다. 신군부의 권력찬탈에 맞선 민주화운동이자 계엄군의 살인적인 진압에 저항한 정의로운 민중항쟁으로서의 5·18항쟁에 대비하여 용공불순세력들이 배후조종한 시민들의 무장폭동으로서의 광주사태가 진실이라는 공통어로 맞서게 되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즉 담론투쟁이 전개된 것이다. 정

의, 진보, 저항의 에너지로서 5·18에 맞서 조작, 폭동, 용공세력의 음모로서의 5·18담론을 제기하면서 '말(담론)을 놓고 투쟁'하는 상황이 전개된다.

그래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수 세력의 왜곡이 '민주화의 효과 혹은 산물'이라는 평가는 대단히 역설적이지만, 정확한 진단이다. 즉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은 한국 민주화의 산물이다. 왜냐하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조직적인 왜곡담론의 등장은 보수 세력의 정치적 퇴진과 시기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8년 '수평적 정권교체' 이후, 건국 이후 최초로 정권을 이양한 보수 세력이 체감했을 위기의식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 진행되는 뉴라이트를 위시한 보수 세력들이 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추정이 가능하다. 그것은 왜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을 주도하는 뉴라이트 세력들이 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뉴라이트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 필요가 있다.

뉴라이트세력의 성격에 대해서는 합의된 연구결과가 없다. 워낙 뉴라이트의 기원과 이념 및 활동의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특정 세력을 중심으로 뉴라이트 운동 전체를 규정하고, 설명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대체로 그 시기와 중심 주장을 놓고 볼 때 뉴라이트 운동은 소위 민주정부에 의한 민주개혁정책의 실패에 따른 보수 세력의 대항운동(counter movement)의 성격을 띠고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민주개혁세력'에 대한 대항세력으로서 뉴라이트 세력의 정치적 상징조작 중의 하나가 바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뉴라이트의 정치적 상징조작은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5·18항쟁 왜곡은 뉴라이트에 의한 '역사바로세우기' 시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뉴라이트를 위시한 보수 세력들이 역사바로세우기라는 미명 하에 지속적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을 시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보수 세력의 갱신을 도모하기 위한 시도이다. 역사바로세우기를 통해 뉴라이트를 위시한 보수 세력들은 그 동안 자신들을 짓누르던 일종의 낙인이었던 독재정권을 지탱한 수구세력에서 반공주의의 회복을 통한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수호한 세력으로 정치적 정체성의 재정립을 시도하고 있다. 교과서 포럼, 역사바로세우기 모임,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삭제 등은 모두 이러한 뉴라이트 세력의 정치적 정체성 정립을 위한 실천의 일환이다. 예를 들어 뉴라이트는 8월 15일의 의미도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날이라는 해방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반공국가로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건국일의 의미를 부각시킴으로써 분단세력에 의한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 단독정부 수립의 중심세력이었던 보수 세력의 역사적 정당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대표적인 뉴라이트 이론가인 안병직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준다(안병직, 2011: 6-7).

“필자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경제발전과 권위주의체제가 밀접한 상호관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승만 시기의 반공주의가 없었더라면, 과연 대한민국은 수호될 수 있었을까. 이승만은 그 어려운 정치적 여건 속에서도 농지개혁과 귀속재산의 불하로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했다. 그리고 적자재정 속에서도 교육 투자에 중점을 두어 한국의 근대화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였다. 따라서 4·19학생의거도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확립과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의 결과 가능했던 측면도 있는 것이다.…87년의 민주화는 이승만에 의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확립과 박정희에 의한 경제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리고 87년의 민주화는 전두환의 ‘자유주의 정책’에 의한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한국경제의 질적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민주화운동이 87년의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은 권위주의체제하에서 민주주의의 실현조건이 성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론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는 좌익세력의 공산화 시도에 맞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통해 공산주의의 남하를 저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역사가 된다. 또한 이러한 시대적,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는데 충실했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정권의 명예와 정당성을 회복시키고자 한다. 박정희 성역화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루어졌고, 4월 혁명을 통해 미국으로 쫓겨났던 이승만을 ‘국부’로 부활시키고 남산에 이승만 동상을 건립하려는 시도, 전두환의 12·12쿠데타를 박정희 살해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혁명적 시도로 추앙하는 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전두환의 정통성 회복의 최대 걸림돌 중의 하나가 바로 전두환 정권의 원죄와도 같은 5·18항쟁 살인진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5·18항쟁이 불순분자의 선동과 간첩 및 북한 특수부대가 개입한 폭동으로 규정된다면 전두환의 원죄는 사라지고, 오히려 공산주의의 침략과 불순분자의 폭동을 진압한 구국의 영웅으로 격상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설명이 결코 과장이 아님은 아래의 한 카페가 확인시켜 준다. 놀랍게도 이들은 12·12쿠데타 32주년을 맞아 ‘12·12혁명주간’을 선포하고 이를 기념하고 있다.

결국 뉴라이트운동으로 상징되는 보수 세력의 반격(political backlash)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 이후 김대중·노무현정부로 이어지면서 꾸준히 세력을 확장해 온 진보진영에 대한 반발과 함께 이러한 보수 세력의 반동이 호소력을 갖도록 만든 진보진영의 무능이 동시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보수 세력의 5·18항쟁 왜곡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과도한 추정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정당성과 정치적 순수성을 왜곡하는 뉴라이트 세력들의 문제를 지적해야겠지만, 5·18항쟁이 민주화운동으로 승인된 이후 5·18민주화운동의 전국화가 답보상태에 머물고, 오히려 5·18민주화운동의 국가기념일 제정에도 불구하고, 5·18이 광주만의 문제, 관련 단체만의 행사로 축소되는 등 자기혁신과 국민적 공감유도에 실패했던 측면, 그리고 보수 세력의 왜곡시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5·18 관련 단체들의 무기력도 한 요인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보수 세력에 의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은 명백한 정치적 상징조작(symbol

manipulation)이다. 상징조작은 일정한 사물(事物)이나 언어나 행동양식을 상징으로 사용하여, 특정한 의미내용을 담아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에 동조하게 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행동시키는 일을 말한다. 정치적 상징조작은 여러 가지 행태로 나타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5·18왜곡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에서 알 수 있듯 현재 이루어지는 5·18왜곡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상징정책(symbolic performance)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다.

원래 상징정책은 정치체제 및 정부의 정통성을 제고하고 국가권력에 대한 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애국가를 제창하고, 국기를 게양하고, 동상을 건립하는 등 국가적 상징물을 동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명박 정부는 뉴라이트 중심의 역사관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을 보수가 세우고 이끌어온 국가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정립한 다음, 이러한 국가정체성과 배치되는 정치적 상징들을 제거하고자 했다. 분단과 반공의 상징인 전쟁기념관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등의 정치적 상징조작들은 이명박 정부의 상징정책의 일환이다.

현재 뉴라이트 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정치적 상징조작은 특정 의미의 선택과 배제, 정당성의 박탈과 재부여를 통해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정치적 자본의 축적을 목적으로 한다.[24] 1987년 민주화는 5·18 진상규명운동을 계기로 촉발된 반정부투쟁과 반미운동의 산물이었고, 486으로 상징되는 민주화운동세력의 생성 기점이 바로 5·18항쟁이었다. 뉴라이트 담론은 북한을 반민족 세력으로 규정하고, 김대중 정부는 반민족세력과 공존을 도모한 잘못된 정부로 규정한다. 뉴라이트세력에 의해 주도되는 정치적 상징조작은 담론적 상징들을 통해서 일반시민들의 정서적인 감정을 한데 묶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적인 동인들을 집합행동으로 전환시켜 주는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5·18항쟁에 대한 왜곡된 상징조작은 뉴라이트가 주도하는 정치운동과 정치적 동원을 위해 필수적인 측면이 있다.

김대중 정부 이후 정치적 주류 세력으로 뿌리내린 진보진영의 정치적 정당성의 뿌리 중의 하나인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상징조작을 통해 진보진영의 정당성의 근거를 박탈하고, 이를 통해 뉴라이트가 대표하는 보수 세력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일련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냉전수구정권의 정당성 회복을 통해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탈냉전개혁정권의 정당성 박탈 구도가 바로 보수 세력이 의도하는 정치적 상징조작의 목표다.

셋째, 변형된 지역주의와 두 개의 국민(two nations) 프로젝트의 작동이다. 보수 세력에 의한 5·18왜곡담론의 생산에는 결국 정치적 지배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지배적인 균열구조(cleavage structure)는 서유럽국가와 같은 계급갈등이

24) 정치적 상징조작은 특정한 사물이나 대상의 특징적인 측면을 부각시킴으로써 특정한 의미를 강조하는 방법이다. 정치적 상징조작은 대체로 정치적 지지의 유도나 정당성의 확보를 위해 사용된다. 정치적 정당성 확보는 체계나 조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정당성의 상실은 사회운동이나 정당 등의 지속적 존속이 불가능하거나 정당-유권자 연합(party-voter alignment)의 지속을 어렵게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나 종교 갈등이 아니라 지역갈등이었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지역적 갈등의 강도는 상당히 약화되었으나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특히 정치적 동원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지역주의는 매우 효과적인 분열전략으로서 작동했다. 5·18왜곡담론에도 이러한 지역주의 코드는 작동하고 있다. 특기할만한 것은 이러한 지역주의적 동원이 이른바 두 개의 국민 프로젝트와 연동된다는 점이다. 즉 '호남=저개발(낙후)=2등 국민' 대 '비호남=개발(선진)=1등 국민'이라는 전통적인 두 개의 국민 헤게모니 프로젝트에 덧대어 '광주=용공=친북=반민족' 대 '영남=반공=반북=국가정통성'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경제성장, 역사주체로서 비호남과 호남을 분리하려는 정치적 지배전략과 맞닿아 있다. 이를 위해 5·18민주화운동을 신군부의 권력찬탈 음모에 맞선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지역감정에 기초하여 지역정치인 김대중 구명을 명분으로 내세운 불순분자와 간첩의 선동으로 일어난 폭동으로 낙인찍고 있다. 이러한 보수 세력의 시도가 성공한다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상징성이나 사회운동사적 의미도 탈각하고 기존의 지역주의 패러다임 속으로 5·18민주화운동이 미끄러져 들어가 버린다.

넷째, 특정한 정세에 개입하여 정치 상황을 전환하려는 목적으로 5·18항쟁에 대한 왜곡담론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 동안 인터넷을 통해 5·18왜곡담론이 생산되는 시기와 건수를 조사해 본 결과 각 시기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거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전환의 시기에 5·18왜곡담론의 생산건수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전남대 5·18연구소 2009, 81).

5·18왜곡담론의 생산은 보수 세력에 의한 이른바 역사바로세우기라는 보다 큰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적 개입임과 동시에 특정한 정세에서 보수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동원되는 상징조작이자 대항담론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특히 촛불집회라든지,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민감한 정치적 시기(북한 핵실험, 서해교전, 전시작전권 통제 논란 등)에 5·18왜곡담론이 집중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보수 세력은 냉전반공논리를 내세우거나 남북 간의 대립을 조장할 필요를 느낄 때마다 5·18왜곡담론을 불러내 자신들의 정당화 논리로 내세우거나 보수 세력의 결집을 시도하곤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5·18왜곡담론은 진보세력과 광주시민을 국가정체성 왜곡세력과 폭도로 호명함으로써 정당성을 부정하는 효과를 기대함과 동시에 민감한 정치상황에서는 보수 세력을 결집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섯째, 5·18왜곡담론의 생산과 유포에는 이른바 집단 극단화(group polarization)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 집단 극단화론에 따르면, 사람은 서로 생각이 같은 집단 속에 들어가면 극단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러한 집단에 어떤 권위적인 주체가 소속되어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거나 특정한 사회적 역할을 맡기는 경우에는 대단히 좋지 않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선스타인, 2011: 11). 집단구성원들이 모여서 토의를 하고 나면 기존에 갖고 있던 성향과 같은 방향을 유지하면서 더 극단화되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함께 토론하고 나서 평소에 자기들이 생각해 온

것보다 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선스타인 2011, 13).

역설적이지만 이러한 집단극단화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리고 모든 형태의 극단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새로운 정보의 교환이다(선스타인 2011, 39). 5·18항쟁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확보하면 할수록 왜곡의 강도는 심해진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보'는 자신들의 극단화된 시각에 부합하기 때문에 발굴이 된 것이고, 만약 부합한 정보가 아니라면 발굴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집단에 수용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설사 이러한 가치와 신념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료도 자신들의 시각과 신념에 맞게 자료에 대한 가공을 통한 재해석이 이루어진다. 인터넷이 되었건 언론이 되었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자신이 옳다는 자신감이 더 커진다. 이렇게 되면 보다 극단적으로 방향으로 왜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편향의 동화(bias assimilation)' 현상이 나타난다.[25] 즉 자신의 생각과 다른 글이나 주장은 어리석고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치부하고, 자신의 생각과 같은 주장은 현명하고 논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결국 자신의 기존 입장을 더 강화한다. 지만원이나 역사학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극단주의자들은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신념에 반대되는 증거나 정보를 접하더라도 기존 신념이 줄어들기는커녕 더 커진다. 인터넷 때문에 생각이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끼리 뭉치게 되어 더 심한 분화가 이뤄진다. 사이버 공간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과 정치적·문화적·경제적 관점과 입장이 비슷한 사람과 공동체를 형성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인터넷은 자기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키우기보다 상대를 적대하는 소국들로 고립되고 분열되는 '발칸화'(balkanization)의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26] 5·18왜곡담론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주체들이 소통하고 통합하기 보다는 고립되고, 분열되어 대립하는 발칸화의 최적 사례다.

25) 편향의 동화란 사람들이 이미 자기가 가진 기존의 입장을 기초로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6) 발칸화(Balkanization)란 어떤 나라나 지역이 서로 적대적이거나 비협조적인 여러 개의 작은 나라나 지역으로 쪼개지는 현상을 일컫는 지정학적 용어다. 이 말은 20세기 발칸반도에서 일어난 여러 분쟁에서 비롯되었다. 첫 발칸화는 발칸전쟁을 통해 일어났고, 1991년 이후의 유고 전쟁에서 다시 나타났다.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은 발칸화를 통해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순으로 갈기갈기 찢어졌으며, 이 가운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다시 세르비아계와 보스니아 이슬람(보스니아)과 크로아티아계로 나뉘어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세르비아의 자치주 지위에 있던 코소보가 다시 독립을 선언하여, 발칸화의 극단을 보여 주었다. 또한 이 용어는 인터넷이 고립된 여러 개의 섬처럼 나뉘어 있는 현상이나, 국제협력이 서로 적대적인 정책 때문에 깨지는 경우를 비유하는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5.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결론을 대신하여

보수 세력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왜곡의 목표는 무엇인가? 여러 측면에서 정리가 가능하지만, 크게 보면 5·18항쟁의 민주화 운동적 성격을 부정하는 것으로 모아진다. 5·18항쟁에 대한 이념(색깔) 공세도 결국 민주화운동의 요건인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에 위배되는 측면을 부각시키려는 노력이다. 다시 말해 5·18항쟁에 대한 보수 세력의 공격은 제도화된 5·18, 국가적으로 승인된 5·18에 대한 공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주화운동이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차 일부개정, 2011. 9. 15).

보수 세력들은 5·18민주화운동이 법률에서 규정한 민주화운동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공격한다.

우선 5·18항쟁 자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케 한 사건이라고 공격한다. 5·18항쟁 기간 중 시민들은 계엄령 하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도전했던 광주시민들의 시위 자체가 국헌을 문란케 한 내란 행위였으며, 파출소·교도소 등 국가기관을 습격하고 방송국을 방화하는 등의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였고, 항쟁과정에서도 폭력배들이 난동을 부리는 등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의 수호와 무관한 사태 혹은 폭동이었다는 관점을 제기한다.

둘째, 5·18항쟁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항거가 아니라고 본다. 보수 세력들은 5·18항쟁이 신군부의 권력찬탈시도에 맞선 항거가 아니라 박정희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경제개발의 격차에 대한 호남인들의 반발과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김대중의 시위 배후조종 혹은 김대중의 구속에 따른 지역민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본다.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항거에 대한 기각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공세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비상계엄령 전국확대 등의 조치를 취했던 신군부의 행위가 정권찬탈 시도가 아니라 대통령 시해와 국가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구국의 결단으로서 권위주의적 통치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신군부의 행위가 권위주의적 통치가 아닐뿐더러 이에 저항한 광주시민의 행위도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항거가 아니라 국가기본질서를 문란케 한 폭동에 불과했다는 공격이다.

셋째,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거리가 멀다고 공격한다. 헌법에 따르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인바, 간첩 및 북한 특수부대가 개입하여 무고한 시민을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이를 진압하는 군인들을 다치거나 죽게 한 행위는 헌법의 이념과 가치에 위배된다는 공격이다. 이러한 보수 세력의 공격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사용된 반공주의를 다시 불러내 권위주의 정권의 정당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권위주의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온 수많은 민주화운동세력에 대한 왜곡시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왜곡 시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첫째, 진실규명이다. 진실규명의 방향은 해명이 아닌 설명이어야 한다. 5·18민주화운동 왜곡 담론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5·18민주화운동의 이해를 높이는 방향의 설명이어야 한다. 공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 교육청은 물론 타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중요한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5·18민주화운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학계에서도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더 이상 연구할 것이 있나라는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실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연구된 부분보다 연구해야할 영역이 훨씬 많다. 더불어 학자들만의 언어게임에서 벗어나 일반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대중적 5·18민주화운동 입문 서적과 자료집(디지털, 시각자료)의 공급도 이루어져야 한다. 당연한 것으로서의 5·18이 아니라 홍보하고 설명해야 할 것으로서의 5·18이라는 다소 공격적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소통과 연대의 확장이다. 더 이상 5·18민주화운동은 전국화된 5·18이 아니라 광주만의 5·18 혹은 5·18단체만의 5·18이어서는 곤란하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오늘날처럼 심각해진 데는 5·18항쟁의 제도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강화된 5·18단체와 시민사회의 분리가 결정적이었다. 과거의 잘잘못을 여기서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관건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다. 5·18단체 등은 시민사회단체와의 접촉면과 연대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기존 진보적 성향은 사회단체와의 연대 강화는 당연한 것이고, 합리적 보수주의 단체와의 접촉면도 넓혀야 한다. 사회 양극화, 집단 극단화가 횡행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한쪽 사람들과의 대화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의견의 다원주의, 다원적 소통이 중요한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 중의 하나는 합리적 보수단체들이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다. 이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이 보수 전체의 시각과 행동이라기보다는 보수 중에서도 수구적이고 편향된 의견집단의 정치적 선동이 발전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중도적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부터 시작해 다소 보수적이지만 합리적 성향의 시민사회단체까지 접촉면을 넓히면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상호 대화의 기회를 늘릴 수 있다면 5·18민주화운동 왜곡문제의 해결은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을 것이며 전국화라는 목표에도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법정의 호소다. '타진요'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집단극단화 경향은 간혹 화해불가능하고 설득 불가능한 편향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새로운 증거나 설득에도 자신의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이러한 극단화를 해결하는 최후의 해결책은 사법정의에 호소하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방향으로 논의와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현행 형법 형법 307조의 명예훼손죄 조항에 입각하여[27]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왜곡·폄훼 인사를 적

27)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발하여 고소·고발 등을 통해 이들의 왜곡·폄훼 행위에 대한 사법책임을 묻는 경우다. 다른 하나는 보다 적극적으로, 현행 형법 제 307조의 명예훼손 조항만으로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부인이나 특정 지역,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 혐오표현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다.[28]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쟁점은 5·18민주화운동 부인죄를 형법과 특별법 가운데 어디에 삽입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는 법률적 쟁점이기에 필자가 언급하기 조심스런 부분이다. 다만 과문한 필자의 상식에 입각해 의견을 밝혀보자면, 홀로코스트 부인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참조할 때 특별법에 처벌 조항을 삽입하는 것 보다는 형법에 민주화운동 부인이나 혐오죄에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은 든다. 또한 5·18유공자들의 명예훼손을 처벌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거나 특별법에 명예훼손 관련 처벌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기존 형법과 중복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는 법조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사항이다.[29]

결국 보수 세력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왜곡의 목표는 민주화운동으로서의 5·18항쟁, 국가유공자로서 5·18항쟁 관련자, 한국민주화의 원천으로서의 5·18항쟁의 가치를 공격하고, 그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은 진보세력에 대한 보수세력의 이념공세이자 정치공세인데, 공세수준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동의와 정치적 기반 확보라는 보다 현실적 이유도 포함되어 있다. 보수 세력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왜

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8) 2013년 5월 새정연 김동철의원은 “일제의 만행과 헌정파괴범죄와 같은 반인륜 범죄를 부인하고,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민주화운동을 왜곡·날조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명백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하기 위해 “반인류 범죄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새정연 소속 최민희의원은 김동철의원의 대표발의안과 달리 5·18민주화운동에 국한하여 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및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형서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5·18유공자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밖에 새누리당 안효대의원은 현행 형법에 ‘혐오죄’를 신설하여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사람을 혐오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에 따르면, “제11조의2(혐오)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공연히 사람을 혐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여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친고죄로 하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김재윤 2015, 18).

29) 이와 관련하여 김재윤은(2015) 법률 개정의 대안으로 형법 관련 조항 신설이나 특별법 제정보다는 기존 5、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즉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실을 왜곡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곡이 단순히 광주시민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이념갈등 혹은 남남갈등의 문제라고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왜곡에 대한 대응은 그래서 왜곡의 문제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지만 복잡하고 위험하며 난해한 문제다.

< 참 고 문 헌 >

5.18 기념재단, 2010.『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5.18의 기억과 역사 4: 공직자 편』, 광주: 심미안.

강원도, 1980.『새 시대의 개막』. 직장교육자료.

강준만.김환표,『희생양과 죄의식』, 개마고원, 2004.

강창성,『군벌과 정치: 한국 일본』, 서울: 해동문화사, 1991.

고승우, 1987. “한국언론통사.”『80년 5월의 민주언론: 80년 언론인 해직백서』, 한국기자협회 80년 해직 언론인 협의회 공편, 서울: 나남출판사.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2001.『5.18민중항쟁사』, 광주: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1997.『광주5월민주화운동자료총서』1·2·22권,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7.『12·12, 5·17, 5·18사건 조사결과보고서』.

김대령. 2013.『역사로서의 5·18』1~4권. 서울: 비봉출판사.

김대중, 2009.『옥중서신 1』, 시대의 창.

김보현.김상봉 외, 2009.『5.18 민중항쟁에 대한 새로운 성찰적 시선』, 파주: 한울.

김영택, 2004.「5.18 광주민중항쟁 연구」,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김재균, 2000.『5.18과 한국정치』, 파주: 한울.

김재윤. 2015.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한 형법적 규제 방안.”『법학논총』35:2 광주: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김홍식, 2010. “그때 별라도 유언비어가 많았어.”『5·18의 기억과 역사4』.

나간채, 1997.『광주민중항쟁과 5월운동 연구』, 광주: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나의갑, 2001. “5.18의 전개과정.”,『5.18민중항쟁사』, 광주: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노영기. 2013. “5·18항쟁 초기 군부의 대응: 학생시위의 시민항쟁으로의 전환 배경과 관련하여.”『한국문화』62.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선스타인, 캐스. 2011.『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 서울: 프리뷰.

월간조선사, 1999.『총구와 권력(1월호 별책부록)』, 서울: 조선일보사.

윤석한, 1997. “기자협회의 검열 및 제작거부 결정.”『80년 5월의 민주언론: 80년 언론인 해직백서』, 한국기자협회 80년 해직언론인 협의회 공편, 서울: 나남출판사.

최정운, 2007. “폭력과 사랑의 변증법-5·18민중항쟁과 절대공동체의 등장.”『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3. 광주: 5·18기념재단.

풀빛편집부, 1997.『5.18 특파원리포트』, 서울: 풀빛.

한국현대사 자료편찬위원회, 2010.『북의 지령 따라 움직이는 남쪽 사람들—해방 이후 5.18광주사태까지 북의 대남적화통일 공작사』, 서울: 비봉출판사.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990.

“5 · 18민주화운동 왜곡의 심화: 분석과 대안”(오승용)의 토론문

노영기(조선대 기초교육대학)

오늘날 5.18민주화운동이 왜곡된 것은 여러 가지 다차원적이고 중층된 정치 사회적 문제이며 현재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위험하면서 난해하다는 발표자의 지적에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토론은 발표자와의 이견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토론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지만, 토론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몇 가지 보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제기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겠습니다.

첫째, 용어 사용의 문제입니다. 발표자는 5.18민주화운동의 왜곡 주체로서 ‘보수(保守)’, 정확하게는 ‘보수세력’을 주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념 적용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발표문에서 거론되는 한국의 보수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는 세력”으로서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개항전후부터 구한말에 이르는 기간의 세력들은 보수의 모습을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면암 최익현이나 노사 기정진과 같은 인물들은 기존의 가치를 지키며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한국의 보수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그러한 용기와 결단력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적어도 진정한 의미의 보수라고 한다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폄훼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래의 보수는 민족주의자이며 민주주의자이자 적어도 공동체의 가치를 지킬 줄 아는 세력일 것입니다. 현대의 인물 중에서 뽑자면, 심산 김창숙 정도의 인물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보수라는 용어는 적절치 못하고 극우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5.18민주화운동 왜곡의 최초 생산자와 유통경로, 그리고 유언비어에 대한 내용 분석이 필요하다는 발표자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것은 이 글에서 필자는 편의대(便衣隊)의 운영이 흡사 보안사만의 활동인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보안사의 편의대가 많았던 점은 사실이고, 그들의 활동이 무엇이었는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편의대가 운영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보안사만의 활동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 광주에 들어온 거의 모든 군부대에서 편의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정보 수집을 비롯한 여론 조작 등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 발표자는 보안사의 특수정보활동의 실체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들이 일부 있다고 하

셨는데, 개략적이나마 일부 소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보안사 특별팀이 도청 근처에 사무실을 차리고 특수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서술했는데, 당시 도청 부근에 지부 사무실(분소)가 존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무실은 반공개된 곳이지 않을까 짐작하는데, 이 발표에서 말하는 사무실은 이와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5월 22일부터 편의대 운영에 대해 시민군 와해의 특수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짐작하는데 독침사건 이외에 이 같은 사건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발표자가 당시 언론의 책임을 언급한 점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계엄사의 발표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던 점도 존재할 것입니다. 5월 17일 비상계엄전국확대 때부터 계엄사 또는 보안사의 언론 검열 및 통제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진실 보도가 가능했을지, 어쩌면 '받아쓰기'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관공서나 방송국의 방화를 부각시킨 것은 군의 지침에 따른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월 23일 국방부 대변인 인솔 아래 국방부 출입기자단이 광주를 방문하였는데, 이들은 취재 보다는 군의 협조 아래 모든 것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들의 기사가 어떤 것이었는가와 광주 파견 기자들의 기사와는 분리시켜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개별 기자들 중에서는 일부가 계엄사의 보도지침을 거부한 사례가 있으며, 중앙일보 기자(기자협회 부회장)은 계엄사에 연행되었습니다. 이를 참고해 언론의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발표자는 5.18항쟁 당시의 왜곡으로 언론 보도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론자의 생각으로는 언론을 통한 유언비어의 확산보다는 실제 광주 시내에서 확산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발표자의 주장대로 보안사의 활동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더욱 많은 자료에 근거해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 가지 예로 들자면 삼양타이어 광주공장 방화가 나왔다는 오보가 보도되고 이를 수정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주3)에 언급된 유언비어의 내용분석이 필요하다는 발표자의 지적에 동의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이 필요합니다.

왜 1995-6년 경부터 왜곡이, 발표자의 표현대로 "국가적 승인과 제도화가 진전될수록" 왜곡이 심해졌을까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인식의 전환인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이것이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무렵 조선일보는 전국적으로 이승만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연관시켜 본다면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의 복권을 시도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발표자는 변형된 지역주의와 두 개의 국민 프로젝트의 작동을 주장하시는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역주의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두 개의 국민프로젝트는 일견 일제 말기의 논리와 유사합니다. 일제 말기 총력전 체제 아래에서 징병제 시행을 요구하는 친일파들이 내세운 것이 '내지=일등', '조선=이등'으로 구분하며 우리 민족이 일등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징병제를 시행, 즉 국민의 의무를 다하자고 선전합니다. 결과적으로 1944년 징병제가 시행되었고 1924년생은 '묻지마라 갑자생'이 탄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일

제의 논리와 두 개의 국민 프로젝트의 유사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서 국민과 비국민으로 나누어 통합과 배제를 했던 것과는 연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발표자는 이 글에서 '발칸화'로 설명하고(주 10 참고) 있는데, 이러한 적용이 적합할지 의문입니다. 필자의 개인적 견해는 오히려 파시즘화, 1929년 세계대공황을 지나며 극우로 치닫는 일본과 독일의 사례와 유사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추후 극복해야 할 상황이지만 발표자가 지적한 위험한 현실상황이라는 점에서 극히 우려스럽다는 말을 덧붙이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부인죄 도입의 필요성과 헌법적 정당성

김재윤(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들어가는 말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일부 극우논객과 종합편성채널,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을 중심으로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다”,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였다”라는 등의 발언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부인, 왜곡, 날조하는 일들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5·18민주화운동 부인은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 신군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5·18민주화운동을 부인, 왜곡, 날조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계엄군의 불법행위로 인해 고통을 겪은 희생자 및 그 유가족 개개인의 존엄성을 훼손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원은 인터넷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게시글을 올린 지만원씨 사건[30]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1심,[31] 서울고등법원 항소심[32]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찰의 상고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27일 대법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하였다.[33] 이는 향후 제2, 제3의 지만원씨가 등장하여 TV방송과 인터넷상에서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사실의 부인 발언을 아무리 하여도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법리로 이들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34]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시선을 독일로 돌린다면 사정은 전혀 다르게 변한다. 즉 독일형법 제130조 제

30) 2008년 1월 극우논객 지만원씨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시스템클럽’ 게시판에 ‘5·18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고, 이에 검찰은 지만원씨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인 피해자 신○○, 김○○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피해자 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공소사실로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1.19. 선고 2010고합51 판결.

32) 서울고등법원 2012.8.23. 선고 2011노308 판결.

33)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2도10670 판결. 이 판결에 대한 자세한 분석으로는 김재윤(2015),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한 형법적 규제 방안」, 『법학논총』, 제35집 제2호, 227-233쪽 참조.

34)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는 김재윤(2015), 앞의 논문, 227-233쪽 참조.

3항은 “국가사회주의(나치) 지배 하에서 범하여진 국제형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된 종류의 행위를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공연히 또는 집회에서 찬양, 부인, 경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과 같은 역사적 사실의 부인으로서 이른바 ‘아우슈비츠 거짓말’(Auschwitzlüge) 내지 ‘홀로코스트 부인’(Holocaust-Leugnung)[35]을 금지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시작하여 최근 더욱더 독일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극우주의자들과 신나치주의자들의 홀로코스트 부인을 정당화할 경우 아우슈비츠 희생자와 그 유가족의 존엄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이를 형법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아우슈비츠 거짓말을 형사처벌하는 독일형법 제130조 제3항과 같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부인, 왜곡, 날조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와 같은 형사처벌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2. 5·18민주화운동 부인죄 도입의 필요성과 그 내용

2-1. 5·18민주화운동 부인죄 도입의 필요성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이 아닌 형사처벌 규정을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은 형법적 규제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홀로코스트 부인이라는 역사적 사실의 부인에 대해 형법적 규제의 방식을 따르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거나 특정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극단적인 이견을 표출하였다고 해서 이를 형벌로 금지한다면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며, 국가가 개인에 대한 사상적 후견의 시도로 사상적 자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미국은 이른바 ‘사상의 자유시장이론’에 따라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에 미국에서는 홀로코스트를 부

35) 홀로코스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약 1,200만명의 민간인이 나치와 그 협력자들에 의해 희생된 사건을 의미하는데, 홀로코스트 부인자들은 아우슈비츠나 여타 수용소에서 유대인을 학살하기 위한 인간가스실이나 소각로 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으로는 이소영(2013), 「기억의 규제와 ‘규제를 통한 기억하기’?: 홀로코스트 부정(Holocaust denial) 규제 법제와 사회적 기억의 구성」, 『법학연구』, 제21권 제4호, 405쪽 이하; 이재승(2008), 「기억과 법: 홀로코스트 부정」, 『법철학연구』, 제11권 제1호, 223쪽 이하 참조.

인하는 공개적인 의견 표명이나 도서의 출판에 대해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36]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인권 유린의 잔인한 역사에 대해 극단적인 의견, 즉 찬동을 하거나 행위를 미화시키는 표현은 민사상의 손해배상 등의 법리로 풀어야지 형사적 제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37]라든지, “역사의 부정을 처벌하는 새로운 규제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규제법은 많으며, 역사부정을 포함하여 역사논쟁을 법원에 맡기려는 시도는 국가에게 상대의 뇌를 검열하게 하고, 급기야 자신의 뇌를 검증받으려는 것이다. 사상에 대해서는 언제나 보다 좋은 사상으로 맞서는 것이 원칙이다”[38]라고 하여 민·형사법적 규제에 반대하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일정 부분 경청할만한 부분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찬성하기 어렵다. 첫째,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다른 어떤 기본권보다 강하게 보호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치안방해(sedition), 음란(obscenity), 명예훼손(defamation), 공격적 언동(fighting words)에 해당하는 표현은 법적 규제가 가능하다.[39] 그리고 미국은 독일이나 유럽과 같이 나치체제나 홀로코스트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아 역사적 사실의 부인에 대한 인식과 대처에 커다란 간극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미국에서 문제된 국가사회당 대 스코키 사건[40]은 홀로코스트 부인과 같은 역사적 사실의 부인이 아니라 나치의 상징인 철십자를 갖춘 나치 정복을 입고 행진을 하고자 한 신나치 단체의 시위금지에 대한 합헌 여부를 다룬 것이다. 그리고 이 판결 내용 가운데 재심을 담당한 주법원은 나치마크 게양을 금지한 부분에 대해 해당 기호가 유대인의 생활공간에 의도적으로 게양된 경우에는 폭력적인 반응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인종이나 종교적 증오의 모멸 표현은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호되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41] 둘째, 인권 유린의 잔인한 역사에 대해 민사적 규제 방식은 그 제재의 효과에 의문이 든다. 이는 미국에서 명예훼손에 대해 형법적 규제가 아닌 민사적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한 주장으로 보이나, 우리나라와 미국은 명예 관점, 표현의 자유의 보장 정도 등 민사소송절차가 다르며, 미국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강력한 민사제재가 존재하지도 않다.[42]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셋째, 역사부정을 처벌하는 규제법이 많다고 하나, 현재까지 홀로코스트와 같은 역사적 사실의 부인을 형사처벌(독일형법 제130조 제3항)하는 독자적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역사적 사실의 부인과 역사논쟁은 엄연히 구별되는 것으로, 5·18민주화운동은 폭동이 아니며, 북

---

36) 이재승(2008), 앞의 논문, 240쪽.
37) 김희정(2012),「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행웡체 대한 제재 법률의 헌법적 정당성」,『고려법학』, 제67호, 101쪽.
38) 이재승(2008), 앞의 논문, 247, 249쪽.
39) 이재승(2008), 앞의 논문, 240쪽.
40) Skokie v. National Socialist Party, 51 Ⅲ. App. 3d 279, 281 (App. Ct. 1977).
41) Skokie v. National Socialist Party, 51 Ⅲ. App. 3d 279, 287-94 (App. Ct 1977).
42) 조국(201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재구성」,『형사정책』, 제25권 제3호, 17쪽.

한군의 개입은 없었다는 것은 역사논쟁의 차원을 넘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따라서 최근 일부 극우논객과 종합편성채널,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역사적 사실로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인행위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민주화운동을 부인, 왜곡, 날조 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명예훼손죄의 법리가 아닌 또 다른 방식의 형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43]

2-2. 5·18민주화운동 부인죄의 구체적 내용

5·18민주화운동 부인죄 도입이라는 형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잉금지의 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 여부를 염두에 두면서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한 형법적 규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처벌대상과 관련하여 역사적 사실의 부인행위에 5·18민주화운동만을 국한시킬 것인지 아니면 반인륜 범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상의 민주화운동,[44] 증오표현 등까지 포함시킬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김동철의원 대표발의안은 반인륜적 범죄와 민주화운동을 부인·왜곡·날조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다.[45] 그러나 동 대표발의안에서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언급된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 행위가 어디까지인지, 헌정질서 파괴범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의미하는지가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위험이 크다.[46] 그리고 역사적 사실의 부인과 증오표현은 그 개념을 달리하는 것으로, 독일형법은 증오표현과 역사적 사실의 부인을 동일하게 형사처벌하고 있지만 조문을 달리하여 그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독일형법 제130조 제1항과 제2항은 증오표현을, 동조 제3항과 제4항은 역사적 사실의 부인을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처럼 증오표현을 형사처벌해야 하는가는 역사적 사실의 부인과 구별하여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47] 따라서 역사적 사실의 부인에 대한 형법적 규제의 대상은

---

43) 김재윤(2015), 앞의 논문, 242-243쪽 재인용.

4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45) 김동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128호, 발의일 2013.5.27.)

46) 같은 지적으로 임중호(2013), 「반인류 범죄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5-6쪽.

47) 증오표현의 규제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로는 김지혜(2015), 「차별선동의 규제 -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법적,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법조』, 제64권 제9호, 36쪽 이하; 이준일(2014),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방식」, 『고려법학』, 제72호, 65쪽 이하; 홍성수, 「혐

5·18민주화운동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처벌행위와 관련하여 독일형법 제130조 제3항은 찬양·부인·경시를 행위태양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국가사회주의(나치) 지배 하에서 범하여진 국제형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된 종류의 행위라는 범죄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범죄행위를 찬양하거나 전적으로 부인하거나 홀로코스트의 불법성, 위험성, 결과에 대해 실질적 의미와 모순되게 경시하는 것을 행위태양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한 형법적 규제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행해진 범죄행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에 저항하면서 펼쳐진 광주시민의 민주화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민주화운동을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부인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하거나(왜곡),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는 행위(날조)를 행위태양으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셋째, 행위방법과 관련하여 공연성을 요구할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5·18민주화운동 부인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할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부인행위는 공연성이 폭넓게 인정되는 신문, 잡지, TV 등 언론매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행해지므로 이러한 행위방법에 한정하여 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넷째, 형벌과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 부인행위는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그 행위방법도 공연성이 폭넓게 인정되는 출판물과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행해지므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 제2항[48]과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익의 균형성에 부합하는 적정한 형벌이라 보인다.

다섯째, 위법성조각사유와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 부인죄가 마련될 경우 자칫 국가보안법에 의해 좌파적 견해가 단죄되는 폐해가 5·18민주화운동 부인죄의 신설을 통해 우파적 견해를 처벌하는 폐해로 연결될 우려가 있고, 국가보안법과 더불어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가 제약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독일형법 제130조 제6항[49]과 유사하게 "5·18민주화운동의 부인·왜곡·날조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위법성조각사유를 만들어 사상의 자유 등이 폭넓게 보호될 수 있는 완충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5·18민주화운동 부인죄를 형법과 특별법 가운데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오표현의 규제: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규제대안의 모색」,『법과 사회』, 제50권, 287쪽 이하 참조.

4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9) 독일형법 제130조 제6항은 "선전물 또는 선전행위가 국민계몽, 위헌적 계획의 저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독일형법 제86조 제3항을 준용하여 홀로코스트 부인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의 문제가 있다. 5·18민주화운동 부인죄는 형법상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법적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형법전에 편입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그렇다고 하여 하나의 독자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으나, 5·18민주화운동 부인죄 하나를 신설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따라서 5·18민주화운동 부인행위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5·18유공자법' 이라 한다) 제1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므로, 5·18유공자법 제8장 벌칙에 제70조의1(벌칙)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5.18민주화운동을 부인, 왜곡, 날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과 제70조의2(위법성조각사유) "전조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를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본다.[50]

3. 5·18민주화운동 부인죄의 헌법적 정당성

역사적 사실의 부인으로서 아우슈비츠 거짓말을 형사처벌하는 독일형법 제130조 제3항과 유사하게 5·18유공자법 제8장 벌칙에서 제70조의1과 제70조의2를 신설하여 5·18민주화운동 부인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5·18민주화운동 부인죄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당벌성과 형벌필요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즉 5·18민주화운동 부인죄의 당벌성으로 규범의 보호목적, 기본권과의 합치성, 형법적 체계정합성 및 사회유해성의 증명에 대해, 그리고 형벌필요성으로 비례성원칙에 따른 적합성, 필요성 및 균형성을 갖추고 있는지가 상세히 검토되어야 한다.

3-1. 당벌성(Strafwürdigkeit)의 검토

1) 규범의 보호목적

우선 새로운 구성요건에 대한 입법안이 제안될 때 그 당벌성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때 당벌성이란 "일정한 행위에 대한 법공동체의 사회윤리적 비난을 의미하며, 당벌

50) 김재윤(2015), 앞의 논문, 243-246쪽 재인용.

성 여부는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 사회적 유해성 등에 따라 판단"된다.[51] 그런데 형벌을 포함하고 있는 새로운 구성요건은 당벌성이라는 하늘에서 그저 우연히 떨어지는 산물이 아니고, 국민의 다양한 이익충돌에 대한 타협의 산물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구성요건상 규범의 보호목적이 명확하게 설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제안된 5·18민주화운동 부인죄는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5·18민주화운동을 부인, 왜곡, 날조"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고자 한다. 이 때 보호객체는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사실 그 자체이다. 1980년 당시 군부독재에 항거하여 발생한 5.18민주화운동은 세계적 석학들에게 '전환기의 정의'(Transitional Justice)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고양한 의거라고 할 수 있으며,[52] 1960년 4·19혁명에 뒤 이은 우리 국민의 살아있는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부 극우논객과 종합편성채널 등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묘사하고 심지어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하는 등 역사적 사실의 부인, 왜곡, 날조하는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악의적인 역사적 사실의 왜곡은 사회적 통합이 절실한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자 및 그 유가족 개개인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부인죄는 1980년 5월 봄 광주시민에 대해 제5공화국 군부독재 정권의 계엄군에 의해 저질러진 수많은 불법행위의 부인, 왜곡, 날조하는 역사적 사실의 부인을 금지하고 계엄군의 불법행위로 인해 고통을 겪은 희생자 및 그 유가족 개개인 대한 존엄성을 보호하고자 한다. 즉 5·18민주화운동 부인죄의 보호목적은 계엄군이 광주시민들에게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거나 북한군이 개입된 행위라는 왜곡과 날조를 용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역사적 사실의 부인을 금지하고 이를 통해 평화로운 공동체의 삶을 방해하는 것을 억지하는 한편, 계엄군에 의한 폭력적·자의적 인권침해의 희생자 및 그 유가족 개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하는데 있다.

2) 헌법과의 합치성

헌법상 가치목록과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한 형법적 대처는 5·18민주화운동이 폭도들에 의한 광주사태가 아니라 제5공화국 군부 독재 정권 하에서 계엄군이 광주시민에게 저지른 수많은 불법행위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이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그 희생자의 존엄성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공공의 법적 평온이란 이익의 관점에서 긍정적 목표설

51) 이보영·이무선(2012), 「마약범죄 처벌의 정당성」, 『법학연구』, 제47집, 225쪽.
52) 임중호(2013), 앞의 검토보고서, 6쪽.

정이다. 반면에 이로써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부정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의해 기본권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 제한의 허용과 관련하여 충돌하는 관련 법익 상호간의 이익형량을 언제나 고려해야 한다. 즉 민주적 국가형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으로 설명되는 표현의 자유[53]에 대한 제한이 정당화될 정도로 중요한 보호목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은 이익형량을 필요로 하게 한다.[54]

이와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 왜곡, 날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정당화될 수 있다. 나치 체제 하에서의 범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의 부인을 형사처벌하는 독일형법 제130조 제3항과 유사하게 신군부 정권 하에서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자신의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피해자 자신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유가족에게도 이익이 된다. 직·간접적으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폭력과 테러를 경험한 모든 생존자는 그들의 쓰라린 고통과 그들의 역사적 정체성에 대한 진실논쟁으로부터 보호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개인의 이익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군부 독재에 의한 폭력적 조치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인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표현의 자유, 즉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인, 왜곡, 날조를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할 자유에 대한 제한은 예술, 학문, 연구 및 교육의 이익과 관련하여 특히 시민에 대한 교육과 위헌적 행동의 방어를 위해 정당하다고 본다.

3) 형법적 체계정합성

다음으로, 보호법익의 선택이 형법적 체계정합성이 있는지, 달리 표현하면 그밖의 형법적 법익보호에 모순이 없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도덕적 금지에 위반될 뿐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의 위협에 의해 금지되지 않음은 자명한 사실이다.[55] 법익보호의 관점에서 거짓말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할 경우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된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보호는 명예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들에 의해 실현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과 가치판단의 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 집합적

53) BVerfGE 7, 198 (208) = NJW 1958, 257.
54) Ostendorf(1985), 「Im Streit: Die strafrechtliche Verfolgung der Auschwitzlüge」, 『NJW』, 1062쪽.
55) Ostendorf(1985), 앞의 논문, 1063쪽.

명사를 쓴 경우 그 범위에 속하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명예훼손죄로 보호받아야 할 구성원이 많은 대규모 집단의 경우 피해자 특정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의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56]

더욱이 검찰은 5·18민주화운동 부인의 문제에 대한 형법적 해결을 그 동안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에게만 떠맡겨져 온 경향이 있었다. 즉 검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그 유가족의 이익을 위한 개입도 소극적 자세로 임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평온과 같은 사회적 법익의 보호를 위해서 개입하지도 않았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친고죄[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11조(모욕)] 내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로 규정되어 있어 5·18민주화운동 부인이라는 전체 사회적 갈등의 문제를 피해자 개인의 고소권 행사 내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여부에 의존시켜 개인적 문제로 파악하는 한계를 보여 왔다.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가벌성을 확대해온 현재의 형사정책적 방향, 즉 형법은 더욱더 사회통제의 규제적 수단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방향과 모순되는 것이다. 형법의 단편성 내지 겸억성이 형사정책적 원칙으로 언급되지만, 오늘날 형사정책의 일상에서는 가벌성의 흠결이 더욱 빈번히 언급되고 있다. 이에 형법은 경제범죄, 환경범죄, 컴퓨터범죄, 마약범죄 등의 영역에서 부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57] 사회통제의 수단으로서 형법이 이러한 변화된 사회와 국가에 의해 요구되어지는 한 본래의 의미에서 사회유해적 행위에 대한 가벌성의 흠결은 보완되어야 한다는 '동등한 대우의 원칙'(Gleichbehandlungsprinzip)이 요구될 수 있다.[58] 즉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점절도를 형사처벌하는 한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포기하는 것은 형법체계에 있어 가치모순으로 인식될 수 있다.

4) 사회유해성의 증명

마지막으로, 당벌성을 위해 금지된 행위의 사회유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5·18민주화운동을 부인, 왜곡, 날조하는 발언에 대해 일부 국민들은 이를 무시하거나 분노하지만 일부 국민들은 이에 대해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서로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때 이러한 종류의 발언이 어떠한 정치적 의견표현의 맥락에서 행해졌는가 하는 관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59]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부 극우논객과 종합편성채널에 의해 5·18민주화

56)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는 김재윤(2015), 앞의 논문, 227-233쪽.
57) 이러한 현대형법의 팽창현상에 대한 상세한 분석으로는 김재윤(2009), 『현대형법의 위기와 과제』, 전남대학교출판부, 16쪽 이하 참조.
58) Ostendorf(1985), 앞의 논문, 1063쪽.
59) Ostendorf(1985), 앞의 논문, 1063쪽.

운동 부인 발언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 이러한 부인 발언은 특히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희화화된 민주주의 관념을 심어주게 되고 그 결과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폄훼하고 게시글이 다수 등장하여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더욱이 5·18민주화운동을 부인, 왜곡, 날조하는 자는 지난 신군부 독재 하에서 행해진 다수의 폭력적·자의적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찬양하고 선동할 것이라는 연상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부인은 피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유가족들에게 분명 사회유해적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악의적인 부인 발언은 통합이 절실한 우리 사회를 분열시킴으로써 평화로운 공동체 삶의 영위라는 관점에서도 사회유해성이 인정될 수 있다.

3-2. 형벌필요성(Strafbedürftigkeit)의 검토

1) 비례성원칙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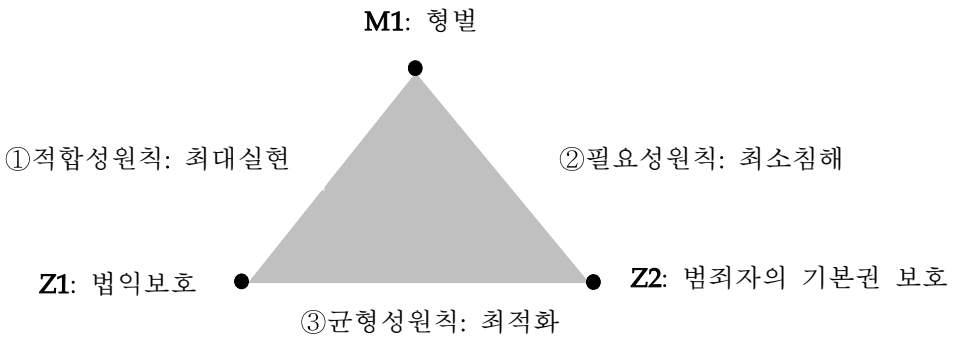
5·18민주화운동 부인죄라는 새로운 구성요건이 헌법상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당벌성 이외에 비례성원칙에 따른 적합성, 필요성 및 균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때 '비례성원칙'(Verhältnismässigkeitsprinzip)이란 일반적으로 국가의 권력은 무제한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되고, 이는 반드시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비례적인 수단을 사용하라는 원칙을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비례성원칙이란 수단이 목적에 (a)적합하고(적합성원칙), (b)필요하며(필요성원칙 내지 최소침해원칙), (c)과잉되지 않아야 한다(균형성원칙 내지 좁은 의미의 비례성원칙)는 것으로, '목적과 수단의 관계'(Zweck-Mittel-Relation)로 이해된다.[60]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비례성의 원칙의 세 가지 부분원칙 이외에 기본권제한의 입법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계상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목적의 정당성'을 추가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61]

---

60) 비례성원칙에 관한 주요 국내문헌으로는 김대환(2005),「우리나라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공법학연구』, 제6권 제3호, 191쪽 이하; 이준일(2006),「헌법재판의 법적 성격」,『헌법학연구』, 제12권 제2호, 321-334쪽; 이용식(2006),「비례성 원칙을 통해 본 형법과 헌법의 관계」,『형사법연구』, 제25호, 27쪽 이하 참조. 독일문헌으로는 Alexy(1986),『Theorie der Grundrechte』, Frankfurt a.M.; L. Clérico(2001),『Die Struktur der Verhältnismäßigkeit』, Baden-Baden; Hirschberg(1981),『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Göttingen; Lerche(1961),『Übermaß und Verfassungsrecht』, Köln u.a. 참조.

61) 헌법재판소 1990.9.3. 89헌가95 결정 참조. 헌법재판소와 같이 비례성원칙의 부분원칙에 '목적의 정당성'을 포섭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자세한 분석으로는 김대환(2005), 앞의 논문, 199-200쪽 참조.

적합성원칙, 필요성원칙 및 균형성원칙이라는 비례성원칙의 부분원칙을 형사실체법 영역에 적용시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62] 형사실체법은 법익보호라는 목적(Z1)의 실현을 위하여 형벌이라는 수단(M1)을 사용하지만 이는 범죄자(피의자·피고인·수형인을 포함한 개념)의 기본권 보호라는 또 다른 목적(Z2)을 침해한다. 여기서 비례성원칙은 <그림 1>과 같이 Z1, Z2, M1을 세 꼭짓점으로 하는 이른바 '관계삼각형'의 구조를 형성한다.



<그림 1> 형법영역에 있어 비례성원칙의 '관계삼각형'

2) 적합성원칙

우선 5·18민주화운동 부인죄의 도입에 따른 형벌위협이 법익보호를 위해 적합한지 여부, 즉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구성요건에서 규정된 형벌, 즉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과 그 범위가 당해 구성요건이 설정한 법익을 보호하게 하거나 그 보호를 촉진시키는 것인지 여부(<그림 1>에서 M1→Z1)를 검토해야 한다. 법익을 보호할 수 없는 형벌위협은 아무런 의미 없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할 뿐이기 때문에 위헌이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 모든 국가는 대체로 형벌의 효과에 의존하고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유형이 형벌목적의 의미에서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63] 이에 따라 형벌목적이 무엇인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오늘날 단지 과거에 행한 범죄의 속죄와 응보라는 형벌목적을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이라는 예방목적이 중요한 형벌목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부인의 형사처벌과 같은 새로운 형벌규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한 긍정적 영향의 가능성은 개별 사례에 있어 제외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범주의 행위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다소간 의문이다. 왜

62) 이하의 논의는 이상돈(2005), 『헌법재판과 형법정책』, 고려대학교출판부, 98-100쪽; 이준일(2014), 앞의 논문, 322-326쪽 참조.
63) BVerfGE 45, 187 (253 ff.) = NJW 1977, 1525.

냐하면 이러한 범죄자는 정치적 신념에 따라 범죄를 행한 이른바 사상범 내지 확신범(Überzeugungsverbrechen)이거나 청소년과 같이 정치적 이념이 아직 미성숙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규제적 수단이 범죄자의 태도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으며, 반대로 범죄자의 기존 태도를 고착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부정적 형사제재의 효과는 유죄선고를 받은 자가 정치적 순교자로 과대 선전될 수 있기 때문에 진지하고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자칫 잘못하면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자를 '재사회화'(Resozialisierung)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축출시켜 '탈사회화'(Desozialisierung)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극적 일반예방으로서 위하(Abschreckung)가 아닌 적극적 일반예방으로서 '규범의 안정화'(Normstabilisierung)라는 일반예방에 여전히 희망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형사제재의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함으로써 이러한 행위의 사회유해성을 국민들이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규범인식을 보다 견고히 할 수 있을 때 올바른 방향으로의 행위조종의 효과를 충실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 일반예방의 형벌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형벌이 실제로 부과되어 형벌위협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64] 왜냐하면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해 실제 형벌이 부과되는 것은 그러한 범죄의 예방을 위해 그 법정형이 얼마나 중하게 설정되어 있는가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3) 필요성원칙

다음으로, 필요성원칙이란 형벌의 투입은 최후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때에도 범죄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Gebot der Minimierung)하는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1>에서 M1→Z2). 이러한 필요성원칙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부인죄가 도입되더라도 시민에게 가장 최소한의 침해가 되는 수단을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형벌은 타인의 법익침해를 통한 법익보호를 의미하며, 형법적 사회통제의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최후수단(ultima ratio)의 원칙이 적용된다. 5·18민주화운동 부인, 왜곡, 날조에 따른 법익침해의 위험과 그로 인한 당벌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어떠한 형사제재도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다.

필요성원칙과 관련하여 한편으로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보호를 위해서 이들에 대한 계엄군의 폭력행위의 부인, 왜곡 및 날조를 새로운 형사처벌 규정을 만들어 특별히 형사처벌한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5·18민주화운동 부인은 일차적으로 생존한 피해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으로 충분히 인정되어 기존의 명예훼손의 법리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64) Ostendorf(1985), 앞의 논문, 1063쪽 이하.

형사소추의 조건으로 당사자의 고소가 있거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한 기존 명예훼손죄의 법리는 피해자 특정의 곤란 등과 같은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5·18민주화운동 부인죄는 피해 당사자의 명예 내지 존엄성의 보호와 아울러 수많은 증언자, 신뢰할만한 문서, 법원의 판결 및 학문적 연구를 통해 증명된 5·18민주화운동이란 역사적 사실도 보호하고자 한다는 데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부인죄의 필요성은 긍정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5·18민주화운동 부인의 유포를 막기 위해 형벌이 아닌 보다 더 약한 규제수단으로도 충분하다는 견해가 제시될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한 최선의 예방은 단지 그들을 형사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원인과 뿌리를 근절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일부 극우논객의 극우적 사상은 하루아침에 변경될 수 없기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 가능성이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의 정립과 관련된 교육이 학교, 적어도 중고등학교에서 거의 수행되지 않고 있으며, 학업을 모두 마친 이후에는 국가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교육정책이 5·18민주화운동 부인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보호책이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다만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한 최후의 예방수단으로서 형벌이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형법적 예방수단이 필요한지 여부는 5·18민주화운동 부인이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희생자의 명예와 존엄성의 침해가 심화되고 역사적 사실의 보호가 얼마만큼 어려워지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이미 현시점에서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인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왜곡된 역사인식이 일부 일베 청소년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싹트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개인 간의 평범한 대화 과정에서의 5·18민주화운동 부인이 아니라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5·18민주화운동을 부인, 왜곡, 날조하는 행위는 너무나 손쉽게 사회에 유포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형벌에 의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4) 균형성원칙

마지막으로, 비례성 검토에 있어 세 번째 기준은 5·18민주화운동 부인죄의 도입을 통한 형벌위협이 균형성을 갖추고 있는가이다. 이 때 균형성원칙은 형법으로 추구하는 목적과 형법이 사용하는 수단, 특히 형벌은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균형성원칙은 목적과 수단의 균형(M1≒Z1) 여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 그치지 않고, 규범적 차원에서 형벌에 의해 추구하고자 하는 법익보호(Z1)와 범죄자의 기본권 보호(Z2)

사이의 “최적상태의 실현”(Z1→Z2; Gebot der Optimierung)을 포괄한다.[65] 이와 관련하여 입법자는 법익보호의 목적 및 범죄자의 기본권 보호의 목적이라는 서로 충돌하는 두 가지 목적과 수단 사이의 이익형량을 구체화하여 최적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본질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대상은 형사제재로서의 형벌,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가 법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규범과 일정한 비례관계에 있는가의 여부이다.

제안된 5·18민주화운동 부인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런데 아우슈비츠 거짓말 처벌조항인 독일형법 제130조 제3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제안된 5·18민주화운동 부인죄의 자유형과 비교할 때 그 상한에 있어 2년이나 높다. 그러나 독일형법과 우리나라 형법은 동일한 범죄행위라 할지라도 개별 국가의 전체 법정형 구조의 상이함으로 인해 그 법정형에 있어 다소 간 차이가 있다.[66] 이에 5·18민주화운동 부인죄의 법정형이 독일형법 제130조 제3항의 법정형과 동일할 이유는 없으며, 그 보다 5·18민주화운동 부인죄의 법정형이 이와 유사한 죄질을 갖는 다른 구성요건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가중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 부인죄의 법정형은 정보통신망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법정형과 동일하며, 출판물 등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한 형법 제309조 제2항의 법정형과 비교할 때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은 동일하나 벌금형은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상향된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벌금형이 상향된 데 있어 보이나, 5·18민주화운동 부인죄는 개인의 명예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그 유가족의 존엄성도 보호뿐만 아니라 부차적으로 역사적 사실도 보호하는 것이므로 벌금형의 법정형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균형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5·18유공자법 제70조의2에 “전조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신설을 함께 제안하였는데,[67] 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만 적용되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보다 그 적용범위가 넓은 것으로 비록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인, 왜곡, 날조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인 한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목적과 수단의 균형을 달성하고 있다고 본다.

---

65) 이상돈(2005), 앞의 책, 99-100쪽.

66) 예컨대 상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독일형법 제223조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이지만 우리나라 형법 제257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자유형의 상한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 형법이 2년이나 높다.

67)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는 김재윤(2015), 앞의 논문, 245쪽 참조.

4. 맺는 말

이른바 아우슈비츠 거짓말 내지 홀로코스트 부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시작하여 최근 더욱더 독일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다. 극우주의자 또는 신나치주의자들에 의한 아우슈비츠 거짓말의 대표적인 예로 “유대인 말살을 위한 단일한 계획은 없었기 때문에 홀로코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우슈비츠 및 여타 수용소에 인간가스실은 없었다”, “집단학살을 증명할 문서화된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에 증언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홀로코스트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건국 등의 목적을 위해 꾸며낸 이야기이다” 등을 언급할 수 있다.[68] 독일은 이러한 아우슈비츠 거짓말에 대해 독일형법 제130조 제3항을 마련하여 형법적 규제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독일의 아우슈비츠 거짓말과 유사하게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일부 극우논객과 종합편성채널에 의해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한다” 또는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였다” 등의 5·18민주화운동을 부인, 왜곡, 날조하는 행위가 증가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와 존엄성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상에서는 아우슈비츠 거짓말을 형사처벌하는 독일형법 제130조 제3항과 유사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 사실의 부인으로서 5·18민주화운동 부인죄 도입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 내용, 그리고 그러한 형벌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부 극우논객과 종합편성채널에 의해 유포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인, 왜곡, 날조행위는 진지하게 고려할 일말의 진리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부인은 신군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민주화운동을 부인, 왜곡, 날조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의 제약에 대한 우려는 “전조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 한다”라는 내용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신설하여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폭넓게 보호될 수 있는 보충장치를 만들어 둠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0조의1(벌칙)을 신설하여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5·18민주화운동을 부인, 왜곡, 날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부인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 규정은 당벌성으로 규범의 보호목적,

68) 이소영(2013), 앞의 논문, 413쪽.

기본권과의 합치성, 형법적 체계정합성 및 사회유해성의 증명뿐만 아니라 형벌필요성의 내용으로 적합성, 필요성 및 균형성을 갖추고 있어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공론의 장에서 민주적 토론을 위한 하나의 행동규칙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대환(2005),「우리나라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공법학연구』, 제6권 제3호, 191-223쪽.

김지혜(2015),「차별선동의 규제 -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법적,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법조』, 제64권 제9호, 36-77쪽.

김재윤(2009),『현대형법의 위기와 과제』, 전남대학교출판부.

김재윤(2015),「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한 형법적 규제 방안」,『법학논총』, 제35집 제2호, 225-253쪽.

김희정(2012),「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행윙체 대한 제재 법률의 헌법적 정당성」,『고려법학』, 제67호, 75-113쪽.

임중호(2013),「반인류 범죄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1-8쪽.

이보영·이무선(2012),「마약범죄 처벌의 정당성」,『법학연구』, 제47집, 217-238쪽.

이상돈(2005),『헌법재판과 형법정책』, 고려대학교출판부.

이소영(2013),「기억의 규제와 '규제를 통한 기억하기'?: 홀로코스트 부정(Holocaust denial) 규제 법제와 사회적 기억의 구성」,『법학연구』, 제21권 제4호, 405-430쪽.

이용식(2006),「비례성 원칙을 통해 본 형법과 헌법의 관계」,『형사법연구』, 제25호, 27-54쪽.

이준일(2006),「헌법재판의 법적 성격」,『헌법학연구』, 제12권 제2호, 313-346쪽.

이준일(2014),「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방식」,『고려법학』, 제72호, 65-90쪽.

이재승(2008),「기억과 법: 홀로코스트 부정」,『법철학연구』, 제11권 제1호, 223-252쪽.

조국(201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재구성」,『형사정책』, 제25권 제3호, 9-46쪽.

홍성수,「혐오표현의 규제: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규제대안의 모색」,『법과 사회』, 제50권, 287-336쪽 .

Alexy(1986),『Theorie der Grundrechte』, Frankfurt a.M.

L. Clérico(2001),『Die Struktur der Verhältnismäßigkeit』, Baden-Baden.

Hirschberg(1981),『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Göttingen.

Lerche(1961),『Übermaß und Verfassungsrecht』, Köln u.a.

Ostendorf(1985),「Im Streit: Die strafrechtliche Verfolgung der Auschwitzlüge」,『NJW』, S. 1049-1112.

“5·18민주화운동 부인죄 도입의 필요성과 헌법적 정당성”(김재윤)의 토론문

안 진(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글은 한국현대사에서 한 분기점을 이룬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하고 왜곡하는 행위들을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가를 모색한 연구이다. 12·12 신군부의 쿠데타를 현실의 법정에서 처벌했고, 계엄군의 학살에도 굴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싸웠던 광주항쟁의 주역들의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자리매김 했던 것은 한국 사회가 공유해야할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을 집단기억으로서 공고화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론자에게 이 연구는 한 사회가 합의를 통해 확립한 중요한 역사적 진실, 공공의 진실을 누군가가 심각하게 훼손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법적인 제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을까를 고민한 글로 보인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저자는 그에 대한 해답을 명예훼손죄의 법리로 형사처벌하는데서 찾고 있다.

구체적으로 필자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8장의 벌칙 제70조의 제1항에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5·18민주화운동을 부인, 왜곡, 날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와 함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70조의 제2항(위법성조각사유)에 “전조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5·18유공자법’(약칭)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입법목적(제1조의 규정)으로 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폄하행위를 동 법률 안에서 벌칙으로 처벌하는 것은 그 행위를 5·18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에 대한 침해(혹은 명예훼손)이자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훼손행위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5·18유공자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은 저자가 시도한 바와 같이, ‘5·18유공자법’의 법칙조항의 신설로 충분하다고 보인다. 그런데, 토론자에게는 5·18유공자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사적인 차원의 처벌)이 곧 바로 민주주의의 가치('공공의 진실')의 훼손에 대한 처벌(공적인 차원의 처벌)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5·18유공자법'의 벌칙조항에 '5·18민주화운동 부인죄'를 도입하는 것은 5·18유공자의 명예회복에는 직접적으로 기여하겠지만 역사적 사실의 부인행위, 공공의 진실의 부인, 나아가서는 민주주의 가치의 훼손에 대한 처벌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처벌의 공적인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독일형법의 홀로코스트 부인죄에 대한 규정에서와 같이 형법에 개별조항을 신설하거나 혹은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1995년 제정, 총 4개 조항)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처벌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는 없을지 제안하고 싶다.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역사적 사실의 부인행위의 처벌대상에 관한 규정조항에는 5·18민주화 운동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민주화운동의 부인, 왜곡, 날조행위를 포괄 할 수 있어야 하고, 일제침략전쟁이나 국가폭력의 범죄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부인행위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김동철 의원의 대표발의안은 참고할 만 하다고 보인다. 필자는 가능한 특별법안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개념이나 포괄적인 '민주화운동'의 개념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위험이 크다고 보았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기존의 2개의 법률을 참고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에는 형법의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의 반란죄와 이적죄를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규정되어 있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제2조)에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토론자의 의문의 핵심은 필자가 주장하는 대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하 행위들을 형법의 명예훼손죄의 법리로 형사처벌함으로써 과연 공공의 진실을 훼손한 사회적 해(social injury)를 규제할 수 있고, 렇게 함으로써 훼손된, 침해된 진실을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다는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필자가 본문에서 잘 분석하고 있듯이 독일의 홀로코스트 부인죄의 규정이나 미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적인 범죄유형이 아닌 예외적인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인 제재는 그것이 속한 사회의 역사적인 맥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홀로코스트에 대한 공적인 기억과 진실이 유태인들의 것만이 아니고 독일사회 전체, 나아가서는 2차대전 이후 국제사회 전체의 공인된 집단기억이 되었듯이, 한국사회에서 독재정권 하의 인권유린은 서구사회의 홀로코스트만큼 중요한 공적인 역사적 사실이며 공인된 집단기억이기 때문이다. 토론자가 다른 대안으로 주장하는 특별법이나 형법상의 규제의 필요성은 한국사회의 특수한 역사(일제 식민지지배와 해방 후 40여년 동안의 독재체제)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기존의 법의 해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의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머물지 않고, 입법(법의 개정)을 통해 역사적 사실의 부인죄 도입의 가능성과 대안을 제시하신 발표자님의 연구에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 도청 앞 집단발포의 책임자등 5·18민주항쟁의 핵심적 진실이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역사적 사실의 부인을

법적인 차원에서 논의하고 연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1980년 5월 광주 그리고 북한

-'북한 개입설'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희송(전남대학교 5·18연구소)

Ⅰ. 문제제기

최근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부대 광주 침투설, 북한 간첩들의 선동설 등 '북한 개입설'의 색깔공세에 휩싸여 있다.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과 연계시키는 북한 개입설은 '레드 콤플렉스'를 자극하는 시대착오적인 이데올로기 공세로 치부되었지만 지속적인 왜곡과 폄훼의 결과 거짓이 진실을 호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다음에는 의심받지만 되풀이 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는 괴벨스의 주장이 5·18역사 왜곡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 개입설은 반공이데올로기의 초월적 권위에 힘입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숭고한 가치를 부정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왜곡·폄훼의 시도는 상당부분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5·18왜곡담론이 정치담론으로 성장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반면에 5·18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은 담론투쟁의 성격상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반공이데올로기가 헤게모니를 창출하는 한국사회의 현실은 북한관련 논의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 개입설의 근거로 제시된 탈북자들의 발화와 북한관련 자료는 남북관계의 특성상 공개적인 검증과 접근이 어려운 조건이었기 때문에 별 다른 논박없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이유가 되었다. 5·18왜곡·폄훼세력에 의한 북한 개입설은 반공주의의 잣대로 모든 것을 해석하면서 인정투쟁을 거쳐 역사적 재해석과정을 마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가치를 부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작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뉴스타운 사이트(www.newstown.co.kr)에서 전개하고 있는 '광수 찾기'[69]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북한 개입설의 근거가 되는 북한관련 발화와 자료에 대한 논증을 통해 이들 주장의 상당부분이 분단정치에 기반하여 '사실 중 일부만을 말하는 반

69) 뉴스타운은 5·18기록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북한의 특정인사라고 주장하면서 사진 속 인물 찾기를 전개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남한으로 망명한 황장엽(김일성종합대학 총장 역임)과 김덕홍까지 1980년 5·18 당시 광주에 와서 폭동의 주역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쯤 숨기기의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80년 5월 당시의 '남북관계'와, 개입의 당사자로 거론되는 '북한의 5·18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북한 개입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1980년 5월 항쟁기간을 전후한 남북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당시의 남북대치 상황에서 북한군 침투가 가능했는지? 남북당국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남북당국자의 견해를 통해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5·18 항쟁기간인 1980년 5월 22일 남북총리급 회담을 위한 실무대표자 회의가 개최되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남북 대화록[70]'을 중심으로 당시의 남북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한 1980년도 남북대화록을 통해 당시 정부당국자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남북대치의 상황과 수준, 북한의 남침의도와 사례를 파악할 것이다. 북한군 침투설의 경우 정부가 사실을 밝히면 논란이 해소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왜곡담론의 거짓말에 동조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가피하게 1980년 당시의 정부자료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남북대화록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당시 군의 경계태세 관련 자료 및 미국정부 고위관계자의 증언 등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1980년 5월 항쟁기간 발행된 북한 로동신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의 5·18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1980년 5·18항쟁 당시의 5·18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개입의 당사자로 거론되는 북한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북한은 5월 항쟁기간 동안 '사건'으로서의 5·18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지? 파악하여 북한의 개입 의지와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북한의 관영매체인 로동신문에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당시에도 정치적 목적에 따른 의미부여와 왜곡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5·18항쟁 이후 다양한 의미가 부여된 '역사'로서의 5·18이 아닌 1980년 5월 항쟁기간 동안의 5·18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고찰이 될 것이다.

특히 5·18왜곡·폄훼세력이 북한 개입설의 대표적인 사례로 5·18항쟁에 대한 북한의 언론보도를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로동신문에 대한 분석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만원은 "5·18상황을 실황 중계한 방송은 북한 방송으로 북한은 광주실황을 밤낮으로 방송하였으며, 이런 상황들을 실황 중계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훈련된 요원들을 대거 광주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한다(지만원, 2010: 182). 이들의 주장처럼 1980년 5월 당시 5·18에 대한 북한 언론의 보도가 실황중계 수준의 보도였는지 로동신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들 주장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로동신문 분석은 통일부 산하 '북한자료센터'에 로동신문 열람 신청을 통해 이뤄졌으며 로동신문이 갖는 북한 언론매체의 속성상 기존의 매체비평이 아닌 내재적 접근방식을 통

70) 통일부 자료인 "South-North Dialogue in Korea(No. 21~30, 1979.9~1982.12)"는 1980년도 남북대화를 일지형태로 기록하고 있는데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다.

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당의 방침과 정책, 당원들의 투쟁 업무를 일상적으로 해설함으로써 당원들을 교양하는 것이 목적으로 바로 당과 국가, 최고 지도자의 의사를 대변한다(이광재, 1984; 전미영, 2010).

따라서 로동신문은 북한 정권의 정치적 태도를 알아보는데 가장 강력하고도 확실한 자료로서(김원태, 2010) 북한 당국의 입장을 파악하는 바로미터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서구의 신문보도와는 달리 속보성과 시사성을 담보한 뉴스 보도지가 아닌 당의 선전 교양지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갖는 사회·정치적 맥락과 정치적 의도를 함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Ⅱ. 1980년 5월 항쟁기간의 남북관계

1. 5·17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북한공산집단의 위협에 따른 불가피한 조처?

1980년 5월 17일 정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언론·출판·보도 및 방송의 사전검열, 태업 및 파업행위 금지, 전국 대학의 휴교 조치,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의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포고령 10호를 발표했다. 포고령 발표와 동시에 민주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조치가 이뤄졌으며 각 대학에는 계엄군이 배치되었다. 또한 5월 18일 최규하 대통령은 '특별성명'을 통해 북한 공산집단의 위협에 철통같이 대처하여 나갈 것임을 천명하면서 5·17조치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 국내적으로는 계속되는 사회혼란을 이용한 북한공산집단의 대남 적화책동이 날로 격증되고 우리 사회 교란을 목적으로 한 무장간첩의 계속적인 침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학원의 소유사태 등을 고무, 찬양, 선동함으로써 남침의 결정적 시기 조성을 획책하고 있습니다…이에 정부는 국가를 보위하고 3천7백만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하며, 안정속에 성장과 발전을 바라고 있는 대다수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일대 단안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앞으로 정부는 국민생활안정과 사회정의의 구현을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북한 공산집단의 위협에 철통같이 대처하여 나갈 것입니다**(1980년 5월 18일 대통령 최규하).

5·18민주화운동의 촉발의 계기가 된 5·17조치에 대해서 신군부와 최규하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굳건히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위협에 맞선 불가피한 조처라는 주장은 신군부가 이후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하였던 주장으로서 광주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의 이유가 되기도 했다. 그리

고 지금은 다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중요한 주제로 활용되고 있다.

그럼 1980년 5월 당시에 '북한 위협'은 실재했던 것일까? 1980년도의 남북대화록에 따르면 1980년 5월을 전후하여 과거에 비해 특별한 북한의 도발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분단 이후 지속되었던 국지적인 충돌과 간첩침투와 같은 일상적 위협은 존재했지만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할 정도의 위협과 충돌은 없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왜냐하면 1980년 1월부터 추진되었던 남북총리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회담이 5·17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1>과 같이 그해 10월까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분단 이후 진행된 남북회담의 역사에서 남북대화는 남한과 북한정부의 내부적 요인이나 상호간의 도발에 따라 무산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정말 신군부의 주장처럼 1980년 5월에 북한의 위협이 실재했다면 1980년도의 남북회담은 중단되는 것이 자연스런 과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남한정부는 헌정질서를 중단시킬만큼 북한의 대남 적화책동이 격증되는 위기상황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위협의 상대인 북한과의 남북회담은 중단하지 않았다. 남북총리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 회담은 5월 22일 예정대로 개최되었다.

남북총리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 회담은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79년 1월 19일 박정희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책임있는 남북당국간 회담을 제안하였으나 북한은 남북당국자간 회담이 아닌 '전민족대회' 개최를 주장하여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1980년 1월 12일 북한이 남북총리회담을 제안하고 1월 18일 최규하대통령이 총리회담 추진을 천명하면서 1975년 이후 단절되었던 남북회담이 5년 만에 재개되었다.

남북총리회담 준비를 위한 제1차 실무대표 회담은 1980년 2월 6일 개최되었다. 1차 실무 대표회담에서는 1976년 단절되었던 남북 직통전화의 재개통을 합의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밀도 깊은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논의는 제10차 실무회담까지 지속되었다. 실무대표 회담에는 남한정부에서는 김영주 수석대표와 정종식, 이동복대표가 참여했으며, 북한정부에서는 현준극 수석대표와 임춘길, 백준혁대표가 참여했다. 남북총리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 회담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

<표 1> 남북총리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 일지[71)]

	회담 일시 및 소요 시간	회담 장소	회담 내용
1차	1980년 2월 6일 오전 10시, 1시간 12분	판문점내 중립국 감독위	남북직통전화 재개 합의
2차	1980년 2월 19일 오전 10시, 2시간 30분	판문점내 북측 판문각	회담 장소와 의제를 제외한 6개항 합의
3차	1980년 3월 4일 오전 10	판문점내 남측 자유의 집	의제 사전 협의 동의, 장소 이견

71) 통일부 자료 "South-North Dialogue in Korea(No. 21～30, 1979.9~1982.12)" 자료에서 재정리.

	시, 3시간 20분		
4차	1980년 3월 18일 오전 10시, 3시간 20분	판문점내 북측 판문각	회담 절차 합의, 의제 추후논의
5차	1980년 4월 1일 오전 10시, 1시간 48분	판문점내 남측 자유의 집	**북한의 3월 무력도발에 대한 남한의 항의로 회담 지연**, 차기 회담 합의
6차	1980년 4월 18일 오전 10시, 3시간	판문점내 북측 판문각	회담명칭 이견, 의제협의 지속
7차	1980년 5월 6일 오전 10시, 3시간 15분	판문점내 남측 자유의 집	의제 이견 절충
8차	1980년 5월 22일 오전 10시, 2시간 24분	판문점내 북측 판문각	**5·17조치의 이유로 북한을 거론한 것에 대한 북한의 항의로 회담 지연**, 차기 회담 합의
9차	1980년 6월 24일 오전 10시, 2시간 6분	판문점내 남측 자유의 집	남측: 총리회담 9월 개최 제안 북측: 건강상 이유로 수석대표 불참, '광주사태'관련 남한 당국 비난
10차	1980년 8월 20일 오전 10시, 1시간 30분	판문점내 북측 판문각	남측: 추석전 이산가족 상봉 제안 북측: 건강상 이유로 수석대표 불참, '광주사태'관련 남한 당국 비난

2. 1980년 5월 항쟁기간 동안의 남북관계:5월 22일 남북대화록을 중심으로

1980년 5월 22일 오전 10시, 전남도청 광장과 금남로에는 시민들이 운집하여 전날 공수부대의 집단발포와 퇴각과정에서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도심을 정리하고 있었으며, 군용헬기는 시내를 선회하며 '폭도들에게 알린다'는 내용의 전단을 살포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판문각에서는 남북총리회담 준비를 위한 제8차 실무대표 회담이 개최되었다.

2시간 24분 동안 진행된 제8차 회담에 대해 남북대화록은 "양측 대표단은 총리회담 의제를 결정하는 것을 계속하기로 전제하였지만 북쪽 대표단이 남쪽의 5월 17일 계엄령 확대, 대학가 혼란같은 내부적 문제를 중상모략하면서 더 이상의 진척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의 회담분위기는 회의 시작 발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데, 남한측 수석대표는 북측의 회의 시작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북측은 이제까지 실무회담을 남북 양측 사이에 있는 현안 문제들을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적 분열과 사회적 혼란을 선동하기 위한 기회를 얻기 위해 참여해 왔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오늘 북측의 언급은 이러한 의심을 더 하게 만들었다. 만약 회담이 성공하려면 각각 상대편 체제의 내재된 질서를 존중하면서 남북양측이 실무급 권한에 충실하게 회담을 수행해야만 한다(김영주 남한대표 회의 시작 발언, 제8차 회담).

반면에 북한측 수석대표는 총리회담의 이슈만 합의되면 회의가 가능한 상황에서 남한 정부가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남북간 회담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측은 모두 발언을 통해 5·17비상계엄 전국 확대의 이유의 하나로 거론한 북한 위협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총리회담이 제안된 이 때에 오직 의제의 이슈가 결정되기만 하면 회담은 열릴 수 있다. 실무회담의 앞길에 가로 놓여 있는 장애물을 쌓음으로써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남북간 회담을 위태롭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남한 당국은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기 위한 결정적 기회를 모색하고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한 음모가 격화되었다는 핑계를 대면서 계엄령을 확대했다. 이것은 우리(북한)에 대한 도발행동이며, 회담 속에 다른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것이다(현준국 북한대표 회의 시작 발언, 제8차 회담).

북한측의 주장에 대해 이동복 대표는 북한 측이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9일까지 라디오 방송에서 남한의 최근 학생운동에 대해 2,136회나 언급하면서 많은 북한 방송들이 남한 학생들에게 '봉기하라, 최후까지 정의의 투쟁을 수행하라'고 촉구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행동이 선동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북한에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이의제기 이후에도 남한측 대표단은 향후 총리회담의 준비단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남한의 내부 상황에 과도한 간섭은 불가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나서, 남한측 대표단이 준비한 의제 초안의 적절성을 설명했다. 특히 남한측은 제안된 총리회담의 조기 실현을 위해서 북측이 진정성을 보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각 의제에 대한 논평을 시작했다. 5월 22일 개최된 제8차 회담과정에서 남한정부는 더 이상 다른 항의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제8차 실무회담에서 남한측이 다른 내용의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회담이 개최되기 전까지 남한정부가 심각하게 인식할만한 북한의 도발책동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4월 1일 개최된 제5차 회담의 경우 남한정부는 3월에 있었던 북한측의 무장침투 문제를 제기하면서 회담이 순연되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것은 8차 회담이 개최되었던 5월 22일까지 남북회담에 영향을 미칠만한 북의 도발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5월 22일 이후 개최된 제9차 회담과 제10차 회담에서도 북한의 침략책동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다.

오히려 아래와 같이 제9차 회담에서는 조속한 회의진행을 촉구하는 남한대표의 발언이 있었다. 5월 항쟁 이후 진행된 9차 회담과 10차 회담의 경우 남북회담의 이니셔티브는 오히려 북한이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월 24일 개최된 제9차 회담의 경우 북한 현준

국 수석대표가 와병을 이유로 회담에 불참하고, 광주의 유혈참극에 대해 남한 정부를 계속 비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담을 무산시키지 않고 이전의 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회담 시기와 의제를 북측에 대폭 양보하였다.

> 나는 남북당국 사이의 생산적 대화로서 총리회담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란다. 나는 북한 측에 남북대화 성사를 위한 우리 측의 제안을 수용해주기를 기대한다. 남측은 의제문제해결을 위해서 협력할 것이다(남한대표의 회의 시작 발언, 제9차 회담).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는 5·18왜곡·폄훼세력의 주장처럼 1980년 5월 항쟁기간에 만약 북한 측의 군사적 개입이 있었다면 당시에 개최되었던 남북회담에서 남한정부가 이렇게 대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1980년 5월 항쟁기간에 북한 특수부대 침투와 같은 군사적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남북대화록 최종 결론 장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이다.

1980년 당시 정부는 제10차 회담으로 남북회담이 무산되고 나서 남북대화록에 총평 성격의 내용을 부기했다. 최종결과 보고서 형태의 제3장 '실무회담의 중지' 장은 1절 북한에 의한 회담의 중지와 남한의 재개를 위한 노력, 2절 북한의 실무회담 지연과 난관 조성 사례로 구성되어 있다. 2절은 회담기간 중 북한측의 회담 지연을 위한 파괴적인 행위 및 발언 사례를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군사도발 사례'를 명기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회담기간인 1980년도에 총4건의 군사도발 사례가 있었는데, 5·18항쟁기간에 북한군의 군사적 도발이 있었다는 기록은 찾을 수가 없다.

<표 2> 남북총리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 기간 중 북한의 군사도발 사례[72)]

일시	내용
1980년 3월 23일	한강 하류를 통한 3명의 무장공비 침투
1980년 3월 25일	경상북도 포항 앞바다를 통한 무장 간첩선 침투
1980년 3월 27일	남측군사분계선 강원도 금화 동쪽 5킬로미터 지점을 통한 3명의 무장 간첩 침투
1980년 9월 9일	동해에서 조업중인 어선 남진호와 그 선원들을 북한 경비정이 피랍

최종 보고서는 오히려 북한측의 5·18에 대한 언급을 남한 내부문제에 대한 부당한 문제제기로 회담을 지연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트집 잡기로 간주하고 있었다. 북한측이 선전선동의 무대로 활용한 사례의 하나로 제시한 제10차 회담의 경우 직접적으로 광주 5·18을 명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이 남한의 내부 문제를 정치 선동의 장으로 활용했다고 평가했다. 당시 남한정부가 '광주사태'를 비롯한 일련의 시위를 '한국의 내부 문제들(some

72) 통일부 자료 "South-North Dialogue in Korea(No. 24, 1980)" 자료에서 재정리.

internal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로 간주하고 있었다는 것은 북한의 외부침투에 의한 사건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북한 위협론에 대한 미국정부의 입장과 간첩사건

1980년도에 작성된 한국정부의 남북대화록은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과 같은 외부의 개입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정부만의 인식이 아니라 당시 미국정부 당국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최근 발간된 회고록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1980년 5월 항쟁 당시 미국은 5월 22일 광주의 비극적 사태에 대한 '공식입장'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73].

> 우리는 한국의 남쪽 도시 광주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태를 깊이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당사자들이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할 것과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불안이 계속되고 폭력이 점증하면 외부세력에 의한 위험한 오판을 불러올 위험이 있다**. 평온이 회복되면 최대통령이 밝힌 정치발전 계획의 이행 재개를 위한 수단을 강구할 것을 모든 당사자들에 촉구할 것이다. **우리가 재차 강조하지만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악용하려는 어떠한 외부세력의 기도도 방위조약의 의무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공식입장 발표에 대해 신군부의 보도지침을 준수하고 있던 한국의 언론은 미국이 신군부에 대한 신뢰와 북한 위협의 현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신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조성하면서 북한 위협론을 재차 강조했다. 당시 한국 언론이 보도했던 북한 위협론에 대한 우려표명은 신군부가 주장했던 내용과 일치한다.

그런데 당시 주한 미국대사였던 글라이스틴은 그의 회고록에서 당시 미국의 발표는 한국 군 수뇌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발표였으며, 북한의 도발가능성에 대해 "확답할 수는 없었지만 북한이 당장 도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고 밝히고 있다(글라이스틴, 2014:194). 5월 22일 발표된 미국 정부의 공식성명에 대해 글라이스틴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 이 공식성명은(대체적인 초안은 내가 만들었으며 '미국의 소리'방송과 주한미군 방송으로도 방송됐다) 여러 고려 사항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한국의 군 수뇌부는 광주의 혼란을 북한이 이용할 것을 우려해 1979~80년 위기의 매 고비마다 평양에 대해 경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워컴과 나는 북한에 대해 그들만큼 걱정하지는 않았지만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신중한 것이

73) 필자 강조. 여기서 외부세력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음.

좋겠다고 생각했다. 워컴장군은 데프콘 3 경계경보에 준하는 경계태세를 비공식적으로 발령하고 공중경보기의 증파와 항모 기동타격대의 파견을 요청했다(글라이스틴, 2014: 195).

글라이스틴의 회고록은 1980년 당시의 상황을 담고 있는데 먼저 북한의 도발과 같은 외부위협은 실재하지 않았지만 신군부의 요청으로 이러한 입장을 표명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북한 위협론은 신군부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발언이었으며, 미군은 데프콘3에 준하는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미군은 공식성명 이후 5월 23일 조기경보기 2대를 일본 미군기지에 배치하여 북한의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미군의 대처와는 별개로 한국군은 이미 1980년 5월 11일부터 '대침투작전태세 강화조치[74]'를 취하고 있었으며, 5월 14일 추가로 '대침투작전 강화지시'가 전군에 내려진 상태였다(작전상황실 상황일지, 1980년). 또한 5월 항쟁기간인 5월 21일에는 진도개 둘이 발령되어 최고의 경계태세가 유지되고 있었다. 이런 여건에서 600여명에 이르는 북한군의 광주 침투가 이뤄졌다는 5·18왜곡·폄훼세력의 주장이 합리성을 갖는 이성적인 주장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5·18왜곡·폄훼세력은 간첩 이창용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북한군의 침투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간첩 이창용의 사례도 왜곡·폄훼세력이 일부 내용을 침소봉대하고 왜곡한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5·18왜곡·폄훼세력은 "광주사태를 전국적으로 확대시켜서 정권전복을 노리려 했던 북한의 계획과 광주사태 당시에 서울을 비롯한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이 침투했던 사실로 보아 간첩 이창용이 광주사태가 한창일 때 서울 나들이를 한 것은 전국적인 무장폭동의 그림을 그리려 시도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자유북한군인연합, 2009:423). 지만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창용의 행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실제로 서울과 광주사이를 오가던 간첩도 잡혔다. 1980년 5월 23일 06:15분, 서울역에서 간첩

---

74) 1. 5월 11일 대침투작전태세 강화
: 최근 국내 소요사태 발생에 편승하여 북괴의 대남도발 침투가 예상되는 바 각급 부대는 대침투 내용 강화할 것
가. DMZ 은밀침투에 대비한 작전 및 경계 강화
나. 소요사태 발생 지역에서 보안 목표 경계강화
다. 수도권 및 영향권에서 해안 및 수중침투 봉쇄
AN_2기 대비대책 강화
라. 필요한 점검 및 근무확인 조치

2. 5월 14일 대침투작전 강화지시(추가)
: 남북대화 및 대남 심리전 공세와 병행 적극적인 대남활동 및 비정규전 위협이 예상되고 있음
: 기간 80.5.10.~ 5.20
: 추가 조치사항
1) 조기 경보체계 확립(감시활동 강화)
2) 검문검색 철저(공항 및 항만)
3) 요인 신변보호 철저
4) 즉각 출동태세 유지

이창용(평양시 중구역 계림동 36번지)을 주민의 신고로 남대문경찰서 경장 한규용이 검거했다. 이창용은 광주에서 서울로 왔다가, 다시 광주로 가는 도중 잡혔다. 현금 1,935,000원, 난수표3매, 무전기1대, 독침1개, 위장 주민등록증 2개, 환각제 등 22종 339점을 압수했다(지만원, 2010:162).

지만원은 이창용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간첩이 실제로 광주와 서울을 오간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창용 체포 당시의 언론보도와 경찰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이창용은 전남 보성을 통해 침투해 순천을 경유하여 서울역에 도착했다가 바로 체포되었다. 신군부의 의도에 따라 5·18을 왜곡한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1980년 5월 23일 동아일보의 보도조차도 이창용은 '광주시에 들어가 학생 시민들의 시위를 무장폭동으로 유도하고 반정부 선전 및 선동임무로 파견되어' 광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검문검색이 엄중하여 서울로 들어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실제 재판 기록에서는 광주 잠입 기도나 5·18과 관련된 임무와는 무관한 간첩으로 확인되고 있다. 결국 이창용은 광주에 들어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18왜곡·폄훼세력은 버젓이 광주와 서울을 오간 간첩으로 조작하면서 5·18민주화운동을 이념논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Ⅲ. 북한 언론보도에 비친 1980년 5월 광주

1. 로동신문을 통해 본 5·18

5·18왜곡·폄훼세력은 북한의 언론에서 5·18민주화운동이 자주 보도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5·18이 북한의 적화통일 공작의 최고 걸작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고 간주한다(지만원 2010).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5·18 당시에 북한은 한편으로는 광주실황을 밤낮으로 북한주민들에게 방송하여 북한군인들은 물론 북한주민들의 적개심과 의협심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전군에 폭풍명령을 내려 남침준비를 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북한 언론 보도와 북한군 침투설을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다.

북한 언론의 보도방향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로동신문의 보도 논조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1980년 5월 항쟁시기 5·18에 대한 로동신문의 보도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다. 물론 당시의 방송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방송에 대한 접근은 현재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로동신문은 가장 적절한 분석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로동신문은 1945년 10월 13일 북조선 공산당의 결정에 의해 11월 1일부터 발행되기 시작했으며, 1946년 8월 30일 조선노동당 제1차 대회에서 로동신문으로 제호를 바꾸어 지금까지 매일 발행되고 있다(권명은, 1980). 매일 발행되는 로동신문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배포되고 당 간부에서부터 당 세포비서에 이르는 모든 당직자들과 책임

자들이 의무적으로 구독하고 있으며, 당원을 제외한 일반 개인은 구독할 수 없지만 각 사업소나 공장, 학교, 군부대에 의무적으로 배포되고 사상교양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모든 북한 주민이 접한다고 할 수 있다(이광재, 1984).

로동신문은 1980년 당시 총6면으로 발행되었는데[75] 로동신문의 지면 배치는 제1면에 당시 주석이었던 김일성의 연설문, 담화문, 시책지시, 외국 대표단 접견이나 현지지도 등 최고지도자와 관련된 내용이 주로 게재되었다. 제2, 3, 4면은 당과 주석에 대한 우상화 선전 내용이나 해설기사, 사회주의 건설성과를 드러내는 기사들이 주로 실렸다. 제5면에는 남한 관련기사가 게재되는데 주로 남한정부를 비난하는 남한 내의 소식이 실렸다. 마지막으로 제6면은 외신면으로 외국 통신사의 기사 내용을 인용하여 미국과 남한에 대한 비방과 북에 대한 우호적 기사를 실고 있었다.

로동신문을 통해 북한의 5·18에 대한 인식과 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5·18기사가 실린 지면을 구분하여 각 지면에 따라 보도내용의 비중을 다르게 살펴봤다. 로동신문의 특성상 제1면의 경우 1980년에는 김일성 주석의 동정과 지시사항이 주로 실렸다는 점에서 가장 비중이 큰 지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로동신문 1면에 5·18관련 기사가 실렸다면 그 만큼 북한에서 비중있는 사건으로 다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로동신문의 경우 1면에 배치되는 기사의 건수나 분량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면에 실렸다는 것 뿐만 아니라 1면 지면을 점유하는 비중에 따라 기사의 의미를 세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분석에서는 먼저 1면에 실린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되 1면 전체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다뤄졌는지를 다시 세분화했다. 기사의 비중을 세분화하는 방법은 로동신문 1면에서 로동신문 제호를 제외한 부분을 전체 면으로 산정하여 각 기사가 점유한 비중을 퍼센트로 구분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로동신문의 5·18관련 보도가 실시간으로 다뤄졌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도 일시와 함께 그 기사가 실제 발생한 날짜를 연계하여 살펴봤다. 또한 북한의 5·18에 대한 인식변화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분석의 범위를 5·18항쟁기간 10일은 물론 항쟁 전후로 범위를 확장하여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자 했다.

5·18 이후의 기사 게재 빈도를 중심으로 5·18에 대한 보도양상을 고찰한 전미영(2010)의 경우, 5·18을 전후하여 대남기사가 급증하고 5월 18일 하루에만 5·18관련 기사가 1·2면에 5건이나 실렸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5·18이전까지로 분석대상을 확대하면 5월 18일 대남기사는 이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5월 18일 로동신문에서 5·18관련 기사로 분류한 내용도 사건 발생시점을 엄밀하게 따져보면 아래 <표 4>와 같이 5·18관련기사가 아닌 5월 16일 시위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로동신문에 대한 분석은 기사 유형별 분류나 일자별 게재 빈도와 같은 기존의

75) 로동신문은 특별한 경우 지면을 늘려 8~10면까지 발간하기도 하는데(이기우, 2014) 1980년 5월 16일의 경우 8면으로 발행되었다.

매체 비평의 방식으로만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사의 비중과 사건발생 시점을 구분하고, 내용의 의미변화 과정을 파악하는 담론분석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표 3>과 같이 1면에 실린 내용은 지면에서의 비중과 함께 기사 제목을 같이 명기하였다. 참고로 기사 제목은 로동신문에 실린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1) 5·18항쟁 이전의 보도 양상

1980년 5월 로동신문에 남한의 시위관련 기사가 1면에 처음 등장한 것은 5월 4일이다. 5월 4일 로동신문은 1면의 지면 60%를 할애하여 5월 2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민주화 대행진' 시위를 비롯한 각 대학의 학생시위 모습을 보도하고 있다. 이후의 보도에서는 5월 2일 민주화 대행진 학생시위를 시작으로 5월 15일 서울역 회군 시위까지 급박하게 전개되었던 이른바 '서울의 봄' 민주화 시위가 주요 기사로 다뤄지고 있다.

5·18항쟁 이전의 보도에서 1면에 남한시위 관련기사가 보도된 시기는 5월 4일(60%), 5일(42%), 11일(38%), 15일(74%), 16일(100%), 17일(80%) 등이다. 이 가운데에서 가장 주목할 보도는 5월 15일, 16일, 17일의 보도 내용이다. 1면의 보도비중에서도 확인되듯이 5·18항쟁기간을 포함하여 5월 한달 동안 남한관련 기사가 가장 많이 다뤄진 날들이었다.

특히 5월 16일은 1면 전체를 남한 시위 내용으로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지면을 8면으로 증면하여 발행한 날이다. 5·18항쟁 기간을 포함하여 1980년 5월 한달 동안 로동신문이 증면까지 한 경우는 5월 16일이 유일하다. 5월 16일의 기사 내용은 서울시내 21개 대학과 지방 11개 대학의 학생들이 시위에 참가한 5월 14일의 시위내용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대거 거리시위에 나선 13일과 14일 시위를 보도하고 있다.

또한 5월 15일과 16일의 로동신문은 형식면에서도 '투쟁의 불길은 온 남녘땅을 휩쓴다(5월 15일), 반파쑈민주항전 남조선전역에!(5월 16일)'라는 큰 제목을 기존의 보도형식과는 다르게 타이틀 제목만으로 사용하였다. 5월 16일 1면의 큰 제목 "반파쑈민주항전 남조선전역에!"가 상징하고 있듯이 당시 북한은 남한의 학생시위를 반파쇼 민주주의 투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로동신문에 보도된 기사의 제목은 기사내용을 요약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타이틀 제목보다는 기사 내용의 전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구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로동신문은 실제 시위현장에서 외쳐졌던 투쟁구호들을 큰 제목 형태로 가령 "<유신잔당 몰아내자>" 와 같이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보도 양태는 5·18항쟁을 비롯하여 5월 한달 동안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5·18항쟁 이전의 보도 양상에서 특징적인 것은 기존의 5면에 주로 배치되었던 남한 관련 기사가 1면에 보도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5월 16일은 증면까지 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보도 지면의 증가는 남한의 민주화시위가 점차 전국적인 차원으로 확산되고 시위

가 늘어가는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시위가 없었던 시기의 경우는 그 만큼 보도내용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후 5·18항쟁 기간의 보도에서 5·18보도가 많아지는 것은 5·18왜곡·폄훼세력의 주장처럼 북한의 적화공작에 따른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5·18의 양상이 특별했던 것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5·18항쟁 이전의 보도 양상에 대한 분석에서 북한의 언론이 왜곡·폄훼세력의 주장처럼 5·18만 대서특필한 것이 아니라 5·18항쟁 이전부터 남한의 시위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전체 보도 비중에서는 5·18항쟁 이전인 5월 10일부터 15일까지의 시위가 더 크게 다뤄졌다. 탈북자를 비롯한 왜곡·폄훼세력의 주장처럼 5·18만을 특별하게 다룬 것이 아니라 로동신문은 이미 5·18항쟁 이전부터 남한의 시위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었으며, 5·18항쟁기간에도 이러한 보도기조가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표 3> 5·18항쟁 이전의 로동신문 보도 내용

일시	지면	내용(1면: 기사 제목, 기타 면: 중심 내용)	비고
1일	5면	·4월 29일 시위상황	
2일	5면	·4월 30일 시위상황	
3일	5면	·4월 30일, 5월 1일 시위상황	
4일	1면 (60%)	·<유신잔당 몰아내자>,<비상계엄령 해제하라>,<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라> / 서울대학교 15개 단과대학 학생들 1만 2천여명이 민주화대총회를 열고 시위투쟁을 전개, 시국선언문을 발표	2일 시위상황
		<계엄령을 해제하라>,<강제징집 철회하라>,<학우의 피를 보상하라> / 서울의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이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투쟁을 계속하기로 결의, 롱성과 가두시위를 전개, 경찰과 투석전	2일 시위상황
	5면	·5월 1일, 2일 시위상황	
5일	1면 (42%)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라 / 모든 지식인들은 민주화를 향한 대렬에 참여하라, 매판재벌의 재산을 공개하라 해제하라 / 서울대학교 학생들 6천여명이 제2차 민주화대총회 진행	3일 시위상황
		·<유신잔당 물러가라>/<비상계엄령을 해제하라>,<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 서울의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낮에 이어 밤에도 롱성과 시위를 계속 전개	3일 시위상황
	5면	·2일, 3일 시위상황	
6일	5면	·2일, 3일, 4일 시위상황	
7일	5면	·3일, 4일, 5일 시위상황	
8일	4·5면	·6일, 7일 시위상황	
9일	4·5면	·7일, 8일 시위상황	

일시	지면	내용(1면: 기사 제목, 기타 면: 중심 내용)	비고
10일	5면	·8일, 9일 시위상황	
11일	1면 (38%)	·민족통일을 성취하자/ 서울대학교, 리화녀자대학교, 신학대학, 단국대학교 학생 6천여명 투쟁 계속	9 일 시 위 상황
		·사회와 학원을 민주화하는 력사적사명수행해 국민모두가 참여하자,<비상계엄령을 조속히 해제하라> 서울의 여러 대학 학생들 10일에도 투쟁 계속, 교수들도 투쟁에 참가	
	5면	·9일, 10일 시위상황	
12일	5면	·10일 시위상황	
13일	5면	·9일, 10일, 11일 시위상황	
14일		·확인불명(자료 누락)	
15일	1면 (74%)	·투쟁의 불길 온 남녘땅을 휩쓴다 / <학생운동의 대규모의 가두시위와 가두집회로 발전> / <학생들의 움직임은 예측을 허용하지 않는 형세> /<전두환을 체포하라>	14일 시 위 상황
		·서울에서 20여개 대학의 3만여명 학생들이 중심거리로 달려나가 가두시위를 전개	14일 시 위 상황
		·서울대학교 학생들 1만여명이 거리에 진출하여 격렬한 시위 전개, 기동경찰대를 포위하고 투석전	14일 시 위 상황
		·<모든 대학들이 가두시위>,<서울시내사태 긴박> / 일본의 신문들이 14일 전개된 남조선학생들의 투쟁을 보도	
	5·6면	·13일, 14일 시위상황	
16일	1면 (100%)	·반파쑈민주항전 남조선전역에!	
		·대구시내 대학생 1만2천여명이 경찰과 투석적, 5대의 경찰차량을 불태우고 파출소 3개를 파괴	14일 시 위 상황
		·6천명 전남대학교 학생들 <유신잔당 물러가라> 등 구호밑에 투석전, <도청>앞까지 진출 / 광주시의 중심거리교통이 차단되고 경찰관 등 10며명이 중경상, 50여명의 교수들이<량심선언>을 채택하고 시위에 가담	14일 시 위 상황
		·서울대학교와 중앙대학교, 숭전대학교 학생 8천여명이 문화방송국앞에서 성토모임/ 한양대학교, 건국대학교 학생들 광화문으로 진출,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의 수천명의 학생들도 련좌시위	14일 시 위 상황
		·시위에 나선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당국자와의 담판을 주장 /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시위로 렬차가 정지	14일 시 위 상황

일시	지면	내용(1면: 기사 제목, 기타 면: 중심 내용)	비고
		·서울시내 20여개 대학 학생들이 야간시위 / 투쟁을 계속하기로 결의	14일 시 위 상황
	5·6·7·8면	·13일, 14일, 15일 시위상황	
17일	1면 (80%)	·서울에서 15일에 10만명 군중이 반<정부>시위 / 시위군중을 해산시키기 위하여 경찰이 최루탄을 사용	
		·15일 하루동안 남조선에서 62개 대학 학생들이 시위에 참가	
		·8만명 시위학생들이 광화문을 향해 행진, 경찰과 대치 / 모여든 주민들로 남대문인근은 인산인해	15일 시 위 상황
		·서울 남대문근처에서 경찰과 맞선 학생들이 경찰차량을 소각 / 인하대학교,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바리케크를 쌓고 경찰과 투석전	16일 시 위 상황
		·고려대학교 학생 2천여명이 16일에도 가두시위 / 광주의 대학생 1만5천여명이 시내광장에서 련좌롱성 / 여러지방의 대학생들이 시위계속	16일 시 위 상황
	4·5·6면	15일, 16일 시위 상황	

2) 1980년 5월 항쟁기간 동안의 보도 양상

① 5월 18일~21일의 보도 양상

1980년 5월 항쟁에 대한 로동신문의 보도는 5월 19일 처음 등장했다. 항쟁의 첫날인 5월 18일의 경우 로동신문 발행의 특성상 5·18에 대한 기사는 실려 있지 않다. 따라서 18일자 1면의 70% 기사는 5·18관련 내용이 아니라 18일 이전에 진행되었던 남한 시위에 대한 기사 내용이었다. 5월 19일의 5·18에 대한 보도도 특별한 사건으로서 의미를 부여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계엄령의 전국 확대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지속되는 남한의 시위상황에 대한 보도에 가까웠다.

5월 21일자 1면 66%를 점유한 '련합성명'도 5월 18일의 기사와는 약간 다른 성격이지만 비슷한 사례이다. 조선로동당을 비롯하여 조선민주당,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등 총 19개 정당, 사회단체가 전국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하여 5월 20일 발표한 련합성명 전문을 1면에 게재했다. 련합성명은 비상계엄확대를 5·16군사정변의 재판으로 간주하고 계엄령 확대의 이유로 북한을 거론한 것을 규탄하였다. 련합성명은 17일과 18일의 민주인사

체포소식 등은 언급하고 있지만 광주5·18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

> 이 폭압조치는 남조선파쑈분자들의 상투적인 수법그대로 이번에도 역시 <남침>이라는 허황한 구실밑에 우리를 걸고 강행되었다…새로운 <비상계엄령>의 선포를 전후하여 서울에는 중무장한 <국군>과 장갑차들이 쓸어들어 시내 각 대학과 요소마다에 배치되었으며 청년학생들과 민주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선풍이 휩쓸고있다. 보도에 의하면 17일에는 이미 수십명의 학생지도자들이 체포되고 18일에는 전<대통령>후보였던 김대중이 그의 비서들과 함께 체포된 것을 비롯하여 정계인사들, 교육계, 종교계 등 각계의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하루아침에 체포되었다 한다(련합성명, 1980년 5월 20일).

'사건'으로서 5·18에 대한 내용은 5월 20일 보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목으로 '무장한 군대들과 격렬 충돌', '방송국건물에 불을 질렀다', '광주의 중심거리는 전투장과 같다' 등 기존의 시위양태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는 5월 항쟁에 대한 내용들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사의 내용 가운데 시위가 '폭동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는 언급이 처음 등장한다. 5월 19일 보도에서는 기존의 시위 보도와 마찬가지로 반<정부 시위>라고 규정했던 것에서 시위의 성격을 다른 수준으로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런데 5월 21일 보도는 20일 보도에 비해 보도 건수가 대폭 줄어든다. 5·17조치를 비판한 '련합성명'을 게재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비상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기사들이 다시 등장하고 5·18에 대한 보도 건수는 줄었다. 또한 광주시위에 대한 묘사도 다시 학생시위로 언급하면서 폭동에 대한 언급은 사라졌다.

5월 항쟁의 초기인 5월 18일부터 21일까지의 로동신문의 보도를 종합하면 5월 항쟁의 무대인 광주에서는 치열한 공방 끝에 공수부대를 도심 외곽으로 몰아내고 본격적인 무장을 갖췄던 상황에 비해 로동신문에서는 기존의 남한 시위의 보도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 수준에서 언급이 되고 있다. 5·17조치로 다른 지역에서는 더 이상 시위가 전개되지 못한 상황에서 광주지역의 시위만 지속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한 시위를 언급한 로동신문의 전체 보도 건수에서 광주의 기사가 많아졌지만 5월 21일까지는 항쟁으로서의 5·18은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5월 21일까지의 보도는 오히려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대한 비난이 더 비중있게 언급되었다고 할 수 있다. 5월 20일 조선로동당을 비롯한 제 정당, 사회단체들의 '련합성명'이 발표되고 21일자 로동신문 1면에 게재되는 일련의 과정은 당시 국가를 지배하는 조선로동당의 주요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듯 로동신문의 보도에서도 계엄령 확대와 관련된 다양한 보도기사들이 게재되었다.

<표 4> 5월 18일~21일의 로동신문 보도 내용

일시	지면	내용(1면: 기사 제목, 기타 면: 내용 중심)	비고
18일	1면(70%)	·남조선전역에서 15일 15만여명의 학생들이 시위에 참가	15일 시위상황
		·광주시내 3개 대학과 7개 전문대학 학생 3만여명이 <계엄령 해제>등을 요구하며 홰불행진	16일 시위상황
		·광주시내 9개 대학 학생 2만5천여명이 시국성토대회와 가두시위를 단행	16일 시위상황
		·수원지역 6개 대학 3천500여명의 남녀대학생들이 거리를 누비며 시위, 삐라도 살포	16일 시위상황
	5·6면	·15일 전국 시위상황, 한국시위에 대한 외국 언론의 반응 등	
19일	1면(48%)	·광주에서 수백명의 대학생들이 <계엄령>을 무시하고 반<정부> 시위, 경찰서 습격	18일 시위상황
		·광주에서 학생들과 시민들 5천여명이 시위 괴뢰공정부대가 출동하여 많은 학생들을 련행	18일 시위상황
		·수만명의 광주시내 학생, 교수, 시민들이 합동민주화성토대회, 민주화해불행진, <화형식> 진행	16일 시위상황
	2·5면	·17일 비상계엄 선포, 민주인사 연행상황 등	
20일	1면(50%)	·광주에서 5만명이 거리에 떨쳐나와 <비상계엄령>을 반대하여 시위 무장한 군대들과 격렬하게 충동	19일 시위상황
		·1만5천명의 시위자들이 괴뢰군과 충돌, <비상계엄령의 즉시 해제>등을 요구	19일 시위상황
		·광주학생들 가두시위, 괴뢰군공정부대 군인들과 충돌 광주의 중심거리는 전투장과 같다고 외신이 보도	19일 시위상황
	5·6면	·19일 광주 시위상황, 비상계엄 확대에 대한 외국 언론의 반응 등	18일 서울의 계엄상황
21일	1면(66%)	·남조선에 <전국 비상계엄령>이 선포된것과 관련하여 조선로동당을 비롯한 각 정당들과 사회단체들에서 련합성명을 발표(성명 전문 게재)	
	5·6면	·19일 광주 시위 상황, 서울의 주요 신문·방송 기자들의 19일 집회 등	

② 5월 22일～27일의 보도 양상

5월 22일 로동신문은 무장투쟁으로 확산된 5·18을 보도하면서 광주시민의 시위를 반<정부>시위와 폭동으로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광주에서의 5월 21일 투쟁의 소식을 전하면서 2면에 큰 제목으로 '광주의 폭동군중이 라주경찰서의 탄약고를 습격', '무기

고를 부시고 무기 탈취, 괴뢰기관 점거', '광주시의 반<정부>폭동 20만명 규모로 확대'라는 기사를 연속 배치하고, 맨 아래에 '광주의 시위대들이 목포, 라주 등 다른 도시들에로 향하고 있다. 광주에서의 사태가 이 도시들에로 확대될것같다'는 기사를 실었다. 또한 외신면인 6면에서는 지면 구성을 새롭게 2개로 구획하여 5·18관련 외신의 반향을 소개했다. 기존의 6면에서는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와 관련된 외신 보도를 싣고 있었다.

5월 23일과 24일에는 1면에 다시 '광주폭동' 소식이 실리기 시작했다. 24일자 로동신문은 폭동군중이 광주시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보도하면서, '광주의 항쟁'이 도내 16개 시,군으로 확대되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1면에는 '최근 남조선사태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조선중앙통신사 성명이 게재되었다. 5월 23일 발표된 조선중앙통신사 성명은 5월 항쟁기간 동안 로동신문 1면에 게재된 두번째 성명으로 직접 '광주의 사태'를 언급하고 있다.

5월 20일 발표된 련합성명이 비상계엄 전국 확대의 내용만을 담고 있었다면 조선중앙통신사 성명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중적인 폭동으로 전화되고 있는 광주 소식을 함께 전하고 있다. 또한 신군부가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북한 위협을 거론하고 있는데 대해 "남조선 내부가 어떻든 그에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천명하면서 남한정부를 맹비난했다. 그런데 조선중앙통신사 성명은 6일 이후 발표되는 사설에 비해 5월 항쟁의 중요성이나 5·18이 갖는 인민항쟁적 성격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않고 있다.

최근 남조선사태에 대하여

오늘 남조선에서는 유신체제의 청산과 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청년학생등과 각계각층 인민들의 대중적인 민주항쟁이 두달나마 계속되고 있다. 이 투쟁은 날을 따라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군사파쑈분자들이 남조선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인후에는 급격히 대중적인 폭동으로 전화되고있다…그러나 광주의 사태는 그 어떤 무력탄압으로써도 정의의 항쟁에 일떠선 인민대중을 굴복시킬수 없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조선중앙통신사성명, 1980년 5월 23일).

5월 24일자 로동신문에는 처음으로 5·18관련 2컷의 시위사진이 게재되었다. '괴뢰군으로부터 빼앗아낸 군용차에 <전두환 찢어죽여라>는 구호를 내걸고 전진하는 광주의 반<정부>폭동군중들', '괴뢰군의 장갑자를 빼앗아타고 과감히 돌진하는 광주의 반<정부>폭동군중들'로 설명된 2장의 사진은 5월 항쟁기간 동안 처음 로동신문에 실린 5·18관련 사진이다.

5월 19일과 21일, 22일, 23일 보도에서도 시위관련 사진이 게재되고, 일부 사진을 광주에서의 시위사진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5·18관련사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5·18관련 사진보도는 24일에 이어 25일, 26일, 27일까지 이어졌으며 보도된 사진은 주로 무장한 시위대나 시위에 나선 시민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내용이다. 한편 로동신문의 사진자료는 독일 언론인 위르켄 힌츠페터[76]가 고립된 광주의 참상을 최초로 알리면서 공개

76) 힌츠페터는 5월 20일과 21일 광주에서 취재한 영상을 5월 22일 일본으로 반출하여 독일시간으로 5월 22일 저녁 8시 방송에 광주의 참상이 공개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한 영상자료 등을 활용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18왜곡·폄훼세력은 “5·18광주사건 당시 텔레비전과 방송, 신문을 비롯한 북한의 언론매체들이 광주에서 벌어지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사건들을 실상 그대로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남한의 민주화투쟁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만 볼 수 없다는 취지도 있었지만 전적으로 남한의 북한의 남침통일을 정당화시키고 인민들의 사고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한다(자유북한군인연합, 2009: 214).

그러나 북한 언론매체의 보도 방향을 결정하는 로동신문의 사진보도를 살펴보면 5·18관련 사진 기사는 5월 24일 처음 등장하였으며, 5·18의 참혹함을 상징하는 희생자들의 사진 기사는 5월 항쟁이 종료된 이후인 6월 5일 특집기사로 게재되었다. 6월 5일 로동신문 5면에서 ‘천추에 용납못한 귀축같은 만행’이라는 제목으로 계엄군에 희생당한 시민들의 모습과 폭력을 행사하는 공수부대의 사진이 5면 전체에 실려 있다.

5월 항쟁의 마지막 날이 되는 5월 27일 로동신문은 ‘광주에서 2만명의 시민들과 학생들이 반<정부>집회, 전두환의 파면을 요구’, ‘무장시민들이 <계엄군>의 광주시내 돌입을 저지할 태세’ 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저항 자세를 강화하여 계엄군과 끝까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도청 함락작전으로 5월 항쟁이 종료되었던 5·18의 마지막 소식은 5월 29일 신문에서 보도되었다.

5월 항쟁기간 동안 로동신문 제1면에 실린 남한 시위관련 기사와 비중을 살펴보면 5월 18일 70%, 19일 48%, 20일 50%, 21일 66%, 23일 46%, 24일 66%, 26일 32%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항쟁기간 뿐만 아니라 5월 전체로 놓고 보더라도 이 시기에 5·18관련 기사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할 수는 없다.

5·18왜곡·폄훼 세력의 주장과는 달리 5월 항쟁기간 동안 발행된 로동신문에서 5·18 희생자의 참혹한 사진은 게재되지 않았다. 5월 항쟁이 종료된 이후 발행된 특집 기사에서 게재된 사진 기사를 가지고 항쟁기간 투쟁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간의 순서를 뒤엎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항쟁기간 내내 광주의 소식과 영상을 실시간으로 북한의 언론매체를 통해 방송했다는 주장 또한 과도한 억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5월 22일~29일의 로동신문 보도 내용

일시	지면	내용(1면: 기사 제목, 기타 면: 내용 중심)	비고
22일	2·4·5·6면	·20일, 21일 광주 및 전남지역 시위상황	
23일	1면(46%)	·폭동군중이 광주시를 완전히 장악 / 광주시는 무장한 시위자들의 통제하에 있다	21일 시위상황
		·광주의 폭동군중이 함평, 고창등지로 진출, 완도, 목포등	22일 시위상황

		징에서 경찰서들을 파괴 / 광주의 항쟁이 도내 16개 시, 군으로 확대	
		·시위대가 목포, 령광, 담양을 장악 / 반<정부>세력이 무장을 강화	일시 불명
	4·5·6면	·21일, 22일 광주 및 전남지역 시위상황	
24일	1면(66%)	·21일 광주에서 30만명이 폭동에 참가 / 목포시내 전체 고등학교 학생들이 시위에 합세	
		·목포에서 폭동참가자들이 재판소에 불을 지르로 경찰서들을 습격 / 신민당 총재가 <계엄령>의 철폐를 요구	22일 시위상황
		·조선 중앙통신사 성명/ 최근 남조선사태에 대하여(성명 전문 게재)	
	4·5·6면	·22일, 23일 광주 및 전남지역 시위상황	광주사진 게재
25일	2·4·5·6면	·23일, 24일 광주 시위상황	
26일	1면(32%)	·<비상계엄령>을 즉시 해체하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당장 중지하라 / 남조선군사파쏘도당의 5.17폭압조치를 규탄하는 평양시군중대회가 있었다	
	2·4·5·6면	·24일, 25일 광주 및 목포지역 시위상황	
27일	3·5·6면	·25일, 26일 광주 시위상황	
28일	3·5·6면	·26일 광주 시위상황	
29일	1면(68%)	·[사설 게재]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사에 빛나는 장을 기록한 력사적사변	
	5·6면	·27일 광주 진압상황 및 목포 시위상황	

2. 5·18에 대한 북한의 인식 : 5월 항쟁기간을 중심으로

북한 로동신문은 5월 항쟁기간 동안 5·18을 각각 다르게 호명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로동신문은 시위와 참여주체에 대한 설명 및 호명을 매일 다르게 기술했다. 시위와 참여주체에 대한 설명은 그 시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동일한 지면에서조차 제 각각 다르게 보도하는 것은 로동신문이 항쟁기간 동안 5·18의 성격과 의미를 규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볼 수 있다. 로동신문은 5월 29일 사설을 통해 5·18의 성격을 '인민들의 대중적인 봉기'로 규정하였는데, <표 2>는 항쟁기간 동안에 이와 비슷한 호명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6> 5월 항쟁기간 동안 로동신문의 5·18에 대한 호명

일시	시위에 대한 설명	참여주체의 명칭
5월 18일	시위	시위자
5월 19일	반정부 시위	시위자
5월 20일	반정부 시위, 폭동의 성격을 띠기 시작	시위자, 시위군중
5월 21일	반정부집회, 대중적 투쟁의 폭풍	시위자
5월 22일	반정부 폭동, 반정부시위와 폭동	폭동군중, 시위대, 시위자
5월 23일	광주의 항쟁, 내란상태, 인민들의 투쟁	폭동군중, 무장한 시위자, 시위대, 반정부세력
5월 24일	폭동, 광주폭동사건, 대규모폭동사태	폭동참가자, 애국적항쟁군중, 반정부폭동군중
5월 25일	폭동, 반정부항쟁,	군중, 무장한 봉기자·군중·청년·시민, 시위대
5월 26일	반정부시위, 대중적인 애국적 반파쇼투쟁, 인민들의 투쟁	군중, 봉기자, 반정부폭동군중
5월 27일	반정부집회, 반정부시위	반정부세력, 무장 시민·군중, 폭동군중, 시민군

항쟁 기간 동안 매 시기 다르게 기술되던 5·18은 5월 29일자 로동신문 사설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의 통일된 의미를 갖게 된다. 로동신문은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사에 빛나는 장을 기록한 력사적사변”의 사설을 통해 5·18을 ‘인민들의 대중적인 봉기’로 규정했다. 5월 29일 로동신문 사설은 5·18에 대한 조선노동당의 최초의 공식입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로동신문의 사설은 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의 결정과 의도를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기사로서 당의 결정과 방향을 제시하는 지시서나 지령서로 간주되며, 남한관련 사설이 게재되는 것은 1년에 10여 편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고성준, 1980; 전미영, 2010). 따라서 로동신문 사설에서 5·18을 다뤘다는 것은 5·18에 대한 조선노동당과 북한정부의 입장이 공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설]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사에 빛나는 장을 기록한 력사적사변**

온 남녘땅을 뒤흔들어놓은 광주의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대중적인 봉기는 지금 내외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전체 조선인민들은 반파쑈민주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항쟁에 떨쳐나서 영웅적 기개를 남김없이 발휘한 광주의 애국적인민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며 그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고 있다…광주인민봉기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피압박인민들의 투쟁에서 특출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 사변이다. 봉기는 전체 질서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동방인민들의 근대력사에서 처음 있는 가장 크고 격렬한 자랑스러운 대중적폭동이다(1980년 5월 29일, 로동신문 사설).

5월 29일 로동신문의 사설보도 이후 예전의 지면배치에서는 남한관련 기사가 거의 게재되지 않았던 4면에 '광주인민봉기에 대한 각계 반응'이라는 특집란이 새롭게 구성되었다. 광주인민봉기에 대한 각계반응은 매일 구호를 제시하고 5·18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싣기 시작했는데, 5월 31일 신문의 구호는 '세계를 격동시킨 광주인민봉기는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투쟁사에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로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를 격동시킨 광주인민봉기는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투쟁사에 영원을 빛을 뿌릴것이다

광주인민봉기에 대한 각계 반응

온 남녘땅을 뒤흔들어 놓으면서 <유신>악당들에게 준엄한 철추를 안긴 영웅적광주인민봉기는 애국의 열정으로 들끓고있는 우리 청년 학생들의 가슴마다에 커다란 민족적 긍지와 자랑을 안겨주었다(김일성종합대학 학생).

이렇듯 로동신문은 5월 항쟁이후 다양한 논설과 정론의 지도기사를 통해 5·18의 성격과 의미를 해설하는 보도를 지속했으며 이러한 결과들은 다시 1981년 5월 18일 5월 항쟁 1주년의 사설로 수렴되었다. 1981년 5월 18일 로동신문은 "영웅적 광주인민봉기는 반파쑈민주화투쟁사에 길이 빛날것이다"는 사설을 통해 좀 더 명확하게 인민봉기의 성격을 강조했다.

[사설] **영웅적광주인민봉기는 반파쑈민주화투쟁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광주인민들의 영웅적봉기가 있은 때로부터 1년이 된다. 이날에 즈음하여 북과남, 해외의 모든 조선인민들은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의로운 항전에 떨쳐나서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며 용감히 싸운 광주항쟁자들의 불굴의 기개를 숭고한 마음으로 돌이켜본다…광주인민봉기는 파쑈의 전횡과 억압에 항거하는 인민대중의 분노의 폭발이었다…광주의 봉기군중은 적이 폭압무력으로 시를 겹겹이 포위하고 군사적위협공갈, 경제적봉쇄, 회유기만책동을 강행하는 가운데서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 동안이나 봉기도시 광주시를 지켜 용감히 희생적으로 싸웠다…실로 광주인민봉기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력사를 빛나는 위훈으로 장식한 특출한 사변이었다. 광주인민봉기가 자주와 독립, 민주주의와 진보를 위한 피압박인민들의 투쟁에서 가지는 의의는 거대하다. 광주인민봉기는 그 규모로 보나 완강성, 지구성으로 보나 동방근대력사에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크고 진정한 대중적 인민봉기였다(1981년 5월 18일, 로동신문 사설).

위에서 살펴봤듯이 북한의 5·18에 대한 인식은 5월 항쟁 이후 다양한 의미화 과정을 통해 본격화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 것은 1980년 5월 29일자 사설과 1981년 5월 18일 1주년 사설을 거론할 수 있다. 또한 1980년 10월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도 5·18의 의미화 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의미화 과정을 통해 사건으로서의 5·18이 아닌 역사로서의 5·18이 현재의 완성된 의미를 갖추게 되었다[77].

로동신문은 5월 항쟁기간 동안에는 급박하게 전개되는 5·18소식을 보도기사를 통해 전

77) 1980년 5월 항쟁 이후 북한에서의 5·18에 대한 의미화 과정과 인식은 전미영(2010) 참조.

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면 항쟁 이후에는 1980년 5월 29일자 사설을 분기점으로 하여 당의 기관지의 성격에 따라 인민봉기에 대한 해설 작업을 본격화했다. 현재 탈북자를 비롯하여 5·18왜곡·폄훼 세력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북한 언론의 5·18의 이미지는 대부분 항쟁 이후 형성된 인민봉기의 이미지에 기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항쟁기간 동안 발행된 로동신문은 <표 6>에서 확인되듯이 통일된 의미를 전달하여 투쟁을 이끌어내기에는 어려운 여건이었다. 결국 5·18 당시 북한 언론은 5·18왜곡·폄훼세력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선전 선동의 동원기제는 고사하고 5월 29일자 사설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5·18에 대한 통일된 이미지조차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그들의 능력과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1980년 5월 항쟁이 이제껏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전혀 다른 수준의 새로운 투쟁 형태로 예상을 뛰어넘어 전개되었다는 5월 항쟁의 특성에 기인한 결과일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명도. 1995.『평양은 망명을 꿈꾼다』. 중앙일보사.

권명은. 1980. “북한신문의 보도성향: 로동신문을 중심으로”.

김대령. 2013.『역사로서의 5·18』. 비봉출판사.

_____. 2015.『임을 위한 행진곡』. 비봉출판사.

김원태. 2010. “북한 로동신문의 언론이념과 대중설득에 관한 연구”,『한국동북아논총』제56호: 247~266.

김희송. 2013. “5·18항쟁 시기 군부의 5·18담론”,『민주주와 인권』제13권 3호: 5~36.

_____. 2015. “5·18역사왜곡에 대한 고찰:『역사로서의 5·18』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민주주와 인권』제14권 3호: 5~35.

나간채. 2013.『광주항쟁 부활의 역사 만들기』. 한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호국정신선양운동본부. 1997.『12.12, 5·18 실록』.

이광재. 1984. “근대신문 이전의 관보 북한 ‘로동신문’”,『북한』84년 5월호: 52~59.

오승용·한선·유경남. 2012.『5·18왜곡의 기원과 진실』. 5·18기념재단.

자유북한군인연합. 2009.『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광명기획.

지만원. 2010.『솔로몬 앞에 선 5·18』. 시스템.

전미영. 2010. “북한에서의 5·18과 광주에 대한 인식”,『현대북한연구』제13권 3호: 52~82.

정근식. 200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기억논쟁”,『황해문화』제62호: 208~229.

최정기. 2002.「국가폭력과 대중들의 자생적 저항 -5·18에서의 국가폭력과 저항을 중심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기억과 전망』 창간호.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1990.『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황석영.전남사회운동협의회.정동년 외 321인.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1996.『5·18 그 삶과 죽음의 기록』. 풀빛.

사라 밀즈(김부용 역). 2001.『담론』. 인간사랑.

윌리엄 그라이스틴(황정일 역). 2014.『알려지지 않은 역사』. RHK코리아.

올리비에 루블(홍재성·권오룡 역). 2003.『언어와 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로동신문」 1980년 5월 1일~5월 30일.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Special Office for Inter-Korean Dialogue of Unification. 1982.『South-North Dialogue in korea(No.21~30, 1979.9~1982.12).

<군 자료>

계엄사령부. 1980.「계엄상황일지」.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7.『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군사연구실. 1980.「첨부#3 광주소요사태분석(교훈집)」.

군사연구실. 1980.「첨부#7 광주사태수습개요」.

보안사령부. 1980.「광주사태 일일 속보철」.

보안사령부. 1980.「광주소요사태 상황일지 전문」.『683-1980-90』.
보안사령부. 1980.「광주사태 관련자 처리방침 발표 여론」.『383-1980-100』.
보안사령부. 1980.「광주소요사태 진행상황」.『383-1980-100』.
보안사령부. 1980.「광주소요사태 분석 및 교훈」.『383-1980-100』.100』.
보안사령부. 1980.「날조된 악성 유언비어」.『383-1980-100』.
보안사령부. 1988.「광주사태 발발 원인과 배경」.『383-1988-5』.
보안사령부. 1988.「과잉진압설」.『383-1988-5』.
보안사령부. 1988.「학생, 시민의 과격시위 내용」.『383-1988-5』.
보안사령부. 1988.「발포에 관한 내용」.『383-1988-5』.
보안사령부. 1988.「유언비어 문제」.『383-1988-5』.
보안사령부. 1988.「사태성격규정」.『383-1988-5』.
보안사령부. 1988.「사후대책」.『383-1988-5』.
보안사령부. 1988.「총괄정리」.『383-1988-5』.
보안사령부. 1988.「쟁점별 대응논리」.『383-1988-5』.
보안사령부. 1988.「사전계획설」.『383-1988-5』.
보안사 1처. 1980.「광주소요사태 상황일지전문」.『383-1980-90』.
전교사 정보처. 1980.「광주사태시 전교사 정보처 일지」.『383-1980-93』

“1980년 5월 광주 그리고 북한: 북한개입설”(김희송)의 토론문

한 선(호남대 신문방송학과)

흥미 있는 글 잘 읽었습니다.

신문방송학이 전공인 저도 그동안 로동신문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덕분에 이번 기회에 로동신문에 대해 따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쉬웠다면 충분히 검토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어서 선생님 글에 제대로 된 논의를 덧붙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우선 이 글은 518 폄훼 세력들이 왜곡과 거짓 주장을 펼치는 데 사용되는 논거 중 하나인 북한군 개입관련 내용의 진위여부를 다양한 방증자료를 통해 반박하는 글입니다. 가령 로동신문과 남북총리회담 준비 실무회담 일지 분석, 군 관련 상황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자료 모두 꼼꼼히 잘 살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글의 미덕은 무엇보다 상당히 미시적인 수준에서 세세하게 자료들을 검토해 재구성함으로써 북한군 개입이 가능하지 않았음(논리적 허구성)을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장점이자 동시에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미시적 수준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큰 틀에서 유목화하는 추상화 작업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주장과 논거로 이어진다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가지 제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총리회담 실무회담의 주요 내용을 다룬 문헌자료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남북대화록의 내용으로 미루어 지만원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또는 종편에 등장했던 탈북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북한군의 침투가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대목입니다. 우선 남북대화에서 우리 측이 북한의 군사도발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80년 3월(3/2, 3/25, 3/27)에 있었던 3차례 간첩침투 이후 4월 1일 비난했는데 만약 518 기간동안 간첩침투가 있었다면 이후 10월까지 이어진 회담에서 어떻게 이를 언급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주장입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질문도 생기는데 518 왜곡세력은 이미 국내에 침투한 간첩들이 활동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 이청룡의 침투를 활용하는 것에서도 이청룡이 언제 침투했는지 모르겠지만 518 직전이었다면, 우리 측이 회담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 되고(이 경우 간첩침투에서 남북대화록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투가 없었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518보다 훨씬 이전에 침투했다면 역시 왜곡세력들이 과거 침투한 간첩들이 광주에 모여 폭동을 주도했다는 식으로 주장할 수도 있게 됩니다(이런 구차한 것에까지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하는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만, 왜곡세력들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논리적으로 차분히 대응하자면...).

결국 남북대화록이나 글라이스틴의 회고록은 미시적 자료들을 보다 큰 틀에서 해석하는 과정이 추가될 때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고 봅니다. 남북대화록은 미국 측으로부터 체제승인이 시급했던 신군부의 대외적 입장, 국내용으로 북한군 위협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이 뒤엉켜 투영돼 있는 자료일 것입니다. 고도로 군사적이며 외교적이지만 동시에 정치사회적 맥락이 반영돼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대화록 분석에 맥락적 사실이 보강되며 더욱 좋겠습니다. 글라이스틴 당시 미 대사의 행동만 하더라도 신군부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따라간 것이라기보다 당시 국제적 정세의 문제, 미국 입장 등과 같은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취한 행동이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신군부의 정당성을 추인해주는 것이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심층적인 논의가 이어진다면 좋겠습니다.

2. 다음은 분석적 엄밀성과 관련된 것인데요, 로동신문에 대한 분석입니다. 보통 언론학에서 신문내용 또는 담론분석은 내용분석이라는 틀 속에서 행해집니다. 신문기사의 유형(톱, 사이드, 중간, 하단, 단신)과 지면, 기사분류(정치 사회 경제) 등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틀에서 보자면 로동신문 분석은 내용분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면의 %가 나오는 데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성명서와 같은 전문을 게재하는 것이(비율은 증가시키겠지만) 중요한 기사로 다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결과 선생님의 미시적이고 꼼꼼한 발견이 논리적 엄밀성이 부족한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동신문을 분석한 선행 연구 중 하나를 살펴보면, 북한언론(로동신문)은 크게 4가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김영주, 2010). ①정치사상 교양자료 ②경제교양자료 ③문화교양자료 ④정세교양자료 등. 이 중 정제교양자료는 남한정세자료와 국제정세자료로 구분되며 로동신문 5, 6면에 실립니다.

특히 대남 기사 중 위대한 수령을 흠모하거나 남한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해 싸우는 내용에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하며 둘째로는 반미자주화 또는 반파쇼민주화 투쟁입니다. 세번째는 미제침략자들의 전쟁도발 책동에 대한 폭로 등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김정일 시대 10년동안 로동신문을 분석한 결과도 당수령 흠모 15%, 반파쇼민주화투쟁 9%, 반미자

주화 투쟁 10.7% 등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나옵니다. 즉 선행연구를 참조하면 북한 로동신문에 지속적으로 대학생들의 시위관련 소식이 이어졌던 것은 이를 반파쇼민주항전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518에 대한 마지막 평가도 반파쇼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추가된다면 북한 로동신문에 518을 전후한 기사보도가 많았던 것은 로동신문의 정책상 일관된 양상이었다는 점이 부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박정희 체제의 몰락 이후 한국사회에 대한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 관련 보도는 매우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저널리즘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점이 밝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추가된다면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같은 맥락에서 시계열적으로 지면을 분석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518을 기점으로 전후 짧은 시기만 살피고 있는데, 이를 1979년 상황부터 몇 달간으로 확장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성 기사에 대한 해석이 좀 더 보강되었으면 합니다. 로동신문은 원래 구호성 기사가 많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인데요, 글을 읽다보면 기사 내용은 없고 구호성 제목만이 게재된 경우가 나옵니다. 저에겐 매우 생소하고 특이한 내용인데 로동신문이 원래 이런 일을 자주 하는지, 어떤 경우에 어떤 의미에서 사용하는지, 그리고 구호성 제목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첨가된다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세계화:
홍콩, 대만, 중국을 중심으로[78]

정근식(서울대학교 사회학과)

1. 노래의 힘

노래혁명이라는 말이 있다. 약간은 의미가 생략된 단어여서 노래를 통한 사회혁명인지, 감성을 표현하는 방식의 혁명적 전환인지 모호하지만, 나는 2016년 봄, 이 용어가 탄생한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을 방문해서야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깨달았다. '노래혁명'(the singing revolution)이라는 용어는 에스토니아의 운동가이자 예술가인 하인즈 바크(Heinz Valk)가 1988년 6월 10-11일 탈린의 노래축제장(Song Festival Grounds)에서 이루어진 자발적이고 대중적인 한밤 노래 시위 이후 일주일 만에 만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노래하는 혁명' 또는 '노래를 부르며 수행한 혁명'이라고 불러야 좀더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되는데, 소련의 '점령'하에 있었던 발틱 3국에서 1986년부터 1991년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 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사회운동의 양상을 지칭한다.[79]

이 혁명을 낳은 노래축제는 1869년 에스토니아 타르투(Tartu)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다. 사회학자 뒤르껨이 말했던 것처럼, 이 노래축제는 집합의식을 만들고 연대를 배양하는 터전으로, 국내외에 거주하고 있는 에스토니아인들이 모여 민속의상을 입고 민요와 현대 합창곡을 같이 부르며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였다. 발틱 3국은 원래 제정 러시아가 지배하에 있다가 러시아혁명의 혼란기인 1918-1920년 기간에 독립하였는데, 1939년 독소조약으로 소련에 의해 점령되었다가 독소전쟁의 개전과 함께 나치독일이 점령하고, 1944년 가을에 다시 소련이 점령하여 1989년까지 소련영토의 일부로 존재해왔던 지역이다. 소련의 지배하에서 노래축제는 지속되었는데, 1986년부터 여기에서 독립과 민주주의를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기 시작하였다. 이 축제는 체제 변혁기 민족적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로써 기능하기 시작하였다.

1989년 8월 23일 저녁 7시, 소련점령 50주년을 상기하는 행사에서 에스토니아 수도 탈

78) 이 연구는 5.18재단의 지원에 의한 <임을 위한 행진곡 연구>의 일부임. 아직 출판되지 않은 초고이므로 인용을 사절함.
79) 이에 관한 다큐멘터리 필름(2006)이 제작되어 있다.

린에서 라트비아 수도 리가를 지나 리투아니아 수도 빌니우스에 이르는 약 600㎞의 도로에 사람들이 손을 잡고 늘어서서 '자유'를 외쳤는데,[80] 이 거대한 인간 띠잇기행사에 약 200만 명이 참가하였다. 이들은 거대한 인간띠를 만들고, 자신들의 국기를 흔들며 국가를 부르고, 자유와 독립을 외치는 등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우리는 이를 이중적 의미에서 '발트의 길'이라고 부르는데, 이 길은 노래를 통해 만들어졌고, 노래와 함성으로 확장되었다. 당시 '발트의 길'에 동참한 사람들이 전체인구의 4분의 1에 달했다. 그만큼 노래는 큰 힘을 지녔다. 이런 단결된 힘의 노래가 지구상 어디에 또 존재할까?

이 노래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중의 한 사람인 마트 라(Mart Laar)는 독립 후 초대 총리가 되었다. 유럽에서는 이를 1989년 혁명(Revolutions of 1989)이라고 부르며, '노래하는 혁명', 또는 "모든 국민의 가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것이 일어난 2년 후 소련이 붕괴했고, 발트3국은 독립을 쟁취하였다. 에스토니아 사람들이 이때 불렀던 노래들은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노래의 가사는 "나의 조국은 나의 사랑, 애정을 받쳤던 그대에게, 노래하네 크나 큰 행운을, 생기발랄한 에스티여"였다.[81]

발틱 3국에서 진행된 노래혁명은 포크송(민요), 로크, 그리고 합창곡을 모두 포괄한다. 이후 이 노래축제는 오늘날 발트 3국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세계노래대전'이 되었다. 이 축제는 에스토니아를 비롯한 발트 3국에서 4~5년을 주기로 전세계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해외동포와 국내 전 지역의 사람들이 수도에서 모여 일주일간 노래의 향연을 벌인다. 최근에 군티스 스미첸스(Guntis Smidchens, 2014)는 이런 과정을 자세히 연구하여 <노래의 힘(The Power of Song)>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했다.

과거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소련의 '점령' 50년이 되던 해인 1989년 5월, 발트 3국은 민족정치정당 통일조직인 '발트총회'를 창설해 소련연방정부에 "불법 점령사실을 인정하고 독립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매우 불확실했다. 저항은 충분히 체계적으로 조직되지 않았고, 시민들의 참여는 불확실했으며, 동유럽에서 오랫동안 보아왔듯이 소련의 무력침공도 우려됐다. 그해 8월 15일자 소련공산당 기관지인 '프라우다'는 발트 3국이 계획하고 있던 집단행동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 루마니아 독재자인 차우셰스쿠는 스스로 지원 병력을 보내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런 불안감이 행사 당일인 8월 23일까지 계속됐다. 그러나 놀랍게도 국내외의 시민들이 관심과 성원, 참여가 놀라웠다. 이들은 50구간으로 나누어 각각 인간띠잇기를 계획했고,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들은 하나로 묶어 낸 것은 구호와 노래였다.

나는 탈린의 독립광장 언덕에 있는 '발틱의 길'(The Baltic way)이 시작되는 첫 발자국 기념물에 서서 노래가 가진 힘을 생각하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떠올렸다. 오늘날 우리

80) 이때 에스토니아인들은 "바바두스(vavadus)", 라트비아인들은 "브리비바(briviba)", 리투아니아인들은 "라이스베스(laisves)"를 외쳤는데, 이들은 모두 "자유"라는 뜻이었다.

81) 터스티부부(James Tusty and Maureen Castle Tusty)는 2006년 "The Singing Revolution"이라는 다큐 필름을 제작하여 에스토니아인들이 어떻게 평화롭게 자유를 획득했는가를 보여주었다.

는 ‘광주민주화운동’을 1980년 5월의 열흘간의 투쟁을 지칭하기도 하고, 그때부터 1995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처벌’이 이루어진 시기까지를 지칭하기도 하는데,[82] 이 시기의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항상 ‘임을 위한 행진곡’과 함께 했다. 집회나 시위는 항상 이를 부르면서 시작되거나 마무리되었고,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83] 이 노래는 운동가요에서 의례음악으로 전환되었다. 우리도 임을 위한 행진곡과 함께 일종의 노래혁명을 수행했는지도 모른다.

이 글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 탄생이후 어떻게 그리고 왜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는가를 다룬다. 필자는 작년에 이 노래가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가르는 감성혁명의 분기점이 된 것이라고 평가하였는데(정근식, 2015), 5.18재단의 후원으로 후속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노래의 국제화나 세계화의 과정에 관하여 좀더 집중적으로 분석할 필요를 느꼈다. 여기에서는 홍콩과 대만, 중국에 한정하여 이 노래가 어떻게 확산되고, 어떤 방식으로 현지의 맥락에서 변용되어 소비되는가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2. 연구방법

오늘날, 임을 위한 행진곡은 단순한 노래 하나가 아니라 일종의 커다란 문화적 텍스트이자 사회적 쟁점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연구는 매우 다양한 시각에서 서로 다른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몇가지 검토해야 할 중요한 질문들과 방법론적 문제들이 있다.

지금까지의 많은 관심들은 이 노래가 누구에 의해 언제 어떻게 제작되었는가에 맞춰져 있다. 많은 경우 하나의 작품이 유명해지고 널리 보급되면, 그것의 제작과정과 보급과정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제작과정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문제의식과 활동이 재조명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노래는 제작과정자체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 작성되지 않았으며, 이 노래가 만들어진 후 사회적 쟁점으로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러서 제작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기억이 흐릿해지고, 또 서로 엇갈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노래는 제작과정을 넘어서서 어떻게 전국화되고, 어떻게 세계적으로 보급되었는가에 대한 답을 필요로 한다. 이 노래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불려지고 있을 뿐 아니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어 해당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

82) 또는 1997년 12월의 대통령선거와 이듬해의 수평적 정권교체까지로 규정할 수도 있다.

83) 한국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1987년 6월을 지칭하기도 하고, 1995년 광주특별법 제정이나 1997년 12월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지칭하기도 한다. 때때로 이행과 ‘공고화’를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현재까지도 한국 민주주의가 공고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만큼, 개념화가 어렵다.

기 때문이다. 전국화나 국제화, 세계화를 논의하려면 각각의 개념들이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진다. 전국화는 지방적 맥락과 집단적-계층적 맥락을 모두 지칭하는 것으로, 그것이 만들어진 광주를 넘어서서 전국적으로 불려진다는 의미 외에 학생집단을 넘어서서 다른 사회집단들도 이를 부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 노래는 1982년 봄에 만들어진 이후 이 노래는 우선 학생운동권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 노래를 작곡했던 김종율은 군 입대 후 처음 휴가를 나온 1983년 초에 서울의 신촌에서 이 노래가 불려지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랐다고 증언하였다. 당시의 대학생문화는 1970년대 후반기의 이른바 운동권과 비운동권의 이분법적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동질적으로 변화했다. 이 노래는 노래자체가 가진 특유의 호소력과 1980년대 전반기의 어두운 상황 때문에 매우 빠른 시간에 학생운동권을 넘어 대학가 전체로 확산되었고, 대학문화의 일부가 되었다. 더 나아가 1980년대 중반부터는 대학사회를 넘어서서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 그리고 시민운동을 통하여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의해 소비되고, 나아가 시민사회의 대중문화의 일부로 정착되어갔다. 시간적으로 보면, 이 노래는 이 국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1987년의 6월항쟁을 통하여 민주주의로 이행하고, 이어 노동3권의 보장을 위한 대규모 노동자투쟁이 전개되는 국면에서도 긴 생명력을 가지고 재생산되었으며, 이 과정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 '시민적 내면세계'에 자리잡는 과정이었다.

특정한 노래가 국제화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노래는 하나의 독립된 텍스트이고, 노래가 불려진다는 것은 일종의 언어적 수행이자 소통행위이다. 텍스트로서의 노래는 곡과 가사의 2요소로 이루어지며, 수행적 행위로서의 노래는 여기에 창자를 포함한 3요소로 이루어진다.[84] 특정 노래가 국제화되거나 세계화된다는 것은 소통과 공감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화는 원래의 특정 언어의 가사와 곡이 서로 다른 창자에 의해 불려지는 경우와, 곡은 동일한데, 가사가 번역되거나 번안되는 경우, 그리고, 가사는 동일한데 곡이 달라지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세 번째 경우는 과거 식민지시대의 애국가의 국제화 사례에서 나타나는데, 복제기술의 발전으로 근래에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논의를 생략해도 된다. 특정한 노래가 확산될 때는 항상 원곡과 가사대로 부르기 외에 편곡되거나 노래가사 바꿔부르기가 파생될 수 있다. 국제적 확산의 경우에는 원래대로 부르기 외에 번역하여 부르기, 번안하여 부르기 등 다양한 변이가 발생한다.

첫째 경우는 해당 국가에 교민사회가 발전해있거나 언어적 친근성으로 인하여 쉽게 번역되는 경우에 많이 나타난다. 오늘날 음악의 세계화로 인하여, 특히 영어로 된 팝송이나 일부 프랑스어로 된 노래들이 원래의 텍스트대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대중음악이 아닌 경우, 이런 사례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가장 흔히 나타나는 국제화와 세계화는, 곡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사가 번역되거나 번안되는 경우이다. 번역국제화와 번안국제화 모두 유력한 양식이다. 노래가 대중적으로 소

84) 물론 곡 또한 연주라는 요소를 감안하면, 더 복잡하게 구분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상수로 간주하기로 한다.

비되는 경우, 의미가 분명해야 하며, 따라서 현지의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번안하여 소비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둘째는 이 노래가 어떤 맥락에서 불려졌는가에 관한 질문이다. 이 노래는 단지 한가지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추모음악으로부터 시작하여 사회운동음악이 되었고, 또 의례음악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맥락에서의 변화하는 모습을 설명해야 한다.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가에 따라 노래의 빠르기와 창법이 달라진다. 추모나 기념의례 뿐 아니라 시위현장에서 불려질 때 그것들이 나타난다. 이 노래의 수행성은 특정한 시공간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이 노래가 일상화되면, 이 노래가 불려진 시공간적 정보는 간과되므로, 이를 모두 망라하여 경험적으로 검토하기가 쉽지 않다.

셋째는 전파와 확산의 수행자와 경로들에 관한 것이다. 확산의 경로나 주체를 생각한다면, 해외 교민사회에 특정 노래가 많이 불려지는 것도 국제화나 세계화라고 할 수는 있지만, 교민사회에 한정된다면 적극적 의미의 국제화나 세계화는 아니다.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원래의 곡과 가사로 노래를 부른다면, 이 경우는 본래적 의미의 국제화에 가장 근접한다. 또한 '호소력이 있어서 자연적으로 확산되었다'는 표현은 별로 적합하지 않다. 운동가요로 활용되는 경우에도 사회운동의 주요 영역, 즉, 학생운동의 맥락과 노동운동의 맥락, 기타 민중운동의 맥락으로 구분된다. 국제적 확산의 경로를 이념형적으로 말한다면, 중심이 국내에 있고, 여기에서 해외의 모든 단체나 개인이 개별적으로 연관되는 중심집중형과 해외 거점형이 있을 수 있다. 후자는 해외에서 전파의 거점이 형성되고 거기에서 다시 추가적인 확산이 일어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기독교나 가톨릭을 매개로 한 국제적 인권레짐이나 NGO의 활동이 연관된다.

넷째는 2000년대 중반이후에 형성된 뉴라이트적 운동과 여기에서 발생한 폄훼와 부인의 문제가 있다. 폄훼와 부인은 국내적인 정치투쟁의 지평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냉전분단의 청산이 미흡한 상태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 많은 경우가 양자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북한에서도 알려졌고, 영화에서 삽입곡으로 사용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를 전국화나 국제화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노래가 만들어지고 널리 보급된 이후에 이와 관련된 인물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였고, 거기에 북한방문이나 문화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사후적인 해석이나 오해, 비방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 더구나 광주민주항쟁에 북한군이 참여했다는 수준으로 원래의 사건에 대한 왜곡이 가해지는 경우, 노래에 대한 왜곡은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5.18이나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의도적 폄훼나 왜곡이 국내의 우파들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에서 일본의 재일 한국인들에 대한 혐오발언과 비교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노래의 국제화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선 국제화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이 노래가 불려질 뿐 아니라 특정 국가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재창작되어 소비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화는 그 사회의 언어로 번역되거나 번안되어 불려지는 것을 포함한다. 외국에서 이 노래가 불려지는 방식은 첫째, 한국어로 된 가사가 그대로 불려지

는 방식, 외국어로 번역되어 불려지는 방식, 그리고 그 나라의 사정에 맞게 새로운 가사로 만들어져 불려지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여기에 더하여 단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문적인 음악집단에 의해 음원으로 녹음이 되고 새로운 음반으로 만들어져 소비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화는 다양한 형태와 수준을 가진 개념이다.

특정 노래의 국제화는 전국화와 마찬가지로 확산의 통로가 있다. 구체적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은 어떤 나라에서 어떤 통로를 통하여 불려지게 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해 가능한 응답은 한편으로는 한국의 학생운동과 긴밀한 교류를 하였던 국가나 집단을 검토해보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교적 국제적인 연대활동이 강했던 영역, 특히 노동운동에서 국제적인 연대를 꾀했던 집단들을 추적하여 검토해보는 것이다. 1980년대의 아시아의 국가들은 냉전적 균열하에 놓여 있었고, 이른바 '자유진영'에 속했던 나라들의 운동가들은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운동에 주목하였고, 특히 노동운동과 여기에 깃든 문화운동은 아시아의 많은 사회운동가들의 중요한 관심사였다.

3. 국제화의 초기국면: 홍콩의'사랑의 출정'

1) 학생운동의 맥락에서의 국제화

필자는 작년에 쓴 글(정근식, 2015)에서 "현재의 자료로 볼 때 아시아의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빨리 임을 위한 행진곡을 배워 간 나라는 대만이었다. 1988년 대만 타오친공회(桃勤工會) 간부 커정룽(柯正隆)이 한국 노동운동을 공부하려고 한국을 방문하였는데, 마산공장 파업현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처음 듣게 되었고, 대만으로 돌아간 후 곡에 중국어 가사를 붙여 <노동자 전가(勞動者戰歌)>라는 노래를 만들어 불렀다."고 썼다. 그러나 조사결과 이것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홍콩에 이 노래가 알려졌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85] 놀랍게도 임을 위한 행진곡은 만들어진지 얼마되지 않은 1982년에 학생운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네트워을 통해 홍콩으로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홍콩중문대의 황혜정(黃慧貞, 안젤라 웡) 교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매우 이른 시기에 국제화의 길을 걸었음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2016.2.12.).

"내가 이야기의 전부를 말할 수는 없지만, 홍콩에서 기독학생운동이 부흥된 것이 1981

85) 나는 2015년 10월 28일, 홍콩의 음악운동가 Billy와의 서면 인터뷰를 시작으로(2차 11.5, 3차, 12.10), 2016.1월 6일과 8일, 홍콩에서 빌리와 사회운동가 Apo를 면담하였고, 면담 결과 1980년대 초반과 중방에 홍콩중문대 학생이던 황혜정과 황계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파악하고, 이들을 차례로 서면 인터뷰하였다.

년이었다. 나는 이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 중의 한명이다. 홍콩기독학생회는 한국의 파트너로 YMCA 및 한국기독학생회(KSCF)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나는 이들과의 협력으로 서울에 있는 아시아기독교회의가 조직하여 1982년에 열린 청년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몇 명 되지 않은 성원 중 한명이었다. 그때는 한국의 학생운동이 정점에 있던 시기였고, 회의가 열릴 때마다 엄청난 영감을 가지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고, 내가 기억하지만 이후 1980년대 내내 내가 참여한 모든 젊은이들의 에큐메니칼 모임에서 부르고 또 불렀다. 모든 홍콩 기독학생회 회원은 이 노래를 알았고, 우리가 모일 때는 자주 이 노래를 불렀다. 1984년 내가 홍콩의 기독노동운동조직에서 인턴을 할 때, 나는 특별한 노동자 모임을 위해 이 노래를 중국어로 번역하였다. 사람들은 곧바로 이 노래를 좋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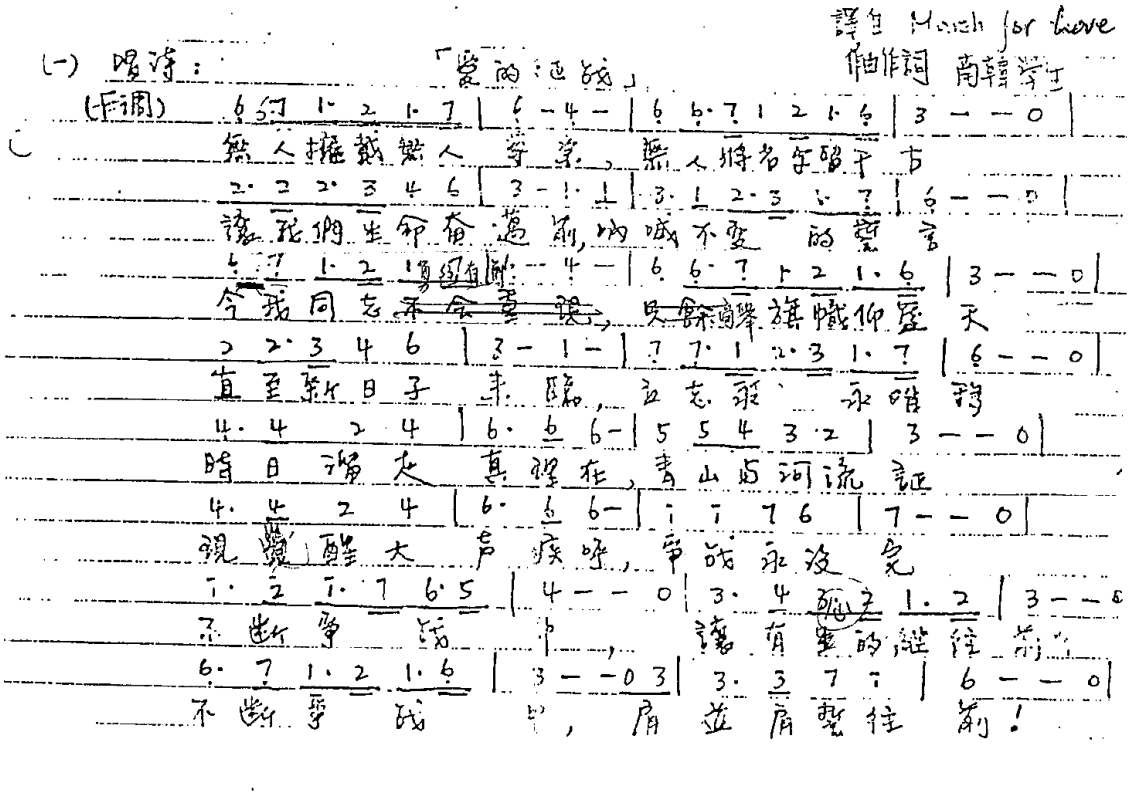
내가 홍콩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기독학생회의 노래집에 이 노래의 번역판이 실려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내가 번역한 것과 똑 같은 것은 아니었다. 이 수정된 번역판이 내가 번역한 것에 기초하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 생각으로는 황계성이 이것을 노래집에 집어넣은 사람 중의 한 명일 것 같다. 만약 황계성이 잘 기억하지 못한다면, 나도 그것은 확실히 알 수 없다."[86]

그녀의 증언은 확실히 기독학생운동의 국제 네트워을 통해 임을 위한 행진곡이 홍콩으로 전파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녀가 1984년 번역하였다는 노래 악보는 빌리가 소장하고 있었는데, 빌리는 그것이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가를 잘 몰랐지만, 황혜정은 이 광둥어 번역본 수고를 보고, 바로 그것이 자신이 만든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수고를 보면 노래의 제목은 한자로는 '애적 정전', 영어로는 'March for love'로 표기되어 있고, 번역은 자신이 했으며, 원래의 작곡 작사는 '남한 학생'이 한 것으로 쓰여져 있다. 곡은 5선지 대신 수자로 표기되어 있고, 중간에 번역된 가사가 약간 수정된 흔적을 볼 수 있다.

---

86) I can only write you what I know but not sure if this is the whole of the story. Student Christian Movement of Hong Kong (SCMHK) revived in 1981 and I was among one of the first leadership taking part in the revived movement. Since then there had been very close contact between SCMHK and the YMCAs of Korea and Korean Student Christian Fellowship (KSCF), the counterpart of SCMHK in South Korea. I was again one of the first few who took part in a youth training programme organized by Christian Conference of Asia in Seoul in collaboration with YMCAs and KSCF held in 1982. As you can imagine, at the height of the student movement of the days, the song of March for Love was sung over and over again in great spirit during the programme and, as I remember, in every ecumenical youth gatherings I involved thereafter throughout the eighties. All SCMHKers knew the song and sang it often when we met. In 1984 when I was an intern of a local Christian Labor Organization, I translated it into Chinese for the special labour gathering held then. People loved it instantly. I left HK for some time and when I returned, a translated version of the song was included in a SCM Song Book. The translation was not exactly the same and I had no idea whether this translation was revised based on mine or not. I thought that WONG Kai Shing was the one who put the song book together. But if he did not remember, I am not sure how the revised translation was done.

<그림 1 > 임을 위한 행진곡의 광둥어번역본(황혜정)



황혜정보다 조금 늦게 홍콩 기독학생운동에 참여하여 활동했던 황계성의 증언(Wong Kai Shing 2016.1.18)을 보자.

"나는 이 노래를,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기독학생운동을 하면서 배웠다. 홍콩기독학생회는 세계기독학생연맹의 한 성원이고, 한국의 조직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이 노래를 배운 것은 세계기독학생연맹 활동모임이었거나 아니면 1986년 내가 홍콩의 기독교 모임(대부분 학생들)의 성원으로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 한국방문은 홍콩기독학생운동 조직이 마련한 것으로, 한국의 사회운동과 학생운동,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사회참여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때 나는 홍콩기독학생회의 여러 활동을 하면서 이 노래의 영어판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었다. 그러나 내가 이 노래를 중국어로 번역한 사람은 아니다."[87]

87) 황계성은 黃慧貞이 당시 홍콩 중문대의 기독학생회 멤버로 이 노래의 중국어 버전이 보급되는 과정을 알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I think the song you mentioned is called "March for love." It is a song of democratic movement in South Korea. I learned this song from the activities of the Student Christian Movement of Hong Kong (SCMHK) in 1980s, but I am not sure which activities. SCMHK is a member of the World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WSCF). The member of WSCF in South Korea is the Korean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One possibility was that I learned this song in an activity of the WSCF. Another possibility was that I

그렇다면, 왜 홍콩중문대학이었을까? 그것은 홍콩대학보다 중문대학이 좀더 자유롭게 학생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홍콩에서는 1960년대 항만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운동, 중문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운동이 발전했다. 홍콩대학이 식민지적 엘리트문화를 대변했다면, 중문대학은 홍콩의 기층문화를 대변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 때문에 홍콩의 학생운동은 중문대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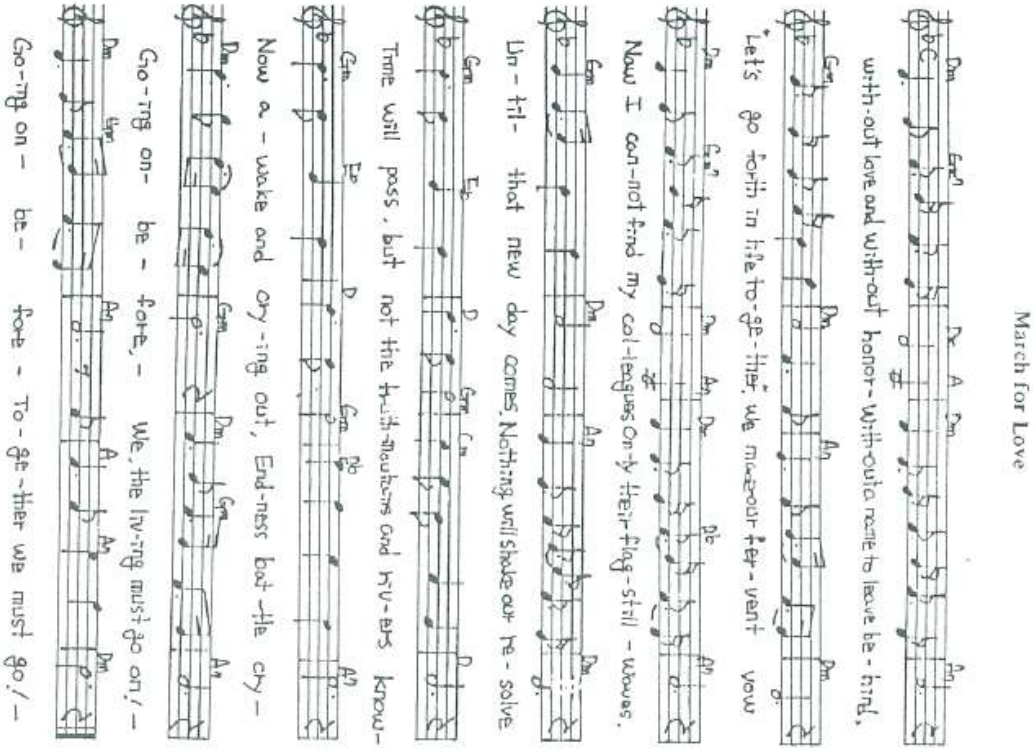
황계성은 이 노래를 영어로 옮겨 보급하였다. 황계성은 황혜정과 마찬가지로 홍콩 중문대 학생이었다. 두 사람의 증언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국제적 확산의 초기국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장소는 홍콩이었는데, 여기여서 왜 홍콩이었고, 왜 홍콩 중문대학이었을까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홍콩은 아시아에서 일본과 함께 1960년대부터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역사가 긴 대표적인 도시국가였다. 오랫동안 국제 기독교운동조직에서 일했던 안재웅의 증언에 따르면, 냉전기 서구의 아시아 지원기구는 주로 싱가폴이나 홍콩에 거점을 두고 있었는데, 싱가폴에서 사회통제가 심해지면서, 본부를 홍콩으로 옮기는 경향이 생겨나기도 했다. 당시 한국의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을 지원하고 있었던 국제적인 기독교운동조직도 대체로 홍콩에 본부를 두고 있었다.

이들의 증언에서 거론되는 홍콩기독학생회나 아시아에서의 국제적 에큐메니컬 운동의 상황은 세계기독학생연맹과 연관되어 1985년에 출간된 한 보고서에서 확인된다.[88] 특히 이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에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 당시 홍콩에 본부를 두고 있던 세계기독학생연맹(WSCF)에서 주선하여 인도, 홍콩, 필리핀, 파키스탄 학생 및 활동가들로 구성된 한국방문팀이 한국의 대학 및 노동운동 현장을 둘러본 후 1985년 11월에 발간한 보고서에 보면, 임을 위한 행진곡이 영어로 번역되어 실려 있다(Ecumenical Fact Finding Team, 1985, p.45).

---

learned this song when I visited South Korea in 1986 with a group of Hong Kong Christians (most were university students). The visit was organized by the Student Christian Movement of Hong Kong. The purpose of the visit was to understand the social and student movements and the participation of Christians in South Korea. Then I taught this song (in English) to people in some of the activities of the SCMHK at that time. However, I was not the one who translated it into Chinese.

88) 이 보고서는 1980년대 중반에 세계기독홍콩에서 활동하던 안재웅 선생이 제공하여 주었다. *세계기독학생연맹(WSCF)은 1895년 스톡홀름에서 성립하였고, 일제시대에 YMCA학생부가 관계있었다. 해방후 YMCA, YWCA, KSCM(서울대 한국기독학생연맹)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다가 Y와 K가 합쳐서 1970년대에 KSCF가 조직되었다. 강문규가 Y 학생부 간사로 일하다가 WSCF 아시아간사로 제네바에서 일했는데, 이 조직이 지역화되어 아시아사무실을 동경에 두고 활동하였다. 강문규가 Y총무가 되어 귀국한 후, 그의 후임으로 안재웅이 아시아책임자로 활동하였는데, 1980년대에 사무실을 홍콩으로 옮겼다. 1981년 박상증목사가 CCA총무에 취임했을 때안재웅이 홍콩사무실에서 아시아총무로 일하였다. 안재웅은 010-3435-5070. 그는 김대중시대 IMF관리하에 있을 때, 모금으로 재단을 만들어 사무총장으로 일하였다. 그러나 안재웅이 근무하던 시기 이후에 학생운동이 내부적 이념갈등으로 약화되고, 에큐메니칼(연합) 정신이 희석화되었다. 1970년대 도시산업선교회(개신교와 가톨릭)에서 지원하여 Asian Community for people's Organization (ACPO)을 조직하였는데, 홍콩중문대는 교수들이 좋은 사람이 많아서 이런 운동을 지원하였다고 한다. 현 KSCF총무는 장병기목사이다.



* 출처: Report visit to Korea, Christian Conference of Asia, WSCF Asia/Pacific Region, 1985, p.45.

2) 노동운동의 맥락에서의 노래의 변용

홍콩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0년대 중반까지 주로 국제적인 기독학생운동의 연대의 맥락에서 도입되었지만, 1989년 북경의 천안문사건을 계기로 대중적 감성과 사회의식이 바뀌면서 비판적 의식이 고양되고, 점차 노동운동의 맥락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한다.

홍콩의 노동운동은 학생운동과의 연계보다는 독자적인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발전했는데, 1970년대 홍콩이 4마리의 용의 하나로 성장하면서 경제성장과 함께 노동운동은 뚜렷한 모습을 갖추었다. 이때 미국이나 유럽의 기독교 및 가톨릭의 세계적인 네트웍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노동운동의 현장에서 성장한 아포(Apo)의 증언에 따르면, 1970년대의 홍콩노동운동은 한국의 전태일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고, 또 김지하의 시를 번역하여 노동교육에 사용하였다. 당시 홍콩에는 IMCS(가톨릭 학생회), SCM(기독학생회), 홍콩학생연합(HKFS)등 많은 학생운동조직이 있었다. 또한 홍콩의 UIM (산업선교)이나 HK CIC, 가톨릭 (YCW)등도 있었는데, 이들은 1976-77년에 활동했던 한국의 영등포 산업선교와 같은 맥락에서 조직되었다.

그 중의 한 단체로 홍콩의 <아시아 노동운동 모니터>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원래 1976년에 설립되었다. 베트남전쟁의 끝난 직후 아시아에는 개발붐이 일었고, 미국도 많은 투자를 했는데, 미국이 투자한 기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모니터하기 위하여 이 단체가 설립되었다. 설립초기에는 관심이 다양했지만, 1980년대에 접어들어 초점이 노동문제로 모아졌다. 비판적 아시아 연구(Critical Asian Studies)라는 잡지도 출간했다. 노동연대링크(APWSL)은 젊은 노동자활동가들의 교환프로그램을 발전시켰다. SCM은 1980년 광주항쟁 후에 군의 진압에 대해 매우 분개하였고, 또 당시의 태국의 독재정치에 대한 반대운동이 다마섹대학을 중심으로 일어난 태국의 반독재운동에도 큰 영향을 받았다.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조직이 홍콩을 중심으로 연대활동을 만들어갔다.

한편 홍콩에는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조직들이 발전하고 있었다. 아시아인권위원회(AHRC: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HICF(학생연맹), HK 專上학생연합(Asia Student Association, 세속적 조직), IMCS(가톨릭 학생연맹), SCM(기독학생연합) 등이 1970-80년대 한국의 학생운동 및 인권운동을 지원하였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아시아 조직들이 홍콩에 본부를 두고 있었다. 이들은 1990년대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홍콩의 '임을 위한 행진곡' 도입의 역사는 1990년대에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기독학생운동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황혜정의 광동어 번역본을 발음하기 좋게 정리하여 노래를 부른 사람은 노동자문화운동가 빌리(Billy/또는 老B)이다. 그는 1987년 홍콩의 침례교대학을 졸업한 후 사회사업가로 출발하였는데, 1989년 천안문 시위에 충격을 받아 시위를 지원하는 맥락에서 노래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당시에 지하 밴드로 아나키스트 록 밴드를 결성하여 천안문 사건으로 투옥된 사람들을 위한 노래를 불렀다. 아나키스트 록밴드는 1982년 결성되었는데, 홍콩과 중국의 민주주의를 기원하는 그룹이었다. 빌리는 1989년부터 지역사회 행사에서 시민의 권익과 민주에 관련된 노래를 불렸다. 그것은 1989년 천안문 진압이 계기가 되었다.

빌리는 1993년에는 노래를 창작하여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는 주로 노동자와 소외된 시민(평민)들의 이야기들을 노래로 만들었는데, 그들의 마음과 욕구(요구)들을 노래로 만들었다고 한다. 그는 많은 집회(행사)에서 노래를 불렸으며, 가끔은 직접 활동하면서 노래를 하기도 하였다. 그 후에는 다른 팀들과 같이 활동을 하였으며, 창작 노래 모임 단체도 만들었다. 또한 일부 시민(평민) 단체가 원하는 노래 가사를 써주기도 하였다.

빌리는 어떻게 임을 위한 행진곡을 알게 되었는가? 그의 증언에 따르면, 1992-93년경 노동운동을 했던 그의 친구 중 한명이 한국에 가서 교류활동을 한 후, 이 노래의 악보를 들고 귀환하였는데, 이를 통해 원래의 곡과 가사를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애적 정전>이라는 제목의 광동어로 직역하여 옮긴 악보를 바탕으로 노래를 불러 보았지만,[89] 운

89) 빌리는 홍콩 중문대학 학생 황계성(黃啓成)이 당시 SCM(Student Christian Movement 기독학생운

율이 잘 맞지 않아서 가사를 고쳐서 새롭게 만들었다고 한다. 이에 관한 그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처음에는 중문대학의 한 학생이 번역자를 찾아서 중국어로 번역을 하였다. 그 때에는 한 글자 한 구절씩 번역을 하여서 광동어로 노래하기는 힘들었다. 번역한 광둥어 글자 발음 음운은 멜로디와 조화하지 못해서 실제로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 오직 그 당시 한 극단이 길거리 공연에서 응용하여 불렀다. 나는 그 극단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때 번역한 악보를 받았다. 악보는 받은 몇 년 후, 1995년 또는 1996년에 노동조합운동(공인 운동)을 할 때, 나는 자주 여기에 참여하여 노래로 지원을 하였다. 나는 가사의 뜻을 기반으로 구절을 대폭 수정하였고, 가사의 각 단락의 내용, 분위기, 기분(정서)을 담는 가운데 최대한 비장한 느낌을 살렸다. 그래서 지금의 광동어 가사가 탄생하였다.[90] 그 후 자주 홍콩 노동운동 모임 (활동) 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

그 후 빌리는 2001년 별도의 가사를 만들어 이 노래를 다시 녹음하였다. 그 자신이 가사를 썼고, 소음(噪音)합작사에서 음반을 제작하였다.[91] 이 음반에는 원곡이 남한노동운동가곡(南韓工運歌曲)이고, 중국어가사(中文歌詞)는 범인(凡人)이 썼다고 표기되어 있다. 새롭게 홍콩의 노동자노래운동에서 번안된 노래가 탄생한 것이다.

<사랑의 출정(爱的征战)>(광둥어판(粤语版, 2001)의 가사[92]

여태껏 인생을 환호성으로 장식한 적 없고, 근면해도 행복할 수 없었다.
사회 밑바닥에서 온갖 억압을 겪어도 우리들 가슴은 죽지 않았다.
내 마음 속에 묻혀 있었던 분노는 깨어난 사자 같아서
항쟁의 불길에 동행하니, 우리들 운명이 하나가 되었다.
싸우는 이 순간, 푸른 산, 푸른 바다, 푸른 하늘
세상에 우리 흔적 남기니 환호성이 하늘을 울린다.
이 생에 열매를 볼 수 없다 해도, 우리 후손들은 보리니
노동자는 결국 스스로 결정할 것이니. 영웅 되어 역사에 남을 것이다.

从来没有欢呼声加冕　勤劳未可得到幸福
浮沉在社会底处　　历尽了压迫心不死

동) 소속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악보를 황계성이 썼을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황계성은 이를 부인했다.

90) 이것이 홍콩의 임을 위한 행진곡의 두 번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91) https://m.soundcloud.com/noise-cooperative/xxwhpvi8ehnn ; https://m.soundcloud.com/mininoise-hk/cd1-04-battle-of-love

92) 광둥어판은 가사는 시처럼 되어 있어서 직역은 힘들고, 의미전달에 초점을 두어 번역했다. 번역자는 김란(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埋藏在我心中的激愤　犹如睡醒的母狮
同行在抗争的火线　　命运已紧紧结连
作战同往这一刻　　青山海与天
在世界花上这一笔　　欢呼响震天
此生纵使不可见　　愿他朝有后继者
劳动者终要自主　　成仁见青史

빌리가 이 노래를 녹음할 때 그는 소음합작사(噪音合作社 Noise Cooperative)라는 밴드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었다. 그 당시 그는 원래의 노래가 너무 비장한 느낌이 들고, 홍콩의 노동운동 분위기와는 좀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해서 비교적 견실하고 경쾌한 리듬으로 녹음을 하였다고 한다.

소음합작사는 2002년부터 2003년 사이에 팀원들이 개인적인 이유로 인하여, 개별 활동을 하였다. 어떤 사람은 홍콩을 떠났고, 공연도 중지되었다. 그래서 빌리는 몇 해 동안 각종 행사에 참석을 하여 혼자서 노래를 하였다. 2006년에 그는 정상적인 음악회를 열고 싶었고 새로운 밴드를 구상하였다. 그래서 노래 가사에 신경을 쓰지 않고 사회의식이 같은 단원들을 찾았는데, 2006년 음악회가 끝난 후 모임을 계속하기로 결정하면서 2009년에 빌리는 새로운 밴드인 '미니소음(迷你噪音mininoise)'을 만들었다.[93] 그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과 함께 첫 CD을 녹음할 때, 그는 다른 감정으로 녹음을 하였다. 왜냐하면 이 노래를 처음 소개해주었던 그 극단친구가 죽었고, 자신은 매우 그를 그리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롭게 녹음된 곳은 자신의 극단 친구를 생각하면서 슬픈 감정과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는 방식이었다. 2009년 버전에는 영문가사가 있는데, 이는 소음합작사의 한 팀원이었던 샐리(Sally)가 번역한 것이다. 그는 두번째 광동어 버전을 영문으로 번역했다.

4. 노동운동의 맥락에서의 확산

1) 대만의 노동자전가

홍콩에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전파된 곳은 대만이었다. 1988년 가을, 왕리자(汪立峽)가 홍콩에 있는 아시아 노동자 지원단체의 제안과 초청으로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노동자연대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홍콩에 있는 영국의 노동운동

93) 迷你噪音网站：http://www.blogbus.com/mininoise-logs/271759201.html
http://www.blogbus.com/mininoise-logs/10022837.html
爱的征战音乐：http://music.douban.com/artists/player/

관련 인사가 한국에 갈 것을 제안하였고,[94] 그는 노동자 출신을 한 명 대동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타오웬항근주식회사 산업노조(桃園航勤股份有限公司產業工會:약칭 桃勤노조)'의 성원이었던 커정륭(柯振隆)과 함께 가게 되었다.[95] 이 회사는 일종의 공항화물서비스 회사이다. 서울에서 여러 나라의 노동운동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후 이들은 마산으로 갔다. 당시 마산의 노동자들이 전투적인 시위를 하는 것을 보았고, 이 자리에서 이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매우 인상 깊게 들었고, 이 노래를 익혔으며, 대만에 돌아온 후 커정륭이 이를 악보로 옮기고, 대만 노동운동의 맥락에 맞는 <노동자전가>라는 노래를 만들었다.

이에 관하여 나중에 노동자전가를 부른 흑수 나카시의 단장인 유자강(劉自強)은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필자에게 알려주었다(2016.1).[96] 이에 따르면, 1987년 대만 정부에서 계엄령을 해제한 후 대만의 노조간부들이 노동운동에서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이 필요해서 한국에 가서 한국 노동자들이 항쟁 현장 견학을 다녔다. 그 때 한국 마산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한국 북을 치고 불렀던 노래를 커정륭이 듣고 이 노래의 멜로디를 암기했다. 커정륭은 그때 타오근노조의 제1대 상무이사였다. 커정룽이 대만에 돌아온 후, 신주(新竹) 사두산(獅頭山)에서 열린 '추투(秋鬥)'의 간부 훈련을 참가하기 위해 당시 대만 노동운동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정촌기(鄭村祺)의 차를 함께 탔는데, 이 자리에서 커정룽이 한국에서 이 노래를 인상깊게 들었다고 말하자, 정촌기가 그에게 스스로 노래를 만들어 보라고 제안했다. 훈련이 끝난 후 커정룽은 노동자들과 함께 이 노래에 대해 토론했다. 결국 예술전문학교를 졸업한 장금대(蔣金台)라는 노동자가 가사를 완성하고 멜로디도 좀 개편했다. 노래의 이름을 <노동자전가(勞動者戰歌)>로 하였다. 이 때 만들어진 노래의 곡은 원래보다 약간 단순하게 편곡되었지만, 훨씬 전투적인 가사로 되어 있다. 이 노래의 마지막은 '쉐쉐'라는 구호로 이루어져있는데, 그 의미는 '죽여 죽여'라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노동자전가는 처음에 커정륭이 속한 桃勤노동조합에서 불렀지만, 점차 대만노동운동계에 퍼지기 시작했다. 이 노래가 1989년에 불리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의 신문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94) 왕리자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95) 2015.9.29일 장여흥씨 소개로 타이뻬이 유용의 집에서 왕리자(왕립협), 커정륭(가정룽), 유용 등을 만나 인터뷰를 했는데, 1988년 10월말 또는 11월, 한국에 가게 된 맥락을 왕립협(왕리자)이 설명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개사하여 노동자전가로 만든 맥락을 커정룽이 주로 말했다.

96) 유자강 자신은 그 때 아직 노조에 들어가지 않아서 한국에 가지 않았는데, 입사한 후 12년 동안 타오근노조의 상무이사를 담당했고, 지금 퇴임했다. 그는 이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노동조합에 합류한 후, 커정륭과 정촌기, 장금대로부터 들었다고 한다.

<사진> 대만의 노동자전가 제작팀원(좌: 유용, 가운데: 커정륭, 좌에서 네 번째:왕립협)

1996년 대만에서 흑수 나카시(黑手那卡西)라는 노동자노래패(工人樂隊)가 결성되었다. 여기에서 흑수는 기계를 다루어 검게 된 노동자들의 손을 의미하며, 나카시는 대만의 전통적인 노래의 형식을 의미한다.[97] 이들은 대만의 노동교육센터(ICLE: Informational Center of Labor Education , 台灣勞工教育資訊發展中心) 및 노동자입법행동위원회(工人立法行動委員會) 의 협조하에 음악을 통한 사회운동을 목표로 하였다. 흑수 나카시는 최초로 노동자전가를 테이프로 내놓은 노래패였다. 당시 대만에서 노동운동 전문 노래패는 黑手那卡西가 거의 유일하였다. 이 밴드 창립자인 천부오웨(陳柏偉)는 1990년 3월에 일어난 학생시위에 참가할 때부터 저항적 운동가요를 쓰기 시작했다. 특히 1992년 찌롱고속버스회사(基隆客運)의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 〈우리 단결해서 같이 가자(團結逗陣行)〉라는 노래를 쓰고 현장의 사기를 떨쳐 일어나서 그가 더 적극적으로 노래를 쓰기 시작한다. 그 후 그가 하류계층에 들어가서 노동자의 생활과 직장에서의 상황을 확인하였고, 1996년 공장이 문닫는 운동에 나가서 노동자입법행동위원회(工人立法行動委員會) 에 참가했다. 그가 이 위원회 위원장인 쯩춴치(鄭村祺)과 자주노동자협회(自主工聯)의 우영이(吳永毅)에게 '우리가 앨범을 내자. 1980년 이후 노동자들이 불렀던 노래와 내가 쓴 노래를 집합해서 앨범을 내자'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1996년 이 밴드가 설립되었다. 이 밴드는 노공

97) 중국어 '나가시, 那卡西'는 타이완에서 중요한 전통대중음악의 형식이다. 대다수 전형적으로 전통찻집이나 술집 같은 곳에서 노동계급 문화의 요소와 섞였다. 이 용어는 일본어의 '나가시'(流し, 흐르다라는 뜻)에서 빌려왔지만, 이는 또한 반주(伴奏)를 뜻하기도 한다. 어느 해설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 용어는 나가시 뮤지션들의 이주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묘사한다고 한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한 찻집에서 다른 찻집으로 옮겨 다녔다. 교공악대의 林生祥은 이런 스타일을 "아주 전원적이면서도 도회적인 음악형태이며, 가수와 함께 보통 건반악기를 갖고 다니며, 아코디언과 드럼을 연주한다." 이 형태(음악 장르)는 친노동자 밴드와 뮤지컬 그룹들이 좋아한다. 가장 두드러진 그룹 중 하나는 '나가시'란 이름을 딴 '흑수나가시'이다.

회(勞工會)의 조직 내부에서 설립된 밴드이지만 멤버 중에 두 명만 노동자 출신이다. 이들은 운동현장에서 노래를 부를 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 기타를 가르쳐주고 노동자의 창작력을 키웠다. 그래서 1999년부터 단체창작 워크숍을 열고 노동자들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게 하면서 이 이야기들을 노래로 만들었다. 이 워크숍은 노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경험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기회였다.

이들은 1998년 세 번째 음반을 내놓을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의 번안인 노동자전가를 이 음반에 포함시켰다. 이 음반은 '회가(回家)'라는 작품을 비롯하여 11곡을 수록했는데, 노동자전가는 세 번째 곡이었다.[98] 1998년 노동자밴드가 상업적으로 음원을 판매한 것을 유용(劉庸)이 증언했는데, 그가 이 그룹의 초창기 멤버로 테이프를 녹음할 당시 아마츄어 가수로 참여하였다. 그는 가전제품회사인 大同의 노동조합 간부였다.

이 노래의 원본은 '광주의 노래'로 통용되었고, 가사는 위에서 언급한 두 사람이 만든 것으로, 전투적인 의지를 북돋우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대만 노동운동의 현장에서 사용되었다.

노동자전가 (改編詞：桃勤工會 柯正隆、蔣金台 原詞曲：韓國光州之歌)

全國的勞動者啊　전국의 노동자여
勇敢地站出來　용감히 나와라
為了我們的權利　우리들의 권리를 위해
不怕任何犧牲　희생을 두려워 마라

反剝削爭平等　착취 반대 평등을 위해 싸워라
我的同志們　우리들의 동지여
為了明天的勝利　내일의 승리를 위해
誓死戰鬥到底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워라
(殺殺)　(쉐쉐)

'임을 위한 행진곡'은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노동자운동 과정에서 활력 넘치는 문화 저항정신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곡이었듯이, 대만에서도 주로 노동운동과 소외층 약세운동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곡이 되었다. 1998년 5월 1일 대만 난디엔공회(南電工會)가 조직한 5·1 반실업시위운동 동영상은 '노동자전가'를 주제곡으로 제작되었다.

98) 陳幸嬋, "工人樂隊－黑手那卡西", 電子報 047, 2011.11.2.

커정룽 등이 만든 노동자전가와 나카시가 실제로 부른 노래는 후반부 합창부분이 조금 다른데, 빌리가 나카시에게 왜 이 부분이 다른가라고 물으니 나카시는 자신들이 정촌기에게 노래를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를 보면, 대만에서 노동자전가는 노동당 계열의 커정룽 뿐 아니라 기독교 노동운동계의 정촌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홍콩의 아포와 빌리에 따르면, 대만에서는 기독교 노동운동가였던 정촌기가 한국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CD를 가져갔는데, 대만의 노동자노래운동그룹인 흑수 나카시(黑手那卡西)그룹이 이를 배워 노래를 불렀다고 증언하였다. 빌리는 1998년 또는 1999년에 친구의 소개로 이 노래운동그룹을 알게 되었다. 그 후 2000년에 빌리가 큰 행사를 홍콩에서 진행할 때, 흑수 나카시 그룹을 홍콩으로 초청해서 공연을 하게 되었다. 공연 후에도 계속 연락 및 교류를 하였고, 중국 대륙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들을 추천하여 주었다.

대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번안판인 노동자전가는 나카시 노동자밴드(黑手那卡西工人樂隊)가 1998년에 부른 곡이 널리 알려져 있다.[99] 이것이 나카시가 부른 대만의 노동자전가 1차 버전이다. 이 노래의 2차 버전은 나카시가 2002년에 한국의 광주를 방문하여 원곡에 접하고, 원곡에 맞게 다시 부른 것이다. 전반부는 같은데 후반부가 바뀌었다. 지금도 대만의 시위에서는 이 노래의 1차 버전이 잘 불린다. 흑수 나카시는 2005년 한국 아시아 마당 민중극단의 초청으로 5.18기념사업 연출에 참여하기도 하고, 노동자전가의 원본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학습하기도 하였다.

홍콩의 노래운동가 빌리는 대만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鄭村棋(쯩춴치,1952년생) 와 흑수 나카시 그룹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말했다.[100] 정촌기는 대만의 사회운동가이며 정치인이다. 그는 국립 타이뻬이대학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하바드대학에 유학하여 교육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귀국하였다. 쯩춴치가 미국에 유학할 때 사회주의적인 입장에서 노동자 문제를 연구했고, 대만에 돌아온 후, 신문지 '중국시보(中國時報)'의 기자가 되었는데, 이 때 중국시보 노조를 결성할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준비를 하다가 신문사에서 해고되었다. 그 때부터 그는 운동가가 되었다. 중국시보사를 떠난 후 쯩춴치가 대만의 하층노조를 구성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1986년 타이완성 총노조 직원훈련팀 팀장(臺灣省總工會組訓組組長)으로 일한 후, 타이베이현(臺北縣) 노공국(勞工局, Labor Affairs Bureau) 코디네이터를 거쳐 1993년 노동교육센터 주임(臺北縣勞工局勞教中心主任)이 되었다. 그는 1990년 들백합학생운동(野百合學運) 이 일어났을 때,[101] 5명의 고문 중 한명

99) http://blog.roodo.com/nakasi/; http://www.archive.org/details/ March_for_you_comrade _Korean_version

100) 빌리는 흑수 나카시가 결성될 때, 대만의 노동운동가였던 정촌기그룹이 배후에서 이를 지원했는데, 유용(劉庸)은 그 그룹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정촌기그룹이 뒤에서 주도했다고 하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101) 이 학생운동은 리떵훼이(이등휘) 전 총통 재임시기이던 1990년 3월 16일부터 22일까지 지속되었으며, '3월 학생운동'이라고 불린다. 10여명의 대학생들이 중정기념당 앞에서 국민대회 해산, 임시약관 폐지, 국시회의를 통한 구체적 정치경제개혁 일정제시를 요구하면서 단식농성에 들어갔으며, 이에 30여개의 대학생과 교수들이 이에 호응하였고, 고등학생들까지도 참여하여 6천여명이 모여 대규모

이었다. 이어 노동자입법행동위원회 위원장 (工人立法行動委員會召集人), 노동자교육정보발전센터를 창립(勞工教育資訊發展中心創辦人)하였다. 적극적으로 노동자운동(공운,工運)을 하였기 때문에 1990년대 행정원 원장인 하오보우첸이 그를 '공운깡패'라고 불렀을 정도였다. 그는 노동자입법행동위원회를 맡아 활동할 때, 흑수 나카시 조직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후인 1998년 타이베이시 노공국 국장 (臺北市勞工局局長)이 되어 2003년 2월까지 활동하였고,[102] 2012년 10월 이후 인민민주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쯩첸치가 해외에 있는 지식인들과 함께 '대만사회연구계간(台灣社會研究季刊)'을 창립하고 다른 친구들과도 '도서변연(島嶼邊緣)'이라는 잡지를 창립했다.

한편, 2000년 5월, 한국 화교로 대만 노동당에서 활동을 하던 장여흥이 광주에서 열린 제4회 동아시아 평화인권국제회의에 참여하였을 때, 광주민주항쟁 20주년 기념으로 만들어 참가자들에게 나누어주었던 5.18 다큐멘터리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들어 있었는데, 그는 이 노래와 노동자전가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고, 다큐작가와 함께 이를 원래의 가사에 충실하게 번역하여 유튜브에 올려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였다. 대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노동자악단 나카시가 부른 노동자전가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부른 버전이 존재하는 셈이다.

<그림> 黑手那卡西의 공연장면

시위로 발전하였다.

102) 1998-2002년 마윈져가 타이페이시장에 재직할 때 쯩첸치가 노공국 국장을 맡았다. 이것은 반체제 운동자가 민진당 뿐 아니라 국민당과도 협력할 수 있다는 뜻이다.

2) 중국에서의 노동자찬가

피촌(皮村)과 평곡(平谷)은 중국 베이징 동북쪽 근교에 있는 마을로, 농민공들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장소이다. 피촌은 원주민은 1,000명 정도였으나 중국 각지에서 몰려든 농민공이 2만명에 이를 정도로, 독특한 특성을 가진 교외 도시이다. 순헝은 여기에서 노동자 자치조직으로 북경공우지가를 조직하였고, 노동자문화관을 만들었다. 현재 성원은 100명 정도이다. 이 노동자조직은 중국에서 제일 큰 규모이며, 다른 도시의 노동자조직과 협력하고 있다.

여기에서 2002년에 결성된 노동청년문예연출대(打工青年文艺演出队)가 신공인예술단(新工人艺术团)으로 발전하면서, 2005년에 <노동자찬가>라는 제목으로 음원을 만들었다. 이

노동자찬가는 중국판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원곡에 중국의 농민공운동과 관련된 가사를 붙인 것이다. 이 노래는 주로 중국의 농민공들의 노래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 잠깐 중국의 민중적 노래운동에 대해 살펴보자. 개혁개방이후 중국에서도 노동자들이 주체가 된 노래운동이 시작되었다. 1989년 천안문 사건당시 대학생들은 호더지엔(호덕건)이나 최건 등이 부른 노래들을 즐겨 불렀다. 최건의 一無所有(아무 것도 없다)가 대표적이다. 중국에서 대학생들은 혁명가들도 잘 불렀는데, 국제가등은 당국과 저항하는 학생들이 공유하는 것이었다. 이런 노래의 하나가 <단결은 바로 힘이다>란 노래이다. 당시 대학생들은 베이다오(北島)의 시에 나오는, “고상함이 고상한 자의 통행증이고, 교활은 교활한 자의 무덤이다”라는 표현을 플랭카드에 적어 천안문에 걸고 투쟁하였다. 이후 중국의 노래운동은 여기에는 노동자들 뿐 아니라 대학생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원톄쥔(온철군)이나 이창평등의 영향을 받았다. 이들의 영향으로 2003년부터 대학생들이 농촌에 들어가 농민운동을 한 사례가 200곳에 이르며, 이들의 음악 관련 운동은 순헝(孙恒)이 도와주고 있다.

피촌에는 노동자문화박물관과 초등학교가 있고, 평곡에는 노동자(공인)대학과 同心이라는 복숭아농장이 있다. 工友之家에서 공인대학을 만들었다. 순헝이 책임자이고 뤼투(呂途)가 그의 부인으로 신공인운동의 이론적 대변자라고 할 수 있다.[103] 신공인예술단은 순헝이 주도하고 있고, 쉬두어(許多)가 보컬로 참여하고 있다.[104] 신공인예술단은 2004년부터 매년 1회 앨범을 내고 공연을 하는데, 2005년에 두 번째 앨범을 낼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의 중국판인 <노동자찬가>를 포함시켰다. 단장 순헝이 홍콩 노동자밴드(빌리)가 부르는 노

103) 뤼투(呂途)는 장춘출신으로 북경의 중국농업대학을 졸업하고 유학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후 중국노동자운동에 투신하였다.

104) 2015년 10월 17일 베이징남역에서 許多(쉬두어)를 면담한 후, 12월 10일 베이징 교외의 피촌을 방문하여 순헝(孙恒)과 뤼투(呂途)를 만나 인터뷰하였다. 중국 신공인운동에 관하여 뤼투의 책(2013;2015)을 참조할 수 있다.

래를 듣고, 가사를 새로 만들었다.[105] 순헝은 이 노래가 전투력이 좋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효과가 커서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순헝이 신공인예술단 책임자이자 노동자찬가의 작사자이다. 그는 하남 안양사범학원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음악교사를 하다가 북경으로 와서 잡지사에서 일을 했는데, 2000년경 여기에서 중국 인민대학의 온철군 교수를 처음 만났다. 온철군교수는 중국에서 3농문제로 많은 연구를 하면서 농민운동이나 노동자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중국개혁 농촌판>이라는 잡지를 간행하고 있었다. 온철군과 함께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 이창평은 원래 호북성의 監利縣 00향의 당서기로, 당 서기로 일할 때, 주룽지총리에게 3농문제에 관한 편지를 썼고, 이를 바탕으로 책을 출판했는데, 이 책의 파급력이 컸다. 그러나 당의 입장과 다른 제안이었으므로 당과의 갈등이 점점 커졌고, 이 때문에 그는 향의 당서기 직을 사임하고 북경으로 와서 온철군이 발행하던 잡지의 편집장이 되었다. 이 때 순헝과 뤼투는 이 잡지사에서 자원봉사를 하였다. 이창평은 현재 베이징 근교의 마을인 평곡에서 노동자대학(공인대학)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순헝은 2002년 신공인그룹을 만들었다. 그가 인터넷에 신공인회의 조직결성과 활동에 관한 소식을 올리자 홍콩의 옥스팜(Oxfam HK)에서 일하고 있던 빌리가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해 왔다. 옥스팜은 아시아 노동자들의 연대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기금회로, 2003년 순헝의 밴드공연을 지원해주었고, 이를 계기로 협력이 시작되었다. (2003년 홍콩에서 빌리가 노래공연을 할 때, 순헝은 '사랑의 출정(愛的征戰)'을 처음 들었을 것이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2004년 '양안 3지', 즉 중국(대륙), 홍콩, 대만이 함께 참여하는 공인 음악회를 홍콩에서 개최하였다. 순헝은 이 때 처음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의 대만판과 홍콩판, 즉 대만 나카시그룹의 '노동자전가'와 홍콩 빌리의 '애적정전'을 들었다고 한다.[106] 당시 '사랑의 출정'은 광동어로 불려진 것이었으므로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가사를 통하여 그 의미를 파악했다. 순헝은 이를 계기로 중국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개사한 노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빌리는 여러 나라의 임을 위한 행진곡 버전들을 수집하여 제공해주었는데, 여기에는 홍콩판과 대만판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태국, 필리핀에서 불려지는 임을 위한 행진곡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한국의 임을 위한 행진곡도 포함되어 있었다. 순헝은 기억이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캄보디아판과 말레이시아판은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빌리는 자신이 순헝에게 임을 위한 행진곡을 중국어 표준어 버전으로 만들 것을 주문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노래는 대만,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버전들이 다 있었는데, 중국 표준어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순헝은 중국의 현실, 특히 농민공들의 현실을 감안하면서 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노

105) 쉬두어의 증언에 따르면, 임을 위한 행진곡은 홍콩가수 Billy가 2003년경 북경공연에서 부르는 것을 처음 들었다. 광동어로 부르는 노래였지만, 노래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106) 순헝은 대만의 노래그룹 흑수 나카시를 통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접하였으므로, 원래 노동자전가를 만들었던 커정륭이나 유용 등을 모르고 있었다.

랫말을 만들려고 노력하였고, 대만판과는 달리 원래의 곡에 충실하게 가사를 붙였다. 노래의 제목은 노동자찬가였다. 이 노래는 2005년에 순헝이 발행한 두 번째 앨범의 마지막 곡으로 삽입되었다. 이 노래의 가사를 만들면서 농민공 대신 '신공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107]

그는 노래가사에서 노동의 고귀함나 노동자의 존엄성을 드러내려고 하였고, 노동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또한 누가 노래를 부르는 주체인가를 감안하여 노랫말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노래의 주체는 3억에 달하는 중국의 농민공, 즉 신공인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신공인의 권리나 행복함은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를 가사로 만들었다'고 증언하였다. 그가 노동자찬가를 만들 때의 의도는, 신공인들이 힘을 내서 일을 하고 힘을 합쳐 권리와 행복을 찾자는 것이었고, 농민공들의 단결과 노동의 존엄을 결합시켜 노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신공인예술단은 2004년 첫 번째 앨범으로 '천하의 노동자는 모두 한 가족(天下打工是一家)'을 내고, 2005년에 두 번째 앨범으로 '노동자의 노래를 위하여(为劳动者歌唱)'를 냈는데, 여기에는 총 12개 곡이 수록되었고, 노동자찬가는 맨 마지막 곡으로 포함되었다.

'노동자찬가'-신공인예술단(新工人艺术团)

가족과 친구 곁을 떠나 출정의 길에 나섰다.
생활을 위해 바쁘고, 이상을 위해 분투한다.
우리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요, 지혜와 손발이 있다.
우리는 지혜와 두 손으로 도로, 다리, 고층빌딩을 세웠다.
바람이 불고 비를 맞아도 한 시도 멈추지 않는다.
땀과 눈물이 흘러도, 고개 숙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우리의 행복과 권리는 우리들이 쟁취해야 한다.
노동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노동자가 가장 영광스럽다.

후렴
바람이 불고 비를 맞아도 한 시도 멈추지 않는다.
땀과 눈물이 흘러도, 고개 숙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우리의 행복과 권리는 우리들이 쟁취해야 한다.
노동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노동자가 가장 영광스럽다.

107) 근래에 중국에서는 농민공이라는 말보다는 '신공인'으로 쓰는 경향이 있다. 농민공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어서 신분적 비하의 뉘앙스를 갖게 되었으며, 이들이 사용하는 '타공'이라는 용어는 '일은 하다'라는 중립적 의미여서 자주 쓴다고 말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노동자가 가장 영광스럽다. (번역 김란)

离开了亲人和朋友，踏上了征战的路途。
为了生活而奔波，为了理想而奋斗。
我们不是一无所有，我们有智慧和双手。
我们用智慧和双手，建起大街桥梁和高楼。
风里来雨里走，一刻不停留。
汗也撒泪也流，昂起头向前走。
我们的幸福和权利，要靠我们自己去争取。
劳动创造了这个世界，劳动者最光荣。

风里来雨里走，一刻不停留。
汗也撒泪也流，昂起头向前走。
我们的幸福和权利，要靠我们自己去争取。
劳动创造了这个世界，劳动者最光荣。
从昨天到今天到永远，劳动者最光荣

《为劳动者歌唱》2005

《北京、北京》	《开往家乡的列车》	《一个村里来的小伙》
《五毛钱》	《煤》	《拥抱生命》
《红丝带家园之歌》	《不再迷茫》	《这矮矮的村庄是我们在这城市的家》
《六里桥》	《小小的渴望》	《劳动者赞歌》

신공인예술단은 2014년까지 총 8개 앨범을 출판하였다.[108)]
이들에게 한국의 임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 내용에 대해 빌리가 설명해주었는데, 이에

108) 신공인예술단의 앨범에 관한 소개는 http://baike.baidu.com/link?url=BKpIGQU-o0podRg7HQAM7m76fvYqRYYc_tqQ9FmM9rgjmgVaB_whPlnKDa00OR1SefpwYlS4gZAsBoBYlozj4a#3, 앨범에 수록된 노래에 관해서는 http://www.dashengchang.org.cn/Music.htm

따라 순헝은 한국의 5.18 광주에 대해 비극적 사건으로 생각하게 되었는데, 노래의 탄생 배경과 시대적 상황에 대해 들었고, 비록 아직도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자찬가의 정신은 임을 위한 행진곡과 정신은 똑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순헝은 임을 위한 행진곡에 얽힌 사연과 항쟁에서 죽은 영혼을 위로하는 노래임을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109]

2004년 북경에서 아시아 노동자예술단들의 특별공연이 있었는데, 여기에 태국과 필리핀 팀도 같이 불렀다. 순헝은 2004년 대만의 노동자노래운동그룹 나카시를 만나서 대만판 노동자전가에 대하여 토론한 적이 있는데, 당시 대만의 상황에 기초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노래가 매우 저항적이고 전투적인 느낌을 준다고 생각하여, 중국 대륙에서는 한국이나 대만과는 달리 전투적 노동운동이 없으므로 이와는 다른 내용을 가진 다른 느낌을 주는 노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홍콩판 애적 정전에 대해, 그것이 평등을 강조하고 발라드풍으로 매우 서정적인 느낌을 준다고 평가하고, 노동자 공동체운동의 맥락에서 탄생하여 화목과 평등을 강조하는데 비해, 대만버전은 전투적이며, 대륙에서는 노동자들의 단결과 노동의 고귀함(존엄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신공인예술단의 중요한 성원인 쉬두어(허다)는 고등학교 재학시절 록음악에 심취하였고, 공부는 소홀히 하였는데, 절강성 가흥대학에서 수학하였으며, 대학 졸업후 북경에서 비공식적인 음악학원 迷笛에서 음악공부를 하였다. 2002년 순헝을 알게 되었고 3-4인이 최초로 일하는 청년예술단의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도 온철군의 3농운동에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그의 중국의 개혁적인 잡지에 실린 농촌관련 내용을 읽고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베이향에서 3농 동아리에 참여하였고, 건축공장에서 노동자밴드를 조직하였다. 이것이 일하는 청년예술단(打工青年文艺演出队)으로 발전하여, 2002년 5월 1일 노동절에 이 예술단이 최초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2004년 신공인 예술단으로 개명을 하면서, 처음 앨범을 발표하였고, 2005년 두 번째 앨범 <노동자를 위하여 노래하라>를 냈다. 여기에 노동자 찬가가 포함되었다. 쉬두어는 2005년 노동자찬가를 내기 전에는 한국판 일을 위한 행진곡을 들을 적이 없고, 2009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비디오 삽입곡으로 있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들었다고 한다. 이 한국방문은 장소익이 조직한 한강이라는 공동작품(민중연극)을 만드는 회의에 참여하였다.[110] 이 회의는 중국 뿐 아니라 대만, 홍콩, 한국과 함께 한 것으로 1개월간 공동 작품을 만드는 작업이었다.[111] 이어 광주 5.18 기념식

---

109) 2004년 1월, 구해근교수의 책을 번역하여 <한국공인: 계급형성적정치여문화>(사회과학문헌출판사)>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는데, 여기에 임을 위한 행진곡에 관한 소개가 실려 있다. 순헝은 아마도 노래 가사를 만들기 전에 이 책을 읽어보았을 것이다.

110) 아시아의 연극인들의 연대활동은 1991년 김명곤이 연출한 '아시아의 함성 Ⅰ'에 이어, 극단 `한강'의 연출가 장소익이 연출한 '아시아의 함성 Ⅱ'가 대표적이다. 이 작품은 한국을 비롯하여,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일본, 네팔, 대만, 홍콩 등 아태지역 10개국의 시인, 가수, 음악가, 무용가, 인형극 조정가, 배우, 연출가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 15명이 힘을 합쳐 만들어 낸 공연작품이다.

111) 신공인예술단을 초청한 극단한강 여름연극학교는 극단한강이 매년마다 개최하는 연극의 대중화(大衆化)을 위한 행사이다. 그동안 꾸준히 추구하고 연구해온 극단한강의 공동창작방법론을 통하여 연

에 참석하였다. 5.18기념 세계 노동자 극단 공연으로 민중연극 네트웍이라고 할 수 있다.

쉬두어는 임을 위한 행진곡과 관련하여 홍콩버전과 한국의 원곡이 비슷한 3/4박자이고, 중국버전은 대만버전과 비슷한 4/4박자라는 차이가 있으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빠르게 부르면 전투적이며, 이와 유사한 것이 대만버전이라는 것, 그리고 느리게 부르면 비장한 느낌을 준다고 설명하였는데, 그가 강조한 것은 노래와 율동의 결합이었다. 이들은 빌리와 마찬가지로, 임을 위한 행진곡의 특징을, 곡의 비장함이나 가사의 감동적 메시지 못지않게, 수행적 특징, 즉 노래와 율동(몸짓)의 결합에서 찾았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시위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행적 사건으로 각인되어 있고, 이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항상 역동적 율동과 함께 전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쉬두어는 이 노래를 부를 때 가장 큰 호응을 받았던 사례로, 심천의 애플 조립공장에서의 공연을 들었다. 이때 이들은 심천의 '중저음'이라는 밴드와 함께 공연을 하였는데, 관중들과 같이 율동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관중들과 혼연일체가 되는 느낌을 가졌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관중들의 반응은 일반적으로는 도시별 차이보다는 청중별 차이가 크다. 노동자들이 일반 시민들보다, 그리고 블루칼라층이 화이트칼라층보다, 산업노동자가 서비스노동자보다 호응이 큰데, 도시별로 보면 상해가 상대적으로 블루 칼라가 많아서 반응이 좋다고 한다. 그는 태국버전을 들은 적이 있는데, 동작은 동일한데 노래의 인상은 별로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노동자찬가는 2012년 새해맞이 행사에서 불렀고,[112] 2013년에는 춘만 축제를 북경의 '단중앙대예당'에서 거행하였다. 2014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14 打工春晚>(외지 출신 노동자 대상으로 한 설 축제 공연)에서 이 노래가 엔딩곡으로 선정되었다. 이 공연에서는 태국노동자밴드도 함께 하였는데, 태국판 임을 위한 행진곡인 '연대'는 한국의 멜로디와 같으며, 가사만 다르다.

순헝은 2008년 피촌에 신공인박물관을 개설하여 중국 농민공의 역사와 운동을 전시하였다. 농민공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다. 중국의 농민공들은 일하는 현지에서는 호구가 없으므로, 자녀들을 도시의 공립학교에 보낼 수 없다. 만약 호구가 없더라도, 충분히 돈이 있으면, 추가비용을 부담하면서 그의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만, 대부분의 농민공들은 돈이 없으므로 그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다. 따라서 농민공들이 집중되어 있는 대도시 근교에서 이들의 자녀교육은

극에 관심있는 일반인들과 함께 창작워크샵을 진행하였다. 이 모임의 기원은 1986년 대학의 연극반, 탈반 출신들이 모여 만든 민족극연구회 산하 극단 천지연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8년 2월 극단 '한강'이 창단되었다. 이들은 배우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창작 방식을 실험하였고, 1993년부터 그 방식을 과학화, 체계화시켜 극단 '한강'의 연극론으로 정립했다. 최근 많은 민중문화예술단체들이 그러하듯이 활동반경이 축소되었으나 현재 인천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작품으로는 창단 공연 <대결>을 비롯하여 <밝은 햇살>, <마지막 수업>, <골리앗 그보다 더 높이>, <노동자를 싣고가는 아홉대의 버스>, <한겨울밤의 꿈>, <산타 히로시마>, <잠적/토템>, <사람, 사물, 장소, 이념>, <청춘>, <나마스테>, <반쪽 날개로 날아온 새>, <노동자를 싣고가는 아홉대의 버스 2>, <교실이데아>, <산재>, <교실이데아 2>, <단장곡>, <교실 이데아 3>, <교실 이데아 - 꿈 이야기>, 연극 <전태일> 이 있다.

112) https://www.youtube.com/watch?v=vSUIj3Rp0fc&feature=fvst

심각한 도전거리였다. 순헝은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별도의 학교를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시도하였다. 순헝은 자신의 음반수입으로 피촌의 폐쇄된 공장을 75,000위안에 장기 임차하여 학교를 설립했다. 학교의 이름은 '동심'학교로 일종의 실험학교이며, 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500명에 달한다. 교사들은 초기에는 거의 무급 교사들이었으나 근래에는 유급 교사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북경의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이 학교 외에 피촌에서 15개의 소규모 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재활용 옷을 다루는 가게나 식당들이다. 이외에 청년예술단이 활동하고 있다. 북경 공우지가는 피촌 외에 평곡에도 비공식학교로서 노동자대학(공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생태농원을 가지고 있다. 미래에 이들은 공인합작사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합작사는 평등한 성원들로 구성되는 일종의 조합형 사회기업이다.

그러나 순헝의 노동자운동은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는 당국이나 폭력집단으로부터 상당한 압력이나 협박을 받기도 했다. 실제로 광조우-佛山 노동운동가들이 월급 체불에 대한 항의를 하였는데, 이 중 4명이 체포되어 투옥중이다.

5. 맺음말

노래의 국제화나 세계화는 원곡과 가사가 그대로 이식되는 방식, 원곡에 번역된 가사를 결합하여 재생산되는 방식, 그리고 원곡에 해당국의 맥락에 따라 만들어진 가사가 결합되어 새로운 노래로 탄생하는 방식 등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국제화나 세계화는 크게 보면, 한국의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에서는 원래의 곡과 가사 그대로 불리지만, 한국의 사회운동에 영향을 받았던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원래의 곡에 자신들의 맥락에 따라 번안된 가사를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확산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 노래의 국제화가 최초로 홍콩에서 학생운동의 연대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졌으며, '사랑의 출정(애적 정전)'이라는 노래가 여기에서 만들어졌다는 것, 1988년 대만의 노동운동의 맥락에서 '노동자전가'가 창작 방식으로, 그리고 2004년 중국의 노동운동의 맥락에서 '노동자찬가'가 창작 방식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이 세 가지 노래는 문화적 노동운동가들에 의해 독립적인 음반으로 만들어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전파와 확산경로를 보면, 아시아 여러 나라의 연대운동의 맥락에서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에 관심을 가진 인사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임을 위한 행진곡에 접하고 노래를 배워 귀국한 후 이를 악보로 옮기거나 음반을 가져가서 새롭게 가사를 만들고, 음반을 출시하는 경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중반에는 학생운동의 맥락에서 확산되었으나 1980년대 후반기부터 주로 노동운동의 맥락에서 확산되었다.

이 글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임을 위한 행진곡은 가장 가까운 일본에서는 1980년대부터 일본어로 번역되어 불렸지만(イムのための行進曲), 새롭게 창작되거나 노래가 음반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1980년대 후반, 대만에서 노동자전가가 만들어지던 비슷한 시기에 캄보디아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이 가사가 바뀌어 불려졌는데,[113] 캄보디아에서는 이 노래가 강제 퇴거에 반대하는 주민운동의 맥락에서 불려졌다. 1990년대에는 태국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에 태국어로 가사를 붙여 '연대(Solidarity)'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114] 태국 노동운동박물관의 노동자 밴드 파라돈(Paradon)이 이를 불렀다. 말레이시아에서도 말레이어와 중국어로 노동운동가로 만들어져 불려졌다.[115] 인도네시아에서도 불리는데, 홍콩을 경유했는지, 인도네시아를 경유했는지 불분명하나 홍콩의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이것이 불린다.[116] 이 노래는 자바를 기준으로 한 인도네시아 표준어인 바하사어로 만든 가사를 가지고 있다.[117]

북한에서는 어떤가? 1991년에 만들어진 '임을 위한 교향시'는 1980년 전남대 학생회장이었던 박관현을 다룬 영화로, 여기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들어있으나, 대중들이 이를 부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영화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들어 있다고 해서 이 노래에 대한 폄훼가 이루어졌다.

해외의 노동문화단체에서 일을 하거나 원곡에 새로운 가사를 만들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새롭게 만들어낸 사람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가장 큰 특징을 노랫말에서 찾기보다는 노래와 율동이 결합되면서 현지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것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국제화나 세계화는 한편으로는 문화적 텍스트의 확산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 등 한국의 사회운동의 역동성이 확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이 노래에 대해 이루어지는 비방이나 폄훼를 국제화나 세계화의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동아일보 기자 이정훈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북한민주화운동의 주제가로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광주민주화운동에만 붙잡아놓은 것은 너무 좁은 생각이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민주화시켰듯이, 북한 동포들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북한을 민주화시키게 해야 한다. 이 노래가 북한으로 들어가 북한의 젊은이들이 김씨 왕조의 폭압을 무너뜨리는 혁명가가 되게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민주화를 이야기하면서 북한 민주화를 이룰 노래 하나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큰 실책이다." (2014.4.16. http://blog.donga.com/

113) 1989.6.21. 한겨레신문, '동아시아에서 불리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기사를 볼 것.
114)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우리 안의 아시아 우리가 꿈꾸는 아시아』, 2008; www.youtube.com/watch?v=1jwUSFERdjc
115) http://utopia.e-channel.info/read.php?832
116) 홍콩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이주노동자가 약 25만명이 있다. 홍콩 인도네시아이주노동자연합(INWU)은 매주 일요일에 집회를 하는데, 이들은 종종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다.
117) 인도네시아 버전에 대한 문의는 fahmi@amrc.org.hk로 할 것.

milhoon/archives/3669)

이런 견해가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의 임을 위한 행진곡의 세계화는 현지의 필요에 의해 적절하게 변용되면서 이루어진 것이지, 한국의 사회운동단체의 주관적 의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캄보디아어로 번안되어 불리는 임을 위한 행진곡(youtube, 이몽)

임을 위한 헹진곡 타일랜드 버전(youtube, Solongman)

중국농민공이 부른 임을 위한 행진곡(youtube, Hankyor도 TV, 2012)

슬픈 영혼결혼식-'임을 위한 행진곡'을 아시나요(youtube, 5.18기념재단, 1982)

임을 위한 행진곡-어느 결혼식(youtube, 광주광역시, 2014)

노래를 찾는 사람들 3 (youtube, 1991)

뉴스타파 10회 목격자들 (youtube 임을 위한 행진곡)

서정민갑의 임을 위한 행진곡 (youtube, 2015.12.10.: 이화여대 한소리 1983)

5·18 기념재단 엮음, 2006, 『5·18 민중항쟁과 문학 예술』, 5·18기념재단.

5월문학총서간행위원회 편, 2013, 『희곡』, 5·18기념재단.

김보경. 2014.「누가 역사를 부인하는가: 5·18 과거청산 부인의 논리와 양상」, 김동춘.김명희 외. 『트라우마로 읽는 대한민국』. 역사비평사. 328-366.

김선출, 2001, 『5월의 문화예술 : 기원에서 5·18기념 사업까지』, 샘물.

김창남 편, 2004, 『대중음악과 노래운동, 그리고 청년문화』, 한울.

나간채 외, 2004, 『기억 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나간채 편, 1997, 『광주민중항쟁과 5월운동 연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노동은, 1989, 『민족음악의 이해』, 민족음악연구회.

노래를 찾는 사람들 엮음, 1993, 『노래를 찾는 사람들 : 반주·화성악보집』, 한길사.

문병란, 1985, 『아직은 슬퍼할 때가 아니다』, 풀빛.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편, 2007-2009, 『노래는 멀리 멀리』, 서울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박호재·임낙평, 2007(개정판), 『윤상원평전』, 풀빛.

백기완, 1985, 『이제 때는 왔다 : 백기완 시집』, 풀빛.

원톄쥔(김진공 옮김), 2013, 『백년의 급진 :중국의 현대를 성찰하다』, 파주 :돌베개.

이영미, 1993, 『노래이야기주머니』, 녹두.

전용호, 2015,「광주와 오월항쟁과 나병식」, 나병식선생추모문집편찬위원회, 『황토바람에 풀빛』, 풀빛.

전용호, 2015,「못 다 이룬 공동체의 꿈」, 『김영철유고모음 못 다 이룬 공동체의 꿈』, 5.18기념재단.

전용호, 2006,「윤상원 열사와 '님을 위한 행진곡'」,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편, 『광주이야기』.

정경은, 2008, 『한국 현대 민중가요사』, 서정시학.

정근식, 2015,「임을 위한 행진곡: 1980년대 비판적 감성의 대전환」, 『역사비평』112, 역사비평사. pp.252-277.

정근식, 2012,「한국의 근대와 사회적 감성으로서의 슬픔에 관하여」, 『감성연구』 5,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정근식. 2001.「청산과 복원으로서 5월운동」, 광주시 5·18사료편찬위원회. 『5·18민중항쟁사』. 653-679.

정근식·김종률, 2014,「5·18의 망각과 기억: 임을 위한 행진곡을 중심으로」, 한인섭 외,『한국현대사와 민주주의』, 경인문화사.

정유하, 2006,「5·18의례음악의 변화」, 정근식·나간채·박찬식 외,『항쟁의 기억과 문화적 재현』, 선인.

코헨, 스탠리(조효제 역). 2009.『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왜 국가와 사회는 인권침해를 부인하는가』. 파주: 창비.

테사, 모리스 스즈키(임성모 역). 2006.『우리 안의 과거』. 서울: 휴머니스트.

황석영, 2000,『장산곶매: 황석영 희곡전집』, 창작과 비평사.

陳幸嬋,“工人樂隊－黑手那卡西”,『電子報』047, 2011.11.2.

呂途, 2015,『中國新工人：文化與命運』, 北京: 法律出版社.

呂途 , 2013,『中國新工人：迷失與崛起』, 北京: 法律出版社

Asia Monitor Resource Centre, 2008, 30th Anniversary Proceedings: Labour Resurgence Under Globalization, AMRC.

Ecumenical Fact Finding Team, 1985, Report visit to Korea, Christian Conference of Asia, WSCF Asia/Pacific Region.

Guntis Smidchens, 2014, The Power of Song: Nonviolent National Culture in the Baltic Singing Revolu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임을 위한 행진곡의 세계화: 홍콩, 대만, 중국을 중심으로(정근식)’의 토론문

김병인(전남대 사학과)

본 발표에서 정근식교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세계화 과정을 현지 조사와 관련자 인터뷰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발표문의 대체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국제화나 세계화는, 한국의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미국、일본、독일 등에서는 원래의 곡과 가사 그대로 불렸고, 한국 사회운동에 영향을 받은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원래의 곡에 자신들의 맥락에 따라 번안된 가사를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확산되었다. 그 전파와 확산경로는, 아시아 여러 나라와의 연대운동의 맥락에서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에 관심을 가진 인사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접하고 노래를 배워 귀국한 후 이를 악보로 옮기거나 음반을 가져가서 새롭게 가사를 만들고, 음반을 출시하는 형태를 취했다. 시기적 특징으로는, 1980년대 중반에는 학생운동의 맥락에서, 1980년대 후반기부터는 노동운동의 맥락에서 확산되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세계화는 노랫말 자체보다는 노래와 율동을 결합시켜 현지의 사회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즉, 임을 위한 행진곡의 국제화나 세계화는 한편으로는 문화적 텍스트의 확산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 등 한국의 사회운동의 역동성이 확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교수님의 발표 내용은 다년간에 걸친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추가로 내용을 덧붙이거나 다른 설명을 하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다만 본 발표 내용이 금번 학술대회의 주제인 ‘5、18과 역사를 둘러싼 정치’와 제1섹션의 주제인 ‘5、18과 역사왜곡’이라는 전체적 논의 선상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논점 등에 관해서 몇 마디 첨언함으로써 토론문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학술대회와 섹션 주제에 맞춰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민주항쟁 기념행사 공식지정곡 제정과 관련된 제반 불협화음과 정치적 왜곡과 비방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은 어떠한 것인지 듣고자 합니다. 결론 부분에서 동아일보 기자의 발언을 제시한 까닭이 그것이 하나의 대안이라는 것인지 선생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특히 ‘임을 위한 행진곡’과 연관된 종복론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북한의 명절이나 국가기념일 중 설날(1월 1일)과 추석 그리고 3월 1일(반일인민봉기일)은 우리나라의 설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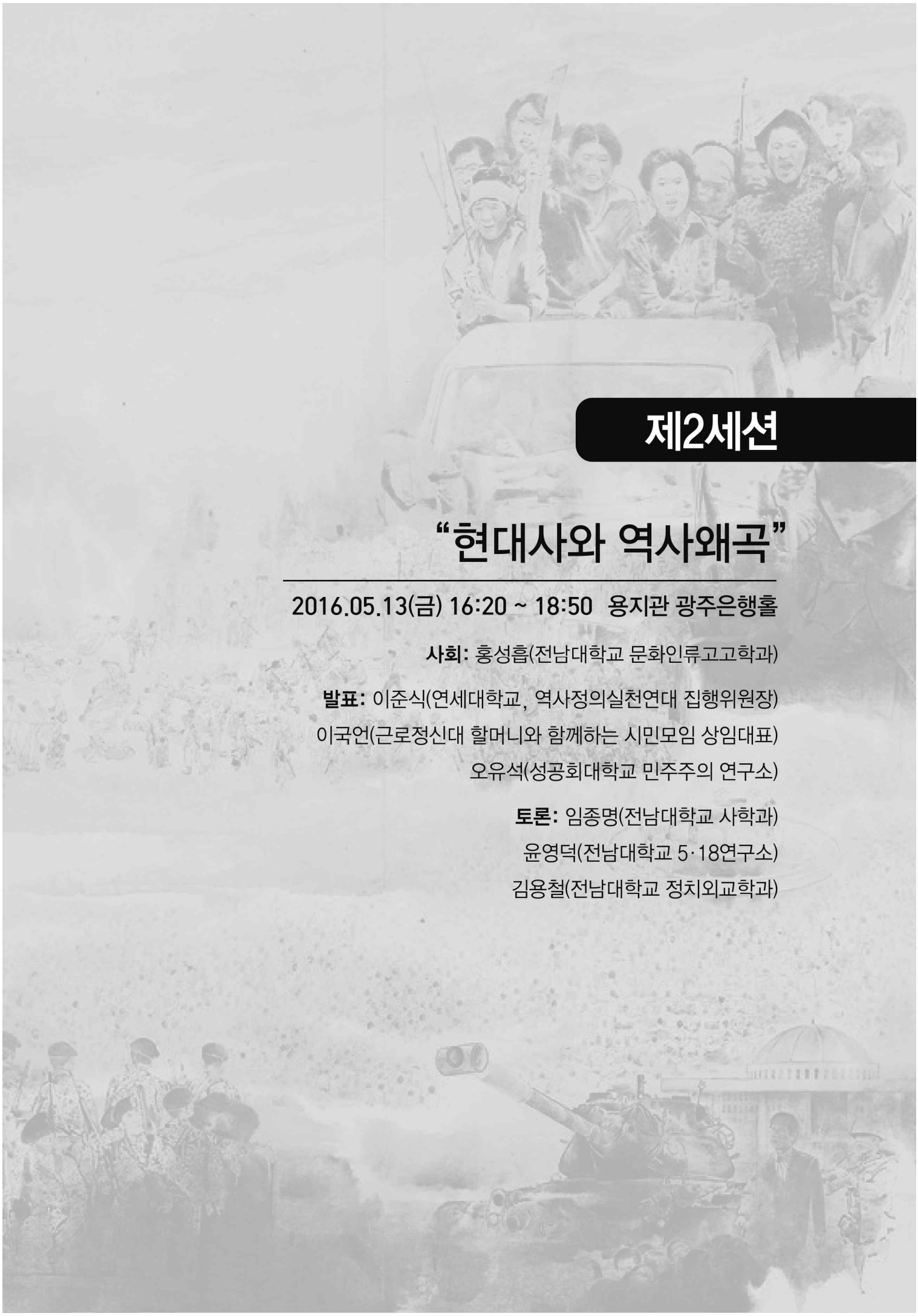
력 1월 1일)과 음력 추석 그리고 국경일 3·1절과 일치하며, 단오(5월 5일)는 같은 날이고 식수절(4월 6일)은 우리나라 식목일(4월 5일)과 하루 차이가 있을 뿐이며, 국제노동자절(5월 1일)은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같은 날이며, 광주학생사건기념일(11월 3일)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11월 3일)과 일치합니다. 또한 8월 15일은 해방기념일로 우리나라의 국경일 8·15 고아복절과 같다. 그렇다면 북한이 명절과 국경일 혹인 국가기념일로 삼고 있는 날 우리들이 똑같은 명목으로 그날을 기념한다면 그것도 종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종북론은 실상이 없고 허구적인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대처하면 할수록 논란만 증폭시킬 뿐입니다. 식민사관 중 복잡한 논리는 사라지지만, 고토 분지로(小藤文次郎)가 주장한 허황한 '토끼형국론'은 우리나라 지도를 호랑이 모양으로 그리는 '지리결정론'의 수용 양상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낳는 것과 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정당성의 불온화'라고 불 수 있는데, 이것은 지난 30년 동안 진행된 5·18과 관련된 제반 정치투쟁이 '불온의 정당화' 과정이었다는 사실과 비교하여 '역행' 혹은 '배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정치적·사회문화적 함의가 무엇인지 지혜를 구하고 싶습니다. 일당 2만원 빼고는 무엇 하나 얻을 것 없는 자들의 훼방과 비난의 궁극적 목적이 결국 반대세력을 종북으로 몰아가고 빨갱이 이미지 덧칠하는 데에 있다면, 국가에 의존한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화라는 테제에 갇히기보다는 '국민이 우위에 선 국가'로의 전환을 통해 제반 문제의 일괄타결이 더 빠르지 않을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즉, '임을 위한 행진곡'이 5월 운동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 운동적 수단 혹은 감성적 동원 기능을 수행하다가, 이제 5·18의 본질로 자리잡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훼손과 비방을 오직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화라는 제한된 범위에서 다루고 대처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 어버이연합 알바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5·18의 역사적 정당성을 부정하려는 세력은 마루야마 마사오의 『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에서 언급된, "일본 파시즘 지배체제에서 활약했던 정치적 인간상 '신을 모시는 가마', '관리', '무법자 혹은 낭인' 중 마지막에 해당한다고 볼 때, 그 형식적 서열의 상층부에 있는 '신의 가마'로서의 '권위 체계'를 허물지 않으면, 그 속에서 성장하려는 수많은 관리와 낭인의 출현을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화에 대한 제반 노력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전제하고, 여기에 덧붙여 보다 장기적 전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동양 역사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사회적 기능과 그것을 뛰어넘는 본질적 의미를 고려할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화와 세계화의 문제는 조급하게 다루기보다는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구조적 시스템의 형성과 정착이라는 부분에 더 고민했으면 하는 의미입니다. 노래는 종종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적·사상적 의도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은데, 백제 무왕과 관련된 '서동요(薯童謠), 신라시대 원효의 무애가(無导歌)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고려시대 예종은 재위 15년째 되던 해(1120) '도이장가(悼二將歌)'를 지어 신숭겸(申崇謙)과 김락(金洛) 두 장수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예종은 서경의 팔관회(八關會)에 참관하였을 때

허수아비 둘이 관복을 갖추어 입고 말에 앉아 뜰을 뛰어다녔는데, 이를 이상히 여긴 신료가 그 뜻을 물으니 좌우에서 “그 둘은 신숭겸과 김락(金樂)으로, 태조 왕건(王建)이 견훤(甄萱)과 싸우다가 궁지에 몰렸을 때 왕건을 대신해서 죽은 공신이다. 그래서 그 공을 높이고자 태조 때부터 팔관회에서 추모하는 행사를 벌였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는 얼핏 보면 예종이 고려태조를 도운 건국공신을 추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왕권강화책을 추진하기 위한 감성적 호소라는 정치적 배경이 자리잡고 있다. 즉, 예종이 개국공신과 북방족과의 전쟁에서 희생된 장수들 초상 앞에서 노래를 짓고 눈물을 흘리면서 추념하는 행위는 윤관을 통해 강력한 대여진정책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컸던 것이다. 그런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도이장가(悼二將歌)’ 항목을 검색하면, “이 작품에 표출된 미의식은 숭고(崇高)이다. 오로지 임(태조 왕건)을 온전하게 하겠다는 충성심이 하늘 끝까지 미쳤기에 두 공신의 장렬한 죽음은 값진 것이며, 죽음의 비극을 초월하여 숭고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의 죽음은 순간적인 것이나, 곧은 자취, 곧 충절은 영원한 것으로 하여 완전히 극복될 수 있다. 제작경위에서 알 수 있듯이, 팔관회와의 관련이나 주술제의적 측면, 제5행에 드러난 가상(假像)의 주술적 발언 등을 고려하면 이 작품은 특히 주술적 숭고미를 구현하고 있다. 아울러 영웅적 인물이 현실과 죽음을 초극하는 장엄한 행위는 인격적 숭고를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이 작품에는 인격적 숭고미도 동시에 표출되고 있다. 오늘날 전하는 것 가운데서 임금이 지은 가장 오래된 향가로, 제작연대와 제작경위가 밝혀져 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인 의의가 매우 크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오래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 ‘앞으로도 오래 지속될 미래에 대한 힘과 소망’을 믿음으로써 ‘문명’이 형성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계승하려는 ‘지성’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0년 초 겨울공화국 치하에서 공식적으로 슬퍼할 수 없는 누명쓴 폭도들 앞에서 숨죽여 부르다가, 점차 시위 대열에서, 광장의 추도식에서, 노동현장에서, 엠티에서, 선술집에서 숱하게 불리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공식성도 없었지만, 결국 그 ‘노래의 힘’이 5、18을 복권시켰습니다. 그 ‘위대한 노래의 힘’은 ‘도망간 자의 비겁함’과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을 자각시켰으며, 결국 우리를 이 땅의 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장엄한 ‘노래의 힘’을 여전히 믿는, 그리고 ‘역사의 힘’을 추동한 우리들이 여전히 이 나라의 주인일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은 보훈청장이 인정하는 공식지정곡이 아니라, 전국민의 지정곡이며 역사의 공식곡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며, 토론 말씀을 가름할까 합니다.



제2세션

“현대사와 역사왜곡”

2016.05.13(금) 16:20 ~ 18:50 용지관 광주은행홀

사회: 홍성흡(전남대학교 문화인류고고학과)

발표: 이준식(연세대학교, 역사정의실천연대 집행위원장)
이국언(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상임대표)
오유석(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 연구소)

토론: 임종명(전남대학교 사학과)
윤영덕(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김용철(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보수정권 이후 한국 근·현대사 왜곡의 실태와 분석

이준식(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1. 머리말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라는 말은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다. 역사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순서를 바꾸어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하고,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라는 말로 쓰기를 더 좋아한다. 모든 권력은 지나간 과거사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해석은 미래의 권력을 보장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보수세력 재집권 8년차를 넘긴 2016년 현재 대한민국은 조지 오웰의 경구가 딱 어울리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명박정권이 등장한 이래 지금까지 보수세력은 끊임없이 한국 근·현대사의 왜곡을 기도해 왔다. 물론 대부분의 기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국민(더 정확하게는 시민)의 역사의식이 보수정권의 근·현대사 왜곡을 쉽게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작년에 박근혜정권이 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밀어붙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태, 그리고 일본 아베정권과의 잘못된 일본군‘위안부’ 문제 협상 결과를 둘러싼 여론의 추이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둘 모두에서 박근혜정권이 잘못했다는 여론이 잘했다는 여론의 두 배 가까이 되었다.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 8년의 실정은 하나둘이 아니다. 잘한 것은 거의 보이지 않는데 못한 것은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따가운 비판을 받아 마땅한 것은 사람들의 기억을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변조하려는 시도였다.

이명박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뜬금없이 건국절 제정 움직임을 보이는가 하면 건국절 제정이 실패로 끝나자 뉴라이트의 역사인식을 그대로 담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급조해 뉴라이트정권이라는 비판을 자초했고 박근혜정권 이후에는 전교조와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 식민사관에 찌든 인물의 국사편찬위원장 임명과 국무총리 후보 지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일본군‘위안부’ 문제 엉터리 합의, 건국절 제정 움직임 재개 등 독립정신과 민주주의를 기

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작태가 연이어 벌어졌다.

여기서 밝혀둘 것이 있다. 이 발표의 제목은 '보수정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방향으로 근·현대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정권에 보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진정한 보수에 대한 모욕일 수도 있다. 우리는 일본의 아베정권을 극우정권이라고 하는데 아베정권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역사인식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명박정권이나 박근혜정권도 극우정권이라 불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에서는 보수정권이라고 쓸 것이다. 단 이때 보수는 쓰기는 '보수'로 쓰고 읽을 때는 극우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도 들어 있다는 것을 미리 밝힌다.

4·13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운동의 일환으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에 모인 여러 시민단체가 내세운 '기억과 심판'이라는 구호에는 역사왜곡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주권자들이 보수정권을 표로 심판해줄 것을 호소하자는 뜻이 감겨 있었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시계를 유신시대로 되돌리려는 무리를 투표로 철저하게 응징했다.

그러나 심판과 응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총선 직후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인 간담회에서 밝혔듯이 박근혜정권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일본 아베정권과의 일본군'위안부' 합의도 고수했다. 대통령의 뜻에만 충실하게 따르는 교육부장관은 예정대로 국정교과서 집필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니 보수정권의 역사왜곡은 현재진행형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발표에서는 보수정권이 어떻게 한국 근·현대사를 왜곡해 왔는지, 그리고 그러한 왜곡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2. 친일·독재의 근·현대사와 민주정부의 과거사청산

1987년 6월항쟁 이후 민주화운동이 거둔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과거사청산이다. 특히 이른바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는 임시이기는 했지만 특별위원회라는 형태로 여러 국가기구가 만들어져 길게는 100년 전, 짧게는 20년 전의 잘못된 역사를 정리하는 성과를 남겼다.[118)]

한국의 과거사문제는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지만 크게 보면 일제 식민통치가 남긴 과거사와 독재정권이 남긴 과거사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두 종류의 과거사가 사실상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데 한국 과거사문제의 특징이 있다. 실제로 독재정권의 과거사 문제는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정권에 의해 친일파청산이 좌초한 데서부터 비롯되었다.

---

118)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미완의 과거청산-성과와 쟁점 과제'라는 제목의 특집으로 『역사비평』, 93호, 2010에 실린 안병욱, 「한국 과거청산의 현황과 과제」; 정현백, 「글로벌 시각에서 본 과거청산의 의미」; 이준식, 「국가기구에 의한 친일청산의 역사적 의미」; 한성훈, 「과거청산과 민주주의 실현: 진실화해위원회 활동과 권고사항의 이행기 정의를 중심으로」; 안김정애, 「국가기관의 민주화와 과거사청산」 등을 볼 것.

해방공간에서 친일청산의 열기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뜨거웠다. 제헌헌법에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제101조)는 부칙조항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이 조항을 바탕으로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9월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10월에는 친일파에 대한 사법적 처리를 담당하는 반민족행위처벌특별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러한 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친일파청산에 반대한 것은 친일파, 그리고 친일파를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으려고 한 이승만세력밖에 없었다. 제헌헌법의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가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근거규정이 추가된 것에 대해 “누가 그것을 먼저 주장하고 나섰던지는 지금 기억이 없으나 그때의 정세로는 누구든지 그것을 주장하기만 하면 아무도 반대할 수 없었다”고 한 증언을 통해 당시 분위기의 일단을 짐작할 수 있다.[119]

그러나 한반도의 남쪽에 반공국가를 세우려고 한 미국의 지원을 업은 이승만정권에 의해 국가차원의 친일파청산은 무산되었다. 정부 수립 이후 친일파청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친일파와 그 비호세력에 의한 반대 움직임도 거세졌다.

이승만정권은 반민법이 제정될 때부터 반공을 위해서는 친일을 문제시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시종일관 친일청산에 반대했다.[120] 이승만대통령이 나서서 반민법과 반민특위의 활동을 부정했다. 친일경찰 출신을 앞세워 반민특위 간부에 대한 암살을 시도하다가 끝내는 무장경찰을 동원해 반민특위를 사실상 강제해산시켰다.[121] 그리고 6·25전쟁의 와중에 최종적으로 반민법을 폐지함으로써 친일파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애버렸다.

친일파는 반공을 내세워 한국의 기득권세력으로 다시 살아났다.[122] 이승만정권을 거쳐 박정희정권, 심지어 해방된 지 30년도 더 지나 출범한 전두환정권에 이르기까지 정치, 사법, 군, 경찰, 문화, 예술, 교육, 학술, 종교, 경제 등의 모든 분야에서 친일세력의 헤게모니는 확고했다. 친일파 헤게모니의 기반은 바로 독재권력에 대한 충성이었다. 독재권력은 자신을 지지할 세력이 절실하게 필요했고 친일파는 기꺼이 독재권력에 충성을 바침으로써 살아남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친일파청산의 실패는 단지 민족정기를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권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뒤 만성화된 부정부패, 이승만정권과 박정희정권 아래 이루어진 몇 차례의 사법살인으로 상징되는 인권탄압, 그리고 4·3사건·여순사건·한국전쟁 등에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123]의 뒤에는 모두 친일파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

119) 이강수, 『반민특위 연구』, 나남출판, 2003, 103쪽.
120) 임대식, 「반민법과 4·19, 5·16 이후 특별법 왜 좌절되었나」, 『역사비평』, 32호, 1996.
121) 자세한 내용은 이강수, 앞의 책; 허종,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친일파 청산, 그 좌절의 역사』, 선인, 2003 등을 볼 것.
122) 미군정기에서부터 박정희정권에 이르기까지 친일파가 어떻게 기득권을 유지했는지 그 실태를 표로 정리한 박수현, 「한국 민주화와 친일청산 문제」, 『기억과 전망』, 24권, 2011, 141~149쪽을 볼 것.
123)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학살을 주도한 전두환 등의 신군부는 친일파 출신은 아니지만 친일군인 박정희의 총애를 받으면서 군부의 실력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친일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지금 현재도 국방부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친일군인 미화 작업은 이를 이해하는 데 시사적이다.

독재정권의 기반은 친일파 출신의 관료·경찰·군인·지식인이었다.

이승만정권에서 자행된 3·15부정선거의 원흉은 대부분 일제강점 말기에 군수, 판사, 경찰, 군인, 은행원을 지낸 경력을 갖고 있었다.[124] 4·19혁명에 담긴 민주주의의 여망을 뒤엎고 5·16군사쿠데타를 일으킨 군인들 가운데 장성급 인사들은 모두 일본육군사관학교나 만주군관학교 출신으로 일제강점기에 이미 천황의 군대에서 장교생활을 시작했다는 경험을 갖고 있었다. 군사쿠데타 이후 들어선 박정희정권을 뒷받침한 관료와 이데올로그도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크고 작은 친일행위를 한 적이 있던 인물이었다.

그렇다면 결국 친일과 독재는 서로 분리된 두 개의 과거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과거사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친일파가 독재권력이거나 또는 독재권력의 하수인이었으며 친일의 논리와 독재의 논리도 다르지 않았다. 친일과 독재가 한 몸이라는 것이야말로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중요한 원리인 셈이다.

이승만정권 이후 군사독재정권에 이르기까지 친일과 독재의 역사 곧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나마 과거사청산의 물꼬가 트인 것은 1987년 6월항쟁 이후였다.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잘못된 과거사의 청산이 화두로 등장했다. 그 결과 1990년에는 광주보상법, 1995년에는 광주특별법, 1997년에는 거창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과거사청산이라기보다는 특정 지역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이 중심이었다.

진짜 청산다운 청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최초의 문민정부를 자처한 김영삼정권 때였다. 김영삼정권은 옛 조선총독부 청사를 철거하는 등 일제잔재 청산과 관련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더 중요한 것은 12·12사태(1979년)로 권력을 장악하고 1980년에는 형법상 내우외환의 죄와 군형법상 반란이적의 죄를 범한 자에 한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앤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2005년)을 만들어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전두환 등 신군부를 재판정에 세우는가 하면 종래 군사독재정권 아래 의거로 의미가 축소되어 있던 4·19를 혁명으로 격상시키고 거꾸로 박정희 등의 정치군인이 저지른 5·16을 혁명으로 부르던 것을 군사정변으로 격하시킨 것이다. 김영삼정권은 적어도 군사쿠데타와 그에 따른 군사독재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선을 그으면서 청산의 길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김영삼정권의 과거사청산은 여기까지가 한계였다. 과거사 전반에 걸친 청산작업은 민주정부의 출범 이후에 본격화되었다.

국민의 정부 시기이던 2000년에는 제주 4·3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제주4.3특별법,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해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이 각각 제정되었다. 2001년에는 광주유공자법도 제정되었다.

참여정부 시기이던 2004년부터는 과거사청산을 더욱 확고하게 하기 위해 특별법에 기반한 특별위원회 형태의 국가기구가 대거 출범했다. 2004년에는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원회,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

124) 이준식, 「3·15부정선거와 서대문형무소」, 『4·19혁명기 서대문형무소』, 서대문형무소역사관, 2013.

심의위원회, 2005년에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워회, 친일반민족행위신장규명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06년에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등이 꾸려졌다. 그러면서 친일파청산을 포함한 일제잔재 청산이 해방된 지 60년만에 국가차원에서 재개되었고, 정부 수립 이후 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학살과 인권탄압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도 추진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군, 국가정보원, 경찰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과거사를 청산하는 작업도 이루어졌다.

민주정부 아래 진행된 과거사청산은 분명히 한국 근·현대사의 질곡을 헤쳐 나가는 분수령이었다. 그러나 보수라고 쓰고 극우라고 읽어야 할 세력에게는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었다. 당연히 보수세력은 민주정부의 과거사청산을 불온하다고 간주했다. 과거사청산을 폄훼하고 좌절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보기가 2004년 3월 이후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정에서의 논란이다. 당시 국회 다수당이던 한나라당은 이 특별법을 형해화하기 위해 온힘을 쏟았다. 실제로 법안심의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주장에 의해 원안은 심하게 변질되었다. 친일청산을 호도하기 위해 독소조항이 새로 부가되었는가 하면 조사대상도 축소되었다. 그러나 원안 수정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장교 이상으로 되어 이던 군 관련 친일반민족행위 혐의자가 중좌 이상으로 제한되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한나라당의 실세이던 박근혜 의원의 아버지이자 한나라당의 정신적 지주이기도 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의식한 수정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친일파청산은 단지 하나의 보기일 뿐이다. 민주정부 이후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세력은 과거사청산에 집요하게 반대했다. 과거사청산은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뒤흔들려는 좌파의 음모라는 것이었다. 당연히 과거사청산의 배후에는 북한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반민규명법이 예상을 뒤엎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반대표를 던진 한나라당 김광원 의원은 “북 등의 멤버가 개입한 의혹이 있으니 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북은 배급을 실시하고 호적제를 없애면서 친일파 정리에 들어가 북 체제를 구축했고 남을 공격했다”라면서 “일련의 흐름이 북의 흐름 쪽으로 가고 있고, 북에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안에 반대한다”라고 주장했다.[125] 해방 이후에 이미 친일청산 반대논리의 핵심을 이루던 색깔론이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 조금도 가감 없이 재생되었다. 다른 과거사청산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것을 색깔론으로 덧칠하려는 데는 과거사청산이 곧 보수세력의 정통성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아직도 반공이 대한민국의 국시라고 굳게 믿으면서 친일청산이야말로 북한의 조종에 따른 것이라는 허황된 주장을 하는 극우세력, 일제의 식민통치와 독재가 한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강변하는 뉴라이트가 과거사청산을 비판하는 첨병 노릇을 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집안이 친일독재의 혐의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은 유력 보수신문 곧 ‘조중동’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

125) 방학진, 「친일특별법 제정과 그 파장」, 『민족21』, 37호, 2004, 94쪽.

3. 이명박정권과 근·현대사 왜곡의 초석 쌓기

2008년의 정권교체 이후 친일독재세력은 정권을 등에 업고 과거사청산에 대해 조직적인 반격을 시작했다. 실제로 과거사청산과 관련해 이명박정권 출범 이후 상식을 뒤집어엎는 희한한 일이 많이 벌어졌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몇 사례만 검토하기로 하자.

1) 이명박정권의 과거사 관련 위원회 폐지 방침과 건국절 제정 움직임

2007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이명박 당선자측에서 꾸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08년 1월 초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과거사청산에 줄곧 반대해 오던 보수정권 입장에서야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폐지가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상당수의 위원회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것이었다. 출범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폐지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론도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폐지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특히 친일청산 관련 위원회가 그러했다. 대다수의 국민은 뒤늦기는 했지만 국가가 나서서 친일청산을 하는 데 대해 찬성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친일청산을 그만두겠다는 데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다. 민간인학살과 관련된 위원회도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컸다. 결국 한나라당에서는 여러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겠다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진실화해위원회로 모든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통합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정부 조직 관련 주무 부서인 안전행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결국에는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대신에 이명박정권은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 활동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 폐지 방침 발표와 철회는 정권 초기 이명박정권의 과거사청산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폐지 방침이 오락가락 하는 사이에 보수세력에서는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 원년으로 삼자는 뉴라이트의 주장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126] 그 단초는 정권이 출범한 지 세 달만에 국무총리 산하에 대한민국 건국60년 기념사업회를 설치한 것이었다. 여기에는 보수인사와 뉴라이트세력이 대거 참여했다. 이명박정권 이전만 해도 정치권력 밖에서 변죽만 올리던 뉴라이트의 주장이 국가시책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명박정권이 발간한 『건국60년』이라는 홍보책자에는 "임시정부는 자국의 영토를 확정하고 국민을 확보한 가운데 국제적 승인을 바탕을 둔 독립국가를 대표한 것은 아니다. 실효적

126) '건국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신주백, 「정부수립과 한국근현대사 속에서 광복ㆍ건국의 연속과 단절」, 『한국근현대사연구』, 48, 2009 등을 볼 것.

지배를 통해 국가를 운영한 적도 없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실제 출발은 1948년 8월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보아야 한다.…대한민국을 건국한 공로는 1948년 8월 정부수립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공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적혀 있다.

독립운동 자리에 건국운동을 넣어야 한다는 뉴라이트의 주장이 그대로 담겨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독립운동과는 무관한 건국운동의 결과라는 반헌법적 발상이 정권에 의해 공식화된 것이다.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 등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는 내용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고 하는 사람들의 속내는 간단했다. 이들은 1945년 8월 15일의 광복을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정부 수립 곧 자신들이 말하는 '건국'을 끼워 넣으려고 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반공과 시장경제의 발전에서 찾으려고 했다. 대한민국정부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참여했더라도 반공과 시장경제의 발전에서 어긋나는 정치세력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에서 일탈한 존재로 보았다. 일제에 맞서 나라의 독립과 겨레의 해방을 위해 싸운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고 해방 이후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펼친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한다. 거꾸로 '건국' 이전에 친일을 했더라도 그리고 건국 이후 독재체제에서 어떤 인권탄압을 자행했더라고 반공과 시장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했다면 애국자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뉴라이트의 어떤 교수가 극단적으로는 친일파야말로 진정한 민족주의자이고 독립운동가 가운데는 사악한 민족주의자도 있었다는 식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127] 독재도 마찬가지이다. 이승만의 독재가 있었기에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무너지지 않았고 박정희의 독재가 있었기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놀라운 경제성장이 있었으니 독재는 더 이상 비난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명박정권이 광복이 아니라 건국을 기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자 반대여론이 비등했다. 광복회 등 독립운동가 단체들도 반대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이명박정권은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건국절 제정 움직임을 취소했다.

2) 뉴라이트의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이명박 정권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포럼에서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이하 대안교과서)를 출간했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2002년부터 기존의 고등학교 국사에서 분리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대안을 자처했다. 뉴라이트에 따르면 기존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좌경 교과서라는 것이었다. 대안교과서의 필자들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127) 박효종, 「'편협한 민족주의'에 근거한 독립운동사를 비판한다」, 『철학과 현실』, 67, 2005.

성공의 역사'와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할 것을 교과서를 통해 국민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128]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일본제국주의의 수탈과 억압은 과장되었거나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일제는 조선인을 경제외적으로 수탈한 바가 없다. 일제는 자본주의 교환관계에 의해 경제활동을 전개했을 뿐이다.
- 식민지시기는 제국주의와 함께 들어온 서양 근대문명을 학습하고 축적한 시기였다. 특히 일제는 토지조사사업 등 근대적 소유관계에 입각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켰고 각종 근대 제도를 도입하고 물적 인프라스트럭처를 확충했는가 하면 교육기관을 확대해 근대교육을 받은 인적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했다. 조선인들은 일제 식민통치에 참여함으로써, '근대국가 운영의 경험과 능력'을 축적했고, 이는 해방 후 국가운영에 도움이 되었다.
- 일제의 근대화 시책과 식민지시기 한국인의 근대적 역량 구축은 해방 후 한국 고도경제성장의 역사적 기반이 되었다.
- 이승만 대통령은 자본주의를 선택하는 결단을 내림으로써 대한민국의 운명의 나침반을 돌려놓은 건국의 아버지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친일파나 독재자로서가 아니라, 조국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오늘날 대한민국이 선진자본주의국가로 진입하는 데 결정적으로 이바지한 '근대화 혁명가'로 기념되어야 한다.
- 산업화 없이 민주화는 가능하지 않다. 산업화시기 민주화운동으로 자처한 좌파의 발호는 오히려 산업화의 걸림돌이 되었다. 산업화가 성공함으로써 중산층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의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우리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날은 대한민국을 건국한 1948년 8월 15일이며, 이날을 광복절 대신 건국절로 추가 지정해 대대적으로 기념해야 한다.

대안교과서는 일제 식민통치를 미화하고 더 나아가 친일파를 옹호하는 책,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책, 이승만정권과 박정희정권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 역사학계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접한 책으로 평가했다.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였다. 일본 극우세력이 펴낸 후소샤 교과서에 빗대 '한국판 후쇼사 교과서'라는 평가마저 나왔다.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책을 부교재로라도 쓸 역사교사는 없었다. 당연히 학교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그렇지만 대안교과서 배후에는 한나라당, 보수언론, 재벌이 있었다. 전경련은 대량구입과 배포를 통해 대안교과서를 적극 후원했다. 『조선일보』는 "대안교과서 출간으로 좌편향 사관이 독주하던 역사교육 시장의 균형을 맞추는 첫 걸음을 겨우 떼게 된 셈이다"라고 주장했다.[129]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던 박근혜 의원이 같은 해 5월 열린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역사적 쾌거라는 취지의 축사를 한

128) 이하의 내용은 대안교과서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주는 따로 달지 않는다.
129) 『조선일보』, 2008년 3월 25일자 사설.

것이다. 실제로 뉴라이트가 만든 대안교과서는 이후 보수세력이 근·현대사 왜곡작업을 벌이는 데 하나의 지침이 되었다.

3) 공영방송을 통한 친일·독재세력 미화[130]

독립운동과 민주화보다는 친일과 독재를 긍정적으로 보자는 뉴라이트의 황당한 주장은 이명박정권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일부 정신없는 사람들이 하는 헛소리 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보수정권 이후 뉴라이트 뒤에는 권력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조중동'이라는 보수언론도 있었다. 이명박정권 이후에는 공영방송 KBS마저 친일파와 독재자를 미화하는 데 팔을 걷어붙였다. 2011년 6월 친일군인 백선엽을 찬양하는 다큐멘타리를 방송했는가 하면 같은 해 9월에는 독재자 이승만을 미화하는 다큐멘타리도 방송했다. 뉴라이트가 친일과 독재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군불을 지핀 게 보수정권의 힘을 업고 국민의 소유인 전파를 타고 역사를 왜곡하는 커다란 불길이 된 것이다.

백선엽 다큐멘타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백선엽의 이력에서 치명타라고 할 수 있는 간도특설대 부분을 과감하게 생략한 것이다. 간도특설대는 "조선인 항일세력은 조선인의 손으로 잡는다"는 목표 아래 친일파를 앞세워 만든 악명 높은 부대였다.[131] 그랬기 때문에 국가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규명위원회는 "항일무장세력에 대한 탄압활동과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백선엽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바 있다.[132] 그런데 입만 열면 국가정체성 운운하는 사람들이 국가기구의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백선엽에게 내려진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규정을 형해화하려는 데는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백선엽이 만주군의 장교이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만주군 장교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바로 박정희이다.

이승만도 마찬가지이다. 이승만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사실상 일단락되었다.[133] 비록 한때 독립운동가로 활동했고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통령과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서 두 번이나 쫓겨난 경력을 갖고 있을 정도로 공 이상의 과가 있다는 평가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도 KBS가 총대를 메고 보수신문이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승만 살리기 프로젝트가 진행된 데는 숨은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친

130) 여기에 대해서는 박한용, 「KBS의 이승만, 백선엽 특집 다큐멘터리 놀음」, 『시민과 언론』, 94, 2011; 이준식, 「그들은 왜 친일파와 독재자를 불러내나」, 『시민과 언론』, 94, 2011 등을 볼 것.

131) 간도특설대에 대해서는 김효순, 『간도특설대』, 서해문집, 2014; 김주용, 『만주지역 친일단체』, 역사공간, 2014 등을 볼 것.

132)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Ⅳ-7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2009, 820-835쪽.

133) 이승만에 대해서는 서중석, 『이승만과 제1공화국』, 역사비평사, 2007; 정병준, 『우남 이승만 연구』, 역사비평사, 2005 등을 볼 것.

일과 독재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바꾸자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현대사에서 친일파 출신의 독재자라고 하면 바로 연상되는 사람이 있다. 바로 박정희이다.[134]

뉴라이트, KBS, 보수신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백선엽.이승만의 역사적 재평가 작업이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게 박정희 재평가라는 사실을 짐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 정확하게는 박정희의 후손으로 당시 많은 사람이 다음 대통령으로 여기고 있던 박근혜의 정치적 행보로 직결되는 것이었다.

4) 한국사교과서 집필기준 수정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2011년은 많은 역사왜곡 시도가 자행된 해였다. 이 무렵이면 시민사회와 국가가 진행하고 있던 과거사청산 작업이 일단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친일과 독재세력에 대한 미화도 전방위로 전개되었다.[135] 친일·독재세력 미화는 이제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이명박정권은 역사교과서 개악에도 나섰다. 뉴라이트는 2011년 5월 한국현대사학회라는 단체를 만든 뒤 7월에는 교과서 개편 건의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136] 건의안의 토대는 현대사학회의 전신이기도 한 교과서포럼이 펴낸 대안교과서였다. 현대사학회의 건의 가운데는 '강제병합 이후 일제에 의한 근대제도의 이식과 우리 민족의 수용'을 역사교육과정에 명기하자고 주장도 포함되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역사교육에 반영하자는 것이었다.

이명박정권은 현대사학회의 17개 요구안 가운데 10개를 수용했다.[137] 2012년에 사용될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은 2011년 4월에 이미 완료되었다. 그런데 교육부는 뒤늦게 현대사학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8월 9일 장관의 '행정고시' 형태로 집필기준을 수정했다. 그러자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가 발칵 뒤집혔다. 논란 끝에 수정안의 상당 부분은 철회되었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기존의 용어 대신, 독재를 정당화하고 반공주의와 같은 의미로 통용되어 온 '자유민주주의'를 쓰도록 한 것만은 끝내 관철되었다. 보수세력이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한 이유는 분명했다. 이들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구분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인민민주주의' 곧 북한체제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몰아붙이려는 색깔론의 한 변형이었다. 보수세력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에 기초해 학문과 사상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고전적 의미의 자유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뉴라이트인 권희영이 밝혔듯이 '반공 자유민주주의'가 이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였다. 보

134) 이준식, 「박정희의 식민지체험과 박정희시대의 기원」, 『역사비평』, 89, 2009.
135) 자세한 내용은 김승은, 「이명박 정권 이후 보수세력의 역사왜곡」, 『내일을 여는 역사』, 52, 2013 등을 볼 것.
136) 「뉴라이트는 왜 8년만에 몰락하게 됐나」, 『주간경향』, 983호, 2012/
137)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의 개악 과정 및 그 의미에 대해서는 오수창, 「2011 역사 교육과정과 '자유민주주의'의 현실」, 『역사와 현실』, 81, 2011; 이인재, 「역대 대한민국 헌법의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82, 2011 등을 볼 것.

수세력은 자유민주주의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이승만과 박정희를 '국부'라거나 '민족지도자'로 칭송하고 동상까지 세운 반면에 조국의 자유독립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나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헌신한 민주화운동세력을 부정하는 전도된 역사인식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이승만과 박정희 등 독재세력을 대한민국 성공신화를 이끌어낸 산업화 주역으로 부활시키려고 했다. 민주화 항목에서는 이승만·박정희의 독재 관련 서술을 약화시키는 반면에 산업화(또는 근대화) 항목에서 이승만·박정희의 치적을 최대한 강조해 대한민국 건국과 근대화의 아버지로 치장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시 이는 산업화의 성과가 축적됨으로써 비로소 중산층이 주도하는 민주주의사회가 성취되었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이어진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독재자야말로 민주화의 주역이었다는 뉴라이트의 해괴한 논리가 그대로 반영된 집필기준인 셈이다.[138] 결국 이명박정권은 2011년 12월 30일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 그리고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의 주장이 일부 관철된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새로 확정했다.

교과서문제가 보수세력의 주장대로 일단락되자 이명박정권은 국가폭력으로 저질러진 역사범죄를 은폐하고 역사범죄자들을 미화하는 역사인식을 미래세대에게 심기 위해 '현대사박물관'을 기획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월 15일 '광복절 및 건국 60년' 경축사에서 건국사 60년을 "성공의 역사, 발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로 평가하면서 현대사박물관을 세우겠다고 공표했다. 박물관의 이름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정해진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명박정권이 구상한 현대사박물관은 뉴라이트의 주장을 충실하게 반영한 '건국'박물관이었다.[139] 그래서 처음에는 1948년 8월 15일 이후의 역사만을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이었다. 당연히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이명박정권은 어쩔 수 없이 개항 이후의 역사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방식으로 전시계획을 바꾸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퇴임 시기에 맞춰 우여곡절 끝에 개관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여전히 큰 한계를 안고 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과정에서 이미 폐쇄성, 비민주성, 비전문성이 지적되었다. 특히 내용면에서는 뉴라이트 시각의 편향성이 지적되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체제만을 강조한 나머지 헌법이 대한민국의 기본 정신으로 인정한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이 의도적으로 축소되었고 역시 헌법이 대한민국의 기본 정신으로 인정한 평화통일도 간과되었다.

---

138) 박한용, 「우리 내부의 역사갈등과 과제」, 『한민족연구』, 12, 2012.

139)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대해서는 이동기, 「현대사박물관, 어떻게 만들 것인가?-'독일연방공화국역사의 집'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건립 과정 비교」, 『역사비평』, 96, 2011; 이동기·홍석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사업 비판과 정책 대안」, 『역사비평』, 99, 2012; 김성보, 「성찰이 결여된 '역사인식 보수대연합'의 공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역사비평』, 103, 2013; 이기훈, 「굴절된 시각과 부족한 준비-'역사' 없는 역사박물관, 제1전시실(1945년 이전)」, 『역사비평』, 103, 2013; 양점심, 「반쪽의 역사 보여주기-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2전시실(1945~1960)」, 『역사비평』, 103, 2013; 김아람, 「성장신화에 갇힌 박물관-제3, 4전시실(1961년 이후)」, 『역사비평』, 104, 2013 등을 볼 것.

그나마 역사학계와 시민사회의 비판 때문에 보강된 독립운동 관련 전시는 일관성도 내용도 없는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민주화' 관련 전시는 정치적 민주화에만 국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산업화의 결과로 묘사되는 등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건립은 학생들이 보수세력의 입맛대로 수정된 교과서에 담긴 내용을 첨단시설로 무장한 박물관 현장학습을 통해 입체적으로 인식하고, 영화나 방송으로도 재학습하는 순환고리의 완성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한 복판에 떡 하니 자리잡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학생 더 나아가서는 일반시민에게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전도된 역사인식을 심어주는 학습공간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는 것이다.

4. 박근혜정권과 근·현대사 왜곡의 본격화

이명박정권은 뉴라이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양한 형태로 근·현대사 왜곡을 기도했다. 그러나 정작 상당 부분에서 의도를 관철하는 데 실패했다. 정권 초기 야심차게 밀어붙인 건국절 제정의 좌절이 대표적인 보기이다. 실제로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정권이었지만 이승만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형식적 민주주의마저 포기하지는 않았고 그나마 여론의 동향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역사왜곡을 밀어붙이지는 못했다. 어쩌면 이명박정권의 최대 관심사는 대운하사업의 변형의 4대강사업을 통해 막대한 사익을 챙기는 데 있었기 때문에 역사왜곡을 본격적으로 강행하지 못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면서도 이명박정권 5년 동안 보수세력은 온라인 미디어를 비롯해 다양한 매체를 장악함으로써 향후 본격적인 역사왜곡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이명박정권에 이어 등장한 박근혜정권은 초기부터 강력하게 역사왜곡 작업을 벌이기 시작했다.

1)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사태

2013년 8월 말 '교학사 교과서' 사태가 일어났다.[140] 뉴라이트가 주도한 교학사 '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의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다른 교과서에 비해 2~3배의 오류를 지적당했다. 정상적으로는 도저히 검정을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박근혜정권이 기도한 역사쿠데타의 총대를 멘 국사편찬위원회가 '봐주기' 검정을 함으

140) 교학사 교과서 사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글이 나와 있다. 여러 글 가운데서도 이준식, 「한국 역사 교과서인가, 아니면 일본 역사 교과서인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일제강점기 서술 비판」, 『역사비평』, 105(2013); 지수걸, 「교학사판 『한국사』의 논리와 책략」, 『역사비평』, 105(2013); 홍석률, 「냉전적 역사 서술과 상처받은 자유주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현대사 서술 비판」, 『역사비평』, 105(2013) 등을 볼 것.

로써 교과서라는 이름을 붙이기 민망한 잡서(雜書)가 검정을 통과할 수 있었다. 당연히 검정을 통과한 뒤에도 수많은 오류, 그것도 단순한 오류가 아닌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었다. 그러니 도저히 교육현장에서 쓸 수 없는 '쓰레기 교과서'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자 박근혜정권이 직접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에 나섰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교학사 교과서의 대변인이라도 된 것처럼 교학사 교과서만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맞는 교과서라고 목청을 높였다.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을 취소하는 대신에 다른 7종의 검정 통과 교과서에 대해 '좌편향'이라는 혐의를 씌워 교학사 교과서와 한데 묶어 수정지시를 내렸다.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는 교육현장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2014년 2월까지 전국 고등학교 학교 가운데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 교학사 교과서가 워낙 수준 이하였기 때문이다.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과정부터 시작해 교육부가 마지막으로 수정승인을 내릴 때까지 확인된 교학사 교과서의 수정 건수만 해도 3000건에 이른다. 게다가 수정되지 않고 남은 오류도 최소한 500건 정도가 된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역사인식의 오류이다. 일제 식민통치·친일·독재 미화가 바로 그것이다. 친일문제만 보기로 들어보자. 교학사 교과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하나의 상식처럼 받아들여지는 친일과 반일의 논의를 뒤집으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학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자 필자들과 뉴라이트 단체들이 2013년 9월 17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회견에서 대표 필자인 권희영은 한국사회가 지나치게 친일 대 반일의 구도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하면서,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다른 교과서들이 모두 반일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야말로 심각한 문제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141] 그러나 이는 뒤집어 이야기하면 교학사 교과서가 반일을 뛰어넘어 친일의 입장에서 서술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면서 권희영은 예의 '좌편향' 주장을 들고 나왔다. 교과서를 반일의 시각에서 쓰는 것은 좌편향이라는 것이다. 해방 직후 친일파들이 살아남기 위해 써먹던 '친일=반공=애국, 반일=용공=매국' 논리가 권희영과 뉴라이트에 의해 되살아난 셈이다.

2)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년 여름에 발표된 2015 역사과 교육과정과 이후 작업이 진행되던 집필기준(안)에서 근·현대사의 축소, 독립운동사의 왜곡·폄하 등 뉴라이트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박근혜정권에 의한 역사교육의 퇴행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2015 역사과 교육과정에서 전광석화처럼 2009 교육과정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꾸기도 했다. 사실상 국정화에 준하는 이런 조치만 갖고도 부족했는지 박근혜정권은 기어이 2015년 말에 국정제를 강행했다.

141) 『경향신문』, 2013년 9월 18일.

국정제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국정제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세계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 교과서 발행제도이다. 그런데도 박근혜정권은 국정제를 강행하려고 한다.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켜서 교과서 시장을 석권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 실패로 끝나자 박근혜정권은 국정제를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처음 국정제 이야기를 꺼낼 때만 해도 교육문제에 민감한 학부형을 끌어들이기 위해 한국사가 수능 필수가 되었으니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 권의 교과서로 역사 교과서를 단일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 논리대로 한다면 수능시험의 필수과목이 된 지 오래인 영어나 수학은 일찌감치 국정 교과서를 써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영어 교과서와 수학 교과서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검정교과서 내지는 인정교과서이다. 결국 수능시험 때문에 한국사 국정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무런 설득력도 없는 궤변일 뿐이다. 실제로 교육부의 궤변에 대해 현장의 역사교사들은 검정제 교과서에 나오는 공통 사항을 중심으로 역사를 배우는 것이 학습 부담도 줄이고 수능시험에도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방식이라는 반론을 폈다. 역사교육계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반론 제기의 결과 국정제를 둘러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정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학부형들이라고 한다. 이는 대학 입시를 국정제 강행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박근혜정권의 시도가 사실상 실패로 끝났음을 보여준다.

수능 때문에 단일 교과서 곧 국정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검정 교과서는 사실의 오류가 많은 교과서이고 국정 교과서야말로 사실의 오류가 없는 교과서라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국정 교과서야말로 무오류라는 황당한 주장은 역사학과 역사교육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은 정반대이다. 과거에 나온 중·고등학교 국정 교과서와 현재도 쓰이고 있는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가 이를 잘 보여준다.

먼저 유신체제 때의 국정 교과서나 전두환정권 때의 국정 교과서를 보면 역사적 사실의 오류가 넘쳐난다. 한 가지 보기만 들어보자.

유신체제의 고등학교 국사 국정 교과서는 5단원 1장 1절 ‘대한민국의 성립’에서 대한민국 성립 배경으로 광복군의 항전을 들면서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대한 민국 임시 정부의 김 구, 김 규식, 김 원봉, 지 청천 등은 만주와 시베리아에서 항쟁하던 독립군과 중국 대륙에 흩어져 있던 한국 청년을 모아, 광복군과 조선 의용대를 편성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한 항일전을 전개하였다. 그 뒤 임시 정부는 중국 국민당 정부와 더불어 충칭으로 옮기면서”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 삽입된 이 서술은 완전히 엉터리이다. 한국광복군이 출범한 것은 중일전쟁 발발 이후 3년이나 지난 1940년 9월이다. 당시 김규식과 김원봉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 김원봉이 조선의용대 조직을 주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선의용대 자체는 애초에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무관했다. 더욱이 이 서술만 놓고 보면 마치 광복군이 출범한 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중국국

민당 정부와 함께 충칭으로 옮겨간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국민당 정부가 먼저 충칭으로 임시 수도를 옮긴 뒤 대한민국임시정부도 따라서 간 것이고 충칭에서 한국광복군을 출범시켰다. 역사에서 선후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당연히 이 교과서를 갖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앞뒤가 마구 섞인 엉터리 역사를 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사실은 이 교과서가 나올 당시 다 밝혀져 있었다는 점이다. 교과서 필자라고 이를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엉터리 서술이 버젓이 실린 것이 바로 국정교과서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전두환 정권이 발행한 1982년 판 교과서에도 비슷한 오류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임시 정부의 김 구, 김 규식, 김 원봉, 지 청천 등은 만주와 시베리아에서 항쟁하던 신흥 무관 학교 출신의 독립군과 중국 대륙에 산재해서 독립 운동에 종사하던 한국 청년을 모아 충칭에서 광복군을 창설하였다(1940). 이보다 앞서 김 원봉의 조선 혁명당 쪽에서 조선 의용대를 결성하여(1938) 중국 각지에서 항일 전쟁을 전개하고 있었다”라는 서술은 1979년 판에 비해 한층 사실에 부합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여전히 김규식, 김원봉이 한국광복군을 만들 때 관여한 것처럼 서술한 것은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는 새로운 오류가 추가되었다. ‘김 원봉의 조선 혁명당’이라는 서술이 바로 그것이다. 김원봉 등이 만든 조직은 조선혁명당이 아니라 (조선)민족혁명당이다. 이는 국정 교과서라면 있을 수가 없는 오류이다. 이처럼 단순한 사실 관계에서도 오류 투성이인 교과서를 어떻게 국정이라는 이름으로 학생과 교사에게 강요할 수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다.

앞에 예시한 것은 몇 십 년 전의 교과서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일부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2015년 1학기에 이미 배운 초등학교 6-1 실험본 사회 교과서(이하 실험본)와 2016년에 전국 초등학교에 보급된 초등학교 6-1 사회 교과서(이하 보급본)가 ‘국정교과서=무오류 교과서’라는 환상을 깨뜨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실험본 106쪽에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이라는 제목 아래 초기 임시정부의 지도자들을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리 안창호, 군무총리 이동휘’라고 소개하는 대목이 나온다. 임시청부가 초창기에 트로이카 체제도 아니었는데 내무총리, 군무총리라는 직책은 어색하기 짝이 없다. ‘내무총장 안창호, 군무총장 이동휘’라고 쓰는 것이 맞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현행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라도 학생들에게 올바로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있지도 않았던 내무총리, 군무총리를 학생들에게 외우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국정 교과서의 실체이다.

실험본 114쪽에는 1929년 11월 3일부터 일어난 광주항일학생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 학생으로 산다는 것

1929년 10월에 목포로 가는 기차가 나주역에 도착하였다. 일본인 남학생들이 한국인 여학생의 머리채를 당기며 희롱하기 시작하였다. 이 모습을 본 박준채 학생은 일본인 학생을 때렸고, 곧바로 한일 학생들 사이의 패싸움이 시작되었다.

▲ 광주 학생 운동을 이끈 학생들

그러나 일본 순사들이 박준채를 비롯한 한국인 학생들만 체포하고 불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하였다. 분노한 광주 시내 학생들은 동맹 휴업과 항일 시위에 나섰다. 일제는 광주 시내의 모든 중등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고 시위에 가담한 학생들을 잡아 구속하였다.

부당한 일제의 탄압에 광주에서 시작된 항일 학생 운동은 온 나라에 퍼져 나갔다.

황당하다. 광주항일학생운동의 발단이 된 나주에서의 충돌 사건을 패싸움이라고 서술하는 것부터가 그렇다. 나주에서의 충돌 사건이 10월 30일에 일어났는데 11월 3일 이전에 한국인 학생들에 대한 체포와 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11월 3일 광주의 학생들이 시위를 일으켰다는 대목에서는 어처구니없는 웃음만 나온다. 무슨 즉결재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3-4일 사이에 체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인가? 11월 3일 이전에는 체포된 학생도 재판에 회부된 학생도 없었다. '광주 학생 운동을 이끈 학생들'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사진의 학생들은 1929년의 학생들이 아니라 1926년에 성진회라는 학생 비밀결사를 만든 광주고보, 광주사범학교, 광주농업학교의 학생들로 1929년에는 이미 대부분 학교를 졸업한 상태였는데도 마치 1929년 광주항일학생운동의 주역인 것처럼 거짓 서술을 하고 있다.

사진 이야기가 나왔으니 좀 더 예시를 해 보자. 101쪽과 105쪽에는 3·1운동과 관련된 두 개의 사진이 실려 있다. 101쪽의 사진은 3·1운동 당시 수천 명의 시위군중을 학살한 일제 헌병경찰의 모습인데 아무리 보아도 우리가 아는 헌병경찰의 모습이 아니어서 어색하기 짝이 없다. 자세히 보면 경찰 옆에 어깨띠를 한 민간인의 모습이 보인다. 그렇다 이 사진은 해방 이후 시위대를 검거하는 대한민국(또는 미군정) 경찰 사진이다. 105쪽의 사진에는 '3·1운동 당시 만세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역시 이상하다. 당시 여학생의 복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사진의 주인공은 여학생이 아니라 기생이다. 3·1운동 당시 기생들도 여러 지역에서 만세시위에 참여했는데 이 사진은 그런 기생들의 모습을 찍은 것이다. 그런데 버젓이 여학생 만세 시위 모습이라는 거짓 설명을 한 것이다.

◀ 헌병 경찰
시위 참가자를 체포하는
헌병 경찰

▲ 3·1 운동 당시 만세 운동을 하는 학생들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실험본에서는 수백 개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당연히 교육부는 발칵 뒤집어졌다. 그런 가운데 보급본을 분석한 역사교육연대회의가 공개하지 않은 내부 보고서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보고서에서 지적한 오류를 보급본에서는 거의 대부분 삭제했다. 다만 한 가지 지적 사항은 끝내 보급본에도 반영하지 않았는데 아래에서 다시 이야기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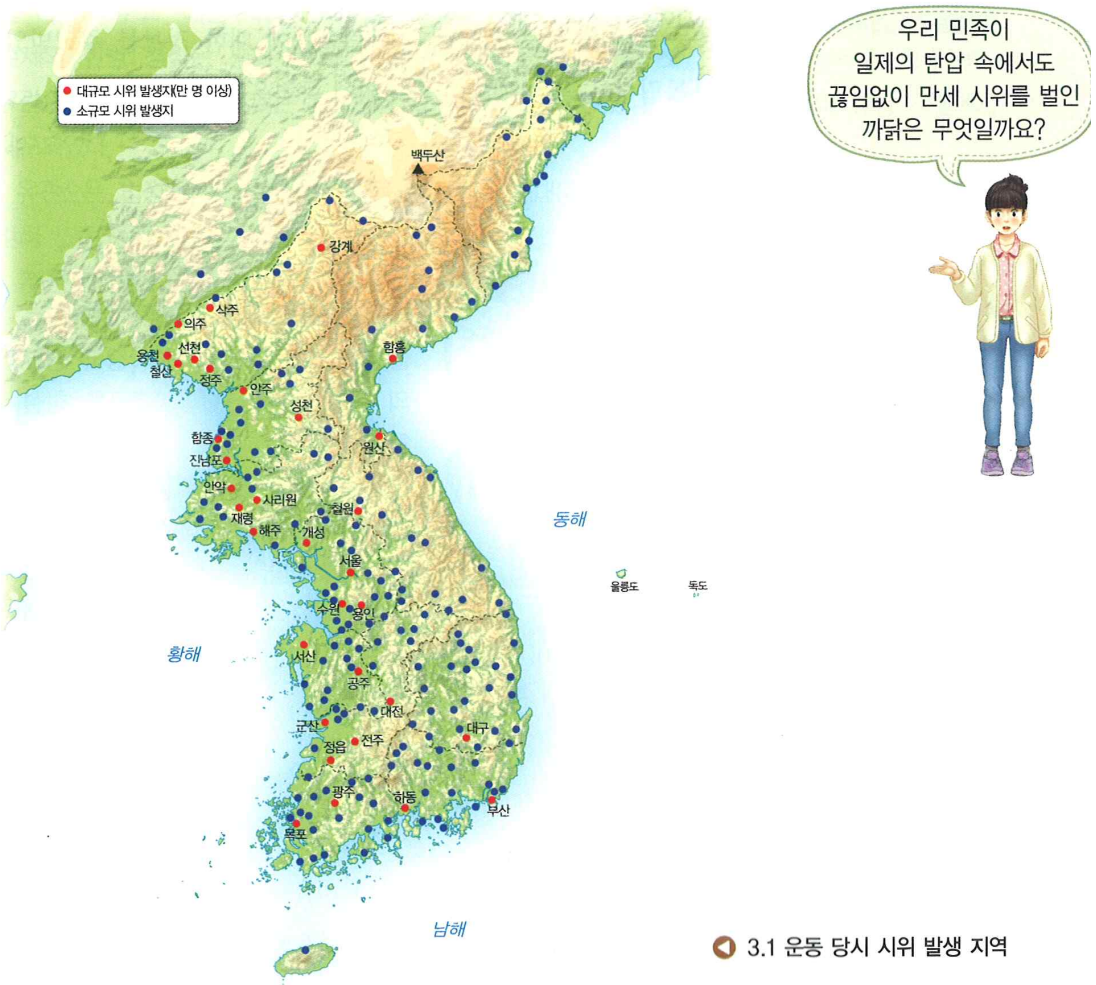
수백 군데의 오류를 삭제했다는 것은 결국 실험본과는 완전히 다른 보급본을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문 서술은 물론 사진과 그림도 대폭 바뀌어서 완전히 새로운 교과서가 되었다. 결국 교육부도 실험본이 엉터리 교과서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보급본은 실험본 못지 않게 오류와 편향으로 가득찬 교과서이다.

보급본에서는 국가주의 서술이 훨씬 강화되었다. 사람들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근·현대편에 해당하는 단원 2와 단원 3은 '나라의 역사(국가사)'에 국한된다. 근대편에 해당하는 2단원의 제목이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민족 운동', 그리고 현대편에 해당하는 3단의 제목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로 되어 있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근대에는 나라를 지키거나 되찾으려는 역사가 우리 역사이고 현대에는 나라를 발전시킨 것이 우리

역사라고 가르치라는 셈이다. 국가주의 서술의 정점은 보급본의 마지막 쪽의 "대한민국의 발전은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문장에 그대로 압축되어 있다. 이는 신판 국민교육헌장(1968)이다.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등학교 역사교육의 목표는 민주시민을 기르는 데 있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않은 채 국가의 발전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 할 것만을 강조하는 교과서를 과연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한 교과서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실험본의 오류와 편향된 서술을 삭제·수정한 뒤 나온 보급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오류와 편향된 서술이 드러나는지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만 언급하기로 하자.

초·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는 그림, 사진, 지도가 많이 실리는 것이 요즘 추세이다.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학습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이다. 초등학교 교과서는 더 그렇다. 실제로 초등학교 교과서는 본문 서술보다 그림, 사진, 지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다. 당연히 그림, 사진, 지도도 교과서의 일부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 실려야 한다. 그런데 보급본의 그림, 사진, 지도에는 엉터리가 너무 많다. 일례로 보급본에는 1895년의 단발령과 관련된 사진이 실려 있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머리를 깎는 남자들이 중절모를 쓰고 있는데 이 무렵에는 중절모가 국내에 들어오지도 았다. 중절모가 널리 보급된 것은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일이다. 따라서 이 사진은 단발령과는 무관한 것이다.



3.1 운동 당시 시위 발생 지역

'3·1운동'은 현행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올바로'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위의 지도는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정체불명의 지도인데다가 지도의 내용 자체가 오류 투성이이다. 예컨대 1만 명 이상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고 표시된 지역 가운데 자료(예컨대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로 확인되는 것은 서울, 용인, 수원(이상 경기도), 해주, 안악, 재령(이상 황해도), 진남포, 안주, 함종(이상 평안남도), 의주, 선천, 철산, 강계, 정주(이상 평안북도), 함흥(함경남도), 철원(강원도), 서산, 공주(이상 충청남도), 군산, 전주, 정읍(이상 전라북도), 광주, 목포(이상 전라남도), 대구(경상북도), 하동(이상 경상남도)이다. 지도에 1만 명 이상이라고 빨간 색으로 표시된 곳 가운데 개성(경기도), 삭주(평안북도), 원산(함경남도), 대전(충청남도), 부산(경상남도)은 해당되지 않는다. 반면에 박은식의 책에 1만 명 이상이라고 명시된 성천, 평양, 용천, 구성, 영변(평안북도), 장연(황해도), 고원(함경남도), 아산(충청남도), 금산(전라북도, 현재는 충청남도), 남원(전라북도), 진주(경상남도)는 빠져 있다. 한편 1만 명 이상으로 표시된 사리원은 봉산군 사리원읍이었다. 따라서 사리원으로 표기할 것이 아니라 봉산으로 표기해야 하는데 봉산에서 1

만 명 이상이 만세시위를 벌였다는 기록 자체가 아예 없다. 전체적으로 이 지도는 내용도 틀린데다가 출처도 분명하지 않다. 이런 지도를 굳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록에 따르면 당시 전국의 232개 부·군 가운데 218개 부·군에서 시위가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 지도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축소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도에 표시된 소규모 시위 발생지는 훨씬 더 많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만세시위가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났던 것처럼 학생들을 호도할 가능성이 크다. 독립운동사를 무시하는 박근혜정권이 만든 국정 교과서다운 행태이다.

서술에서의 오류는 실험본의 오류를 삭제하고 빈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 들어간 데서 많이 드러난다. 얼핏 보면 그럴 듯하지만 실제로는 사실을 왜곡한 엉터리 서술이 넘쳐난다. 보기를 들어보자. 1940년 임시정부의 국군으로 한국광복군이 출범했다. 보급본 92쪽에는 “한국광복군은 연합군의 일원으로 중국군과 협력하여”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는 서술이 나오는데 엉터리 서술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참전국으로서 연합국의 일원임을 인정받으려고 했지만 미국이 끝내 거부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연합군의 일원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실험본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실험본에는 “한국광복군은 중국과 함께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고”라고 제대로 서술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보급본에서 개악해 역사를 날조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보급본 96쪽에는 “이봉창, 윤봉길 등의 의거는 중국인에게 감명을 주었고 중국이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은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라는 서술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사실과 맞지 않는 엉터리 서술이다. 이봉창 의거와 윤봉길 의거는 1932년에 일어났다. 두 의거를 통해 임시정부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 것은 맞지만 역으로 임시정부가 상하이를 떠나 10여 년 가까운 유랑생활(이른바 장정)을 하게 되는 계기로도 작용했다. 임시정부가 다시 활기를 띠는 것은 충칭에 안착한 1940년 이후 더 구체적으로 민족혁명당 등과의 합작이 이루어지면서부터이기 때문에 마치 1930년대 초부터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는 서술은 임시정부의 실상에 대해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오류 못지않게 편향된 서술도 곳곳에 등장한다. 이봉창 의거, 윤봉길 의거, 한국광복군의 활동 외에는 1930년대 이후 독립운동의 역사가 보급본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1930년대 이후는 독립운동의 암흑기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일제에 협력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뉴라이트 역사인식이 그대로 보급본에도 반영된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가 아예 사라졌고 실험본에는 실려 있던 ‘일본군 위안부’ 사진도 삭제되었다. 실험본에서는 아예 ‘성 노예’라는 용어까지 쓴 적이 있다. 보급본 99쪽의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여성들도 많았는데, 그중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간 젊은 여성들은 일본군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였다”라는 서술은 마치 일본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일본군 위안부’ 서술을 연상시킨다. 이는 박근혜정권의 부당한 위안부 협상과 무관하지 않다.

축소된 것은 ‘일본군 위안부’만이 아니다. 일제가 저지른 강제동원 자체가 축소 서술되고 있다. 실험본 114쪽에 사진과 함께 실려 있던 ‘군함섬 수백 명의 한국인이 강제로 끌려가 석탄을 캐다 사망한 장소이다’라는 설명이 빠진 것이 단적인 보기이다. 군함섬 사진과 설명을 뺀 것은 일본의 눈치를 본 것이라고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6-1 보급본 이전의 교과서인 5-2 보급본(2014)에는 “일제는 수십만의 학생들과 청년들은 전쟁터로 끌고 갔다. 또 수백만의 사람들을 탄광, 군수 공장, 공사장에 데려가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채 혹독하게 일을 시켰다”라고 강제동원의 피해 규모를 밝힌 데 반해 “일제는 한국인 학생들과 청년들을 전쟁터로 끌고 갔으며, 많은 한국인을 광산이나 공장으로 보내 혹독하게 일을 시켰다”고 씀으로써 강제동원의 피해 규모를 두루뭉수리하게 처리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아직도 강제동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요구를 대한민국의 국정 교과서가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편향된 서술의 정점은 박정희정권에 대한 미화이다. 앞에서 역사교육연대회의가 찾아낸 실험본의 오류와 편향 가운데 보급본에 반영되지 않은 게 하나 있다고 했는데 박정희정권의 미화가 바로 그것이다. 실험본에서는 이승만정권도 전두환정권도 독재정권이라고 규명했지만 박정희정권에 대해서는 ‘독재’라는 단어를 아예 쓰지 않았다. 그러면서 박정희정권의 독재를 ‘민주주의 제한 정책’이라는 희한한 용어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했다. 박정희정권에 대해 서술하면서 독재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은 보급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보급본 131쪽의 “1972년, 박정희 정부는 국가 안보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헌법을 고쳤다. 이에 따라 장기 집권이 가능해지고 정치적으로 막강한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었다. 그러자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순조롭게 발전하지 못하였다”라고 쓴 것도 문제가 심각하다. 이는 실험본의 “1972년에 박정희 정부는 통일을 준비한다는 구실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유신 헌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 자유가 크게 제한받게 되자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이에 정부는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였다.…공산주의에 맞서고 경제 발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소홀히 하였다. 이로 인해 민주주의는 과거에 비하여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다”라는 서술과 비교할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실험본 서술에서는 어쨌거나 유신 체제에서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제한되었다고 쓴 것을 완전히 삭제하고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해졌다는 식의 서술로 대체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실험본에서 유신체제로 인해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했다고 에둘러 쓴 것(이것도 독재라고 쓰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심각하지만)도 중간 설명이 삭제되는 바람에 마치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운동 때문에 민주주의가 순조롭게 발전하지 못했다는 식의 왜곡된 해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이다.

이번 보급본의 중요한 특징은 독재정권을 언급할 때마다 “헌법에 따른 통치”였음을 강

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박근혜정권의 역사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유신체제를 어디까지나 헌법에 따른 통치로 본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인 속내도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중·고등학교 국정교과서의 집필상황은 장막에 가려져 있다. 국정교과서가 무슨 국가기밀이라도 되는 것처럼 교육부는 모든 상황을 비밀에 붙이고 있다. 집필진도 집필준거안도 밝히지 않았다. 만약 박근혜정권이 정말 떳떳하다면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3) 친일파 미화와 건국절 제정 움직임 재개

2015년 법무부에서 광복70주년을 기린다고 청소년용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한 적이 있다. 이 동양상에는 10명 남짓의 독립운동가 이름이 등장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동영상에서 일본 제국의회 귀족원 의원을 지낸 거물급 친일파 윤치호를 윤봉길과 함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소개했다.[142]

법무부가 애초에 인터넷으로 공개한 동영상의 한 장면

당연히 윤치호를 독립운동가로 둔갑시킨 데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자 법무부는 부랴부랴 홈페이지의 동영상에서 윤치호 관련 부분을 삭제했다. 윤치호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중대한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1,006명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일제강점 초기의 대표적인 친일파가 이완용이라면 윤치호는 거기에 비견할 만한 일제강점 말기의 대표적인 친일파였다. 이런 친일파를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의 반열에 올려

142) 「친일파 윤치호가 독립운동가? 법무부의 황당 동영상」, 『오마이뉴스』, 2015년 8월 15일.

놓은 것이 대한민국 법무부의 역사인식 수준이다.

친일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거꾸로 세우는 것은 단지 법무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2015년 초에 교육부에서는 교육자로서 시대를 초월해 온 국민의 존경을 받는 분을 대상으로 '이 달의 스승'이라는 것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첫 번째 '이 달의 스승'으로 "헌신적인 교육자의 표상이자 민족운동가"인 최규동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143] 그런데 최규동은 민족교육자가 아니었고 민족운동가는 더더군다나 아니었다. 최규동은 일제강점 말기에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친일교육자였다. 오래 전 친일의 역사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을 때 정부에서 친일파인 최규동을 독립운동가라고 오인해 서훈을 한 적이 있다.[144] 그렇지만 친일 관련 자료가 많이 발굴된 오늘날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자료를 찾아보면 최규동의 친일행적이 쉽게 확인된다. 대표적인 친일행적은 '중동학교장 최규동'의 명의로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관변단체인 조선교육회 기관지 『문교의 조선』에 일본어로 쓴 「죽음으로써 군은(임금의 은혜-인용자)에 보답하다」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한 것이다.[145] 글의 내용은 조선의 젊은이들이 기꺼이 징병제에 응해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치라는 것이었다. 이밖에도 현재 확인되는 최규동의 친일행적은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및 평의원, 조선유도(儒道)연합회 평의원, 징병제실시감사축하회 참석, 조선신궁 전승 기원제 관여 등 10여 건에 이른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최규동에게 첫 번째 '이 달의 스승'이라는 영예를 안기려고 하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이를 취소했다.

여성가족부도 한심하기로는 법무부나 교육부에 뒤지지 않는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는 한국을 빛낸 위인 또는 최초의 여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 『친일인명사전』에도 등재된 친일무용가 최승희, 친일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여성교육자 임영신, 여성비행사 박경원이 올라 있었다.[146] 여성가족부는 뒤늦게 관련 전문기관에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인물 전체의 사후검증을 의뢰했다. 그 결과 현재 최승희, 임영신, 박경원은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이다.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는 그나마 논란이 일면 사후에라도 바로잡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국방부보다는 낫다. 국방부는 이명박정권 시절부터 친일군인 백선엽을 한국전쟁의 전쟁영웅으로 기려 명예원수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시민사회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백선엽 영웅 만들기 작업은 중단되지 않았다. 박근혜정권 들어서는 더 노골적으로 진행되었다. 2013년부터는 아예 한미동맹60주년을 맞아 10대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백선엽의 이름을 붙인 '백선엽 한미동맹상'이라는 것을 만들었을 정도이다.

---

143) 「'이달의 스승' 12명 선정 창호·조만식 포함」, 『연합뉴스』, 2015년 2월 16일.

144) 최규동은 모두 7등급인 독립유공자 서훈 제도에서 3등급에 해당하는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그런데 독립장을 받은 진짜 독립운동가 가운데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이상룡이나 신흥무관학교 설립자인 이회영 등 거물급도 포함되어 있다. 일제강점 초기 최규동이 잠시 민족교육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활동을 이상룡, 이회영 등과 같은 급의 독립운동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애초에 독립운동가가 아닌 최규동에게 건국훈장을 추서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145) 崔奎東, 「死を以て君恩に報い奉る」, 『文教の朝鮮』, 1942년 6월호.

146) 「여성부, 친일파·뉴라이트가 '자랑스런 한국인'」, 『프레시안』, 2015년 8월 21일.

박근혜정권이 백선엽으로 상징되는 친일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올해 3월 6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백선엽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이다. 이날 김무성은 백선엽에게 거수경례로 인사를 한 뒤 “장군은 6·25 전쟁 때 나라를 지켜준 영웅으로 생각하고 새누리 당원 모두의 마음을 모아 존경을 표하기 위해 왔다”라는 극찬의 인사말까지 했다.

친일파를 대표적인 ‘위인’으로 만들려는 작태는 단지 일부 정부부처의 무지 탓만이 아니다.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친일과 독립운동, 더 나아가서는 한국 근·현대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극우적 사시로 바라보는 박근혜정권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와 직결된 것이 건국절 제정 움직임의 재개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건국 67주년’은 지난 2013년, 2014년 광복절 경축사에는 한 번도 쓰이지 않은 생경한 단어이다. 일반적으로는 10년 단위로 특별한 해를 기념한다. 따라서 67주년이라는 숫자 자체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그런데도 굳이 대통령 경축사에서 ‘건국 67주년’을 강조한 것은 ‘건국절’ 제정을 밀어붙이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그러나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이 아니다. 다만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날일 뿐이다. 대한민국정부 수립의 근거가 된 제헌헌법 전문에는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다. 대한민국은 1919년에 이미 수립되었으며 1948년의 대한민국정부 수립은 그것을 재건한 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건국절을 주장하는 이들이 건국의 아버지라고 떠받드는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있던 대한민국정부조차 1948년 9월 1일자로 나온 최초의 관보에서 대한민국 30년이라는 표현을 썼다. 대한민국 30년은 1919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출범으로부터 30년이 지났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승만도 1948년에 출범한 대한민국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은 셈이다. 역대 정권 모두 1948년 8월 15일을 정부수립일로 공식 사용해 왔다. 심지어 대한민국정부 출범의 기초가 된 제헌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열린 제헌국회 첫 회의에서 의장인 이승만도 ‘대한민국 30년’이라는 연호를 썼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처음 수립되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는 것은 알량한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역사변조에 지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과정에서 이미 출범했다. 이미 분단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제정된 제헌헌법부터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이 빠지지 않고 들어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현행 헌법 전문에 “평화적 통일의 사명”이 들어 있는 것도 한반도에는 하나의 국가가 존재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바탕을 둔 것이다.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을 이어받은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이고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9월 9일 한반도의 북쪽에 세

워진 북한 정권과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야 할 책무를 갖고 있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

4) 박근혜정권의 뉴라이트 인사 등용과 종편의 역사왜곡

박근혜정권 이후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가 뉴라이트 성향의 인사들을 역사관련 기관에 중용하는 것이다. 특히 교과서포럼의 후신인 현대사학회 관련 인사들이 중용되었다. 이명박정권도 뉴라이트의 전폭적 지원을 업고 출범했지만 역사관련 기관에 뉴라이트 인사를 중용하지는 않았다.

교학사 교과서 사태의 와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현대사학회의 고문이자 뉴라이트의 대부라고도 불리는 유영익을 국사편찬위원장에 임명했다. 유영익은 극단적인 이승만 숭배주의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의 기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원로 역사학자로서는 이채롭게 식민지 근대화론에 기울어지기도 했다. 게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친북정책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반미주의자라고 규정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편향된 인식을 보였다.

현대사학회가 출범할 때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출범 이후에는 고문으로 위촉된 김학준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역시 현대사학회 고문이던 곽병선은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되었다. 현대사학회 이사 겸 언론법학분야 부회장이던 정종섭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쳐 4·13총선에서 '진박' 후보로 당선되었다. 한국사학회의 전신인 교과서포럼 고문이던 이배용은 이명박정권에서 역사교과서 개악 사태의 숨은 주역 역할을 한데 이어 박근혜정권에서도 중용되어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을 맡았다.

그러나 현대사학회 출신으로 누구보다 주목해야 할 대상은 따로 있다. KBS 이사장을 맡은 이인호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효종이다. 현대사학회의 핵심적인 인물을 방송계의 중요한 자리에 앉힌 데는 무언가 속내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방송에서도 근·현대사 왜곡을 본격화하겠다는 속내이다.

방송통신을 다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대사학회 이사이자 뉴라이트의 핵심인 박효종에게 맡긴 것은 박근혜정권이 이제 방송을 이념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존재이유는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 그런데 친일독재 미화 역사인식을 학교에서 가르치자고 주장한 박효종은 '공공성 및 공정성'을 훼손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다. 박효종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대안교과서를 펴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심지어는 2005년에 발표한 한 논문에서는 박정희의 친일행위를 옹호하기 위해 "일본 육사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나라를 중흥시켰으면 민족주의자"라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음으로써 민족, 민족주의, 독립운동을 모독하는 망언을 한 인물이다. 이런 사람이 방송통신심의를 주관할 때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박효종의 주도 아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는 방송통신을 근·현대사 왜곡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인호는 김영삼정권 때 최초의 여성대사(핀란드), 김대중정권 때 러시아 대사를 지내기도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자 극우편향의 본색을 드러낸 인물이다. 박근혜정권 들어서자 대통령의 자문활동 등을 하면서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2013년 3월에는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역사문제에 대한 정권의 개입을 촉구했고 9월 교학사 교과서 사태 때는 보수성향의 원로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교학사 교과서를 적극 옹호했다. 특히 2014년에는 KBS가 단독보도해 논란을 일으킨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의 민족비하 및 외세추종의 주장이 담긴 교회강연에 대해 “이를 반민족이라고 하면 제정신이 아니고 마녀사냥이다. 비이성적이고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나라에 살기 싫다”고 말했다. 이미 학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식마저 저버린 채 어설픈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반면에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데 급급한 사람이 국민이 낸 시청료로 운용되는 공영방송의 책임자가 된 것이다. 실제로 이인호는 박근혜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해 KBS를 완전히 장악해 KBS가 국민의 방송에서 정권의 방송으로 추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보기가 작년에 광복 70주년을 맞아 준비중이던 <훈장>(가제) 2부작이 이승만과 박정희에게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중단된 것이다. 그러니 항간에는 KBS에서 사장보다 더 센 것이 이사장이라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다.

박근혜정권 이후 공중파방송이 ‘박비어천가’ 방송으로 전락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박비어천가’ 자체가 왜곡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종편은 더하다. 특히 TV조선과 채널A는 근·현대사 왜곡을 대중에게 널리 전파하는 첨병이다. 다른 보기를 들 것도 없이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각종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데 종편은 숙주 노릇을 하고 있다. 2013년 5월 TV조선과 채널A는 일제히 정체불명의 탈북자를 내세워 광주민주화운동의 배후에 북한에서 잠입한 특수부대가 있었다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냈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은 북한 특수부대였다는 것이다. 나중에 국방부까지 나서 TV조선과 채널A의 방송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지만 그 여파는 컸다. 지금도 종편 애청자들 사이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의 배후에 북한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마치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돌아다니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든 <백년전쟁>도 마찬가지이다. TV조선과 채널A는 민족문제연구소의 배후에 종북세력이 있으며 따라서 <백년전쟁>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비판함으로써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려는 종북 음모의 일환이라는 거짓 주장을 지금도 되풀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얼토당토않은 비판은 정권에 의해 다시 이용되기도 한다. 이승만의 양자가 <백년전쟁>을 만든 민족문제연구소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청와대 하명이라는 이유로 공안부에 재배정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5. 맺음말

역사는 늘 되풀이된다는 것이 빈말은 아니다. 유신체제 아래 박정희정권이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꾼 데서 단적으로 드러났듯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역사에도 손을 댄 것처럼 박정희정권의 계승자인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도 집권 8년 동안 거세게 근·현대사 왜곡을 몰아붙였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물학적 딸이자 정치적 후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 심해졌다. 일각에서는 한국 근·현대사를 박정희 등 친일·독재세력을 미화하는 역사로 변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박정희의 역사적 복권을 완수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유일한 관심사라고 평가할 정도이다. 그러나 영원히 지속될 것 같던 유신체제가 부마항쟁으로 상징되는 민중의 저항에 직면해 스스로 무너진 것처럼 보수언론인 중앙일보조차 사설에서 썼듯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상징되는 박근혜정권의 근·현대사 왜곡 시도도 이번 4·13총선을 통해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보수정권의 근·현대사 왜곡은 성공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결코 성공할 수도 없는 역사 쿠데타일 뿐이다.

“보수정권 이후 한국 근·현대사 왜곡의 실태와 분석”(이준식)의 토론문

임종명(전남대 사학과)

***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5·18민중항쟁 36주년 기념학술대회’를 준비하시고, 또 이 귀한 자리에 저를 토론자로 참례(參禮)케 해 주신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준식 선생님 발표문의 토론자로서는 부적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제 식민주의에 관한 이준식 선생님의 연구로부터 학은(學恩)을 입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준식 선생님께서 주도하고 계신 ‘역사교육연대회의’의 말석에 앉아, 선생님으로부터 역사운동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평소 선생님에게 배우고 있는 저는 오늘도 발표문을 통해서 제가 역사 선생이라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보수정권 또는 극우정권 이후 한국 근·현대사 왜곡 실태와 그 분석’에 관해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의 발표문에 대해 시비하는 것은 제 능력 밖이라 생각하고, 대신 관련 논의의 확장을 위해, 현재 토론 주제에 관련하여 두어 가지 저의 소회를 밝혀 토론자의 임무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 식민지 이후 ‘식민지 시기 친일(파) 역사·논리’의 옹호와 미화의 (재)생산 구조**

먼저, 저는 해방 이후 ‘식민지 시기 친일(파) 역사·논리’의 옹호와 미화의 (재)생산 구조’와 관련해 논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발표문은 “친일파 헤게모니의 기반은 바로 독재 권력에 대한 충성”이라고, 그리하여 “친일과 독재”가 “하나의 과거사”이며, 나아가 “친일과 독재가 한 몸이라는 것은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중요한 원리”(3쪽)라고 규정하여, ‘친일과 독재’를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식민시기 친일파와 친일 논리, 또 그것들의 역사’의 해방 이후 재생산이 ‘남한의 독재 정권’과, 나아가 그것을 지원하는, 즉 “한반도의 남쪽에 반공국가를 세우”(2쪽)고 그것을 유지하고자 한 미국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의 질문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고 싶습니다.

제 질문의 맥락을 분명히 하고자 평소 제가 생각하는 근대(modren)-한국에서 ‘근·현대’로 통용되는-와 식민주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근대가 전세계적 차원과 규모에서 제국주의/식민주의의 산물이자 그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는 서구에서 발원한 근대를 전세계로 확산시키면서, 비(非)서구 세계의 근대뿐만 아니라 근대의 원산지인 서구 세계의 근대조차 자신의 모습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근대라

는 것은 식민지적 근대에서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 역으로 식민지적 근대는 근대의 핵심적 내용을 자신 안에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의할 때, 우리는 근대화가 식민화 과정의 다름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해방 이후 '식민시기 친일파와 친일 논리, 또 그것들의 역사의 재생산'의 원인에 관한 우리의 탐색에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해방 이후 남한에서 급속도로 추진된 근대화 과정 그 자체가 식민주의를 온존하고, 그것을 일층 발전시키는 과정이었고, 근대화가 그것의 주역으로서 식민주의를 내장한 '친일파'를 역사와 사회의 전면에 내세우게 되는 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달리 말해서 '친일파의 해방 후 재등장과 유지'가 발표문의 표현을 빌리면 '독재정권이나 보수정권,' 또 이를 뒷받침하는 미국을 넘어, 근대(화) 자체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발표자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근·현대사 왜곡'의 세계사적 맥락**

다음으로 저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근·현대사 왜곡'의 맥락과 관련한 논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발표문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근·현대사 왜곡'의 '남한 내 보수세력과 뉴라이트,',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물학적 딸이자 정치적 후계자인 박근혜 대통령"(25쪽)의 욕망과 의제, 또 그를 위한 전략·전술을 핍진(逼眞)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표문의 논의는 '일국적인, 그것도 한국의 지배적인 정치·사회 세력의 욕망과 기획'에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토론자는 향후 관련 논의의 발전을 위해 '전환기의 세계성'이라는 맥락에서 저의 우견(愚見)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세기 말 이래 우리는 역사적 대견변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말의 현실사회주의 붕괴와 탈(脫)냉전이라는 역사적 과정은 지구화(globalization)와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라는 '주도적' 흐름-여기에는 또 자본 주도(captial-led)의 것과 반(反)자본의 그것, 두 가지가 길항·상충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재영토화(re-territorialization)와 민족화(ethnic nationalization)라는, 상충하는 두 개의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이와 세기적 전환기의 상황을 배경으로, (역사) 연구자들은 마르크스 주의 등의 본질주의적(radicalism) 이념·이론, 또 '내재적 발전론'이나 '민중사학론'과 같은 한국 역사학의 주요 연구 패러다임이, 심지어 그것의 기본 전제였던 민족(ethnic nation)과 민족 국가(nation-state)가, 요컨대 민족주의가 '재조정'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전환기의 상황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근·현대사 왜곡'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컨대 지구화와 탈영토화, 또 이와 연관 있는 이론들은 '뉴라이트'가 에스노 중심의 민족주의(ethno-centric nationalism)를 부인하는 자원으로 전용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는 민족(nation)을 기존의 주류적인 민족관, 즉 에스닉 민족(ethnic nation)을 '국민'이라 호명하여도 좋을 정치체 중심의 민족(polity-oriented nation)으로 변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견(一見) 자본과 자유주의의 승리로 보이는 '냉전 해체' 상황은 뉴라이트가 민주주의를 '자본 위주의 자유 민주주의'로 제한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재정의 작업에 착수하는 자원으로 개발·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뉴라이트'와 '보수세력'의 '역사왜곡'은 세계 전환기의 역사성을 자본/권력 중심의 관점에서 표현·담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작금의 역사 왜곡'이 단지 '보수 세력'의 '물레방아 거꾸로 되돌리려는 우행(愚行)'이나, '효녀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효행'의 산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토론자의 졸견(拙見)에 대한 발표자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굴절된 역사, 시민들에 의한 역사의 진실찾기
-근로정신대 문제와 한일 시민단체 활동을 중심으로-

이국언('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상임대표)

1. 문제제기

한국사회에서는 아직도 일본군 '위안부'와 '여자근로정신대'가 같은 것으로 인식한다. 심지어 일부 언론을 통해 지금도 잘못된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기도 한다.

이 같은 원인의 1차적 책임은 일본정부에 있다. 무엇보다 패전 후 진실규명을 외면하고 오랫동안 방치함으로써 '근로정신대=일본군 위안부'라는 잘못된 정보가 오랫동안 자리 잡도록 원인을 제공했다.

한국정부의 책임도 크다. 많은 국민들이 '근로정신대'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혼동하고 있는 잘못 역시 한국정부에 그 중요한 책임이 있다. 특히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이후 군부정권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대일 과거사문제는 논의 자체가 금기시 되어 왔다. 정부차원의 제대로 된 진상조사, 역사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근로정신대'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스스로 구분해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여자근로정신대' 사건에 대한 학술 연구물이라고 해야 손에 꼽을 정도인데다, 한국정부 차원의 최초 직권조사보고서와 피해자 구술집이 2008년에서야 나온 마당이니 국민들이 혼동해 왔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 글은 일제강점기 전시 노동력 충원을 위해 10대 초·중반 미성년 소녀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여자근로정신대' 문제의 개요를 살펴보고, 한국사회에서 제대로 조명되지도 않은 채 묻히다시피 한 이 문제가 어떻게 뒤늦게 '역사문제화' 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 이르기까지 한일 양국에서 활동해 온 시민단체들의 역할을 통해, 어떻게 역사가 역사의 주체인 '대중'의 것으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인지, 미쓰비시 중공업으로 동원된 여자근로정신대 사건을 중심으로 그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2. ‘여자근로정신대’ 사건의 개요

1)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좋은 학교도 보내준다”

양금덕(1929년생. 광주시) 할머니가 당시 일본인 교사와 교장의 거짓말에 의해 일본으로 강제동원 된 것은 태평양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4년 5월말이다. 당시 전남 나주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양금덕 할머니는 일본인 교장과 담임선생으로부터 “일본에 가면 상급학교에도 진학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며 일본에 갈 것을 거듭 종용받았다. 배고프고 가난하던 시절,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는 제안은 배움에 목마른 어린 소녀들의 호감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당시 목포, 나주, 광주, 순천, 여수 등 전남지역 5개 도시에서 동원된 150여명의 소녀들은 여수에 집결한 뒤 연락선을 타고 다음날 시모노세키항에 도착했다. 이어 대표적 공업도시인 나고야로 이동한 뒤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배치됐다.

당시 나고야는 일본 최대의 군수공장이 밀집해 있던 지역이었다.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는 당시 군용 항공기(정찰기)를 제작하고 있었다. 나고야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제작소에는 광주전남 150여명 이외에도 충남지역에서 동원된 150여명 등 약 300여명의 소녀들이 동원됐다. 그리고 이들은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굶주림과 혹독한 감시 속에 하루 8~10시간 동안의 강제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물론 임금 또한 주어지지 않았다.

2) 일본군 ‘위안부’로 오인...고국 땅에서도 냉대

해방 후 피해자들은 구사일생으로 고향에 돌아왔지만 이들 앞에는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만 해도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 경험과 상처가 워낙 끔찍하고 컸다. 특히 남성 중심의 봉건 질서가 뿌리 깊게 자리해 있을 때였다. 일본에 갔다 왔다는 이유로 일본군‘위안부’로 오인을 받은 것이다. ‘저 집 딸은 일본에 다녀왔다더라.’는 말은 곧 ‘위안부’로 인식되곤 했다. 결혼할 나이가 다 되었지만 일본에 다녀 온 것이 알려지는 순간 혼담은 깨지기 일쑤였다.

겨우 가정을 꾸렸더라도 그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어렵게 가정을 이뤄 자식까지 낳고 살다가도 뒤늦게 소문을 듣게 된 배우자로부터 갖은 모욕과 학대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배우자의 지속적인 구박과 폭력을 견디지 못해 끝내 이혼에 이르는 경우까지 적지 않았다.

사회로부터의 고립감도 큰 상처였다. 일본군 ‘위안부’라는 주변의 편견과 냉대에 의해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았을 뿐 아니라, 지금도 그 상처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

처럼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자기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강제노역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광복 후 고국에 돌아와서까지 사회적 냉대를 받게 되는 ‘이중의 피해’가 계속돼 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3) 미성년 아동에 대한 노동력 착취

‘정신대(艇身隊)’란 ‘일본국가(천황)를 위해 솔선해서 몸 바치는 부대’라는 의미로 일제가 만든 용어다. 스스로, 자의(自意)에 의해 나선 것처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성별과도 무관하게 모든 계층에 적용된 포괄적이고 상징적인 용어이다. 노무자나 군인, 군무원은 물론 근로정신대나 일본군위안부도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여자근로정신대는, ‘정신대’ 개념 가운데 하나로서 ‘여성노무동원’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일제에 의해 아시아태평양전쟁(1931～1945) 말기 노동력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민지 조선에서 다수의 미성년 여성들을 군수공장으로 동원된 인력’을 의미한다. 주로 한반도와 일본 본토로 동원되었다.

이 가운데 특히 1944~45년경에 실시한 ‘여자근로정신대 방식’의 동원은 주로 10대 초중반의 소녀들을 대상으로 주로 교장 및 담임선생 등의 지원종용(‘강제’)과 ‘사기적’인 방법(상급학교 진학 및 높은 임금과 같은 비현실적 조건 제시)에 의해 동원되었다.

한국정부가 확인해 공인한 ‘여자근로정신대’ 방식의 일본 작업장은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약 300명), 후지코시(不二越) 강재공업 도야마 공장(약 1,089명), 도쿄 아사이토(東京麻絲) 누마즈 공장(약 300명) 세 곳이다.

이와 같이 여자근로정신대는 일본과 한반도 등지 비행기부속공장 및 방적공장에 동원된 피해자를 의미하며, 강제동원 피해 유형 가운데 노무동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여자근로정신대는 ‘정신대(挺身隊)’라는 용어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와 동일한 개념으로 잘못 수용, 확산되면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는 결과를 낳았다.

여기에 한국정부 또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일괄적으로 ‘이미 끝난 사건’으로 보고 덮어 두고 있었던 데다, 외교적 갈등을 원치 않은 정부의 무관심이 계속되어 오면서 ‘여자근로정신대’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다.

3. 일본 시민단체의 진실규명 노력

1) “교사의 양심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한국에서는 거론조차 되고 있지 않았던 미쓰비시 여자근로정신대 문제에 처음 의문을 품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한 양심적인 교사 그룹으로부터 시작된다.

고등학교에서 세계사를 가르치던 교사 다카하시마코토(高橋信)씨 등은 1986년 군수공업의 중심지였던 아이치현(愛知縣) 지역의 조선인 강제연행 실태와 미군의 공습 피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선여자근로정신대’의 존재와 피해에 대해 처음 알게 됐다.

다카하시씨 등은 조사를 통해 동원된 피해자들이 불과 13~14세 정도에 불과한 어린 소녀들이었다는데 주목했다. 아울러 1944년 12월 7일 발생한 도난카이(東南海) 지진 당시 공장 건물더미에 압사돼 목숨을 잃은 57명 중 6명은 한국에서 건너 온 어린 소녀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당시 미쓰비시가 매년 지진 희생자들에 대한 위령제 행사를 가지면서도, 유독 한국에서 건너 온 소녀들의 희생자 명부는 숨겨 오고 있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느꼈다.

“당연한 것이었죠. 그때까지 일본은 자국민의 원폭피해와 미군의 공습피해에 대해서만 교육해 오고 있었습니다. 교사의 양심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이 이웃 국가에 자행한 식민지 침략과 강제연행, 불법노동에 대해 사실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평화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곧바로 진실규명 작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당시 한국은 아직 군사정권이었고, 그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단지 6명의 사망자 명단 밖에 없었다. 6명의 이름 역시 한국인 이름이 아니라, 일본인으로 창씨개명(創氏改名)된 것이었다.

이들은 목숨을 잃은 소녀들의 한국 본적지 주소의 해당 동(면)사무소 등에 유족들을 찾고 싶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직접 유족을 찾기 위해 본적지 주소만 들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광주전남 지역을 수차례 직접 찾아 나서기도 했다. 이러기를 몇 차례, 드디어 1986년 2명의 유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1987년 3명 유족들의 소재를 추가로 확인함으로써 사망자 6명중 5명의 유족을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이때까지의 조사 내용을 정리해 1987년 4월 29일 일본의 주요 언론에 밝혔는데, 이 보도 후 전쟁 당시 미쓰비시에서의 강제노동에 안팎으로 관여한 사람들로부터 증언과 자료가 하나하나 모여들기 시작했다.

2) “다시는 이 슬픔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1988년 추도비 건립

1987년 7월 25일 이들은 그동안 여러 증언을 모으고, 자료를 보내온 사람들과 함께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미쓰비시 측 희생자 명부에 조선여자근로정신대원 6명의 이름을 기입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미쓰비시 옛 공장 터에 지진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추도기념비를 건립해 그들의 넋을 위로하기로 하고 곧 ‘실행위원회’를 발족키로 했다.

1988년 4월 1일 100만엔(￥)을 목표로 추도기념비 건립 모급활동을 시작하자, 학교와 일반 시민들로부터 기대 밖의 성금이 답지했다. 이어 한국에서 유가족 등 6명이 방문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들의 초청 경비까지 더 보태 애초 목표액의 두 배에 이르는 모금이 이뤄졌다.

이런 과정을 거쳐, 도난카이 지진 발생 44년 만인 1988년 12월 닛신보(日淸)방적(주) 소유 구 미쓰비시중공업 공장 터 한 켠에 시민들의 성금을 모아 지진 희생자들을 위한 추도비를 건립했다. 제막식에는 ‘실행위원회’의 초청으로 피해자 이동련(1930生)과 고 김순례, 최정례의 한국 유족 등 6명이 참석했다.

추도비의 비문은 다음과 같다.
“다시는 이 슬픔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진실을 여기에 새긴다”

한편, ‘나고야 소송 지원회’는 1988년 추도비 건립 이후 지금까지 매년 12월 7일을 즈음해, 지진 희생자들을 위한 추도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2015년 12월 현재 28년째다.

3) 일본정부·미쓰비시 법적 제소

피해자들을 한 명 한 명 만나게 되면서 흩어진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꿰맞춰 나갈 수 있었다. 아울러 이때부터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조심스럽게 전쟁책임 당사자인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재판을 타진했다. 그러나 이들은 뜻밖에 벽과 마주해야 했다. 오히려 당사자인 유족들과 피해 할머니들이 소송을 꺼려한 것이다.

그러던 중 1997년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를 통해 소송에 대한 의사가 타진됐다. 1998년 8월 ‘변호단’(44명 참여)이 결성된데 이어, 1998년 11월에는 소송을 뒷받침하기 위한 ‘나고야 소송 지원회’가 결성됐다. 그리고 마침내 1999년 3월 1일, 원고 5명의 이름으로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피고로 나고야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다음해인 2000년 12월 원고 3명이 추가로 소송에 합류했다.

그러나 ‘위안부’로 오인 받아 가정 파탄까지 겪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에까지 가서 재

판할 만큼의 경제적 여력이 있을 리 만무했다. 그렇다고 정치권의 관심이나 시민사회의 지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전적인 몫은 '나고야 소송 지원회'에 있었다. 장장 10년 동안 이어진 재판에 변론 횟수만 무려 29회였는데, '나고야 소송 지원회'는 재판 때마다 일본을 방문하는 원고들의 항공료는 물론 교통비, 숙박비 등을 부담해왔다.

이 밖에도 무료변론을 자처한 변호단과 함께 그동안 '나고야 소송 지원회'가 원고들의 의견청취, 자료 조사 등의 일로 한국을 방문한 것만 30차례 이상이었고, 공동대표인 다카하시 마코토 대표의 경우, 교류활동 등 그동안 한국을 방문한 횟수만 80여회가 넘는다. 변호단 역시 마찬가지였다. 10년 동안 이어진 재판 기간 동안 가진 변호단 회의만 합숙 10차례를 포함해 무려 126차례였고, 그렇게 해서 쏟아낸 변론 자료만 수천 페이지(page)에 이르렀다.

그러나 결과는 번번이 패소였다. 1심(2005.2.24), 2심(2007.5.31)에 이어 결국 2008년 11.11일 도쿄 최고재판소마저 원고들의 청구를 외면하고 말았다.

4) 주주총회 대응 위해 미쓰비시 주식 취득

소송도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란 긴 여정에서 보면 어느 한 과정일 뿐이다. 정치권과 일본인들의 인식을 바꿔가기 위한 노력은 더 길고 험난한 것이었다.

이들은 무관심한 일본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03년 5월에는 회원들이 직접 무대 주인공이 되어 '봉선화-조선여자근로정신대' 라는 이름의 연극을 공연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초청강연회, 음악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호소해왔다.

아울러, 국회 등 정치권과 미쓰비시를 상대로도 지속적으로 요청행동을 펼쳐왔다. 미쓰비시를 상대로는 원고 등이 직접 참가한 13회를 비롯해 지금까지 30차례가 넘게 교섭을 촉구하는 요청행동을 벌여왔고, 일본정부 및 국회를 상대로도 원고 등이 직접 참가한 11회를 포함, 지금까지 20회가 넘는 요청행동을 진행해 왔다.

'나고야 소송 지원회'의 활동이 단지 도의적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미쓰비시를 상대로 벌인 주주총회 투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매년 6월 하순경 도쿄에서는 미쓰비시중공업의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 '나고야 소송 지원회'는 이 주주총회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러 주식을 사서 주주총회에 참가해 왔다. 직접 주주들을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다.

물론 이를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을 감수해야 했다. 주주총회는 주식 1천주 이상을 취득하고 있는 주주들한테만 참가 자격이 주어지는데, 1천주의 주식 대금만 약 35만엔(한화 약 400만원)이었다. 회사 임원과 주주들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해 일부러 이 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이렇게 어렵게 참가 자격을 얻었더라도 발언 기회가 모두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주주총회에서 온갖 방해를 무릅쓰고 발언 기회를 얻어내, 그동안 미쓰비시 임원과 주주들에게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수차례 촉구해왔다.

"주식 사느라 좀 무리를 했죠"

"미쓰비시 주식을 사고 싶어서 산 것이 아니라, 과거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것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요청하기 위해 주식을 매입했다.

미불임금 때문에 국제신용이 떨어지면 영업에 지장이 생기는데 그대로 놔둬도 되느냐 했더니, 사측에서 '할머니들이 미쓰비시에서 일한 것을 인정하고 과거 일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미우라 도시히로)

"회장에게 기업은 이익을 내는 곳이지만 윤리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다가 답변을 거절당했다. 주주총회 참석은 3월 31일 이전까지 1,000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 한해 허용했다. 그 때문에 지난 2월, 없는 돈에 좀 무리를 해서 주식을 취득했다" (마에야마 구리오)

5) 진실을 향한 360km 원정투쟁 ... 도쿄 금요행동

이러한 노력들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도쿄 금요행동'이다.

1심에 이어, 2007년 5월 나고야 고등재판소 판결마저 패소하면서 승소 가능성은 이제 거의 희박해져가고 있었다. 사건이 최고재판소로 옮겨간 직후인 2007년 7월 이들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새로운 투쟁을 실천에 옮겼다.

최고재판소 판결 역시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미쓰비시 측의 자발적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기 위해 미쓰비시중공업 본사가 위치한 도쿄 한복판에서 매주 금요일 원정시위를 펼친 것이다. 나고야에서 도쿄까지의 거리는 약 360km. 광주-서울 간 거리(297km)보다 더 먼 거리다. 신칸센 1인당 왕복요금만 25만원에 이른 비용을 감수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금요행동'은 한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일본대사관 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수요시위'에서 착안한 것이었는데, '금요행동'은 미쓰비시의 주요 기업 사장단 회의가 매주 금요일에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들은 이른 새벽 나고야에서 도쿄행 신칸센 열차에 몸을 싣는다. 일부러 도쿄 시민들의 출근 시간대에 맞추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들의 1년이 넘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8년 11월 11일 도쿄 최고재판소는 결국 원고들의 청구를 외면하고 말았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뛰어든 이들의 의지는 결코 꺾을 수 없었다. '나고야

소송 지원회'가 최고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금요행동을 강행하기로 한 것. 그러나 그것은 험난한 과정이었다

> "우리들은 패소라는 결과에 굴하지 않고 인도적 책임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 이른 아침 멀리 도쿄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 서서 할머니들의 인권회복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 이 운동은, 소송 이상으로 훨씬 곤란한 투쟁이었습니다. 전화로 싫은 소리는 헤아릴 수 없이 들었습니다. 좌절할 것 같았던 마음을 계속 유지해 준 것은 피해를 입은 할머니들과 그 유가족들의 존엄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
> (다카하시 마코토 공동대표)

나고야에서 도쿄까지 왕복 700km가 넘는 거리, 신간센 요금만 1인당 25만원에 가까운 돈도 돈이지만, 그보다 더 가슴을 짓누르는 것은 정작 다른 데 있었다. 그것은 투쟁을 계속한다고 해도 어떠한 실낱같은 빛마저 보이지 않는다는 것.

6) 한일연대로 확산 ... 미쓰비시 "협의체 구성에 동의"

이 무렵 광주에서는 새로운 기운이 움트고 있었다.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고, 특히 피해 할머니들의 투쟁을 일본 양심인들이 뒷받침해 왔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낀 몇 몇 시민들을 중심으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결성된 것. 2009년 3월이었다.

때마침 2009년 미쓰비시자동차가 광주에 판매전시장 문을 열면서 반 미쓰비시 투쟁에 도화선을 제공하는 결과가 됐다. 미쓰비시자동차 광주전시장 철수 1인 시위 투쟁에 이어, 2009년 12월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로 불길이 옮겨 붙으면서 미쓰비시와의 투쟁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시민모임'을 주축으로 한 20여명의 일본 항의방문단은 13만5천여명에 달하는 규탄 서명용지를 앞세우고 도쿄 시나가와(品川)역에서 미쓰비시중공업 본사까지 삼보일배(三步一拜) 시위를 벌인데 이어, 미쓰비시와 일본정부를 직접 찾아가 문제 해결을 촉구한 것이다.

안으로는 만 3년에 이른 도쿄 원정 금요시위, 밖으로는 재판 후 오히려 불붙기 시작한 한국에서의 반발. 미쓰비시중공업은 결국 2010년 7월 14일 마지막까지 만지작거리던 '협상' 카드를 꺼내지 않을 수 없었다. 미쓰비시가 '나고야 소송 지원회'를 통해 근로정신대 문제에 대한 '협의체' 구성을 수용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이다. 일제강점기 무려 10만 명을 한국에서 강제동원 했던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피해자 측과 '협의체' 구성에 나선 것은

최초의 일이었다.

7) 교섭결렬 ... 제2차 금요행동 재개

기대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미쓰비시와의 협상은 2년 동안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고, 16차 교섭에서 최종 결렬(2012.7.6.)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교섭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두말 할 것 없이 미쓰비시 측의 무성의 때문이었다.

협상 결렬에 따른 여파도 없지 않았다. 소송으로부터만 13년에 걸친 메아리 없는 투쟁에 회원들의 손길도 줄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재정 상태도 점점 어려워져 갔다.

이런 상황에서, '나고야 소송 지원회'는 다시 투쟁의 고삐를 움켜쥐기로 했다. 제2차 '금요행동'의 결행이 그것. 미쓰비시 측의 협의체 수용으로 2010년 7월 잠정 중단했던 금요행동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2012년 8월 10일 재개한 도쿄 원정 금요시위는 해를 두 번 넘겨, 2016년 4월 22일 현재 179회째(2007.7 1차 금요행동으로부터 누적 324회)에 이른다.

-금요행동 현황(2016.4.22. 현재)-

○제1차: 2007년 7월 20일~2010년 7월 9일
145회: 연인원 1,376명 참가, 전단지 배포 약 32,000매

○제2차: 2012년 8월 10일~2016년 4월 22일(현재)
179회: 연인원 1,224명 참가, 전단지 배포 약 30,329매

(1차·2차 누적 324회, 연인원 참가자 2,600명 참가. 전단지 배포 약 62,329매

그 사이 한국에서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큰 변화가 있었다.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이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 일본 기업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에 힘입어, 2012년 10월 24일 미쓰비시로 끌려간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2013년 11월 1일 광주지방법원은 근로정신대 사건으로서는 한국 사법부 최초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광복 68년, 일본에서 첫 소송을 제기한 때로부터 장장 14년 8개월만의 승전보였다.

이어 2015년 6월 24일 광주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30년 전에 시작된 진실규명 노력은 막바지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4. 한국시민단체의 진실규명 노력

1) 패소 이후 시작된 투쟁...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출범

2009년 2월 중순. 광주 시내 식당 한 켠에 20여명의 시민들이 무릎을 마주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태동이었다.

"이미 다 끝난 마당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는 우려도 없지 않았다. 소송은 이미 2008년 11월 도쿄 최고재판소 판결로 끝난 마당이었다.

무슨 특별한 기대를 품을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다. 오히려 정작 피해자들이 일본 시민들의 도움에 의지하는 동안 남의 일처럼 무관심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양심의 가책이 더 컸다. 특히 '나고야 소송 지원회'와 '변호단' 등 일본인들의 살아있는 양심은 그동안 이 문제를 등한시해 온 우리를 더 없이 민망하게 만들었다. 당시 '나고야 소송 지원회'는 나고야에서 도쿄까지 약 360km에 이르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매주 금요일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원정 금요시위를 전개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 같은 소식들은 시민모임을 태동시킨 가장 큰 자극제였다.

이렇게 해서 서로 무릎을 마주했지만, 시민모임으로 모인 사람들이 무슨 이름깨나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다. 평범한 직장인, 예비 사회인, 세일즈맨, 학교 선생님, 시민단체 활동가, 학생, 주부,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가진 건 빈손 뿐, 다만 특별한 것이 있다면 누구보다 부끄러워할 줄 알았다는 것이다.

"오욕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있다면, 이것마저 광주가 보듬어 안아야 할 역사적 사명이자 책무다. 우리에겐 아직 빈주먹 뿐, 그러나 3월 12일은 이미 역사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결성 선언문(2009.3.12) 중-

2009년 3월 12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이렇게 닻을 올렸다.

2) 208회에 걸친 1인 시위...13만5천명 항의 서명운동

일본 소송 패소를 계기로 역사에 사라질 뻔한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투쟁에 불을 지른 것은 역설적이게도 미쓰비시였다. 2009년 9월 25일 광주시청 맞은편에 미쓰비시자동차 판매전시장을 연 것이 그것이다.

'시민모임'은 그해 10월 5일부터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미쓰비시자동차 광주전시장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하지만 항의차원으로 시작한 것이었을 뿐 '시민모

임’의 조직력이라야 내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막상 1인 시위가 시작되자 뜻밖의 상황들이 벌어졌다. 1인 시위는 월~금요일 매일 12시~1시까지 진행됐는데, 1인 시위라고 부르기가 머쓱하게 날이 갈수록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었다. 누가 강요한 것도 마지못해 나오는 것도 아니었다. 항의 수단이 많지 않은 가운데, 그나마 1인 시위라도 맥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심전심(以心傳心)이 전혀 의외의 결과를 가져 온 것이다.

2010년 7월 30일까지 총 208회에 걸친 1인 시위 과정에는 1일 평균 8.6명, 참여한 연인원만 약 1,800여명에 달했다.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시민들의 호응이었다.

한편, 2009년 12월 귀를 의심케 하는 황당한 소식이 일본으로부터 전해졌다. 후생노동성 사회보험청이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금 명분으로 해방 당시 액면가 그대로인 단돈 99엔(한화 약 1,200원)을 지급한 것이었다.

‘시민모임’은 곧바로 항의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그리고 휴일도 잊은 채 거리에서, 직장에서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한마디로 99엔 사건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었다. 국민들의 분노는 곧 서명운동으로 표출됐다. 광주 86여개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해 전국의 114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서명운동에 참가했으며, 이렇게 모인 서명은 애초 목표를 훨씬 뛰어넘어 13만 5천여 명에 이르렀다.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각계 인사 20여명으로 일본 항의방문단을 꾸렸다. 2010년 6월23일 오전 13만 5천여 명의 항의 서명용지를 앞세운 항의방문단은 도쿄 시나가와(品川) 역에서 미쓰비시중공업 본사까지 삼보일배(三步一拜) 시위에 나섰다. 미쓰비시중공업 본사를 방문한 방문단은 미쓰비시 측의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협상에 응할 것인지, 응하지 않을 것인지 7월 14일까지 답을 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2010년 7월 14일 미쓰비시는 한 장의 팩스를 보내왔다.

“근로정신대 문제와 관련한 대화의 장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한다”.

-미쓰비시중공업 측 공문-(2010.7.14.)

미쓰비시 측의 전격적인 대화 수용으로 미쓰비시자동차 광주전시장 앞에서 진행되던 1인 시위는 2010.7.30일을 끝으로 중단됐다. 그러나 이미 광주전시장은 1인 시위가 시작된 이후부터 개점 폐업상태나 다름없었다. 결국 미쓰비시자동차는 광주에 진출한 지 1년여 만인 2010년 11월 16일, 부정적 여론과 판매부진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고 말았다. 시민들의 결집된 힘으로 일제 전범기업 판매전시장을 퇴출시킨 첫 사례였다. 더불어 2013년 6월 30일 한국 내에 있는 모든 미쓰비시 자동차전시장은 잠정폐쇄되었다.

3) “99엔 값을 투쟁 기금으로”...10만 희망릴레이

국민의 기대와 달리,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의 내부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수차례 협상에 들어가는 항공비와 체류비를 감당하는 것조차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2011년 초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은 스스로 자구책에 나섰다. 국민 10만 명을 목표로, 1인당 1천 원씩의 협상기금 모금운동에 돌입한 것이다. 일명 ‘10만 희망릴레이’가 그것이었다. 한화 1천원은 곧 일본정부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지급한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 값, 10만 명은 일제강점기 미쓰비시로 강제동원 된 숫자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막막한 것도 사실이었다. 서명운동도 쉽지 않은 마당에, 돈까지 내라고 하는 일에 얼마나 호응할 수 있을지 가늠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시민단체가 국민 10만 명을 상대로 투쟁기금을 모금하는 일도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역사의 치욕을 반드시 만회하자는 국민들의 의지는 예상보다 뜨거웠다. ‘99엔의 치욕을 미쓰비시 투쟁기금으로’라는 호소에 초등학생들부터 80대 어르신들까지 내 일같이 동참하고 나선 것이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회원들도 2011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무등산 등산로에서 거리 모금 캠페인을 펼쳤다. 그 결과 애초 목표를 뛰어넘어 약 12만 2천여 명이 희망릴레이 성금 모금에 동참하는 또 한 번의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 냈다.

4) 광주시 첫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5곳 확산

한편, 2012년 3월 15일 광주광역시의회는 ‘광주광역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지원내용은 ▲월 30만원의 생활보조금 ▲월 20만원 이내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등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조금 지급은 첫 사례다.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광주에서 이 문제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은 짧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칫 역사의 창고에 들어가 묻힐 수 있었던 ‘근로정신대’ 문제를 현실 무대로 끌어내는 과정이었다. 특히 ▲208회에 걸친 미쓰비시자동차 광주전시장 철수 1인 시위(2009.10~2010.7) ▲13만5천여명 사죄 촉구 항의 서명운동(2010년) ▲12만2천여명에 달하는 희망릴레이(2011년) 등의 예는, 피해 당사자를 뛰어 넘어 결집된 시민의 의지를 한껏 보여준 과정이기도 했다.

광주시의 조례 제정은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시민들의 지난한 과정이 자치단체 차원에서 하나의 정책 의지로 반영된 결과였다. 아울러, 시민들의 결집된 힘이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결실로 맺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다.

광주광역시 사례는 곧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옮겨갔다. 경기도의회는 2012년 11월 6일 광주광역시 조례를 골자로 한 내용의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3년 5월 전라남도, 2013년 9월 서울특별시에 이어, 2015년 10월 인천광역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 현재 5개 광역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비록 제한적 수준의 지원이지만 조례의 의미는 단순히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도움에 그치지 않는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정치권의 무관심과 사회적 냉대로부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거나 소외되어 왔었다. 이런 상황에서 역사의 피해자이자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들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개인의 존엄성을 되찾게 해 줬다는 점에서 이 조례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5) 교섭 결렬...미쓰비시 손해배상 소송 제기

국민적 기대에도 불구하고 제1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협상은 성과를 남기지 못한 채 16차 협상을 끝으로, 2012년 7월 6일 최종 결렬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미쓰비시는 무성의하고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다.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이후 뒤늦게 국민들 사이에서 반 미쓰비시 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시간벌기일 뿐이었다.

문제는 한국정부에도 있었다. 시민들과 원고들이 2년 동안 일본을 오가며 어려운 협상 투쟁을 벌이는 동안 우리 정부는 없었다. 협상이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몇 번이나 진행되고 있는지, 요구안이 무엇인지조차 관심에 없었다.

심지어 2012년 5월24일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의무가 있다"는 역사적 판결을 내려 큰 전환점이 마련되었지만, 대법원 판결 직후에도 외교부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65년 협정에 포함된 것이어서 정부가 별도로 요구할 것은 없다"고 하지 않는가 하면, 심지어 "민간의 일"이라는 식으로 발을 뒤로 빼고 말았다. 한국정부의 태도가 이런 식이었으니 협상 결과야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한 '시민모임'은 2012년 9월 26일 '전범기업 미쓰비시 불매운동' 기자회견을 같고 다시 반(反) 미쓰비시 투쟁에 돌입했다. 곧 이어 2012년 10월 24일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은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피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법원을 통해 일제 전범기업을 법적으로 심판하자는 것이었다.

재판 열기는 뜨거웠다. 매번 공판 때마다 70석 정도의 좌석이 학생과 시민들로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미처 자리가 없어 서서 재판을 방청하거나, 아예 법정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상황을 전해 들어야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6) 근로정신대 사건 사법부 최초 배상명령!

2013년 11월 1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204호 법정. 광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 이종광) 재판부는 마침내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을 명령했다. 일본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1999년 3월 1일 나고야에서 첫 소송을 시작한 지 장장 14년 8개월만의 승소 소식이었다. 여자근로정신대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법부 첫 배상판결이기도 했다.

미쓰비시는 곧바로 항소했다. 특히 게이단렌(經團聯)을 비롯한 일본의 4개 경제단체는 판결 직후 이례적으로 "한일 경제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성명을 발표하는 등 재판 결과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 사이 '시민모임'은 다른 피해자들을 규합해, 2014.2.27. 2차 소송(원고 4명), 2015.5.22. 3차 소송(원고 2명)을 제기해, 미쓰비시를 더욱 압박했다. 그리고 2015년 6월 24일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역시 원고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다. 광복 70년 만에 거둔 역사적 쾌거였다.

이날 저녁 5.18 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는 시민과 학생 약 300여명이 모임 가운데, 승소를 기념하는 '시민 보고대회'가 열렸다. 행사에는 10대 중고등학생에서 구순을 바라보는 피해 할머니들까지 세대를 초월해 함께 기쁨을 나눴다. 300여명이 함께 '아리랑'을 부르며 어깨춤을 추는 광경은 오랫동안 기억될 역사의 한 장면이었다.

5. 한일 연대활동의 성과와 의미

1) 잊혀진 '여자근로정신대' 문제 대중적 이슈화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문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함께 대표적인 전시 여성 인권유린 사건이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조명받기 시작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상대적으로 가려져, 그동안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다.

'여자근로정신대'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구별해서 보도록 한 결정적 계기는 '99엔'(한화 약 1,300원) 사건이었다. 그만큼 근로정신대 문제는 '소외 속의 소외'였던 것이다. '99엔' 사건이 다른 경우와 달리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나고야 소송 지원회'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활동 때문이었다.

물론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투쟁이 일찍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법정 안에서 이뤄지는 소송이 중심이었고, 무엇보다 당사자들만의 투쟁이었다. 그러나 시민들이 결합하면서 투쟁은 법정 뿐 아니라, 법정 밖에서도 현재화될 수 있었다. 1인 시위, 서명운동, 불매 캠페인 등의 활동을 통해 국민들은 그동안 역사에 가려져 왔던 여자근로

정신대의 존재에 비로써 눈을 뜰 수 있게 되었다.

2) 한일 연대투쟁...미쓰비시와의 첫 교섭·법정투쟁 승소

'2010년 11월 8일 오후 1시 동경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301호 회의실'. 한일 과거사 문제에 있어 또 하나의 새로운 막이 올랐다. 광복 후 65년 만에 최초로 미쓰비시중공업과 첫 교섭이 시작된 것이다.

2008년 11월 8일 도쿄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할 때만 하더라도 이미 끝난 싸움처럼 여겨져 왔다. 무엇보다,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속에서 서명운동, 1인 시위, 원정투쟁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한 시민들의 힘을 통해 상대를 교섭장으로 불러들였다는 것에서 그 의미는 적지 않다. 비록 협상은 결렬되고 말았지만, 한일 시민단체들의 지난한 연대활동을 통해 제1의 전범기업 미쓰비시를 교섭 장으로 나오도록 한 것은 대일 과거사 문제에 있어 중요한 선례로 자리매김 될 것이다.

2013년 11월 1일 광주지방법원 승소에 이어 2015년 6월 24일, 감격의 항소심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 역시 한일 연대활동의 성과다. 승소는 한국법정에서 이뤄졌지만, 승소의 싹은 이미 '나고야 소송 지원회'와 '변호단'에서부터 시작됐다. 비록 일본 재판에서는 패소했지만, 일본 지원단체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진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발굴했고, 법리적 쟁점 사안에 대한 논리를 정교하게 만들어 냈다.

특히 일본 법원은 '한일청구권협정'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 하면서도, 피해자들이 강제연행, 강제노동을 당했고, 임금을 지불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어진 한국 소송에서의 가중 중요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 셈이었다.

3) 전국적·보편적 인권 문제로 자리매김...'피해자 지원 조례' 5개 곳 확산

시민들의 결집된 힘이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는 '조례 제정'에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는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시민들의 지난한 과정이 자치단체 차원에서 하나의 정책 의지로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핍박을 받아오고 소외되어 온 피해자들에게,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들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개인의 존엄성을 되찾게 해 줬다는 점에서 이 조례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사례가 전라남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로 확산된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여자근로정신대' 문제가 소송에 나선 몇 몇 원고 당사자나 특정 지역을 뛰어넘어, 전국적 범위에서, 보편적인 인권 문제로 자리매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4) 시민 중심의 대일 역사청산 투쟁의 집단적 경험

잘라 말하자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외하면 한일 과거사 문제는 지금까지 피해 당사자와 유족들의 투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투쟁은 보기 드물게 시작부터 현재까지 일반 시민들이 투쟁의 중심에 서 왔다는데 남다른 의미가 있다.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이어진 208회에 걸친 1인 시위는 전적으로 평범한 시민들이 투쟁의 중심이었다. 목표를 뛰어 넘어 13만 5천여명에 이르는 서명운동 또한 매주 거리로 나가 시민들의 힘을 규합하는 노동력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국민 1인당 1천원 모금운동인 '10만 희망릴레이'에는 광주전남을 뛰어넘어 각양각지에서 12만8천여명의 국민들이 호응했다.

이러한 활동은 이 운동에 참여한 대중 '자신'에게 무엇보다 큰 의미를 남겼다. 우리가 나서면 '변화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는 작지만 소중한 경험을 공유한 것이다. 시민 스스로 역사의 '주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시민모임'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5) '너·나·우리'...국경을 뛰어넘는 평화인권 연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남겨둔 지금, 아직 그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들을 얻었다.

우선 일부이지만 피해자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피해 사실이 드러나거나 언론에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극히 두려워했다. 누구보다 따뜻하게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이면서도 마치 큰 잘못을 한 '죄인'처럼 갇혀 지낸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아픈 상처를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의 공개적인 자리에 나와 당당하게 주장을 펼치는 등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 운동의 '주체'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한국과 일본의 뜨거운 양심이 국적과 국가주의의 틀을 뛰어넘어 께 하고 있 것도 큰 수확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반전, 평화, 인권의 길에 국경은 장애가 될 수 없다. 무엇보다 이름을 앞세우지 않고 오로지 자기 양심에 따라 함께 길을 걸어 온 수많은 시민들이 만들어졌고, 앞으로도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한 투쟁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들' 자신인지도 모른다. 투쟁을 통해 지난날 아프고 시린 역사에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고, '남'이 아닌 '나'와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게 됐다. 아울러 부족한 여건을 탓하지 않고 성실하게 역사적 소임을 감당하려

노력해 왔다.

사족에 불과하지만, 이 아름다운 과정들에 감히 어떤 개인의 사심이나 명예 같은 것들이 끼어 들 수 있었을까? 결집된 시민들의 힘은 '역사'를 다시 깨웠고, 그 발걸음은 아직 '진행 중'이다.

[참고]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 현황

구분	광주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조례명	「광주광역시 일제강점기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 조례」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인천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조례」
제정 시행	2012.3월 제정 2012.7월 시행	2012.10월 제정 2014.10월 시행	2013.5월 제정 2014.1월 시행	2013.9월 제정 2014.1월 시행	2015.10월 제정 2016.1월 시행
대상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1년 이상 거주	▲1년 이상 거주	▲1년 이상 거주	▲거주제한 없음	▲1년 이상 거주
수혜 대상	18명	34명	40명	27명	7명
지원 내용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 ▲진료비 지원 : 본인부담금 중 월 20만원 이내 ▲사망시 장제비 : 100만원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 ▲진료비 지원 : 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 ▲사망시 장제비 : 100만원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 ▲진료비 지원 : 본인부담금 중 월 20만원 이내 ▲사망시 장제비 : 100만원	▲생활보조비 : 월 30만 원 ▲진료비 지원 : 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 ▲사망시 조의금 : 100만 원	▲생활보조비 : 월 30만 원 ▲진료비 지원 : 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 ▲사망시 조의금 : 100만 원

[5·18민중항쟁 36주년 기념 학술대회 토론문]

“굴절된 역사, 시민들에 의한 역사의 진실 찾기”(이국언)의 토론문

윤영덕(전남대 5·18연구소)

“혹자는 ‘지나간 과거’라고 한다. 혹자는 ‘언제까지 매달릴 것이냐’고 한다. 한번 묻자. 그러면, 곁에 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딴 세상에서 온 사람인가? 일제에 열세 살 청춘의 푸른 꿈이 짓밟힌 것도 부족해, 해방된 내 땅, 해방된 내 조국의 하늘 아래에서까지 아직 얼굴을 묻고 있다. 저 기막힌 현실을 두고 감히 ‘과거’라고 하는 자, 누구인가? 저 할머니들의 손을 제쳐놓고, 대체 달리자고 하는 그곳은 과연 어디인가?”

“그래서다. 세치 혀로, 어설픈 궤변으로 ‘역사’니, ‘국익’이니 들먹이는 일일랑 아예 거둬라. 저, 할머니들의 눈물하나 거두지 못하는 ‘정치’가 무슨 ‘정치’며, 저 할머니의 아픔 하나 보듬지 못하는 ‘인권’은 무슨 ‘인권’이며, 죄 짓는 자에게 사죄 한마디 묻지 못한 채 도리어 용기를 안겨주고 있는 ‘평화’가 무슨 ‘평화’라는 말이냐!”

“역사는 다시 쓰일 것이다. 결코 국가가 아니었다. 해방 65년 만에, 미쓰비시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낸 것도 시민들의 결집된 힘이었고, 출구를 찾고 있는 미쓰비시로부터 끝내 사죄문(謝罪文)을 받아 쥐는 것 역시, 시민들의 결집된 힘에 있다 하겠다. 팔부 능선을 넘어, 승리의 종착역은 목전에 와 있다. 굴욕의 역사, 이제 ‘10만’의 ‘신 독립군’에 의해 다시 쓰일 것이다. 우리에겐 아직 빈주먹 뿐, 그러나 1월 22일은 이미 역사다!”

2011년 1월 22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이 ‘99엔 문제 해결과 근로정신대 협상기금 마련을 위한 10만 희망 릴레이’를 시작하면서 발표한 ‘10만 희망 릴레이’ 선언문의 일부다. 이 선언문은 단순한 유인물이 아니라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를 일구어 가고자 하는 시민들의 비장한 자기 결의문으로 다가온다.

열 세 살 어린 나이에 일본 군국주의의 전쟁물자 생산에 동원되었던 ‘식민지 소녀’는 급여 한 푼, 사죄 한마디 받아보지 못하고 어느덧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그 기나긴 시간동안 국가는 아무런 관심도 가져주지 않았고, 국민들의 기억 어디에도 그녀들의 역사는 없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다행스럽게도 “부끄러움과 양심의 가책”을 느낀

한일 양국의 시민들에 의해 ‘역사’가 새로 써지고 있다.

지금은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으로 꽤 많이 알려졌지만, ‘시민모임’은 일제 강점기 제국주의 침략 전쟁의 희생양이 된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당시 13세에서 15세 소녀들)의 명예회복과 인권구제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2009년 3월 12일 발족하였다. 그동안 ‘시민모임’은 ‘근로정신대’ 피해자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는데 주력해 왔으며,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법적 소송과 청원 활동 지원, 일본의 양심적 시민단체인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회’와의 국제교류 활동, 대중강좌, 사진전 등을 진행해 왔다. ‘시민모임’의 이러한 활동들은 수십 년 전의 ‘역사적’ 문제를 놓고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보고자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실천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야말로 역사를 직접적으로 대면하고자 하는 ‘정의로운 시민’들이 국가에 의해 부정되고 회피된 역사를 재구성해 왔던 것이다. 발표자의 자평처럼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은 짧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칫 역사의 창고에 들어가 묻힐 수 있었던 ‘근로정신대’ 문제를 현실 무대로 끌어내는 과정이었다.”

지나간 과거의 시간 없이 현재가 존재할 수 없고 현재를 건너뛰는 미래도 불가능하다. 자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의 역사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시민모임’의 활동과정과 성과를 통해 과거의 중요한 사건들은 단지 ‘지나가버린 사건’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재구성되면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사고와 행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살아 있는 현실’이라는 점을 새삼 발견하게 된다.

어쩌면 식민지시대의 기억들은 고통스러운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자꾸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끄집어내느냐고 말한다.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이야기하자고도 한다. 그러나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에 대한 기억을 애써 회피하는 것이 지난 시간의 고통까지 잊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역사에 대한 망각은 오히려 더욱 더 무섭게 현재의 삶을 옥죈다.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과거사가, 민주주의에 대한 순간의 안일함이,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듯이 역사적 사건에 대한 무시나 망각은 바로 내 삶의 터전을 갉아먹는 것과 같다. 그래서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 극우보수세력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역사 왜곡과 폄하가 노골화되고 있다. 역사를 기억하고 뒤틀린 역사를 재정립하는 과정은 치열한 투쟁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발표자가 근로정신대 문제를 ‘역사문제화’해 온 한일 시민단체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시민중심의 대일 역사청산 투쟁의 집단적 경험”과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운동의 ‘주체’로 변

모”했다는 것을 성과로 든 것이 남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역사의 전복: 반헌법열전

오유석(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 연구소)

1. 4월혁명을 다시 돌아본다

이번 20대 총선을 두고 의외의 결과라고들 한다. 예측하지 못한 선거결과를 두고 다시 한번 '자유롭고 평등한 참여'를 통한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공정한 선거'가 민주주의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민주화를 향한 몸부림이 계속되고 있다. 그 민주화의 계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그 선거가 부정으로 치러졌을 때 국민들은 저항으로 응답했다.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의 훼손일지언정 1989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선 '벨벳혁명'이 일어났다. 2003년 그루지야에선 '장미혁명'이 일어났다. 부정선거가 문제였다. 시민들은 장미 한 송이씩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시위대가 건네는 붉은 장미에 진압군은 총부리를 거뒀다. 그리고 정권을 바꿨다. 2004년 우크라이나에선 '오렌지혁명'이 일었다. 여당이 대선 개표를 조작했다. 시위대는 변화의 상징으로 여긴 오렌지색 옷을 입고 행진했다. 재투표를 이끌어냈다. 2005년엔 레바논에서 발발한 '백향목 혁명'도 정권을 퇴진시켰다. 키르기스스탄에선 총선 부정이 초래한 '레몬혁명'이 터졌다. 사람들은 시위현장으로 레몬을 날랐고 독재자는 망명했다. 원인의 결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2008년 신헌법제정, 2010년 다당제 선거를 통한 정부구성을 이끈 2007년 버마의 사프론(승려들의 연황색 가사) 혁명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미 한국은 56년 전에 선구적으로 부정선거에 저항하는 민주혁명을 시작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한국민들의 열망이 비록 1961년 군부쿠데타로 인해 일시적으로 좌절되기는 했지만 막을 수는 없었다. 한국에서의 민주혁명은 1960년 4월에 시작해서 1980년·518 광주민주항쟁로 이어졌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또 다시 군부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주로의 체제전환에 성공함으로써 그 선구성, 저항의 강도와 지속성, 도덕성(비폭력성)의 측면에서 제3세계 및 세계사적 민주주의 투쟁의 중요한 사례로 자리매김 되었다.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분단과 참혹한 전쟁을 거치면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매김을 하기도 전에 일어난 4월 혁명은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 국가 중에서 최초로 일어난 기념

비적인 시민혁명이었다. 더구나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독재정권을 붕괴시키고 나아가 정권을 바꾼 성공한 민주혁명[147]은 '한국'이 최초이며 유일했다.

1960년대는 세계사적으로 2차대전 종전 후 독립한 신생국가들에서 군부 쿠데타에 의한 군사 통치[148]와 권위주의적 변질이 확산된 큰 전환의 시기였다. 독립과 함께 이식된 민주주의라는 강요된 선택[149]을 한 많은 아시아, 아프리카의 신생국가들에서 이미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상황이 속출되고 있었다. 루시앙 파이(Lucian Pye)는 1960년에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미 더 권위적인 관행들을 지향하는 조류가 널리 퍼져 있다. 예컨대 군부가 처음에 민주적인 정치가들의 몫으로 마련되었던 역할들을 맡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가 시작되던 그 첫 해인 1960년 한국에서는 군사쿠데타가 아니라 근대적인 시민혁명이 촉발되었다.

2. '쓰레기통에서 피운 장미꽃': 4월혁명의 세계사적 의의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이승만은 의원들에 대한 폭력과 위협 및 체포를 통해 그리고 의회가 경찰과 군대에 의해 포위된 상황에서 대통령 선출을 의회 간선에서 직선으로 바꾸는 개헌을 단행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했다. 이른바 '부산정치파동'을 바라보면서

147) 4월 혁명은 전통적인 의미(체제의 전체적인 변혁)에서 '혁명'이라고 말할 수 없을지 모른다. 우리가 4월 혁명이라고 부를 때 프랑스 혁명사에서 2월혁명과 7월 혁명이 있고, 태국에서 씹씨 뚤라(1973년 10월 14일에 있었던 유혈사건, 군부독재를 종식 시킨 태국의 입헌민주주의 정치사상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카지무라 히데키, '역사로서의 4.19', 계간 삼천리, 1980년 5월호), 즉 그것은 보다 뿌리 깊은 사회구조의 변혁까지 시야에 넣어가면서 4월 혁명은 미완성이고 더욱 계속 되지 않으면 안 되는 혁명의 출발점'이며 한국 민중운동의 원점이라고 카지무라 히데키는 말하고 있다.

148)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중동지역에서 군사정권이 강화되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국가를 장악하기 위한 군사 쿠데타가 급속히 가속화되었다. 아시아의 경우 파키스탄(1958년), 태국(1957년), 버마(1962년 네 윈 군사 쿠데타), 한국(1961년 박정희 장군 쿠데타), 인도네시아(1967년 수하르토 장군, 수카르노 축출 후 집권), 대만(장개석), 터어키(1960년 5·27 쿠데타), 월남(1963년) 등 많은 국가에서 쿠데타와 군사통치가 시작되었다. 아르헨티나(1966년), 페루(1962년, 1968년), 브라질(1964년), 칠레(1973년) 등 남미에서도 군사정권이 연이어 등장했다

149) 제3세계 국가들이 모두 '신생'국가인 것은 아니었다. 태국은 식민지를 거치지 않고 독립을 유지했고, 라틴아메리카의 대다수 국가들도 나폴레옹 전쟁 중에 공식적인 독립을 얻었다. 그러나 이 국가들이 유럽국가연합들의 국가체계에서 완전한 회원국 자격을 얻은 것은 1945년 이후 세워진 국가들과 같은 대열에 서 있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과 소련이 여타의 모든 국가들 위에 군림했다. 이 양극 체계가 수립됨으로써 강대국들 간에 제3 세계 국가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되었다. 이는 제3 세계에서 중립을 지킬 여지를 주지 않았다. 이러한 경쟁은 미국과 소련으로부터 신생국가들이 무기, 군사훈련, 군사적 자문을 받는 빌미를 제공했다. 제3세계의 군부는 대체로 미국의 군 모델, 군사원조, 훈련방식을 도입했다. 예컨대 미국은 한국에 군사력을 재조직하고 운영했고, 대만의 국민당 군대를 원조했다. 1950년대만 한국군인 9,000여명이 미국에 가서 교육받고 돌아왔다. 1945년에서 1985년 사이에 미국은 130억불의 군사 및 경제 원조를 한국에 쏟아 부었으며 대만에는 56억불의 원조를 제공했다. 이는 아프리카에 제공한 총 68억 7천불의 원조와 라틴아메리카에 주었던 총 148억불의 원조와 비교할 때 엄청난 액수였다.

영국 타임스 '허그로프' 기자는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구하는 것과 같다"고 혹평했다[150]. 나아가 이승만은 1954년 대통령 연임제한을 철폐한 사사오입개헌, 1958년 야당의원들을 지하실에 감금하고 언론에 대한 통제를 위주로 하는 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른바 '2.4 보안법' 파동, 1959년 진보당사건과 경향신문 폐간 등으로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파괴했다. 1959년 미 의회에 보고된 '콜론' 보고서[151]는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바란다는 것은 쓰레기 통 속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다림 같다'고 재차 인용하면서 "넓은 의미에서 한국이 타국의 예를 따라 군사지배가 민간 정치인의 정당을 대체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나 하는 의문은 정당할 것이다. 이것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당분간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썼다.

이승만 정부는 1960년 3월 15일 제 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승산이 없음을 알고 관권을 총동원한 엄청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4할 사전투표 △3인조 9인조 공개투표 △완장부대 동원 유권자 위협 △유령 유권자 조작과 야당성 유권자 기권강요 △투표함 바꿔치기 △개표 때의 혼표와 환표 △득표수 조작발표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선거라는 이름의 강도행위'였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제도로서의 '선거', 그 선거마저 부정으로 치러졌을 때 한국의 국민들은 침묵하지 않고 저항으로 응답했다. 대구학생들의 2.28시위, 3.15 마산의거에 이어 전국 대학생들의 시위는 마침내 4.19혁명으로 폭발했다. '4.19 피의 화요일'에 서울에서 1백여 명, 광주에서 8명, 부산에서 19명 등 전국에서 사망자 186명, 부상자 6,026명의 엄청난 희생자를 내면서 쓰레기통에 처박힌 민주주의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4월 혁명은 명목상의 민주주의일망정, 가짜 민주주의일망정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마저도 훼손하는 독재정권에 항거한 '학생들' 그것도 '10대 중·고등학생'들의 순수한 반민주주의에 대한 이성[152]과 분노의 발현이었다. 4월혁명에 나선 학생들은 한글 수업을 처음 들은 세대였고 일본 군국주의의 교육을 받지 않았고 이식된 미국식 민주주의를 처음 배운 세대였다.

4월 혁명은 근대 이후 서구에서 시작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기나긴 인류의 보편적 투쟁의 흐름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인 참정권 훼손에 저항

---

150) "Expecting democracy to bloom in Korea was like expecting a rose to bloom in a trash can."는 언급은 영국 신문 <The Times> 의 1952년의 한 사설의 내용.

151) 1959년 11월 1일 미국 상원 분과위원회에 제출된 미국의 대한정책에 대한 권고를 담은 보고서로 미국 콜론연구소(Colon Association Institution)의 이 로버트 스칼피노 등 한국 전문가들이 직접 한국에 파견되어 작성되었다. 1960년 1월에서 5월까지 <사상계>에 분할 게재되었다.

152) 『더 타임즈』 5월 7일자는 '한국이 오래된 학생시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며 1960년 4월의 학생들이 선례가 없이 행동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1919년 3.1운동과 1928년 광주학생운동을 환기시켰다. 같은 기사에서는 학교에서 민주주의의 원칙과 좋은 정부가 갖춰야 할 기반에 대해서 배운 학생들이 이론과 실제 사이의 점증하는 모순을 극복하고 민주주의 이상을 구현하고자 했던 것을 혁명의 주요 배경으로 강조했다.

하여 비 서구사회에서 일어난 최초의 민주혁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 냉전시기 서방세계의 일반적 (정치발전론의)통념[153]은 민주주의가 성공적인 자본주의 발전의 결과라는 생각이었다. 이러한 시각은 현재까지도 많은 동아시아 학자들에 의해 공유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과 거리가 멀었다. 한국의 1960년 4월 혁명은 세계사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자본주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존의 설명과 부합하지 않는 기념비적인 중대 사건이었다.

4월 혁명은 세계사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되고 독립한 아시아-아프리카 신생국가들이 발전과 민주주의 구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그것도 냉전과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저개발 신생국가에서 부정선거에 저항하여 아래로부터 권위주의적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고 유일하게 정권을 바꾼 최초의 성공한 민주혁명의 사례[154]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4월 혁명은 1960년 4월 한국에서 발생한 학생들이 선도하고 국민들이 지지하여 민주혁명을 일으킨 독창적이고 비대체적인 사건이었다. 학생들의 저항이 스승들을 불러내고 그것이 다시 시민들로 확장되어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비폭력 평화적으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도중에 1961년 군사 쿠데타로 좌절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역사는 어떠한 지역이나 국민국가의 역사일지라도 세계사의 흐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4월 혁명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울림을 일으켰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만들어 낸 냉전체제에서 분단된 국가였다. 한국전쟁은 사실상 냉전 체제하의 열전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양대 진영의 대립은 더욱 고조되었고 거의 대부분의 신생국가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속해야하는지 진영선택을 강요받았다.

---

153) 냉전시기 서방세계의 일반적 통념은 민주주의란 자본주의의 경제적 성장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이었다. 1960년 로스토우(W. Rostow)의 '경제발전의 제 단계'를 시작으로 립셋(Seymour Lipset)에 의해 발전된 소위 '근대화론'으로 정의되는 이러한 시각은 현재까지도 아시아를 비롯하여 대부분 지역의 많은 학자들에 의해 공유되고 있다. 그러나 근대화론은 현실과는 큰 차이가 있다. 1960년 한국의 4월 혁명은 근대화론이 충분히 이론화되기 전부터 근대화론의 한계를 드러낸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른바 한국에서의 4월 혁명은 비서구권의 저발전국가에 대한 단계론적이고 근대화론에 입각한 서구 중심의 정치발전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불의와 부정의에 저항하는 국민의 민주적 성숙을 세계에 보여주었고, 이로부터 한국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펼치며 제3세계에서 성공적으로 민주혁명을 이룩한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의 하나로 자리매김 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4월 혁명은 전후 세계사의 맥락에서만이 아니라 근대 이후의 보편적 민주주의 혁명의 맥락에서도 큰 의의를 갖는다. 비록 4월 혁명이 반동적 쿠데타의 발생과 장기적 군사독재로 그 혁명 과업이 좌초되었지만, 장기적인 권위주의적 독재 체제 속에서도 한국의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정신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었던 형성한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사건이었다. 4월 혁명의 경험과 기억의 계승은 독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저항이라는 한국 민주화 운동의 원천이었으며, 이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항쟁, 그리고 2002년 촛불시위 등을 포함 한국의 민주화 운동의 성장과 확산의 역사적, 정신적 발판이 되었다.

154) 4월 혁명은 5.16쿠데타로 인해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쟁취한 민권의 승리 경험은 1980년 광주에 이어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되살아났다. 프랑스 혁명사에서 1848년 2월 혁명도 나폴레옹 3세의 쿠데타로 무너졌지만 그 중요성과 의미가 결코 축소될 수 없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제3세계 중에서도 매우 성공적으로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에서 4월 혁명의 의미도 결코 축소될 수 없다.

한국은 그 진영 논리의 한 복판에 있었고 따라서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유진영이 내세우는 '민주주의의 전시장'(show case)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4월 혁명은 동서 양 진영에서 큰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실패는 미국의 전후 봉쇄(반공)정책과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 그리고 위신 모든 것과 연관된 문제였고 그래서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다시 한 번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각국의 신문기사나 외교문서[1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의 4월 혁명은 영국, 프랑스, 미국뿐만 아니라 덴마크, 헝가리, 체코 등 북유럽과 동유럽, 터키, 월남, 필리핀, 일본,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특히 공산주의 국가(소련, 중국, 몽고, 북한, 북베트남 하노이 등) 에도 널리 알려졌다. 한국이 보여준 민주주의를 향한 희생과 열정은 제3 세계 독재자들에게는 국민의 힘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었고 민주주의가 훼손된 국가들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되기에 충분했다.[156] 또, 이후 제3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주화 운동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폭 넓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

1960년 4월 24일자 미국『뉴욕타임즈』사설은 한국의 상황이 "세계대전 후에 출현한 신생 민주국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새로운 활기를 불러 일으킨다"며 "민주주의는 …. 오랜 기간에 걸쳐 갖은 고난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변혁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설은 "중동과 아시아의 많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이 자신의 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기에 군부 통치를 받았거나(버마와 라오스), 여전히 군부통치를 받고 있고(파키스탄과 이라크), 야심에 찬 군인들이 권력을 강화하고 있다(이집트와 몇몇 국가)"고 언급했다. 또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대통령은 서구 민주주의를 자신의 독재권력 하의 '교화적 민주주의'로 대체했고 터키는 모든 정당 활동과 언론의 기능이 억압받고 있는 불확실한 상황이며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는 약한 꽃송이처럼 존재한다고 서술했다[157]. 즉, 민주주의의 실현이란 결국 개별 국가들의 몫이라는 것이며, 그렇다고 할 때 전 후 제3세계의 역사에서도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진실 그 자체임을 보여준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한국의 4월 혁명이었다. 더구나 한국은 당시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냉전반공보루로서 미국이 정한 한계(limit)선 하에서 민주주의의 전시장(진열장, 표본)[158]이었기 때문에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즉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민주화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미국으로서는 미국의 원조를 통해 정치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터어키(멘데레스),

---

155) 본고에서 사용한 4월 혁명 관련 모든 외교문서와 신문기사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출간한 아래 책에 묶여있는 문서와 기사들을 참조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4월 혁명 사료 총집 6책- 외국기록』, 4월혁명사료총집발간위원회,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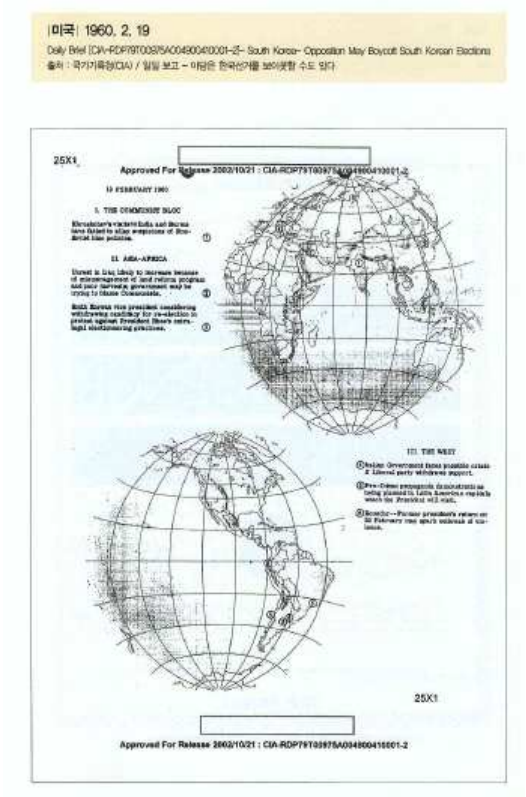
156) 민유기, '서양의 4월 혁명 인식과 그 세계사적 의미', 251쪽.(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정의와 행동 그리고 4월 혁명의 기억』, 선인, 2012).

157) 민유기, 윗글, 248쪽.

158) 다음은 당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엿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한국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바깥 세계에 완전히 다른 얼굴을 선보이는 것. 지금은 사람들이 한국 하면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전부 부정적인 자질들(negative qualities)뿐이다. 한국은 아마 대만만이 거기 필적할 수 있으리만큼 강한 반공주의 시위의 무대가 되어야만 했다'(국무차관 John Steeves가 서울 미 대사관의 Marchall Green에게 보낸 1960년 3월 16일자 서신. 출처: 국가기록청 NARA)

대만(장제스), 월남(고 딘 디엠), 인도네시아(수카르노) 그리고 동북아 안보체제의 동맹국인 일본 뿐 아니라 유럽의 그리스[159]나 스페인(프랑코)까지 한국에서 시작된 민주혁명의 불길이 전파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할 상황이었고 이를 잘 알고 있는 유럽국가와 언론들의 주목을 끌었다.

<그림 1 > 미국의 세계전략 보고


[미국] 1960. 2. 19

Daily Brief [CIA-RDP79T00975A004900410001-2]- South Korea- Opposition May Boycott South Korean Elections

출처 : 국가기록청(CIA) / 일일 보고 – 야당은 한국선거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

25X1

Approved For Release 2003/10/21 : CIA-RDP79T00975A004900410001-2

25X1

Approved For Release 2003/10/21 : CIA-RDP79T00975A004900410001-2

당시 4월 혁명에 대한 각국의 반응을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프랑스, 미국, 영국은 1960년 4월 19일부터 이승만 하야까지 거의 매일 관련 기사와 논평을 담은 꽤 긴 기사를 보도했고 그 후에도 제 2공화국의 탄생과정에 대해 많은 보도를 했다. 당연히 북한과 중국도 매우 민감하고 신속한 반응을 보였다. 당시 북한과 중국, 북베트남 하노이 등에서는 4월 혁명을 지지하는 거대한 군중대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일본 역시 인식의 차이는 있지만 1959년에 이어 1960년 일본에서 일어난 미일안전보장조약반대투쟁(안보투쟁)이 5월에서 6월에 걸쳐 확대되어 가던 상황에서 거의 비등한 비중으로 4월 혁명을 보도했다. 돌이켜 보면 '안보의 해'라고 이름 붙여진 1960년은 한·미·일 3국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

159) 심지어 지중해 연안의 그리스에서도 1967년에 군사쿠데타로 민주주의가 퇴조했으며, 포르투갈에서는 1974년 민주주의가 사라졌다.

를 갖는 해였다. 미국의 경우 보수적인 공화당 아이젠하워정권으로부터 보다 진보적인 케네디 정권으로 바뀌고 일본에서도 미일 안보조약 개정투쟁에서 악명을 떨친 가시 내각으로부터 이케다 내각으로 변동되었으며 한국에서는 12년 장기독재의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다. 이른바 1959년에 제기된 일본에서의 미일안보조약의 개정문제와 1960년의 4월 혁명이 맞물려 있었던 것이다.[160] 안보투쟁은 미국이 바라는 동북아집단방위체제구축에서 일본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인바, 한편으로는 군사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양 측면을 다 포함하는 것이었다. 4월 혁명은 안보 투쟁과의 공명, 4월 혁명의 안보투쟁에 대한 '격려'라는 차원에서 상호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즉, 직접적인 관계보다는 서로 교감하는 심정적 수준에서의 연대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다카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일본과 한국의 민중이 반민주주의적인 정부, 독재적 군사적인 정권에 대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서로 인정했다'고 말하고 있다.[161]

이렇듯 4월 혁명은 전 세계적으로 언론의 깊고 예민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고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보도되었다. 이를 당시 해외에서 4월 혁명 전개과정 보도에서 사용한 용어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4월 혁명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각이 처음에는 반정부 시위나 심각한 폭동이라고 언급되다가 '혁명'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맹아단계의 국민혁명이 확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표현한 4월 20일자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과 4월 19일 상황을 보도하면서 "혁명의 열정에 휩싸인"[162]이란 표현을 쓴 4월 20일자 프랑스의 르 피가로이다. 르 피가로는 4월 25일자 신문에서 "다음의 봉기는 분명히 혁명이 될 것이다"며 4월 26일 이승만 하야 상황을 예측했다. 뉴욕 타임즈는 4월 27일자 신문에서 이승만 하야발표를 통해 '완전한 혁명(full-fledged revolution)'[163]이 이루어졌다고 썼다. 프랑스의 르몽드는 5월 6일자에서 한국학생들을 '혁명의 장인들'이라며 혁명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다. 반면에 일본신문들은 4월 혁명에 대해 대부분 '폭동'(暴動) 이나 '데모'라고 보도한 것이 매우 특징적이다. 다만 '폭동'의 내용은 그 말의 인상과는 다르게 이승만 정부의 오랜 독재정치에 대한 대중의 저항'이라는 의미로 보도했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160) 이대근, "4월혁명을 전후한 미국의 대응전략",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 혁명』, 한길사, 1990. 272쪽).
161) 오타 오사무, "일본에서 본 4월 혁명", 277-8 인용.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정의와 행동 그리고 4월 혁명의 기억』, 선인, 2012).
162) Le Figaro, "Situation toujours explosive en Corée; Les prochaines émeutes pourraient bein être une rêvolution", 4월 20일, 1960년.
163) New York Times, Mr. Rhee Resigns, 4월 27일, 1960년.

<표 1> 해외 보도에서 사용된 4월 혁명에 대한 표기

국가	신문 (성격)	날짜	명 칭	
프랑스	르피가로 (보수)	4.12	violent incidents, insurrection, manifestationsani-gouvermentales	폭력적 사태, 반란사태, 반정부 시위
		4.20	manifestationsani-gouvermentales, sanglantes manifestations anti-gouvermentales rêvolution	반정부 시위, 유혈 반정부 시위, 혁명적 열정
		4.21	les graves émeutes	심각한 폭동
		4.22	émeutes	폭동
		4.25	situation explosive, agitation, émeutes, la crise coréene, une révolution	일촉즉발의 상황, 소요, 폭동, 한국의 위기, 혁명
		4.26	nouvelles manifestations, procession triomphale	새 시위, 승리에 찬 행진
		4.27	nouvelles manifestations, movement insurrectionnel	새 시위, 봉기 운동
		4.28	l'éffondrement du regime, la révolution	체제 붕괴, 혁명
		5.2	"jeunes héros de la révolution" (의원 발언 인용)	"혁명의 젊은 영웅들"
	르몽드 (중도, 친 사회당)	3.17	les incidents	사태
		4.15	émeutes contre le gouvernment	반정부 폭동
		4.17	movement antigouvernmental, nouvelle manifestation, émuetes	반정부 운동, 새 시위, 폭동
		4.19	movement antigouvernmental	반정부 운동
		4.20	une amère victoire, une vague de manifestationsani-gouvermentales, évènements graves	쓰디쓴 승리, 반정부 시위 물결, 심각한 사태
		4.21	les troubles de Seoul, incidents sporadiques	서울의 혼란상황, 산발적 시위 사태

국가	신문 (성격)	날짜	명 칭	
		4.22	la grave crise, la vigoureuse protestation	심각한 위기, 왕성한 항의
		4.27	nouvelles manifestations	새 시위
		5.6	révolution	혁명
		5.21	manifestation	시위
	뤼마니떼 (공산당 기관지)	4.12 ~19	manifestation	시위
		4.20	manifestation, insurrection, fin de la dictature, la dictature menacée	시위, 봉기, 독재의 종말, 위협에 처한 독재
		4.21	incidents, manifestations	사태, 시위
		4.22 ~26	nouvelles manifestations	새 시위
		4.27	insurrection triomphe, manifestation	봉기가 승리하다, 시위[164]
		4.28	이승만 도망가다 s'enfui, 늙은 독재자 le vieux dictateur, (평양에서의 지지 시위: 인민의 영웅적 투쟁 la lutte héroïque du peuple)	
미국	미국 뉴욕 헤럴드 트리뷴	4.19	anti-government demonstrations	반정부 시위
		4.20	Korea Youths riot, a massive day-long riot, disturbances, a reflection of popular dissatisfaction, the worst demonstration	폭동, 소요 사태, 대중 불반의 반영, 최악의 시위
		북한 보도 인용	uprising, riot, struggle, battle against, tragic rioting : 북한에서의 지지 시위 관련 보도: 반정부 폭동, 반 이승만 투쟁의 불길, 봉기, 폭동, 투쟁, 대항한 싸움, 비극적 폭동사태	

국가	신문 (성격)	날짜	명 칭	
		4.21	civilian riots, civilian demonstrations, demonstration against the government, riot-torn country, grievances which provoked the riots=real, the rebellion=spontaneous and genuine, reflecting the pent-up frustrations of those who, the currents of resentment=deep, rioters who died=patriots	시민 폭동, 시민 시위, 반정부 시위, 폭동에 갈갈이 찢긴 나라, 폭동을 촉발시킨 불만(폐해)=실제임, 반란=자발적이고 진정한 것
		4.23	anti-government uprising, student and popular indignation, mounting protests, nation-wide student demonstrations, the upheaval	반정부 봉기, 학생들의 또한 대중적인 분노, 점증하는 항의, 전국적인 학생 시위, 격변
		4.24	anti-government demonstrations	반정부 시위
		4.26	new riots, new insurrection, anti-government riots, anti-government demonstrations	새 폭동, 새 봉기(반란), 반정부 폭동, 반정부 시위
		4.27	steady rioting, demonstrations, revolution, student riots, crisis	지속된 폭동, 시위, 혁명, 학생 폭동, 위기사태
		4.28	a week of bloody rioting	유혈 폭동이 벌어진 한 주간
		4.29	young rebels, violence	젊은 반란자들, 폭력사태
		4.27	full-fledged revolution(뉴욕 타임즈)	완전한 혁명
영국	더 타임즈 (보수)	4.19	sit-down protest, anti-government demonstrations, rioting, the gravest crisis	연좌시위, 반정부 시위, 폭동, 가장 심각한 위기사태
		4.20	uncontrollable protests	걷잡을 수 없는 항의 운동

국가	신문 (성격)	날짜	명 칭	
		4.21	revolution, anti-government demonstrations, guerrilla actions, the demonstrations=reflected popular dissatisfaction	혁명, 반정부 시위, 게릴라 행동, 시위=대중의 불만을 반영
		4.26	violence and insurrection, student demonstrations, rioting, students' sacrifice	폭력사태와 반란사태, 학생 시위, 폭동, 학생들의 희생

3. 반혁명의 시작– 좌절된 부정선거 원흉 처벌

1) 3.15 부정선거와 4월 혁명 재판

3.15 부정선거는 명백한 국민주권을 짓밟고 무시하고 폐물화시키는 행위였다. 따라서 그 행위는 '1960년 부정선거 관계자 공소장'을 보더라도 내란죄로 다스릴 일이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거할 권리가 있으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각각 선거한다"고 규정한 헌법과 그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통령의 선거절차를 규정한 대통령,부통령선거법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통치권의 일종인 선거권을 전면적으로 유린하여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정치제도를 근본적으로 파괴, 말살함으로써 국가를 변란하며 전술과 같이 헌법과 대통령,부통령선거법에 위배하는 부정한 방식으로 이승만과 이기붕의 각 정부통령 당선을 위제하여 그들로 하여금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출된 정부통령인 것 같이 가장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정부통령으로 국회에

164) 장면의 말 인용: "국민의 승리une victoire du peuple" (이승만의 "강제forcée" 사임은 세계만방에 자랑스럽게 알릴만한 국민 권리의 승리"). 이 기사는 전체 논조가 매우 친 민중적, 친 봉기적임. 이승만 하야를 요구하며 새롭게 일어난 시위의 자세한 양상(이승만 동상들을 시위대가 모조리 부순 일, 시위대 수(서울 수천 명, 부산 5만 명, 인천 고등학생 500명), "최인규와 한희석에게 죽음을!" 외치며 시위. 최인규는 내무부 장관, 한희석은 이승만 선거운동을 총괄했다고 설명)을 보도. 이승만 하야 약속 발표 이후 시위대와 시민들 반응을 보도. 미국의 대응, 26일 15개국 대표들이 워싱턴에서 회동, 성명 발표한 일, 같은 날 유엔 한국 옵저버를 방문한 유엔 미 대표가 미국의 우려를 전달한 일 등을 상세히 보도.

선포취임케하여 동인 등이 조직하는 비합헌적인 위조 불법정부를 합헌 합법적인 정당한 정부인 것처럼 참칭할 목적으로.....”

또 부정선거에서 비롯된 이 사건을 ‘혁명’이라고 규정하는데 있어서 더 이상의 논란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4월 혁명 이후 부정선거 관련자, 경무대 앞 발포 책임자 등 ‘반민주행위자의 처벌’문제가 대두되었다. 장면정부가 떠안은 긴급한 과거사는 3．15부정선거원흉 등의 처단문제였다. 그러나 4월혁명의 여세로 지지를 받아 집권한 장면정부는 여론의 빗발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혁명입법에 소극적이었다.

한 신문은 사설에서 혁명의 완수를 위해 특별처벌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역설하면서, 현직 검사들의 대다수는 정치적으로 보아 홍진기, 장경근, 임철호 등의 계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판사들이란 최고 수뇌인 대법관을 위시해서 모두다 이승만정권[165]의 압력에 눌리어 양심과 지조를 팔고 재판의 독립을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썼다.

“현재 검찰이 3．15부정선거의 원흉들에 대해 선거법으로만 다스리려고 하고 국헌문란죄[166]를 적용코자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언어도단이라 할 것이다. 이들에게 중형을 가하지 않는다면 민심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을 것이요, 또 4．19대학살사건에 대해서 살인죄를 적용치 않는다면 4．19에 희생된 청춘의 영령들이 위로되지 않을 것이요”(『동아일보』 1960년 5월 11일자)

4．26직후부터 최인규 등 3．15선거 당시 장관이나 자유당 기획위원들이 거의다 구속되었으나, 과연 이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철저히 처리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처음부터 제기되었다. 이미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어떻게 무산되었는지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로서는 당연한 의문이었다. 제헌국회에서 반민법이 만들어졌지만 반민특위는 제대로 활동도 해보지 못하고 이승만과 친일비호세력들에 의해 해산되고 말았다. 반민특위의 손이 일제 친일 경찰[167]의 한 사람으로 지목되던 최운하, 노덕술 등에게 미치자 서울 수도청의 중부서장이 지휘하는 40명의 무장경찰이 특경대를 습격해서 수사기능을 마비시켰다. 당시 장경근 내무차관과 김태선 시경국장은 이 반민특위 습격을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옹호했다. 이승만대통령도 반민특위의 반민족행위자 처단을 월권 행위라고 비난했다. 11년 뒤

165) 이승만 정부에서 2명의 대법원장과 17명의 대법관이 배출되어, 이 중 부일협력자는 13명(68.4%)다.
166) 1948년 헌법 공포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통령은 아래와 같은 대통령선서를 거부한 일이 없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헌헌법 제 4장 제54조).
167) 3. 15선거때 서울시와 각도의 경찰국장 전원과 경찰서장의 다수가 친일행위자였고, 1960년 5월 현재 경무관 이사관중 약 7할, 총경중 약 4할, 경감중 약 3할, 경위중 약 15%, 정복경찰관의 약 1할, 사복경찰관의 약 2할이 친일행위자였는데,(『동아일보』1960년 5월 7일자 석간) 인적인 면에서나 활동면에서 일제의 것을 이어받아 일제강점기, 그중에서도 일제말의 근성이나 체질이 해방후 그대로 전승되었다.

장경근은 자유당 강경대 보스가 되어 3.15부정선거를 기획했다.4월 혁명 후 구속되었다가 병보석중 서울대학병원에서 처와 함께 일본으로 도주했다.

特警解散내가命令
反民逮捕는한꺼번에하라
李大統領A·P記者에言明
警察行
金明東議員
金局長談金反駁

<1949년 6월 8일자 경향신문>

1960년 3월과 4월에 일어난 사건의 모든 항쟁을 묶어서 4월 혁명이라고 할 때 혁명으로 가는 전 과정에 가장 큰 기폭제가 되었던 것은 4·**11 제2차 마산시위였다. 제2차 마산시위는** 3월 15일 제1차 마산시위 때 행방불명되었던 김주열의 시신이 '오른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되자 격렬한 시위로 경찰의 만행을 규탄했다. 이렇게 시작된 4월 11일의 마산 2차 시위는 일단 모든 혁명의 출발이 그러하듯 가열된 솥뚜껑이 솟구치듯 갑작스레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는 예고되지 않은 봉기였다. 여기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될 인물이 등장했다. 그는 김주열을 사망에 이르게 한 최루탄을 쏜 장본인, 당시 마산경찰서 경비주임 박종표라는 인물이었다. 그럼 박종표가 누구인가? 그는 일본헌병보 출신의 악질 헌병 아라이 겐키치로[168] 반민특위에 입건되어 공판을 받았으나 무죄로 풀려난 인물이었다.[169]

168) 한홍구, "법 갖고 헌법 파괴한 그대, '수구 법비'라 불러주마" 한겨레, 2015년 7월 16일자.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00677.html

169) 결론부터 말하자면 박종표는 5.16쿠데타 세력에 의한 혁명재판에서 사형이 구형되었지만 다른 부정선거관련자들 전원이 감형 혹은 특사로 풀려났듯이 사형에서 무기, 1963년 5월 무기에서 특별 감형되었고 그 해 11월 박정희 최고위장에 의해 특별사면 되었다.

출처: 한홍구,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을 제안하며, 2015년 6월 발표문에서 인용(경향신문, 1949년 8월 20일자)

문제는 개헌을 하지 않으면 특별처벌법 제정이 어렵다는 것이었는데, 헌법개정안에 민주주의 반역자와 부당 불법하게 축재한 자들을 다스리기 위한 조항이 삽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자유당과 민주당의 야합에 의해 묵살되었다. 왜냐하면 선국회해산후개헌이 아니라 선개헌후선거로 민주당이 야합함으로써 자유당국회에서 개헌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1960년 6월 15일 내각책임제 개헌안이 통과되면서 새로운 사태가 발생했다. 부정선거원흉으로 구속된 자들의 담당 변호사들이 - 이들은 법조계의 거물급이 많았다 - 부정선거원흉 처벌법규인 정부통령선거법 등이 개헌으로 실효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하고 살인, 횡령 등의 범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석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이와 함께 형벌불소급원칙[170]이 부정선거원흉에게도 타당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

되었다.

이상하게도 부정선거원흉 등의 처단문제는 7 . 29선거에서 쟁점이 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부정축재를 환원해 활용한다는 막연한 공약만 내걸었을 뿐이다. 사회대중당은 4월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3 . 15부정선거 범행자들을 국헌전복 내란범죄로 처단하겠다고 공약하였으나, 부각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선거운동과정에서 주목받지도 못했다.

9월에 들어와 4월혁명 유족들은 원흉들의 엄단을 요구하는 데모를 법원변호실에서 벌이며 부정선거원흉 . 발포경관에게 무죄 변론을 한 변호인은 혁명정신을 모독했다고 규탄했다. 9월 9일 서울변호사회는 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비민주행위자 및 부정축재자 특별처벌법안을 작성해 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민의원에서는 9월 15일 김준태의원 외 10인이 '민주반역자처벌임시조치법안', 부정축재특별조치법안, 부정선거관여자 공민권정지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장면 총리는 9월 21일 부정선거원흉처단문제는 현행법으로 되는 것을 보고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장 총리는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었다.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변호사들이 무죄를 주장하는 가운데, 9월 26일 검찰은 내무부와 경찰 책임자인 최인규, 이성우, 이강학, 최병환 등에게 사형을, 자유당 기획위원들한테는 15년에서 4년 6월을, 국무위원이었던 송인상, 신현확 등에게 12년 등을 구형했다. 언뜻 보면 검사가 중형을 선고한 것 같았지만, 내무부 관련자를 제외하고는 **언론에서 주장한 국가변란죄 및 국가보안법 등을 적용하지 않고** 허위공문서 작성, 횡령, 직무유기 등을 적용하였는데, 그것은 이 사건의 결말을 시사했다.[171] 10월 8일 장준택판사는 정부통령선거법은 실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최인규 등의 부정선거 혐의에 대한 판결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발포명령사건에 관해 서울시경국장이었던 유충렬과 서울시경 경비과장이었던 백남규에게만 검사의 구형대로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홍진기(전 내무부장관) 조인구(전 치안국장) 및 곽영주(전 경무대비서관)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장부통령저격 배후조종사건에 관련해 임흥순(전 서울특별시장) 이익흥(전 내무부장관) 김종원(전 치안국장) 장영복(전 치안국特情과장) 등에 대해 경형 내지 무죄를 선고했다.

---

170) 헌법 23조는 "어떤 행위가 행위시의 법에 의해서 범죄로 구성되어질 때가 아니라면 어떤 사람도 범법을 이유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제헌헌법 제23조: 제23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또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두 번 처벌되지 아니한다.

17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편, 『한국민주화운동사』, 2010, 1권 제 2장을 참조하여 일부 발췌하였음.

<표 2> 1960년 10월 공판에서 구형과 판결의 형량 차이>[172]

피고	과거지위	*혐의	구형(검찰)	판결
홍진기	내무장관	2,4,5,6	사형	금고 9월
유충렬	서울시경국장	1,4	사형	사형
곽영주	대통령경호실장	9,10	사형	3년
임흥순	서울시장	3,4,5,8	사형	3년,벌금
이익흥	국회의원/전 내무장관	3	사형	무죄
김종원	치안국장	3,7	사형	무죄
장영복	경찰간부	3,4,7	사형	8월(1년유예)
박사일	경찰간부	3,4,7	사형	3년
오충환	경찰간부	3,7	사형	8월(1년유예)

*** 혐의 : 1-학살, 2-학살음모, 3-학살기도, 4-선거법위반, 5-공문위조 및 유용, 6-무고음모, 7-위증, 8-뇌물착복, 9-공무방해, 10-탈세 및 처벌에 관한 법령위반**

2) 혁명 입법 논란

10 . 8판결에 대해 여론은 들끓었다. 10월 8일 마산에서 1천여명이 철야데모에 들어갔고, 서울의 모든 경찰은 돌발사태에 대비해 완전무장했다. 장준택판사와 나항연 서울지법원장, 관계판사 및 무죄로 석방된 자들은 피신했다.

172) 경향신문, 1960.10.8.;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한국혁명재판사I」, 1962, 404쪽-415쪽. 한승주, 「제2공화국과 한국민주주의」, 종로서적, 1983,140쪽 재인용.

모두三十六計
擔當判事와釋放된被告들
六大事件判決에새餘波
羅院長과 세判事는家族까지
食母만이不安속에집을지켜
檢察서不服控訴
48被告에對한法院判決에
凱旋將軍과도같이 우쭐
政界나오겠다고

(경향신문, 1960년 10월 9일)

10월 9일 장총리는 정부로서는 현행법으로도 처단이 충분하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혁명입법을 위한 개헌을 하겠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4 . 19과업완수를 촉진시키고 이미 석방된 자들을 재수감하기 위한 민주반역자에 대한 형사사건임시처리법안이 민의원에서 통과되어 참의원을 거쳐 11월 13일 공포되었다.

민의원은 10월 17일 헌법 부칙에 3 . 15정부통령선거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 부정행위 항의에 살상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1960년 4월 26일 이전 현저히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173]*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고,* 1960년 4월 26일 이전에 부정축재를 한 자에 대한 행정상 또는 형사상 처리를 하기 위한 특별법을 둘 수 있으며, *이들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것을 신설한 헌법개정안을 제안해 11월 23일 재석 200명중 191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4차 개헌- 부정선거 및 부정축재자에 대한 소급 처벌 근거를 헌법 부칙에 놓은 소급법의 사례)*

173)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안은 대상자문제 때문에 우여곡절이 많았다. 민의원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참의원은 의장인 백낙준을 위시해 대상자가 많았다. 연세대학교총장으로 자유당정부통령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지도위원이었던 백낙준은 10 . 8판결 전날에 국회내 자유당계를 반혁명세력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것에 “7 . 29선거에서 당선된 자유당인사는 당당히 국민의 신임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한 바 있었다. 우여곡절을 겪다가 1960년 12월 31일 민의원은 자동적으로 공민권이 제한되는 자동케이스를 폐지한 참의원 수정안을 161 대 6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키고 민의원안을 확정 통과시켜 당일로 공포되었다. 법무부는 1961년 2월 25일 7년 동안 공민권이 제한될 공민권제한 자동케이스 제1차 해당자로 이승만과 자살한 이기붕 등 609명을 공고했다.

3)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소의 활동

특별검찰부장 선정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물망에 오른 사람들이 기피해 민의원은 1961년 1월 12일에야 특검부장으로 대구고검검사장인 김용식[174]을 선임했다.

그는 원래 대구고법원장이었는데 이승만의 법관 연임 거부로 물러났다가 4월혁명으로 특별히 검사장에 임명되었다. 상경한 김용식특검부장은 먼저 30명의 검찰관과 각도마다 15명씩으로 구성된 조사위원 인선에 들어갔다. 1월 17일 특별검찰부(특검)는 육군 헌병감실 건물에서 정식 출범했다.

그렇지만 특검은 발족 6일 동안 수사는커녕 뚜렷한 운영방침마저 세우지 못하다가 25일경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흡사 해방후의 반민특위가 천대받던 그대로였다.

공소시효 만료일이 2월 28일이어서 활동기간이 25일부터 계산하면 34일 정도였다. 이 짧은 기간에 정부의 홀대를 받으며 피의자를 체포해 심문하고 관계 증거를 확보해 기소를 해야 했다. 처음부터 특검 활동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었다. 특검은 중요 사건 중심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천명했지만,

1) 경무대 앞 발포명령사건의 경우 홍진기, 조인구, 곽영주 등이 상호 모의를 했는가가 핵심이었는데, 당시 국방부장관였던 김정열이 입을 열지 않아 수사는 겉돌고 말았고,

2) 2월 1일 군부의 부정선거수사에 들어갔으나 장면정권과 매그루더 미 8군사령관이 반대해 3일째밖에 안 된 2월 4일 벌써 수사보류결정을 내렸다.

3) 정치자금조달관계의 경우 이기붕 친척인 이기호 제일은행장을 구속했을 뿐 담당 검찰관을 교체하고 '산업위축'이라는 이유로 자금조달재벌들에 대해 일체 손을 대지 않기로 결정해 4월혁명단체들의 항의를 받았다.

2월 28일 공소시효 종료일까지 특검은 250여건을 입건, 검찰관수보다도 적은 26명을 구속 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불기소 석방이 10여건, 기소중지가 180여건이었다.[175]

---

174) 그는 특검부장 시절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죽음으로써 국민 앞에 사과하겠다." "쿠데타를 당해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해도 4월 혁명 영령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뿐." 자살을 이미 예고한 걸까? 5월16일 쿠데타가 발발했다. 군부는 20일 특검 수사관을 모두 트럭에 실어 마포 형무소에 가둬버리고 다음날 특검의 예산 낭비와 뇌물수수 의혹을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앞으로 특검의 방향을 묻는 군부의 물음에 '법대로 하겠다'고 한 그의 답변이었다. 혁검은 그해 9월 그를 불기소 처분했다. 낙향하여 변호사 개업 중 자살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32794.html

175) 이것은 『동아일보』1961년 3월 1일자 사설과 이정식, 1976『해방30년사』3, 성문각, 276쪽에 의한

거물급의 다수는 이미 일반검찰청에서 일반법원에 기소했다 하더라도, 특검이 송사리만 잡고 용두사미격으로 끝난 것은 공소시효 기간이 너무 짧았고, 정부, 국회, 법원이 비협조적인 데다가 정치적인 압력이 적지 않았고, 부정선거를 저지르는데 앞장섰던 일반경찰이 태업상태였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특별재판소장은 전주지방법원장으로 있을 때 민주당 이철승의원에게 무죄판결을 내려 법복을 벗었던 문기선변호사가 선임되었다. 1월 25일 5부 재판부가 모두 구성되어 2월 4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갔다. 특별법 제정 이전에 일반법원 소관이었던 부정선거 관련자들 재판까지 맡아, 쿠데타 전날인 5월 15일까지 103건에 263명을 접수했지만, 4월 17일 내무부사건(부정선거 실행에 핵심 역할을 했던 내무부 관련자)에 대해 최인규 사형, 이강학 징역 15년 등의 판결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쿠데타로 더 이상 판결을 하지 못했다. 내무부사건도 연합심판부의 확정판결까지 가지 않아서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셈이 되었다.

4) 5.16 쿠데타와 '혁명재판'

5.16 직후 주체들이 4월혁명 후속조치로 시행된 특별법과 관련하여 취한 조치는 5월 27일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 17호에 의거,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기능을 정지시킨 것이었다(국가재건최고회의령 17호). 즉, 장면 정권하에서 진행되던 특별법 재판을 정지시키고 검찰관을 구속하여 민주당 정권하의 재판이 불철저하고 부패했다는 것을 부각시켰다.
1961년 6월 21일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 조직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의 법적 근거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었다. 비상조치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특별법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 심판하기 위한 혁명재판소(이하 혁재)와 혁명검찰부(이하 혁검)의 조직과 소송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법이었다. 이어 그 특별법에 해당하는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었다. 소급입법의 특별법이 제정된 근거인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은 6월 6일 공포되었는데 이 법은 현행 헌법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고 이 헌법에 대체할 잠정 조처였다. 이 비상조치법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설치와 권한(새로운 정부가 수립되기까지의 최고통치기관) 등을 주로 규정한 초헌법적 법이었다. 이 법은 22조 1항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5.16 군사혁명 이전 또는 이후에 반국가적 반민족적 부정행위 또는 반혁명적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2항에서 '전항의 형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소를 둘 수 있다'고 했다. 그

것이고, 김용식특검부장은 입건 820건중 구속기소 21건, 불구속기소 10건, 불기소결정 789건, 도망으로 인하여 공소시효를 중단시킨 건수 104건이라고 말했다.(앞의 책, 282쪽) 수치가 신문보도마다 다르지만 비슷한데, 김부장 발표와는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집계 방식 때문일 것이다. 한 신문은 거물급 포함 181명이 기소중지되었다고 보도했다.(『경향신문』1961. 2. 27. 석간)

런데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 조직법에 의하면 혁재와 혁검은 위 특별법 이외에도 부정축재처리법과 민주당정부에서 제정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에 규정된 죄도 재판권을 행사했다(7조).

5월 27일 12시를 기하여 구정권하의 특재와 특검은 기능이 정지되고 공판에 계류 중이던 사건도 정지되었다. 6월 21일 혁재와 혁검 조직법이 공포되어 이 법 부칙 제2항에 의해 특재와 특검 조직법도 폐지되었다. 이에 특재와 특검도 해체되었다. 특재에 계류 중인 자는 동 조직법 부칙 3항에 의해 혁재에 수사 기소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구정권하의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은 7월 1일 특별법의제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에 의거 국가비상조치법 22조 1항에 의거한 특별법으로 간주되었다.

7월 8일 대통령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제청에 의해 혁재소장에 최영규 준장, 혁검부장에 박창암 대령을 임명했다. 이들은 7월 12일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재판소와 검찰부를 구성했다. 이리하여 본격적인 혁명재판[176]이 진행되었다.
특별조직법이 공소시효를 2개월로 한데 반해 혁명조직법은 5개월로 했다. 혁명조직법이 훨씬 비상시의 혁명적 입법에 가까운 조직법이라 할 수 있다.
혁명검찰부는 7월 12일 시무식을 한 이후 1961년 12월 11까지 551건 1,474명을 수리하고 이중 264건 713명을 기소하여 기소율은 48%였다.
혁명재판부는 1961년 7월 29일 최인규 등 부정선거 사건을 비롯하여 7대 사건에 대한 공판을 5개 재판부에서 일제히 연 것을 시작으로 하여 1962년 2월 14일 250건 697명을 처리했다. 이중 영구미제(14명), 이송(150명), 공소기각(69명)을 제외한 161건 464명을 판결했다. 상소심은 4월 27일까지 105건 325명으로 상소율은 70%였다. 이리하여 상소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121명과 상소심을 통해 판결이 확정된 325명을 합하여 446명의 형이 확정되었다. 총 10개월간에 걸쳐 야간공판과 휴일공판을 강행하여 총 901회 8,200여 시간의 공판이 진행되었다.

176) 사실 혁재와 혁검이 정식으로 활동하기 전에 이미 군경검 중앙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합동수사본부는 용공분자 및 민주당 요인을 포함한 반국가행위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펴고 있었다. 육군방첩부대장 김재춘 대령을 본부장으로 하여 내무부 치안국장 조흥만 준장, 대검찰청 정보검사 정희택, 육본 법무감 김태청 준장 등이 그 구성원이었다.

< 죄목별 기소인원과 판결자수>

	수리인원(비율)	기소인원	판결자수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	396(26.9%)	224	116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위반			
2조(선거)	104(7%)	98	36
3조(특수밀수)	66(4.5%)	31	20
4조(독직)	100(6.8%)	45	41
5조(반혁명)	140(9.5%)	46	42
6조(특수반국가행위)	608(41.3%)	216	190
7조(단체폭력)	33(2.2%)	29	9
부정축재처리법위반	27(1.8%)	24	14
합계	1474(100%)	713	468

혁명재판 판결 내용을 보면 위 표에서 보듯이 구정권하의 재판 보다 비교적 중형이 내려졌다. 특히 최인규 이강학 한희석 등 부정선거원흉으로 지목된 자들과 임화수 이정재 유지광 등 정치깡패들과 곽영주와 홍진기 등 발포사건 관계자들에게 중형이 부과되었다. 부정선거로 최인규, 경무대 발표사건으로 곽영주, 정치깡패로 임화수, 이정재와 4.19 당시에 학생을 타살한 신정식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혁명재판의 준엄함과 '혁명정부'의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전격적인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중형을 확인 받고도 이후 최고회의 의장의 확인을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수 면소되거나 감형되었다. 확인통계에 의하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366명 중 형 면제자는 무기징역 3명 포함하여 총 28명이었다. 감형자는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7명을 포함하여 10명이었다. 사형을 확정받은 한희석 유지광 등도 무기징역으로 감형하였다.

기소와 구형 언도 등 재판과정에서부터 대상자에 따라 재판이 차별적이었음은 물론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선근에 대한 재판을 들 수 있다. 대한상무회 회장 이선근은 부정선거 혐의로 2년의 구형이 있은지 나흘만에 반공투쟁 공로와 학문적 업적이 현저하며 초범이고 앞으로 혁명대열에 학구적 역군으로 이바지할 것을 다짐했으므로 선고유예가 내려져 석방되었다. 이후 다시 수차례 가석방의 시혜도 베풀어졌다. 1962년 12월 24일 최고회의는 이재학, 신현확, 이하영 등 부정선거와 관련되어 형을 살고 있던 자유당 정권의 핵심 인사 6명을 가석방했다. 이어 1963년 5월 15일 민정 이양을 앞두고 5.16특사로 정치범 76명을 석방했는데[177] 그 석방자 중에는 이중재, 박만원, 이존화, 임철호 등 부정선거 관련 핵심인사들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무기징역을 받은 홍진기도 1963년 11월 25일 석방되었다.

177) 한 신문 기사에 의하면 4.19 당시에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부정선거 원흉들의 석방과 깡패들의 감형에 '자식을 죽인 원수들을 그냥 내보내려면 이 어미부터 죽여달라. 귀한 자식 수백명씩 죽인 놈들을 내놓다니 앞으로 부정선거쯤해도 괜찮을 것 아니냐'고 몸부림치다 몸져 누웠다고 한다.({동아일보}, 1963.5.16).

1963 05 15

1 / 8

텍스트 보기 원문 한글변환

該當者名單(해당자명단)

경향신문 | 1963.05.15 기사 (발표 명단)

該當者名單(해당자명단)
▲特別赦免(특별사면)(殘刑執行免除(잔형집행면제))
◇서울교도소에서출감될자李成雨(이성우) 崔炳煥(최병환) 李重宰朴晩元(이중재박만원) 李存華(이존화) 鄭起燮鄭存秀(정기섭정존수) 李在鶴(이재학) 任哲鎬趙淳(임철호조순) 宋仁相(송인상) 申鉉(신현)확崔在裕(최재유) 李根直(이근직) 孫昌煥具鎔書(손창환구용서) 郭義榮(곽의영) 金永燦金鎭炯(김영찬김진형) 金永徽(김영휘) 裴濟人尹宇景(배제인윤우경) 姜南熙(강남희) 崔獻吉高鍾燁(최헌길고종엽) 鄭麟澤(정인택) 金相(김상)기全(전)장漢(한) 朴定根(박정근) 李夏榮梁在鐵(이하영양재철) 吳(오)임根(근) 愼道晟孫繼天(신도성손계천) 洪滄燮(홍창섭) 朴世泳金甲鉉(박세영금갑현) 徐大鉉(서대현) 金永斗柳泰夏(김영두유태하) 金相道(김상도) 李龍範金昌極(이용범김창극) 許邦道(허방도) 李昭弼蔡奎振(이소필채규진) 沈相俊(심상준) 朱(주)경수白仁燁(백인엽) 嚴鴻燮(엄홍섭) 白南權韓光錫(백남권한광석) 金德福(김덕복) 朴常勳李相國(박상훈이상국) 具本俊(구본준) 楊國鎭李龍雲(양국진리용운) 任興淳(임흥순) 李益興張永福(이익흥장영복) 朴士一(박사일) 金宗元朴炳培(김종원박병배) 朴容(박용)기
◇麻浦(마포)교도소
金永善(김영선) 徐廷學(서정학) 尹武璿(윤무선)
◇大田(대전)교도소吳忠煥(오충환)
◇大邱(대구)교도소金鍾和(김종화)
◇清州(청주)교도소朴世東(박세동) 尹致英(윤치영)(以上(이상)72명)
▲特別減刑(특별감형)

이브러리 1963 11 25 경향신문 이동 공감게시판

1 / 8

過半數確保 어

韓熙錫·洪璡基·李建鎬씨등—
88名곧特別赦免

最高議서發表

◇赦免對象者名單

軍에서公開投票
自民黨 6師團경우指摘

텍스트 보기 원문 한글변환

韓熙錫(한희석)·洪璡基(홍진기)·李建鎬(이건호)씨등— 88名(명)곧特別赦免(특별사면)

경향신문 | 1963.11.25 기사 (발표 명단)

韓熙錫(한희석)·洪璡基(홍진기)·李建鎬(이건호)씨등 |
88名(명)곧特別赦免(특별사면)
最高議(최고의)서發表(발표)

最高會議(최고회의) 姜起千法司委員長(강기천법사위원장)은 25日上午(일상오) 88名(명)의政治犯(정치범)을 特別(특별)사면키로결정, 12月初旬(월초순) 常任委(상임위)의 의결을거쳐 特赦(특사)될것이라고밝혔다.그는 이날法務部(법무부)에서 심사한 第(제)1次審査結果(차심사결과)를 發表(발표)하면서 이와같이 말했다.特赦對象者中(특사대상자중)에는 韓熙錫(한희석),李康學(이강학),辛道煥(신도환),洪(홍)진기등前自由黨(전자유당)의 不正(부정)선거관련자와 李建鎬(이건호),曺烈承(조열승)등 革新系人士(혁신계인사)들이 包含(포함)되어있다.이밖에 曺仲瑞(조중서),金仁則(김인즉)등舊民主黨(구민주당) 反革命事件關聯者(반혁명사건관련자)들도 끼여있다. 高貞勳(고정훈),李東煥(이동환),尹吉重(윤길중),李東華(이동화)씨등一部革新系(일부혁신계)는2次(차)로미루어졌다.

姜委員長(강위원장)은 第(제)1次特赦對象者(차특사대상자)가 最高會議(최고회의) 常委(상위)에서다시 迫加(박가),修正(수정)되어 늦어도 12月(월)17日(일)까지는 석방될것이라고 말했다.
◇赦免對象者名單(사면대상자명단)

韓熙錫(한희석) 李康學(이강학) 朴容益柳忠烈(박용익유충렬) 辛道煥(신도환)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정부수립과 제헌헌법에서 허용된 반민법처리가 이승만 독재정권에 의해 불발되고 다시 12년만에 4월혁명으로 그 기회를 되찾았지만, 과거 청산의 과제가 민주당 정권하에서 불철하게나마 추진되다가 5.16으로 중단된채 군사정부에 의해 변질된 형태로 시도되었다. 결국 우리는 1960년 4월, 피로 얼룩진 혁명에 성공하고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인적, 법적 과거청산에 실패하고 말았다.

<표 3> 3.15 부정선거 원흉 관련자 명단

인물	지위 역할	반헌법 행위 내 용	법적 집행	구분 178)
곽영주 179)	대통령경호실장/경무대 경무관	경무대 발포사건 책임자, 정치깡패 유지광과 동향(이천 토박이)	사형--> 3년구형-->1961년 사형집행	1
곽의영 180)	체신부 장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 피고사건 관련자들	불구속수사-->징역 7년-->특사면	4
구용서 181)	상공부 장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 피고사건 관련자들	징역 10년-->7년	4
김의준	자유당 선전위원회 의장. 자유당 강경파 핵심.	식민지 사법부 판-검사.		3
김일환 182)	15대 내무장관, 교통부 장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4.19후 기소-->징역 8년-->2년 6개월 로 감형-->2년3개월 후 출감	
박만원 183)	자유당기획위 부위원장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 피고사건 관련자들, 정부통령 선거사무장	징역 7년->특사석방	3
박용익 184)	자유당총무위원장	선거자금 배포, 일제하 관료(군수)	사형 구형-->무기징역	3,8
백남규	서울시 경비과장	경무대 앞 발포사건 관련자	무기징역-->징역 10년	2
손창환 185)	보사부 장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	징역3년6개월	4
송인상 186)	국무위원재무장관	부정선거 기획 6인위원회 위원	징역 15년	4,8
신도성 187)	경남지사	부정선거 /이론가		
신현확 188)	부흥부 장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 피고사건 관련자들	징역8년-->3년 6개월	4

인물	지위 역할	반헌법 행위 내 용	법적 집행	구분[178]
유각경[189]	자유당 기획위원 무임소(당무위원, 1959), 부녀부관계 조직부장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 피고사건 관련자들	징역 3년 6개월 --> 형면제 (61.12.21)	3
이근직[190]	농림부 장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 피고사건 관련자들, 15대(1957년) 내무부 장관	징역 10년-->7년	4
이기붕	자유당 실세, 부통령	부정선거	자살	
이선근[191]	대한상무회 회장	부정선거혐의	2년 구형--> 선고유예	3
이익흥	국회의원/전 내무장관	학살기도, 장부통령저격배후조종. 식민지 경찰, 해방후 한국 경찰, 56년 내무부장관으로 장면부통령암살관여[192]. 1956년 지방선거 부정선거 감행.	사형-->무죄	4
이재학[193]	민의원 부의장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 발췌개헌, 24파동 관여.	징역 3년6개월	
이재형[194]	국회의원 자유당 지도위원	민정구락부 핵심. 일본 중앙대 법학부 졸		3
이존화[195]	자유당기획위 조직위원장 겸 선거대책위원회위원	부정선거	사형 구형-->징역 15년-->특사 석방	3
이중재[196]	자유당기획위 부위원장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 피고사건 관련자들	징역 10년 -->7년-->특사 석방	3
이하영	자유당 인사 , 전남지사	부정선거	---> 가석방 -->징역5년	3
임철호[197]	4.19 당시 국회부의장, 자유당 실세 중 한명	부정선거. 일제 하 고등문관 합격 후 변호사경력. 자유당 조직부장, 중앙위원회 부의장.	징역 15년-->특사 석방	3
임흥순[198]	서울시장, 자유당기획의원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 피고사건 관련자들(장부통령저격배후조종)서울경기부정선거사건	무기징역 기결, 부정선거에 한해 형 면제	3
장경근	자유당강경파 보스 자유당정책위원회 의장	식민지사법부 판사, 57년내무장관-이 해 정치강패들이 야당지도자 테러(장충단집회),	구속, 보석중일본으로 도주	3
정기섭[199]	자유당기획위 선거대책위원장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	징역3년6개월	3
정문흠[200]	자유당기획위 원내총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	형 면 제 (61.12.21)	3

인물	지위 역할	반헌법 행위 내 용	법적 집행	구분 178)
정인택	충북지사	부정선거관련자	징역5년	1
정존수 201)	자유당기획위원 감찰위원장	부정선거관련자	징역 7년	3
조순 202)	자유당기획위 선전위원장(관전(官傳))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 피고사건 관련자들	징역 10년-->7년	3
조인구 203)	치안국장	부정선거 관련자. 진보당사건 관계	무죄, 집행유예	2
최병환 204)	내무부 지방국장	부정선거 계획, 투표결과 조작, 허위 공문서 작성	징역 5년 ---> 징역 8년	1
최응복	전 서울시부시장	서울시 선서사범	무죄 혹은 공소기각	1
최인규 205)	내무장관	부정선거 총괄(내무부부정선거사건)	1961년 사형집행	1
최재유 206)	문교부 장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 피고사건 관련자들	징역 8년-->3년 6개월	4
최헌길	전 경기도 지사	선거사범	무죄 또는 공소기각-->징역 5년	3
한희석 207)	자유당기획위원회 위원장 겸 정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자유당 중앙위원회 부의장	부정선거 핵심, 부정선거 계획, 부정선거 원흉. 식민지 군수. 내무부차관. 국회부의장, 자유당중앙위원. 1958년 보안법파동, 3.15선거 배후 계획, 자유당기획위원사건	사형 확정---> 무기징역	3
홍진기 208)	법무장관(한국최고의 관료로 화려한 부활)	부정선거 기획 6인위원회 위원, 저지선을 막으라고 지시. 중앙발포명령사건 관계자	사형-->금고개월--> 무기징역 - - > 특 감 형 -->63년 석방	1
김영찬	산업은행 총재	부정선거 자금관계	징역 12년	8
임화수	전 반공예술인 단장	부정선거에 동원된 정치깡패	1961년 사형집행	6
유지광	전 화랑동지회 대표	정치깡패사건	사형-->무기징역	6
신도환	전 반공청년단장	정치깡패 사건(고대습격시건)	징역2년	6
신정식	정치깡패	4.19 당시 학생 타살	사형	6
현규병	내무부 치안국 수사지도과장	마산데모사건 처리과정 조작과 방치. 직권남용		

인물	지위 역할	반헌법 행위 내 용	법적 집행	구분 178)
유충렬	서울시(경) 경찰국장	경무대 앞 발포사건 관련자, 실무 책임자, 모든 화력을 다해 저지선 절대확보 지시	사형-->사형-->징역20년	2
이강학 209)	서울시 치안국장(당시 35세)	경찰의 선거계획 및 선거자급 배포 관련, 마산데모사건 처리과정 조작과 방치, 부정선거 원흉	징역 15년-> 사형--> 무기징역	2
최병환 210)	내무부 지방국장	부정선거 계획, 투표결과 조작, 허위 공문서 작성	징역 5년 ---> 징역 8년	1
김두용	부산진경찰서장	시위군중에 대해 총기사용 허용, 시위군중에 대해 무차별 총기 사용(시위대 12명 사망)	징역 6년-->감형	2
박정표	마산 경찰	김주열 죽음과 사체 유기	무기-->감형-->사면	
서정학	전 치안국장	부정부패	특사면	

178) 1. 내무부/경무대/군수/지사/교육감(부정선거 원흉 내무부사건(혁재), 각도 부정선거사건(혁재))
2 경찰책임자 : 서울시와 각도의 경찰국장, 경철서장의 다수, 총경, 경무관, 사찰계장
3. 자유당 기획위원회 관련자/ 선거대책위 지도위원(부정선거 원흉 자유당 기획위원사건-혁재)
4. (부정선거 관련) 국무위원-부정선거원흉 국무위원 사건(혁재)
5. 변호사/ 판검사 (재판장)
6. 정치깡패
7. 선거법 위반 공민권제한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안 대상자)
8. 부정선거자금조달 관계자 및 정치자금조달 (부정축재) : 공무원과 기업 (부정선거원흉 선거자금조달사건- 혁재)
9. 군인

179) 경기공업학교 기계과 2년 수료. 일본군 지원병 입대. 경무대 경비 근무(1947).

180) 충북출생, 경성 법학전문학교졸, 2-4대 민의원 자유당 원내 정책위원장

181) 서울출생, 일본 동경대 상과 졸. 한국은행 총재(1950). 구연수 아들 송병준 사위

182) 강원도 출생, 만주군 대위. 육군 준장(1950).

183) 경성제대 법과졸(1936), 제2대-4대 민의원, 자유당 당무위원(1958년).

184) 경성제국대 법문학부 졸, 일제 하 경북 예천군 군수(관료)이며 제3,4대 국회의원, 자유당의 원내총무.

185) 경남출생, 일본 경응대학 의학부 졸, 대한적십자사 총재(1957)

186) 강원출생, 경성고등상업 졸, 식산은행 심사부장, 재무부 이재국장(1949).

187) 1918년 서울출생. 동경제국대. 제3대 국회의원과 경상남도 지사, 제4공화국의 국토통일원 장관 등을 역임했다. 경남지사 재직 당시 3·15 부정선거와 김주열 사망 사건에 연루되어 4·19 로 구속.

188) 경북출생, 경성제대 법과 졸. 고등문관 시험 행정과 합격91943), 일본 상공성 공무관보, 상공부 차관(1957)

189) 중국 북경 협화전문학교 졸(1924년), 정신여고 교사, YWCA 회장. 대한부인회 회장. 유길준의 딸

190) 경북출생(1904), 일본 부흥대학 법과 졸. 강원도 평창 군수, 서울시 산업국장(1950), 경북지사(1955), 자유당 조직위원장

191) 대학총장 박정희-전두환까지 실세

192) 서울명동 시공관에서 1956년 9월 28일 장면부통령 저격사건 발생. 김상붕 체포. 형이 취직을 위해 동생을 소개해 주었던 최훈(미군대북첩보대에서 한 때 일함. 54년 5.20선거 때 자유당 선거운동원)을 배후로 지목. 최훈이 아내랑 교신한 비밀쪽지가 검찰에 적발되어 성동서 사찰주임 이덕신, 이덕신의 수하 박병선, 김광억 형사 추가 구속. 최훈이 사건배후 진술. 자유당 정책위원이며 자유당내 강경파로 이기붕의 측근이던 임흥순으로부터 권유를 받았고 모의는 이덕신과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공작금을 이덕신을 통해 임흥순 및 내무장관 이익흥에게 받았고 치안국장 김종원에게도 받았다.

4. 마무리: 반헌법 열전 편찬의 의미

왜 부정선거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눈 국가폭력의 가해자들 대부분이 불처벌되고 우리의 과거청산은 불발로 끝났는가? 한국에서 과거사 관련 법률이 20개가 넘게 제정되었지만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전제로 한 법률은 없었다. 과거청산 작업이 시작될 때부터 피해자들의 대중운동단체들도 그렇고 의회, 행정부, 언론까지 구 세력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힘을 갖지 못하다보니 가해자들의 처벌을 포기하고 책임도 묻지 못했다. 결국 진상규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아무도 자신들이 고문과 조작, 내란음모, 부정선거를 획책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었다. 진실규명 앞에서도 과거 그들이 행한 잘못에 대해 사죄하기는커녕 인정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으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느냐고 더 큰소리 쳤다. 4월 혁명 직후는 구세력이 수세에 몰렸고 언론도 가세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그러나 그 때도 서민호민의원부의장은 동아일보 기사를 통해(1960년 11월 6일) " 4월 혁명

치안국장 김종원에게는 협조 부탁을 하여 치안국 특정과장 장영복 및 오충환을 통해 공작금 일부를 받았고 권총도 이덕신으로부터 받았다. 1심 판결에서 이덕신-최훈-김상붕 사형, 박병선-김광억 무죄. 1957년 김종원 해직. 4.19 후 사건 재심에서 사형선고를 받고도 감방에서 4년을 보내던 최훈-김상붕-이덕신은 무기 감형,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임흥순-이익흥-김종원-장영복-오충환 등 배후조정 혐의로 모두 사형언도. 그러나 5.16 이후 6명 모두 군사정부의 특사로 석방. 최훈-김상붕도 15년 복역 후 출감. 이덕신만 병보석 중 사망.

193) 강원출생, 경성제대 법학부 졸업, 강원지사, 1-4대 민의원, 자유당 중앙위부위원장, 국회부의장

194) 식민지시기 금련 사업부장, 2대 국회의원 음성에서 출마. 5대 상공부 장관. 족청계로 제거. 58년 4대 민의원 당선(시흥군) 무소속.

195) 3.4대 민의원, 전북 완주 자유당 선전부장. 만주봉천대학 법과 졸.

196) 서울출생(1898), 제일고보 졸, 한일은행 남대문 지점 지배인, 재무부장관, 경선전기주식회사 사장.

197) 충남부여. 명치대 법학과, 고등문관사법과 합격, 법관 안하고 변호사로 활동. 해방후 대통령비서. 4대 민의원 겸 국회부의장. 농림부 장관.

198) 해방후 성동구 동연합회 회장. 성동구 2대 3대 민의원. 무소속에서 자유당에 입당, 자유당 총무부부장.

199) 경기출생, 세브란스 의대졸, 배재중 재단이사장91945), 자유당 중앙위원(1958)

200) 경북출생(1893), 만주 동흥중학 졸, 2-4대 민의원.

201) 서울출생, 경성제대 법학부 졸, 서울지방법원 개성, 수원 지원장. 3-4대 민의원,

202) 전남곡성 출생(1913년). 광주고보 졸. 2-4대 민의원

203) 경남진주 출생, 검사임명(1949), 부장검사(1958).

204) 내무부에서는 장관 최인규, 차관 이성우, 지방국장 최병환, 치안국장 이강학(본인)을 포함한 4인이 주도적 역할 했다 진술,

205) 서울고상. 1959년 3월 21일 내무장관 취임. 1960년 3월경 까지 약 100여 회 걸쳐 내무부 차관 이성우, 치안국장 이강학 등과 공모 불법선거운동 지시. 대통령부통령선거법위반 및 알선수뢰 혐의

206) 서울출생(1906), 세브란스 의전 졸. 보건부 장관(1955). 이수화학

207) 공주사범, 일본고문(고등문관)합격. 창령, 동래군수, 평남지방과장, 미군정 3년 휴식. 정부 수립후 내무부 지방국 근무. 3대민의원(천안, 자유당 공천), 4대민의원 부의장 .

208) 서울출생, 경성제대 법문학부 졸, 일본 고등문관 시험 사법과 합격. 법무부 조사국장(1948), 대검검사(1950).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1958).

209) 대구출생, 일본대학 경제학과 졸, 경찰 투신, 치안국 독찰반 구성. 치안국의 수사지도과장, 경무과장, 보안과장, 통신과장을 책임자로 했다. 총경, 경감, 경위 약 5-60명을 배속해 전국 파견하여 부정선거 실천 여부 감독하게 했다고 진술.

210) 내무부에서는 장관 최인규, 차관 이성우, 지방국장 최병환, 치안국장 이강학(본인)을 포함한 4인이 주도적 역할 했다 진술,

이후 과거의 독재정권에 아부하여 국민들의 기본권을 짓밟은 민주반역자들이 반성을 하거나 자제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고 하면서 “대낮의 햇빛이 두렵지 않은 듯 아직도 날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들의 재 대두를 견제하고 다시는 악몽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위하여서도 나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그 적절한 시행을 촉구하여 마지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별법의 적용을 당지 3.15부정선거가 아니라 1952년 5.26 부산정치파동까지 소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55년이 지난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5년 10월 12일 반헌법행위자열전판찬위원회가 출범했다.[211] 동편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한홍구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관장은 이렇게 말한다.
“현실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있을지 모르나 역사의 법정에 시효란 없다. 유럽에서는 70년이 지나도 나치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추적을 계속하고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한 자들이 현실의 법정은 피해 갔을지 몰라도 역사의 법정마저 피해갈 수는 없다”[212]

반헌법이라는 말이 다소 생소할지는 모르나 지금까지 우리는 국민주권을 명시한 헌법의 가장 중요한 조항들이 집권자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제멋대로 해석되고 사문화시킴으로써 한 장의 종잇장으로 취급되도록 방치해 왔다. 워낙 헌법이 살아 숨 쉬지 못하고 죽어 있다 보니 헌법에 대해 기대나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항쟁으로 직선제 개헌과 헌법재판소[213]를 쟁취해냄으로써 ‘헌법적 질서 아래서의 정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헌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가 스스로 충실히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헌법이라는 것을 민주화 이후 알게 되었다. 헌법은 한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합의이자 사회구성원을 규정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원리이다. 시민은 헌법을 만들고 헌법은 시민을 만든다. 헌법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권력구조와 정부형태가 아니라 국민이다. 지금까지 우리 헌법의 역사는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고, 정권을 잡고서는 다시 장권연장을 위해 자신이 선서한 바로 그 헌법을 뒤집는 일이 다반사였다. 헌법에 규정된 조문은 명백하다.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어떤 일은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 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이제 그 헌법을 제자리에 되돌릴 때다. 헌법을 유린했던 자들에게 헌법을 맡겨둘 수는 없다. 반헌법 행위자열전은 헌법을 유린한 자들의 반헌법적 과거를 당사자들의 행위가 벌어졌던 바로 그 당시의 ‘헌법’에 근거하여 그들의 반헌법행위를 밝히고 기록

211) 이날은 1948년 제헌국회가 반민특위 임원과 재판관, 검찰관을 임명한 날이다. 우연한 일이지만 이날은 박근혜 정부가 역사쿠테타라고 불리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을 공식 발표한 날이기도 했다.
212) (가칭)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준비위, 『누가 반헌법행위자 인가?:반헌법행위자 열전 만들기 자료집』, 2015, 26-27쪽.
213) 헌법에 대한 많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이제 헌법재판소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권력기관으로 부상했다. 이범준, 『헌법재판소』, 궁리, 2009. 김진배, 『두 얼굴의 헌법』, 폴리티쿠스, 2013.

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회복하고, 헌법해석의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214] 해방후 64년이 지나 수록된 당사자들이 거의 모두 사망한 후에 발간된 '친일인명사전'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살아 있는 권력의 반헌법행위를 기록하려는 이 작업은 훨씬 강력한 저항을 야기할 것이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헌법수호의 단호한 결의를 하지 못한다면 헌법은 다시 한 장의 종잇장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1948년 헌법이 제정된 이래 모든 대통령이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제헌헌법 제 4장 제54조)라고 했지만 우리 헌정사는 수난의 역사를 거듭해 왔다. 그런 사회를 민주주의사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호남민심은 호남정치세력을 훨씬 앞서 5·18정신을 계승하고 가장 높은 민주시민의식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보편적 민주주의로 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서 헌법을 유린하는 반헌법행위가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14) 한홍구, "한국의 과거청산과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사업", 『경제와사회』, 109호, 비판사회학회, 2016년 봄호. 29-31쪽.